

RR 2011-02

박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책임자 신 현 석

박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책임자 신 현 석(고려대학교)
전임연구원 이 경 호(고려대학교)
공동연구원 반 상 진(전북대학교)
변 기 용(고려대학교)
이 은 구(한남대학교)
장 덕 호(상명대학교)
엄 준 용(중부대학교)
연구보조원 남 소 정(고려대학교)
연구협력관 정 관 우(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고등교육정책연구소

Higher Educ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비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소의 견해를 밝힙니다.

머 리 말

지식과 기술을 중시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고령인구 증가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 간 경쟁의 심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고등교육체제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편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체제의 원활한 작동은 곧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은 고급인력 특히 박사급 고급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원 박사과정은 급격한 양적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대학원의 양산은 대학원의 설치, 학생선발, 교육과정, 논문지도, 평가시스템의 부재 등 박사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들을 표출하게 되었고, 박사과정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만족과 불신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박사과정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박사인력을 양성하며, 박사과정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박사과정 제도 전반을 진단분석하고, 박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원 설치기준, 박사과정 운영, 박사과정의 질관리의 측면에서 현행 대학원 박사과정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선행 정책 및 연구자료와 주요 선진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박사과정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및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진들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박사과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대학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본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2월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신현석

연구 요약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해 고급 지식 및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할 줄 아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의 역할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고등교육체제의 원활한 작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000년대 접어들어 지속적인 양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교육 및 연구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질적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질 관리(Quality Control)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박사과정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박사인력을 양성하며, 박사과정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박사과정 제도 전반을 진단 및 분석하고 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대학원 설치기준 강화 방안,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개선방안,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질관리 방안으로 크게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우선, 기존 대학원 설치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우선 느슨한 설치기준에 있다. 이러한 기준이 대학규모, 지역적 특성 및 학문적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다수의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슈는 총 10개로 1)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과 범위의 문제, 2) 박사과정 설치 인가기준으로서 고려 가능한 질적 지표 선정, 3) 학문계열별 특성을 감안한 ‘최소 연구실적 충족기준’ 설정 문제, 4) “전임교원 강의비율”의 대학원 설치기준으로서 타당성 문제, 5) 연구실적 범주 간 가중치 부여 문제, 6) 학문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유사계열 범위 설정의 문제, 7) 지역서의 인정 대상 계열 범위, 8) 예체능계 연구업적의 고시에 규정 여부, 9) 박사과정 신설시 ‘사전심의 제도’의 타당성 문제, 10) 질적 지표에 대한 사후 이행점검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 설치기준과 질 관리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며, 둘째, 설치기준은 가능하다면 추후 이행 점검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간단하고 점검하기 쉽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의하여 대학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개선 방안에서 응답자 중 344명의 교수와 479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박사학위과정의 질, 입학기준, 논문 등에 대한 설문문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하였다.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은 대외적, 대내적인 문제들

안고 있는데, 대외적인 문제점은 첫째, 우리나라 대학원 체제가 후속학문세대를 양성하기에는 질적 수준이나 학문적 수월성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이 높지 않으며 해외박사를 우대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둘째, 대학원별 수요공급의 불균형 현상과 박사학위의 공급과잉이 대학원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셋째,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의 특성과 학풍이 부재하다는 것들이다. 대내적 문제점은 첫째, 대학원 박사과정의 구조적 한계점으로 전근대적 대학원 운영방식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특성 없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과 부실 운영의 문제점이 있으며, 셋째, 절대적으로 교수수가 부족하여 질적 수준이나 학문적 수월성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넷째, 박사학위과정 운영의 불합리성 역시 존재하여 학문영역 혹은 계열별로 다양하지도 못하고 엄격하지도 못하여 부실하고, 다섯째, 교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체제가 불합리하고, 마지막으로 논문 표절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데서 비롯한 박사학위의 질적 저하와 부조리 발생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른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 국내 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의 확보, 둘째, 박사학위와 직업자격간의 연계 강화, 셋째, 대학원 운영의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 대학원 학제 운영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가 있으며, 구체적인 대학원 박사학위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첫째, 박사학위 명칭의 선명화, 둘째, 박사학위 수여 기관의 연계를 통한 박사학위의 학문적 질 제고, 셋째, 박사학위 이수과정의 합리적 조정 운영, 넷째, 학위과정 운영의 합리성이나 공정성 확보, 다섯째, 학위 표절 검증 및 차단시스템(프로그램) 개발, 여섯째, 교육자격과 직업자격과의 연계 강화, 마지막으로 지도교수 체제의 엄격성 유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질 관리 방안에 있어 현행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은 첫째, 대학원 평가와 같은 질 관리 기제는 그동안 학부의 일부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강하여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수행된 평가에서 일부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둘째, 일부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원하고 있는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들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 고유의 평가목적에 근거하고는 있으나,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과는 연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점, 셋째, 정보공시제와 같은 상시 질 관리 시스템 역시 학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학원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기과제로는 대학원 정보공시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학부와 중첩되지 않고 분리시키는 것을 선결 과제로 하고 있다. 중장기 과제는 총 세 가지로 첫째, 대학원 자체 평가의 강화를 위해 대

학자체평가에서 대학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정보공시와 대학원 인증을 연계할 수 있다. 둘째, 대학원 인증제를 도입하여 대학 내 상시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으로는 대학 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해주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된 대학(원) 평가 인증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있으며, 이는 기존의 분산된 평가 시스템을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와 대학을 위한 제언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를 위하여서는, 대학원 설치기준 강화를 위하여서는 관련규정 및 지침 개정을 통하여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과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있다. 박사학위과정 운영 개선을 위하여서는 박사학위의 다양화와 차별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지원, 대학원의 자율성 존중과 정부의 역할 명료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박사과정 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서는 대학정보공시제 내 대학원 정보 공시 항목의 개발과 활용, 대학원 자체 평가 제도의 확립, 독립된 대학(원) 평가-인증기관 설립이 있다. 대학을 위한 제언으로는 대학원의 자체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 대학원 학사관리의 질 관리, 대학의 대학원에 대한 자체평가의 강화, 대학원 정보 수집 체계의 확립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대학원 박사과정 남설을 예방하고, 박사과정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박사인력을 양성하고, 박사과정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II. 박사과정 운영 내실화의 배경	5
1. 시대사회적 환경의 변화	5
가. 인구구조의 변화	5
나. 산업구조의 변화	6
다. 국제사회의 변화	8
2. 고등교육체제의 변화	9
가. 환경변화의 영향	9
나. 고등교육정책의 방향	11
다. 대학원 체제의 변화	13
III. 선진국의 대학원 체제	15
1. 선진국의 대학원 제도	15
가. 미국	15
나. 영국	41
다. 프랑스	49
2. 요약 및 시사점	57
가. 요약	57
나. 시사점	59

IV. 대학원 설치기준 강화 방안	61
1. 현행 실태	62
2. 문제점	64
3. 주요 선진국의 대학원 설치 기준	67
가. 영국	67
나. 미국	71
4. 강화 방안	73
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사전적인 검토사항	73
나. 제도개선 기본방향	106
다. 박사과정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108
 V.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개선 방안	117
1. 현행 실태	117
가. 대학원제도의 도입과 발전	117
나. 박사학위 과정 개요	118
2. 주요 선진국의 박사과정 운영 체제	119
가. 미국의 박사과정 운영체제	119
나. EU (유럽연합) 박사과정 운영체제	123
3. 설문조사 분석	127
가. 표본의 일반적 특성	127
나. 교수집단의 의견	133
다. 대학원생 집단의 의견	237
4. 박사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73
가. 국내박사학위 운영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373
나. 박사학위과정 운영의 개선 방안	377

Ⅵ.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질 관리 방안	385
1. 현황 및 문제점	385
가. 일반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385
나. 일반대학원 질 관리 기제의 현황과 문제점	396
다. 종합 및 시사점	408
2. 주요 선진국의 대학원 질 관리 체제	411
가. 미국	411
나. 영국	413
다. 일본	414
라. 호주	416
마. 시사점	417
3. 대학원 박사과정의 질 관리 방안	418
가. 비전	418
나. 목표	420
다. 대학원 내부의 질 관리 기제(자율성 차원)	420
라. 대학원 외부의 질 관리 기제(책임성 차원)	421
마. 대학원 박사과정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423
 Ⅶ. 요약 및 제언	431
1. 요약	431
2. 제언	448
가. 정부를 위한 제언	448
나. 대학을 위한 제언	454
 참고문헌	457

표 차 례

<표 I-1> 연구 방법	4
<표 III-1> 미국대학원 학위수여 체계	24
<표 III-2> 미국 연방정부의 2003년도 고등교육기관 지원 현황	30
<표 III-3>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의 수입 및 지출 현황	32
<표 III-4> 펜스테이트 학점 규정	39
<표 III-5> HEFCE의 대학원 연구학위 프로그램 수준 향상 체계	45
<표 IV-1> 대학원 설치 기준	63
<표 IV-2> 박사과정 운영비율('09년 재학생 기준, 4년제)	64
<표 IV-3> 대학원 입학정원(2001~2010)	66
<표 IV-3> 관련 법령 개정방향 및 신규대조표	77
<표 IV-4> 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논문 및 저서(가중치 없음)	83
<표 IV-5> 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논문 및 저서 (가중치: 국제전문학술지*2)	84
<표 IV-6> 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논문 및 저서 (가중치: 국제전문학술지*2/국제일반학술지*1.5)	85
<표 IV-7> 대학원 전임교원 강의비율(2010년)	89
<표 IV-8> 국내 대학들의 업적평가시 국제/국내 학술지 논문, 저서 등에 대한 가중치 부여 현황	90
<표 IV-9> BK21 사업 인문사회분야 연구업적별 평가기준	95
<표 IV-10> BK21 사업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실적 환산기준	96
<표 IV-11> 교대 음악 실기 업적 평가 기준	101
<표 IV-12> 교대 미술 실기 평가 기준	102
<표 IV-13> 교대 체육 실기 평가 기준	103
<표 V-1> 국내박사학위 관련 현황	118
<표 V-2> 교수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128
<표 V-2> 교수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표계속)	129
<표 V-3> 대학원생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131

<표 V-3> 대학원생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표계속)	132
<표 V-4> 대학원생 선발 방법에 대한 응답(교수집단)	133
<표 V-5> 대학원생 선발 방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34
<표 V-6> 전일제 대학원생 및 시간제 대학원생의 전형방법(교수집단)	135
<표 V-7> 전일제/시간제 대학원생의 전형방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36
<표 V-8> 국제적 수준과 비교한 국내 대학원의 입학기준(교수집단)	137
<표 V-9> 국제적 수준과 비교한 국내 대학원의 입학기준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38
<표 V-10> 입학경쟁률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139
<표 V-11> 입학경쟁률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40
<표 V-12> 입학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141
<표 V-13> 입학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42
<표 V-14> 대학원 신입생의 출신대학 구성(교수집단)	143
<표 V-15> 대학원 신입생의 출신대학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44
<표 V-16> 전일제 및 시간제 대학원생의 구성(교수집단)	145
<표 V-17> 전일제 및 시간제 대학원생의 구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	146
<표 V-18> 대학원생의 입학 동기(교수집단)	147
<표 V-19> 대학원생의 입학 동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48
<표 V-20> 논문제출 자격 요건(교수집단)	149
<표 V-21> 논문제출 자격 요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50
<표 V-22> 종합시험 탈락률(교수집단)	151
<표 V-23> 종합시험 탈락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52
<표 V-24> 지도교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 유무(교수집단)	153
<표 V-25> 지도교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 유무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	154
<표 V-26> 지도학생 수의 제한(교수집단)	155
<표 V-27> 지도학생 수의 제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56
<표 V-28> 논문심사과정의 공정성(교수집단)	157
<표 V-29> 대학원생의 입학 동기(교수집단)	158
<표 V-30>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교수집단)	159
<표 V-31>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60

<표 V-32>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교수집단)	161
<표 V-33>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운영(교수집단)	162
<표 V-34>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63
<표 V-35> 논문심사비의 적절성(교수집단)	164
<표 V-36> 논문심사비의 적절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65
<표 V-37>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교수집단)	166
<표 V-38>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67
<표 V-39> 석·박사 통합과정과 학문 연속성(교수집단)	168
<표 V-40> 석·박사 통합과정과 학문 연속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69
<표 V-41> 대학원의 다양한 인재배출 적합성(교수집단)	170
<표 V-42> 대학원의 다양한 인재배출 적합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71
<표 V-43> 대학원의 독립성(교수집단)	172
<표 V-44> 대학원의 독립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73
<표 V-45>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도입(교수집단)	174
<표 V-46>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도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75
<표 V-47>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학위유형(교수집단)	176
<표 V-48>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학위유형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77
<표 V-49> 학위유형의 개편(교수집단)	178
<표 V-50> 학위유형의 개편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79
<표 V-51> 논문심사 과정의 공개(교수집단)	180
<표 V-52> 논문심사 과정의 공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81
<표 V-53> 학위논문의 공시(교수집단)	182
<표 V-54> 학위논문의 공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183
<표 V-55> 학부로부터의 독립(교수집단)	184
<표 V-56> 학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85
<표 V-57> 학부정원의 감축(교수집단)	186
<표 V-58> 학부정원의 감축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87
<표 V-59> 대학원 정원의 감축(교수집단)	188
<표 V-60> 대학원 정원 감축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89
<표 V-61> 대학알리미를 통한 대학원 공시(교수집단)	190

<표 V-62> 대학알리미를 통한 대학원 공시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91
<표 V-63> 대학원의 평가인증제 도입(교수집단)	192
<표 V-64> 대학원의 평가인증제 도입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93
<표 V-65> 대학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교수집단)	195
<표 V-66> 대학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96
<표 V-67> 대학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교수집단)	197
<표 V-68> 대학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198
<표 V-69> 영어 강의(교수집단)	199
<표 V-70> 영어 강의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00
<표 V-71>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교수집단)	201
<표 V-72>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02
<표 V-73> 외국 대학원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교수집단)	203
<표 V-74> 외국 대학원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04
<표 V-75> 대학원생과의 공동 연구(교수집단)	205
<표 V-76> 대학원생과의 공동 연구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06
<표 V-77> 담당교수의 강의 준비(교수집단)	207
<표 V-78> 담당교수의 강의 준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08
<표 V-79> 대학원생의 수업 준비(교수집단)	209
<표 V-80> 대학원생의 수업 준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10
<표 V-81> 대학원생의 의견 반영(교수집단)	211
<표 V-82> 대학원생의 의견 반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12
<표 V-83> 인접학과의 수업 권장(교수집단)	213
<표 V-84> 인접학과의 수업 권장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14
<표 V-85> 과제물에 대한 Feed-Back(교수집단)	215
<표 V-86> 과제물에 대한 Feed-Back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16
<표 V-87> 대학원 전용 연구 공간의 확보(교수집단)	217
<표 V-88> 대학원 전용 연구 공간의 확보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18
<표 V-89> 대학원 강의평가제도의 도입 여부(교수집단)	219
<표 V-90> 대학원 강의평가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20

<표 V-91> 각종 기자재의 확보(교수집단)	221
<표 V-92> 각종 기자재의 확보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22
<표 V-93> 장학금 제도(교수집단)	223
<표 V-94> 장학금 제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24
<표 V-95> 기숙사 시설(교수집단)	225
<표 V-96> 기숙사 시설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26
<표 V-97>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교수집단)	227
<표 V-98>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28
<표 V-99> 대학원 행정서비스체제에 대한 만족도(교수집단)	229
<표 V-100> 대학원 행정서비스체제에 대한 만족도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30
<표 V-101> 학위논문의 공시(교수집단)	231
<표 V-102> 학위논문의 공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232
<표 V-103> 전임교원 강의비율과 교육의 질 관련성(교수집단)	233
<표 V-104> 전임교원 강의비율과 교육의 질 관련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교수집단)	234
<표 V-105> 전임교원의 강의비율 법령화(교수집단)	235
<표 V-106> 전임교원의 강의비율 법령화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236
<표 V-107> 시간제 대학원생의 직업(대학원생 집단)	237
<표 V-108> 대학원생의 입학동기(대학원생 집단)	238
<표 V-109> 전공일치도(대학원생 집단)	238
<표 V-110> 학자금 충당방법(대학원생 집단)	239
<표 V-111> 대학원생의 입학절차(대학원생 집단)	240
<표 V-112> 대학원생의 입학절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241
<표 V-112> 대학원생의 입학절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242
<표 V-113> 대학원생이 생각하는 입학수준(대학원생 집단)	243
<표 V-114> 입학수준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244
<표 V-114> 입학수준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245
<표 V-115> 대학원입학과정에서의 공인자료 활용의 필요성(대학원생 집단)	246
<표 V-116> 공인자료 활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247
<표 V-116> 공인자료 활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248

<표 V-117> 전일제 및 시간제 대학원생의 구성(대학원생 집단)	249
<표 V-118> 전일제 및 시간제 대학원생의 구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대학원생 집단)	250
<표 V-118> 전일제 및 시간제 대학원생의 구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대학원생)(표계속)	251
<표 V-119>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요건(대학원생 집단)	252
<표 V-120> 종합시험의 탈락율(대학원생 집단)	253
<표 V-121> 종합시험 탈락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254
<표 V-121> 종합시험 탈락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255
<표 V-121> 종합시험 탈락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256
<표 V-122> 논문지도교수 선정방법(대학원생 집단)	257
<표 V-123> 논문지도교수 선정방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258
<표 V-123> 논문지도교수 선정방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259
<표 V-124> 논문지도에 대한 만족도(대학원생 집단)	260
<표 V-125> 논문지도에 대한 만족도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261
<표 V-125> 논문지도에 대한 만족도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262
<표 V-126> 논문심사과정의 공정성(대학원생 집단)	263
<표 V-127> 논문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264
<표 V-127> 논문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265
<표 V-128> 논문심사위원의 구성방법(대학원생 집단)	266
<표 V-129> 논문심사위원의 구성방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267
<표 V-129> 논문심사위원의 구성방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268
<표 V-130> 논문심사위원 중 외부 심사위원의 구성(대학원생 집단)	269
<표 V-131> 논문심사비의 적절성(대학원생 집단)	270
<표 V-132> 박사과정 논문심사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271
<표 V-132> 박사과정 논문심사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272
<표 V-133> 등록금의 적절성(대학원생 집단)	273
<표 V-134> 등록금의 적절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274
<표 V-134> 등록금의 적절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275
<표 V-135> 석·박사통합과정에 대한 의견(대학원생 집단)	276
<표 V-136>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277

<표 V-136>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278
<표 V-137> 대학원의 인재양성 역할(대학원생 집단)	279
<표 V-138> 대학원의 인재양성 역할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280
<표 V-138> 대학원의 인재양성 역할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281
<표 V-139>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운영(대학원생 집단)	282
<표 V-140>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283
<표 V-140>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284
<표 V-141> 산학협력형 학위과정의 학위유형(대학원생 집단)	285
<표 V-142>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학위유형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286
<표 V-142>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학위유형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	287
<표 V-143> 대학원과 학부의 독립에 대한 의견(대학원생 집단)	288
<표 V-144> 대학원과 학부의 독립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289
<표 V-144> 대학원과 학부의 독립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290
<표 V-145> “대학 알리미”의 운용에 대한 의견(대학원생 집단)	291
<표 V-146> “대학 알리미”의 운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292
<표 V-146> “대학 알리미”의 운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293
<표 V-147> 대학원 평가인증제에 대한 의견(대학원생 집단)	294
<표 V-148> 대학원 평가인증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295
<표 V-148> 대학원 평가인증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296
<표 V-149> 학위논문 공시제도에 대한 의견(대학원생 집단)	297
<표 V-150> 학위논문 공시제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298
<표 V-150> 학위논문 공시제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299
<표 V-151> 박사학위논문 심사과정의 공개(대학원생 집단)	300
<표 V-152> 박사학위논문 심사과정의 공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301
<표 V-152> 박사학위논문 심사과정의 공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	302
<표 V-153> 소속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대학원생 집단)	304
<표 V-154> 소속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05
<표 V-154> 소속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	306
<표 V-155> 담당교수의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대학원생 집단)	307
<표 V-156> 담당교수의 강의 만족도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08

<표 V-156> 담당교수의 강의 만족도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09
<표 V-157> 대학원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대학원생 집단)	310
<표 V-158> 대학원교육의 성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11
<표 V-158> 대학원교육의 성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12
<표 V-159> 대학원 교육의 학문적 연구능력 신장(대학원생 집단)	313
<표 V-160> 대학원 교육의 학문적 연구능력 신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대학원생집단)	314
<표 V-160> 대학원 교육의 학문적 연구능력 신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대학원생)(표계속)	315
<표 V-161>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대학원생 집단)	316
<표 V-162>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317
<표 V-162>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318
<표 V-163> 과제물에 대한 Feed-Back (대학원생 집단)	319
<표 V-164> 과제물의 Feed-Back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20
<표 V-164> 과제물의 Feed-Back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21
<표 V-165> 담당교수의 수업충실성(대학원생 집단)	322
<표 V-166> 담당교수의 수업충실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23
<표 V-166> 담당교수의 수업충실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24
<표 V-167> 대학원생의 수업 충실성(대학원생 집단)	325
<표 V-168> 대학원생의 수업 충실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26
<표 V-168> 대학원생의 수업 충실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27
<표 V-169> 대학원 교육을 통한 학문적 발전(대학원생 집단)	328
<표 V-170> 대학원 교육을 통한 학문적 발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대학원생 집단)	329
<표 V-170> 대학원 교육을 통한 학문적 발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대학원생)(표계속)	330
<표 V-171> 대학원의 영어 강의(대학원생 집단)	331
<표 V-172> 대학원의 영어 강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32
<표 V-172> 대학원의 영어 강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33
<표 V-173> 개설과목에 대학원생 의견 반영(대학원생 집단)	334
<표 V-174> 개설과목에 대학원생 의견 반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335

<표 V-174> 개설과목에 대학원생 의견 반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표계속)	336
<표 V-175> 인접학과 수업 권장(대학원생 집단)	337
<표 V-176> 인접학과 수업 권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38
<표 V-176> 인접학과 수업 권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39
<표 V-177> 외국 대학원과 공동프로그램 운영(대학원생 집단)	340
<표 V-178> 외국 대학원과 공동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대학원생 집단)	341
<표 V-178> 외국 대학원과 공동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대학원생)(표계속)	342
<표 V-179> 담당교수와 공동 연구(대학원생 집단)	343
<표 V-180> 담당교수와 공동 연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44
<표 V-180> 담당교수와 공동 연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45
<표 V-181> 학술지 논문 게재 경험(대학원생 집단)	346
<표 V-182> 학술지 논문 게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47
<표 V-182> 학술지 논문 게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48
<표 V-183> 대학원 차원의 세미나와 포럼 개최(대학원생 집단)	349
<표 V-184> 세미나와 포럼 개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50
<표 V-184> 세미나와 포럼 개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51
<표 V-185> 대학원생 전용 연구 공간 확보(대학원생 집단)	352
<표 V-186> 대학원 전용 연구 공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53
<표 V-186> 대학원 전용 연구 공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54
<표 V-187> 대학원 강의평가제도의 도입 여부(대학원생 집단)	355
<표 V-188> 대학원 강의평가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	356
<표 V-188> 대학원 강의평가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표계속)	357
<표 V-189> 각종 기자재의 확보(대학원생 집단)	358
<표 V-190> 각종 기자재의 확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59
<표 V-190> 각종 기자재의 확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60
<표 V-191>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대학원생 집단)	361
<표 V-192> 장학금 제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62

<표 V-192> 장학금 제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63
<표 V-193>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대학원생 집단)	364
<표 V-194>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65
<표 V-194>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	366
<표 V-195>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대학원생 집단)	367
<표 V-196>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68
<표 V-196>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69
<표 V-197> 대학원 행정서비스 만족도(대학원생 집단)	370
<표 V-198> 대학원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371
<표 V-198> 대학원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372
<표 VI-1> 대학원의 종류 및 목적	387
<표 VI-2> 연도별, 설립별 대학원 학교수	388
<표 VI-3> 연도별 설립별 일반대학원 학생수	389
<표 VI-4> 연도별 일반대학원 학교수 및 재학생수 추이 (1999-2010)	390
<표 VI-5> 최근 10년간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추이(2001-2010)	391
<표 VI-6> 최근 5년간 일반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및 정규직 취업률 추이(2005-2010) ..	392
<표 VI-7> 대학의 4대 요건 확보 현황	392
<표 VI-8>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의 대학원 관련 지표	398
<표 VI-9> 학문분야별 평가분야와 인증기관	400
<표 VI-10> 2단계 BK21사업 4차년도('09) 총량 성과	402
<표 VI-11> BK21 5차년도 연차평가 항목 및 지표(인문사회 분야)	404
<표 VI-12> 대학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2011)	406
<표 VI-12> 대학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2011)(표계속)	407
<표 VI-13> 대학의 평가모형 분류 및 특징	408
<표 VI-14> 대학정보공시 대학원부문 공시항목의 예	425
<표 VI-14> 대학정보공시 대학원부문 공시항목의 예(표계속)	426
<부표 1> 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논문 및 저서	464
<부표 2> 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논문 및 저서	465
<부표 3> 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논문 및 저서	466

그 립 차 례

[그림 II-1] 한국의 출산율 및 인구 추이	5
[그림 II-2] 대학 입학정원과 18세 인구 추이	6
[그림 II-3] 대학 학령인구 변화 추이	14
[그림 III-1] 미국 대학원 학위 과정	25
[그림 III-2] LMD 학제 이전의 프랑스와 한국의 고등교육 학제 비교	52
[그림 III-3] LMD 학제 이후의 프랑스와 한국의 고등교육 학제 비교	54
[그림 IV-1] 대학원 설치 절차	62
[그림 IV-2]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입학정원 추이	66
[그림 V-1] 박사과정 경쟁력 강화방안(교수집단)	194
[그림 V-2] 우리나라 박사학위과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대학원생 집단)	303
[그림 VI-1] 대학원(박사과정) 질 관리 시스템의 비전과 전략	422
[그림 VI-2] 대학정보공시제 추진체제	42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고급 지식 및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할 줄 아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고등교육체제의 원활한 작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지식과 기술을 중시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고령인구 증가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 간 경쟁의 심화 및 협력의 필요성 증대 등 변화하는 환경은 각국이 자국의 고등교육체제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편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요구되는 고급인력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른바 세계는 인재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선진국에서는 창의성과 지식의 중요성 증대, 학문간 융합 및 글로벌 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 국부창출 수단으로 박사급 고급인력을 특별히 중시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NSF IGERT 사업, 일본의 글로벌 COE 사업, 독일의 Excellent Initiative사업 등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고등교육 분야, 그중에서도 박사과정을 집중 지원·육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BK21사업, WCU 사업 등 대학원을 육성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부와 석사 중심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대학원과 박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학부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지속적인 양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 그러나 박사과정의 급격한

1)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6,141('00)→8,602('05)→9,912('09)

양적 성장에 비해 교육·연구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²⁾. 국내 박사과정에 대한 불만족은 해외박사 선호현상으로 이어져 유학 서비스 적자, 고급두뇌 유출 등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³⁾, 고급인력 일자리 불일치 등에서 드러나듯 우리나라 박사과정 운영 시스템은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학의 규모나 특성,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도상의 문제, 그리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논문지도 등 박사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교육과 연구여건에 대한 불만족과 사회적 불신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그간 보여준 박사과정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질적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질 관리(Quality Control)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박사과정 운영의 공개를 통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진입관리를 강화하는 등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우수한 박사인력을 양성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의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접하고 있는 박사과정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박사인력을 양성하며, 박사과정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현행 박사과정 제도 전반을 진단·분석하고, 박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국가 SCI 논문 피인용도: 33위/2.39('02)→30위/3.05('05)→30위/3.44('07)

3) 미국으로의 유학생 수 증가('06. 47,554명→'09년 52,187명/ 21% 증가), 국내 공학·자연 계열 교수 중 해외박사 비율('08. 서울대 83%, 포항공대 88%)

2. 연구 내용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고자 한다.

□ 대학원 설치기준 강화 방안

- 현행 대학원 설치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행 대학원 설치기준을 분석
 - 현행 대학원 설치기준의 문제점 도출
- 주요 선진국의 대학원 사례 분석
 - 주요 선진국의 대학원 설치기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교육 및 연구여건 강화를 위한 대학원 설치기준의 강화 방안
 - 양적지표 위주의 현행 설치기준 검토 및 질적 지표의 보완
 - 대학원 설치기준에 대한 법안 마련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운영 개선방안

- 현행 대학원 박사과정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대학원 체제 전반(일반, 특수, 전문)의 기능과 역할 분석
 - 현행 박사학위과정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주요 선진국의 박사과정 운영 체제 분석
 - 주요 선진국의 박사과정 운영 전반(입학자격, 교육과정, 학위수여, 연구지도 등)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박사학위과정 개선을 통한 박사과정 운영체제 개편 방안
 - 대학원 체제 전반(일반, 특수, 전문)의 기능 및 역할 분석을 토대로 일반 대학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입학자격, 교육과정, 학위수여, 연구지도, 조직편제 등 전반적 운영체제 개선 방안 마련
 - 전일제 및 시간제 학생에 따른 운영기준의 차별화 방안 포함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질 관리 방안

- 현행 대학원 박사과정 운영 평가 및 인증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행 대학원 평가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주요 선진국의 박사과정 운영 평가 및 인증시스템 사례 분석
 - 주요 선진국 대학원 평가시스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박사과정 운영의 질 확보를 위한 평가 인증 시스템 강화 방안
 - 대학원 박사과정 평가체제 구축 방안 마련
 - 정보공시제를 활용한 박사과정 관련된 제반 지표의 개발 및 공개 방안 마련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한다. 첫째, 문헌분석 방법으로 박사과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선행연구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방법은 대학교수 및 대학원생들에게 설문하여 박사과정 운영 및 질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적용되었다. 셋째,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방법이 대학원 설치기준 개선안과 박사과정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되었다.

<표 1-1> 연구 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방안 관련 선행 정책 및 연구자료 분석 • 각 방안 관련 외국 사례 수집·분석 	문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과정 운영 및 질 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설치기준 개선안 및 박사과정 내실화 방안 수립 	전문가 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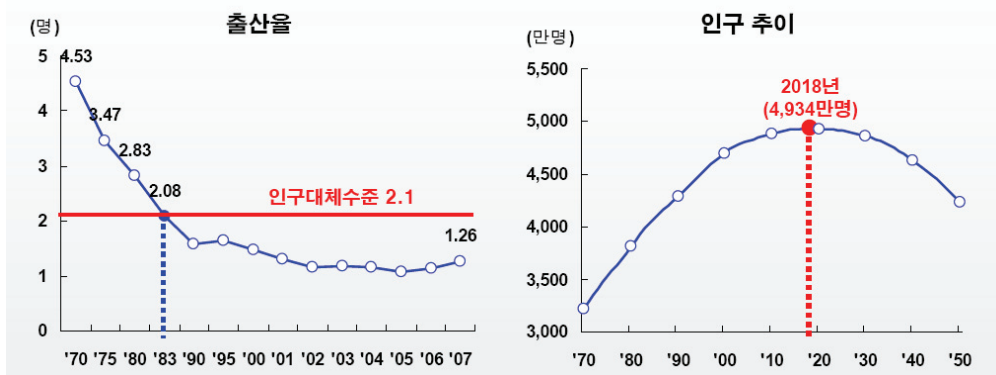
II. 박사과정 운영 내실화의 배경

1. 시대사회적 환경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등교육 학령인구의 변화를 예측하게 해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 OECD에 따르면 세계의 총인구는 2007년 약 66억 7,123만 명에서 2050년에 약 91억 9,12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총인구는 2007년 약 4,846만 명에서 2050년 약 4,23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회 입법조사처,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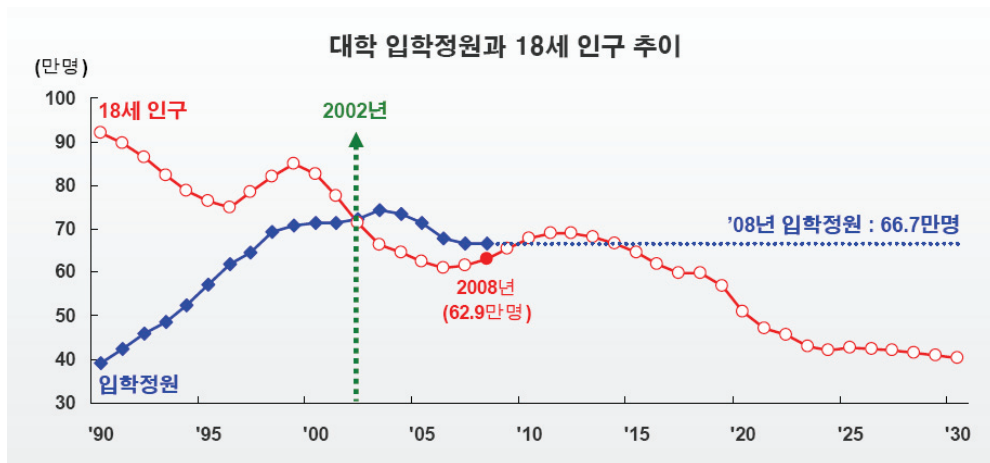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48,219천명으로 2005년에 비해 2.0%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되면서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 인구분포 구조는 전형적인 감소구조인 ‘항아리형’으로 지속적인 사회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율의 감소추세는 가까운 미래에 학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올 전망이다(박재윤 · 이정미, 2010).



* 자료: 통계청(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p.4.

[그림 II-1] 한국의 출산율 및 인구 추이

이렇듯 저출산에 따른 대학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의 통폐합이나 구조개혁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정부는 이미 부실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박재운·이정미(2010)에 따르면 현재의 대학생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학생 유입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5학년도 전후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학 간 통합이나 구조개혁 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통계청(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p.15.

[그림 II-2] 대학 입학정원과 18세 인구 추이

나. 산업구조의 변화

고등교육의 환경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의 빠른 변화가 밀접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 탈산업사회 등이며, 가치 창출과 변화의 근원은 물질에서 지식과 정보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한다. 즉 지식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본으로 간주되면서 창

조적이고 다양한 지식의 생성과 이에 대한 공유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원천으로서 고등교육의 역할이 보다 중요시 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단순히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사회 제도가 아니라 지식 자체를 생산·전달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사회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대학에 대해 갖는 이러한 전략적 역할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등교육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첨단산업의 급신장으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는 과학기술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동종 또는 이업종 간 기술융합이 촉진되고 기존 과학기술의 응용을 가속화함으로써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혁신이 보편화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은 생산설비의 대학, 연구소 등 기술적 파트너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있고, 기술의 복잡화와 고도화로 신기술 개발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연구개발과정의 복잡화, 시스템화로 인해 동종 또는 이업종의 기술융합 및 상호연계 요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국내외 경쟁심화와 기술표준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기술개발기간의 단축, 기술 확보 및 상업화 기간 단축, 기술표준 선점 및 경쟁력 배제 등을 위해 산학연 협력은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철희 외, 2009).

정보통신기술, 뇌 기반 학습과학기술, 바이오 기술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들 간 융합은 향후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교육부문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으며, 가까운 미래사회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고등교육 학습 및 운영 환경 전반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보화 기술은 고등교육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고등교육 운영에 있어 e-Learning과 u-Learning의 활용을 촉진하여 물리적 캠퍼스나 면대면 수업에 주로 의존하였던 종전의 수업방식 및 교육방법을 혁신시키고 있다(윤종혁 외, 2006).

이렇듯 지식과 기술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와 혁신주도경제 속에서 최고의 글로벌 기술을 토대로 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상품을 생산하는 우수한 인재의 능력이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이미 노동시장의 세계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길러진 인력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

를 정비하여 새로운 경쟁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일과 더불어 국내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고등교육이 직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이혜영 외, 2007). 나아가 단순히 고학력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창의적이고 변화에 능동적인 고급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동시에 고등수준의 지식을 생성·응용·확산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 기능, 특히 대학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다. 국제사회의 변화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고등교육 시장이 국제화되면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 간의 네트워크와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 혁신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상덕 외, 2008: 13).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크게 지식기반사회와 국제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현대사회를 지칭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은 모든 인간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새로운 지식의 팽창은 지식의 축적 및 응용뿐만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관점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지식의 전달 방식을 변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받은 사람과 그들의 지식이 국가의 전략적 자원이자 부가 되는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가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경제성장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식이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은 지식자본의 원천이며, 국가적 부를 생산하는 핵심기관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식과 기술의 생명이 짧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최첨단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며, 확산시켜나가는 역할은 고등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교육의 일종의 상품으로 간주되며, 교육 상품은 세계화된 개방적 경제체제에서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교육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세계 교육시장으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고등교육 기관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시장의 개방과 확대는 국내 대학 간 경쟁은 물론, 외국대학과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은 한국의 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경쟁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고등교육기관들이 교육소비자의 교육욕구가 무엇인지 고려하여 상품의 질을 관리하고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고, 세계 교육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2. 고등교육체제의 변화

가. 환경변화의 영향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고 있고,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함께 교육서비스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변화를 유인하고 있다.

첫째, 2000년대 이후 OECD, UNESCO,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정보화·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고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하는 다양한 보고서들을 발표해 왔다. OECD가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한 교육 장관회의의 주제가 고등교육⁴⁾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결합되면서, ‘국경 없는(borderless)’, ‘초국가적(transnational)’, ‘국경을 뛰어넘는(trans-border)’등의 용어는 이미 당연한 것으로 일반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고등교육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주제는 “Higher Education: Quality, Equality, and Efficiency”이다.

세계화·국제화의 영향으로 고등교육 부문에서의 인적교류가 활발해 짐과 동시에 학생이동이 점차 증대되었다. 엘리트 중심의 유학 기회는 급격히 확대되어 오늘날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 등록한 학생이 27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등과 같은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등록학생 수는 20%를 상회한다(OECD, 2009). 그리하여 오늘날 고등교육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쟁하게 되었다(Rhoades & Smart, 1996). 학생을 교육소비자로 인식하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은 다른 대학에 비해 우수한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세계화·국제화의 영향과 맞물려 교육의 시장화는 고등교육의 경쟁을 심화시켰다. GATS, FTA 협상을 통해 공공부문의 교육은 교역 가능한 상품으로 지정되면서 고등교육은 시장의 지배 논리에 예속되었다. 따라서 고등교육부문의 시장화는 대학이 대학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전반에 걸쳐 경쟁을 벌려야 함을 의미한다. 즉 연구를 위한 펀드, 학생, 교수 등의 확보를 위해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경쟁이 요구된다.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상품화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비단 학생자원 획득에 대한 경쟁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학이 활동하는 전 영역, 즉 교수, 학생, 시설, 연구, 국가재정자원 등에서 타 대학 보다 이를 더 빨리,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고등교육서비스에 ‘무역’과 ‘산업’적 관점이 접목되고 있고, 고등교육체제에서 시장기제의 작동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은 이제 고등교육을 상아탑적 교육관에서 벗어나 교육산업적 교육관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대학은 순수학문연구의 진리탐구적 역할을 넘어 이제는 시장경쟁 원리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적 역할까지 강조되고 있다(황인철, 2006).

셋째,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고등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에 자원의 보유량과 가치가 국부를 좌우하였던 것처럼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국가의 지식수준이 곧 국가의 번영을 약속한다. 따라서 지식의 생산, 분배, 배포의 기능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등교육은 국가산업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함과 동시에 기업과 국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그 핵심적

인 기능이 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지식기반경제의 진전, 평생학습사회의 도래 등 이 시대를 특징짓는 여러 요소들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생존자체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이제 고등교육기관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에 봉착해 있다. 이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기업 및 국가의 요구에 부응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 고등교육정책의 방향

고등교육을 둘러싼 일련의 환경 변화들은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식과 기술을 중시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고령인구 증가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 간 경쟁의 심화 및 협력의 필요성 증대 등 변화하는 환경은 각국이 자국의 고등교육체제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편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요구되는 고급인력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른바 세계는 인재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21C 글로벌 시대의 국부 창출 수단으로 고등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체제의 정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창의성과 지식의 중요성 증대, 학문간 융합 및 글로벌 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 국부창출 수단으로 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즉, 학부보다는 대학원을, 석사과정보다는 박사과정에 집중 투자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산업화 사회를 이끌었던 양적 성장위주의 패러다임에서 지식기반사회에 알맞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 박사급 고급인력이 위치해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글로벌 COE 사업’을 통해 박사과정 대학원을 국제적으로 탁월한 교육 연구거점(약 140개)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반부터 고급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현재 자국 대학원에서 다수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16명 중 10명이 국내박사인 점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Excellent Initiative’을, 중국은

‘985 공정’ 사업을 통해 우수한 박사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연구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5.31 교육개혁 이래 고등교육의 양적확대를 가속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보편화시기를 맞이하고는 있으나, 최근에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최근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존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과 방안들을 모색하는 질적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 더 이상 고등교육체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거처럼 규제와 직접적 개입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 중요한 화두는 자율화와 책무성의 강화라 요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학원 정책은 관료제적 계층제를 기반으로 정부가 정책과정을 통제하고 정책의 책임을 지는 전통적인 거버넌스 유형이었다면, 현 정부의 대학원 정책은 자율화를 기반으로 한 대학 간 경쟁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 선별적으로 지원을 받는 소수의 대학원이 전체 대학원의 발전을 선도하는 방식을 취하는 이른바 자치거버넌스로 변화하고 있다(박재운·이정미, 2010). 대학차원에서는 자율적 질 관리의 창원에서 재원확보와 경영 개선을 위하여 경영마인드 도입,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한 대학의 특성화와 조직의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 대학 간의 연합체 결성 등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는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질 관리를 위한 교육 및 경영 여건의 인증, 대학과 학과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대학 정보의 공시, 평가와 연계된 재정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에서는 2000년대 들어 BK21사업, WCU 사업 등 대학원을 육성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우수한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다. 대학원 체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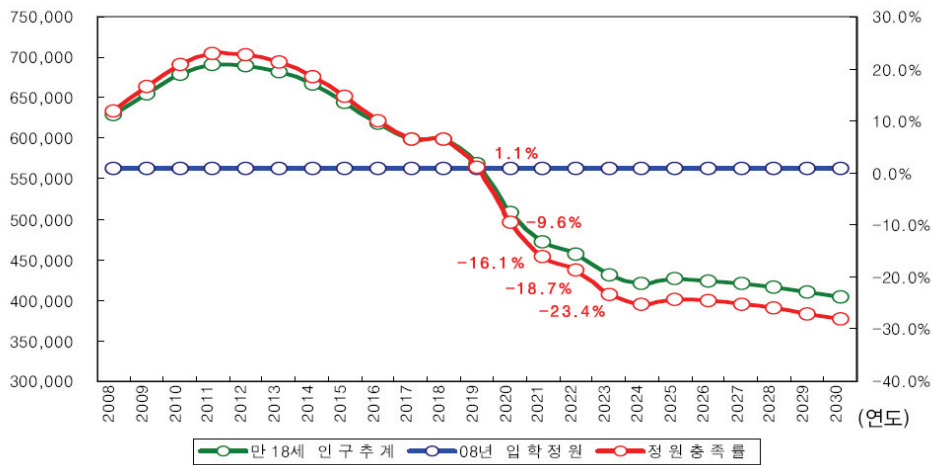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환경 및 정책방향의 영향에 따라 대학원 체제의 기능과 역할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원의 기능은 전통적인 학문탐구의 요람이라는 기능에서 현장중심의 실용교육의 기능, 즉 사회적 적합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학원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은 실용분야의 전문교육보다는 학문연구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어 왔다. 가령 유능한 법조인을 길러내기 보다는 법률을 학문적 차원에서 탐구하고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이른바 지식기반의 요체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산업분야의 이공계 역시 실용적인 교육 보다는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의 학문적 영역을 심화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그러나 정보화 및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은 물론, 각 분야의 효율적 운용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고급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학문탐구의 기능은 물론 첨단산업기술의 제공과 세계화 전략의 쉥크탱크적 역할을 수행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대학원 학생과 교수의 국제 이동을 가속화하여 각 대학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며, 우리의 대학원 역시 이제 상품과 서비스로 세계의 대학원과 자웅을 겨뤄야 하는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동안 양적팽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던 대학원 체제는 법령의 정비, 구조개혁, 질 관리 체제 구축, 학사운영의 내실화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외국인 교원 확대, 우수 연구중심대학원 육성 등 대학원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노력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대학원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학생들의 연령분포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원의 학생 수는 지금까지 양적팽창을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2017년까지는 2011년 대비 약 10만 여명이 증가하여 정점에 도달한 뒤,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박재운·이정미, 2010). 또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노동력이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학습자들의 평생학습 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학습자들을 담당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이미 성인학습자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 학력층이라는 점에서 대학원은 이러한 수요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대학원에서 비전일제 등록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일제 등록생 위주의 경직된 학사운영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자료: 류지성(2009). 수요자 중심의 대학개혁.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 포럼 자료.

[그림 II-3] 대학 학령인구 변화 추이

Ⅲ. 선진국의 대학원 체제

1. 선진국의 대학원 제도

가. 미국

1) 제도의 배경

현재 미국의 대학원은 세계 최정상 수준에 있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그 체계와 제도가 우수하다. 학과 운영의 융통성, 교수들의 연구 활동과 교수활동의 효과적인 접목, 연구와 학습의 통합적 연계,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등은 세계 도처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미국 대학원 제도의 강점이다. 특히, 미국 대학원은 ‘학과중심의 대학원 제도’라는 독자적인 운영체계 형성을 통해 연구-교육-학습의 연계라는 훔볼트적(Humboltian) 이상을 실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민간분야, 정부분야, 이 세 축이 각자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연구 활동의 삼각구도를 균형적으로 조정해 간다는 점, 경쟁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재정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은 오늘날 미국 고등 교육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으며, 자국내 R&D 산업의 발달과 연구중심대학모델의 세계적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오늘날의 미국의 대학원 제도가 있기까지에는 무수히 많은 대학 개혁가들의 노력과 대학차원의 변화 노력이 있어 왔다. 사실, 미국의 대학원 제도는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실제로 19세기 후반에 이르기 전까지 미국에는 독자적인 고등교육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학원 체계도 상당히 영성하였다. 일례로 17세기말의 하버드 대학의 박사 및 석사 학위 취득은 하버드 출신의 학사 소지자가 대학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구한 것을 공식적인 발표함으로써 완성되었으며, 대학(college)은 이들의 연구 활동과 명목상으로만 관계가 있었을 뿐 행정적·교육적·재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Morison, 1936). 또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은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쳤고, 특히 독일은 초기 미국의 고등교육 체계와 대학 및 대학원의 형태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까지 학문, 연구 및 고등학습에 대한 관심은 대학 내부보다는 대학 밖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미국철학회(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741년 설립), 미국 고등과학원(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d Science, 1848년 설립), 국립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863년 설립)등과 같은 교육 및 연구 단체의 활동이 그러한데, 고등교육을 대학 밖에서 추구하는 경향은 19세기 중반이 되 기까지 계속 지속되었다(Greene, 1976).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 대학원 체계가 확립되기까지 그 변화 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미국 남북전쟁 시작(1865년)부터 1890년대까지, (2) 189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1918년)될 때까지, (3)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1945년)가 될 때까지, (4)종전 이후이다(Geiger, 1986). 1957년 이른바 스푸트닉 충격(Sputnik crisis)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미국의 교육 개혁을 거치고 나서야 현재의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과 대학원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1865~1890년대)는 미국 전역에 대학교가 새롭게 설립되고 정비되는 시기로서 주로 남북전쟁 전의 대학(Antebellum college)의 모습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했던 시기이다. 당시에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회적 풍토가 확산되고 있었고, 전쟁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대학의 모습을 찾고자 주 정부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노력하고 있었다(Versey, 1965). 특히 1862년에 제정된 모릴법(Morril Act)은 미국 전역에 공학 또는 농학 관련 주립대학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창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주립대학을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진보적인 대학의 한 형태로서 전문대학(professional school)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840년대의 하버드와 예일의 이과학 대학(scientific school)은 19세기 미국 대학원의 발전에 큰 영감을 주었다. 또한 하버드 법과대학 시스템은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틀의 형성을 유도 해주었으며, 예일의 세필드 대학은 농업화학과 같은 실용학문 강의, 과학과 기술이 연계된 연구 등 과학 분야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고등교육의 개혁은 상당 부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이때까지 미국 대학들의 궁극적 학업 목표는 정신적 훈육(mental discipline) 혹은 학습능력개발에 있었고, 이러한 구시대적 대학(old-time college)의 목표로는 심도 있는 학문과 연구의 체계를 갖추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당시 미국 대학에서의 지식은 개발되고 창조되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학습의 도구로서 존재하였고, 따라서 교육 내용이나 방법도 실제적인 연구나 연구에 필요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형태가 아니었고, 단순히 확실적인 지식들을 답습하고, 암기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학 교육의 모습이 대학의 연구적 가능성을 매우 제한하여 대학을 창조의 공간이 아닌 과거의 산물로 정체시켰고, 대학은 전통적 대학이 그러했듯이 졸업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 사회적 선발의 기제로서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시대적 성향을 염려하여 이미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대학 본연의 과업(True university work)은 대학원 수준에서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Geiger, 1986) 즉, 대학과 대학원은 별도의 통로로서 여겨졌고, 학문에 있어서의 실제적이면서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890년대 직전에는 이런 시각을 반영하여 대학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클라크 대학과 시카고 대학은 순수 대학원 기관을 설립하고, 대학원 양성 과정을 새롭게 운영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변혁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충분치 않았고, 고등교육기관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이런 시도는 결국 그 의미가 퇴색된 채 기존의 모습으로만 머무르게 되었다.

두 번째 시기(1890~1918년)에는 대학원이 급격히 발달하고, 연구 분야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1890년대 이른바 대학 붐('boom' in university)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미국 대학 및 대학원의 기준적인 모델을 세울 수가 있었다(Versey, 1965). 실용적·전문적 목적을 띤 교육이 학부(department) 또는 개별 대학원(school)에서 이루어졌고, 연구에 관하여서는 각 학부의 편제에 근거하여 각자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대학원의 본격적인 발달은 의학부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1900년대 이후에도 문리과학(Arts and sciences)은 소외된 채 유독

의학부에서 대학과 대학원이 발달했다.

의학부에서는 하버드와 존스홉킨스 대학의 교육과정이 주요 모델이 되었고, 교육학에서는 콜롬비아 대학의 사범대학(Teachers College, 1888년 설립)이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이 대학들을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는 전문적인 연구(professional research)와 대학원 연구(graduate research), 문리과학(arts and sciences)이 더디게 발달하였지만, 각각의 독립적인 대학원(graduate school)의 동시다발적 설립과 운영은 그간 간과되었던 학생들의 연구와 학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덕분에 1897년에 처음으로 미국 대학원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300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미국 대학원의 박사학위가 점차 독일 대학원의 박사학위만큼의 사회적 통용성을 갖게 되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78).

하지만,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 이전까지는 연구와 관련한 재정 및 지원, 교수들의 시간, 학생들의 수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였다. 하버드 등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선발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학부과정에 준비 없이 입문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따라서 교수들은 학생들을 기초부터 일일이 다시 가르쳐야 했으며, 심지어는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교수의 몫이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있어서 재료와 장비 심각한 부족을 경험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양쪽의 부담이 있었으며, 연구자로 입문한 대학원생이나 박사후연수생(Post Doc.) 역시 교수진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담을 공유하였다. 즉,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늘어가는 고등교육 수요와 연구 및 학문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세기 초부터는 강의와 연구의 이중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해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ship)라는 별도의 직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코넬, 시카고,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설치되었고, 이때부터 가르치는 교수(teaching men)와 연구하는 교수(research men)를 구분하기 시작했다(Geiger, 2004). 또한 이 시대의 대학은 부족한 연구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부(gifts)에 매달렸다. 존스 홉킨스, 클라크, 시카고, 예일, 위스콘신, 코넬, 하버드 대학 등은 그 대학 출신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졸업자들

을 대상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대학 및 대학원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물론 기부는 연구 전반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로 의약학 연구에 필요한 실험 재료를 구입하기 위함이었고, 이런 거액의 기부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대학도 소수였지만 이 소수 대학의 발전과 영향력이 향후 미국 대학원과 연구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연구중심대학의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교수들의 교육 부담도 역시 많이 줄어들었다. 1900-1910년 동안 학생-교수의 비율이 주립대학의 경우엔 14:1에서 12:1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0:1에서 8:1로 줄어들었다(Geiger, 1986). 또한 당시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은 한명의 수석교수(head professor)가 모든 학과의 일을 관장하는 독일식 모델에서 탈피하여 여러 전문분야 및 학과의 교수들이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문공동체(collegial)라는 독자적인 모델을 창출한다.

세 번째 시기(1918-1945년)는 미국 대학이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로, 특히 1920년대는 미국 대학 발전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동안만 미국 박사 소지자들이 3배로 늘어나고, 1930년대에는 50퍼센트가 더 증가하는 등 엄청난 양적 성장을 한다. 주립대학의 관계자들은 전문 교수진들과 대학원생들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력했고, 동문들(alumni)이 주는 혜택에 익숙해져 있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생의 선택적 선발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부유한 사립대학은 곧 ‘아이비리그(Ivy League)’로 차별화되고, 이러한 차별화된 이미지는 동문들의 기부금을 성공적으로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1920년대의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성장은 대규모의 자선재단의 관심 속에서 이뤄지게 된다. 특히 록펠러재단(Laura Spelman Rockefeller Memorial)의 총재인 럼(Ruml)과 General Education Board의 총재인 로즈(Rose)의 공이 컸는데, 럼은 미국 대학들이 사회 문제를 다루기엔 지식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기초적인 사회과학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고, 로즈는 대학의 기초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들은 재단의 자금을 다양한 학문분야의 각종의 연구에 지원하면서도 주요 사립대학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다. 이 시기에는 재단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역시 대학 연구에 많은 후원을 하였는데, 대학과 산업의 연계는 화학, 전기, 제약 분야에서 많이 일어났고, 미시건과 MIT에는 산업을 목적으로 한 공학연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Servos, 1980). 소위 동료 신드롬

(Collegiate syndrome)이라 불리는 대학 내 새로운 트렌드가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미국 대학들은 처음으로 조직화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원하기 위한 정기적인 재정적 지원에 힘썼고, 교수들과 연구진들의 협력과 공동연구에 기반한 학문 분야는 크게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학문 연구 분위기와 전폭적인 재정지원은 대학 연구의 발전을 이끌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학원생의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정기적으로 받는 연구 기금은 많은 대학원생들에게 지원되었는데, 특히 록펠러 재단과 국립연구평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1919년 설립)의 후원 덕분에 박사후과정생에 대한 연구비(post doctoral fellowships)가 처음으로 지원되면서 박사후과정생의 연구 기반이 견고해졌다.

1930년대는 미국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로, 대학원 학문이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선 입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하버드와 프린스턴, 예일 등은 대학원 입학시험(Graduate Record Examination, GRE)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박사후과정생에 대한 연구비 운영과 교수진의 합리적인 경력구조의 구축을 위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경쟁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풍부한 지원과 경쟁적 구도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1940년대까지 지속되면서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물론 노스웨스턴 대학과 조지워싱턴 대학 등 몇몇 대학은 비효과적인 연구투자로 파산을 겪지만(Kayser, 1970; Williamson & Wild, 1976), 그 외 캘리포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미네소타, 일리노이 대학 등은 학과 특성화와 풍부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력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후(1945년 이후) 세대의 미국 대학원의 발전은 다섯 가지 강력한 지원에 의해서 지속되었다. 농업기술에 관한 연구는 본래 정부차원에서 계속 지속되어오던 것이었고, 일부는 국방성에 의해,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에 의해, 의학 연구는 공중위생국(Public Health Service)에 의해 지원되었고, 과학 분야는 당시 부시(Vannevar Bush) 대통령의 전후 세대의 연구에 관한 청사진에 따라 국가적 연구 재단에 의해 지원되었다(Reingold, 1987).

여기에 미국 대학원 발전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계기가 된 것은 소련의 스푸

트니크호 발사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10년간(1958-1968년) 미국 연방정부는 대학의 기초 연구에 대대적으로 지원금 인상을 하였고(1억7천8백만 불에서 12억5천1백만 불로), 미국고등교육시설운영법(Higher Education Facilities Act)에 따라 대학 건물의 90억불을 지원하였다. 또한 GNP의 성장에 따른 가계의 교육비 지출규모 증가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1960년대에는 미국의 박사배출 비율이 1920년대의 3배에 달하게 되었다(Geiger, 1986). 또한 1960년대는 대학원에 대한 전망이 대학보다 더 좋게 평가되는 변동의 시점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에 의한 또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대학원의 연구와 교육은 ‘대학혁명(Academic Revolution)의 시대’를 열게 되었고, 1920년대의 소수 대학위주의 제한된 집중투자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여러 대학들의 연구 참여 및 지원을 이끌어냈다. 초기에 인력부족을 겪던 때와는 달리 다수의 연구자적 마인드를 가진 박사들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대학들에 참여하면서, 미국의 연구는 풍부한 연방정부의 지원과 시설, 활성화된 연구 분위기를 바탕으로 성공적 발전을 이루어낸다.

2) 대학원 구조

미국은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미국 대학 발전의 초기에는 통일성 있고 일관된 교육 체제를 갖추지는 못했고, 지금도 미국은 전체 주정부와 고등교육기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대학원 체제나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학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교육과 학문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실천 덕분에 미국 고등교육은 대학마다 혹은 학문 분야마다 독자적이고 고유한 시스템을 발전시켰으며, 그러한 다양성이 지금의 바로 오늘날 미국 고등교육 경쟁력의 밑거름이 되었다.

미국 대학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다양성’은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다. 미국 대학원은 다양성과 그 다양성을 지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증체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미국은 학문별, 대학원별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독자적이면서도 그 ‘목적에 맞는’ 대학원 교육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학위체제와 학위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원은 학문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대학교원과 학자양성을 위한 일반대학원과 고급전문직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전

문대학원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학위체계는 학술학위(Academic Degree; MA, MS, Ph.D)와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 MBA, M. Ed. MFA. Ed.D, JD 등)로 구분되고, 이렇게 구분된 학위에 맞게 대학별로 다른 교육과정과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목적 혹은 기능에 따른 대학원 학위 및 교육체제의 운영은 바로 교육과 연구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 제도적 바탕이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 대학원에서는 일반 교육과는 다른 고급 인적자원을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위 및 교육체제를 통하여 맞춤형으로 인재를 양성해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 대학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체계적인 인증체계’라는 것이다. 그러한 학위체계와 학위 과정에 맞는 학문 및 연구 과정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짐으로써 더욱더 다양하고 풍부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던 것이다. 또한 한편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학위체계의 공식적인 전문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인증체계, 특히 대학원에 입학하는 단계에서부터 졸업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단계마다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까다로운 인증체계를 만듦으로써 자연스러운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 각 대학원에서 발행하는 학위에 전문적 권위와 신뢰가 깃들 수 있도록 하였다. 입학 전, 입학 후에서 졸업까지 단계별로 학문소양 및 전문성을 점검하는 시험이나 절차가 많으며,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보조해주는 피드백 관리도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학위인증제도 운영에 있어 정부(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와 민간 사이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매우 특징적이다. 인증(Accreditation)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이들 중에는 대학 전체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지역대학연합(Regional Association)과 각 학문 분야의 인가를 담당하는 전문 인증기관(Professional Association)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미국 연방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고등교육인증기관협의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에 의하여 감독과 평가를 받게 되고, 이들 인증기관들은 각각의 규정된 기준과 심사 요령에 따라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신현석 외, 2005), 이러한 시스템적 기반을 통해 각 전문분야에 대한 치밀하면서도 균형적인 인증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위의 두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미국 대학원의 전반적인 체제를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가) 대학원의 학위수여체계

대학원은 크게 석사학위(Master's degree)와 박사학위(Doctor's degree)로 나누어지며, 박사학위는 총 셋 정도로 분류된다. 가장 일반적인 학위는 학술학위로서 Ph.D(doctor of philosophy)이고, 교육학이나 경영학과 같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주로 주어지는 학위인 Ed.D.(doctor of education)나 D.B.A.(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가 있다. 모든 박사과정 프로그램은 상위의 코스웍(advanced coursework)와 세미나(seminars), 학위논문을 쓰는 과정을 포함하며, 지도교수 및 감독관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표 III-1>과 같다.

미국의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개 1-2년간 30-60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3-5년 동안 60-80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미국의 대학원은 각 학교별로 자율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입학절차나 교과과정, 학위 취득 소요기간과 이수학점수, 학위요건 등이 학교 및 전공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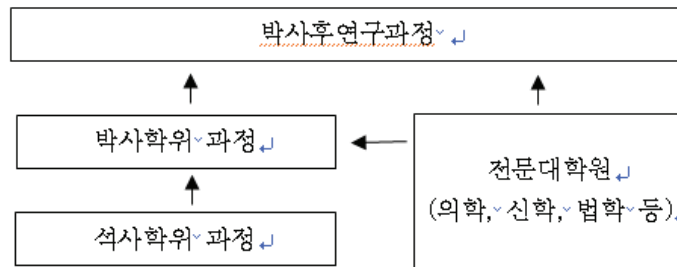
미국에는 또한 "First Professional degree"라는 학위가 존재하는데, 이 학위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활동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이다. 대부분 전문학위 프로그램(Professional degree programs)은 입학단계에서 학사학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8년을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예술, 건축, 신학 분야와 같은 몇몇 분야에서 First Professional 학위는 석사 학위와 같이 취급되기도 한다.

<표 III-1> 미국대학원 학위수여 체계

학문영역	석 사	박 사
Liberal Arts	M.A.	Ph.D.
Natural Science	M.S.	Ph.D.
Agriculture	M.Agr.	Ph.D.
Architecture	M.Arch.	D.Arch.
Business Administration	M.B.A.	Ph.D.
Dentistry		D.D.S
Education		
- Professional	M.Ed.	Ed.D.
- Liberal Arts	M.A.	Ph.D.
Engineering		
- Professional	M.E.	Ph.D.
- Science	M.S.	Ph.D.
Fine Arts	M.F.A.	
Forestry	M.F.	Ph.D.
Law		L.L.D.
Library Science	M.L.S.	D.L.S
Medicine		M.D.
Music	M.Mus.	A.Mus.D.
Nursing	M.S.n.	
Pharmacy	M.S.pharm.	Ph.D.
Public Administration	M.P.A.	D.P.A.
Public Health	M.P.H.	D.P.H.
School Work	M.S.W.	D.S.W.

나) 대학원의 입학과정과 학위과정

미국 대학원 제도의 전반적인 체계는 아래와 같다. 보통 석사-박사-박사후 연구과정으로 이어지지만 전문대학원에서는 그 자체로 박사학위에 준하는 학위를 부여하거나 다른 박사학위 과정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그림 III-1] 미국 대학원 학위 과정

미국 대학원 제도 및 체제의 특징은 다양성에 있으며, 각각의 미국 대학원에서 적용하는 입학과정, 학위 취득 과정과 수학 기간은 대학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대학원의 입학과정에서 대부분의 주요 대학원들은 대학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위한 한 가지 입학신청 양식과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원의 각 학과들은 자격 요건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신청 서류에는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신상정보 양식, 추천서, 에세이, 성적증명서, GRE(혹은 GMAT, LSAT 등) 등을 포함한다. 일부 대학원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자격요건으로 개인 인터뷰나 전화 인터뷰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신현석 외, 2005).

제출된 대학원 입학 신청서류는 대학원의 입학위원회나 혹은 각 학과 사무실로 직접 보내어지고, 이들 서류를 통해 입학결정 여부를 내리는 곳은 학과의 입학위원회에 행정당국, 교수위원회, 일반대학원 사무 부서 등의 연계와 협조를 통해 학과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대학원 신입생은 중앙입학관리사무처에 의해 단과대학별로 입학하는 학부생과는 달리 학과별로 선발된다(고용 외, 1999).

또한 미국의 대학원에서는 신입생 단계에서부터 대학 및 학과의 관리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 신입생의 논문계획서를 직접 대학 교수들이 살펴본 후 학생에게 맞는 지도교수를 찾아주고, 학생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원장, 대학원위원회, 대학 내의 컨설팅 혹은 상담부서, 지도교수와의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펜스테이트 홈페이지, www.psu.edu).

일반적으로 일반대학원 과정의 경우에는 석사과정 이수에 약 2년 내외의 시간이 걸리며, 박사과정 이수에는 약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원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석사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생이 학문계열 내에서 박사과정 입학하면 대부분 석사 학위 논문을 면제하고, 소정의 교과목의 학점이수나 논문 자격시험(Qualifying Exam)을 요구한다.

한편 미국 대학원의 학위체계에서는 그 운용에서의 융통성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시카고의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IC)의 의과대학에서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 의학과 관련된 기초과학분야, 약학분야, 기타 보건분야 등에서 연구 및 실제 활동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숙련도 검증시험(Proficiency Exams)을 치르게 하여 불필요한 교육과정을 굳이 이수/수강하지 않아도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심사는 학과에서 수행하는데, 학생의 학점 및 성취수준(portfolio of credentials) 등을 근거로 하며, 학생의 학점, 출판기록,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추천서, 재직증명서, 간혹 실험능력에 대한 심사를 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여부를 살펴본다.

대학원 내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뒤에는 논문통과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최종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이 최종 시험은 주로 논술이나 구술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석·박사 통합과정에서는 석사학위는 생략하고 박사논문을 위한 준비교육과정에 들어가기도 한다.

다) 대학원 교육체제

미국의 대학원 제도는 매우 독특한 ‘복층형 횡렬구조(two-tier vertical structure)’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 대학원에서 학과는 대학 신입생의 기초 강좌에서부터 박사학위논문의 최종 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제공하는 하나의 통합적 단위이다. 앞서 설명했듯 미국의 대학원 교육체제는 매우 학과 중심적이며, 이 학과중심의 대학원 제도가 유럽의 경우보다 더 융통성 있게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미국 대학원을 특정 짓는 특성화된 학과와 대학원의 지속적인 연대는 대학원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미국 대학원의 지금과 같이 발전시킬 수 있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인효 외, 1998).

3) 대학원 지원제도

가) 학생 지원제도

미국 교육부는 다양한 유형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⁵⁾. 우선 학자금 보조(Grants)로서 연방펠보조금(Federal Pell Grants)과 연방보충기회보조금(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s)이 있는데 이는 학부생에게만 지원된다. 학부생을 포함한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은 근로장학프로그램(Federal Work-Study Program)으로서 학비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도록 대학 캠퍼스 내외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내 일자리를 얻는 학생은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 이상의 시급을 지급받는다. 또, 학자금 융자(loans)는 졸업 후 상환의무가 뒤따르는 것으로서 융자한도는 학생의 성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방퍼킨스융자(Federal Perkins Loans), 스태포드융자(Stafford Loans), 플러스융자(PLUS Loans)가 있고, 특히 학부 모를 대상으로 한 병합융자(Consolidation Loans)가 있다.

2011~2012년에 적용된 학자금융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5) 이하는 주로 미국연방교육부 홈페이지 학생재정지원부문(<http://studentaid.ed.gov>)과 채재은(2005)을 참고하였음.

연방퍼킨스융자는 연리 5%의 저금리융자로서 학생의 재정지원 필요정도와 소속 대학의 학자금 재원 규모에 따라 융자액이 결정된다. 대학원생은 연간 8,000달러, 재학기간(학부과정 포함) 총 60,000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액의 상환은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 후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0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스탠포드융자는 직접융자(Direct Loans)와 연방가족교육융자(Federal Family Educational Loans)로 나뉘며 다시 정부에 의한 이자보조 여부에 따라 보조융자(Subsidized Loan)와 보조융자(Unsubsidized Loans)로 구분된다.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최대 8.25%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대학원생이 연간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500달러이고, 재학기간 빌릴 수 있는 금액은 138,500달러이다. 플러스융자는 학부모를 위한 융자로서 연간 대출한도액은 자녀의 대학재학경비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다시 직접 플러스융자(Direct Plus Loan)와 FEEL 플러스융자가 있으며, 정부에 의한 이자보전은 적용되지 않는다. 병합융자는 다양한 상환계획을 갖고 있는 3-4개의 연방학자금 융자들을 1개월 상환계획을 갖는 융자로 통합시킨 융자이다, 고정이자율이 적용되며, 연간 최대 8.25%를 초과하지 않는다. 통합융자의 종류에는 직접통합융자(Direct Consolidation Loans)와 FEEL 통합융자가 있으며, 스탠포드 상환방법이 적용된다.

또한 미국의 각 대학원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Tuition Waive”, “Stipend(TA and/or RA)”, “Fellowship”이 일반적이다. Tuition Waive란 학위를 끝낼 때까지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으로, 학과마다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학위 과정 기간이 다르지만 대부분 5년 정도이다. 때로는 학생 보험료까지 학과에서 지불해주기도 한다. Stipend란 “아주 적은 월급” 또는 “최소 생계비”를 뜻하는 말로서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TA, 혹은 RA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소속된 직원이 되어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다. TA란 Teaching Assistant의 줄임말로 수업조교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업의 일부를 가르치게 된다. 수업조교들을 본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과제 및 시험을 채점하며 토론을 진행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학교에 따라 월급이 다르다. RA란 Research Assistant의 준말로 연구조교에 해당하며 연구 전반에 있어서 교수의 보조를 맡는다. 월급은 교수 개인의 연구비에서 지출된다며, 연구 프로젝트가 많은 공대 관련 학과에 주로 많이 있는 직책이다. Fellowship이란 TA또는 RA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도 동등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인데, 학교나 학과마다 기간과 정도가 다르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나) 대학지원제도

미국은 정부의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대학에 대한 재정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적 지원기관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은 크게 보았을 때 교육부문과 연구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 <표 III-2>를 보면 교육부문에서 가장 지원규모가 큰 부처는 역시 연방 교육부로서 2003년 기준 227억 달러를 대학에 지원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대학에 대한 각종 학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국가보훈처로서 2003년 기준 약 21억 달러를 대학에 지원하였는데 참전군인의 유족 및 참전군인 본인들의 대학 학자금 지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부와 국방부로서 각각 17억, 15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중에 얼마만큼이 학부와 대학원으로 투입되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학경쟁력의 핵심인 연구 활동이 주로 대학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연구 부문에 대한 지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부문에서는 보건부의 지원이 압도적이다. 약 158억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전체 지원액의 54%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부(40억 달러, 약 14%), 그리고 국립과학재단(31억 달러, 약 11%), 국방부(약 21억 달러, 약 7%)가 주된 지원기관으로 나타났다.

<표 III-2> 미국 연방정부의 2003년도 고등교육기관 지원 현황

(단위 \$1,000)

부처 / 기관	교육부문		연구부문	
	지원액	비중(%)	지원액	비중(%)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22,706,436	77.4	551,932	1.89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93,626	0.32	575,300	1.98
상업부(Department of Commerce)	4,200	0.01	85,900	0.29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1,569,079	5.35	2,164,047	7.42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	4,086,914	14.01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698,087	5.79	15,811,616	54.19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	1,500	0.00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205,545	0.70	43,400	0.15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299,000	1.02	—	—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90,200	0.31	43,824	0.15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	—	—	—
국가보훈처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127,921	7.26	—	—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	—	15,800	0.05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	—	11,500	0.04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454,000	1.55	3,188,115	10.94
미국정보원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	—	—	—
애팔래치안지역협의회 (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	6,000	0.02	—	—
국제개발청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	44,500	0.15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	171,600	0.59
연방 긴급 사태 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	—	—
미국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	2,361,100	8.09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	12,900	0.04
경제기회국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	—	—	—
-기타	65,538	0.07	6,645	0.02
계	29,319,632	100	29,176,593	100

* 출처: NCES(2004). p. 35-39표를 재구성

4) 미국 대학원 학사제도 운영 사례

: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Penn State University)

미국의 각 대학이 전통적인 분권화된 체제를 형성하면서 독자적인 학사제도를 발전시킨 점을 고려한다면 단일의 사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대학원 학사제도 운영 사례로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이하 “펜스테이트”) 대학원의 제도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대학원의 구조와 규모

펜스테이트의 대학원은 University Park와 Harrisburg 캠퍼스, Penn State Erie, The Behrend College, Penn State Great Valley, College of Medicine at The Milton S. Hershey Medical Center로 나뉘며, 매년 1,000명 이상의 대학원생들이 지원한다. 몇몇 전문 학위 프로그램(M.Eng, M.Agr, M.Ed 등)은 Off-Campus 혹은 Penn State World 캠퍼스에서 제공된다. 참고로 국립연구평의회(NRC)에 따르면, 현재 펜스테이트 대학원은 박사학위 프로그램 및 연구의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4년 212개 대학의 5,000개 이상의 박사학위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펜스테이트는 평가대상 69개의 프로그램(기초분야66, 신설분야 3) 중에서 65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상위 10% 이내 랭킹에 오른 성과를 거뒀다.

나) 대학 및 대학원 재정 운영

펜스테이트에서 대학원 예산만 별도로 공개하지 않은 관계로 2010-11년도의 대학 및 대학원 전체에 관한 재정 운영 상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 III-3>와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수입 약 40억 달러 중에서 주정부 및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10억 달러(25.3%)정도를 지원 받고 있으며, 등록금과 병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가장 많다. 지출에서는 강의와 연구에 13억 달러(32.6%)로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병원/클리닉에 외 11억 달러(27.4%)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학생 장학금 등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1

억 6천만 달러(3.7%) 정도였다.

<표 III-3>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1,000)

구분	영역	금액 (전체 예산 중 해당 비율)
수입	등록금(Tuition&Fee)	1,371,988(34.2%)
	병원/클리닉(Hospital/Clinic)	1,105,409(27.5%)
	목적지정기부금(Restricted Funds)	661,462(16.5%)
	부대사업(Auxiliary Enterprises)	340,710(8.5%)
	주정부지원금(Direct State Appropriation)	318,072(7.9%)
	그 외(Other Income)	183,016(4.5%)
	농업관련정부지원금(Agric. Federal Funds)	19,995(0.5%)
	연방정부지원금(Federal Stimulus Funds)	15,791(0.4%)
	합계	\$4,016,443
지출	병원/클리닉(Hospital/Clinic)	1,105,409(27.4%)
	강의(Instruction)	716,533(17.8%)
	연구(Research)	594,868(14.8%)
	보조사업(Auxiliary Enterprises)	340,710(8.5%)
	단과대학지원(Academic Support)	339,803(8.5%)
	대학기관지원(Institution Support)	304,538(7.6%)
	시설관리(Physical Plant)	211,440(5.3%)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143,233(3.6%)
	학생지원서비스(Student Services)	112,531(2.5%)
	Penn College	100,387(2.8%)
	학생지원금(Student Aids)	46,991(1.2%)
	합계	\$4,016,443

* 출처: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예산처(University Budget Office)자료 응용

다) 대학원 내 각종 교육지원프로그램

① 대학원 패컬티 워크숍 (Graduate School Faculty Workshop Series)

대학원패컬티워크숍은 1995년 이래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대학원 각 프로그램 사무실 직원들과 학과장, 대학원의 교수들에게 대학원 교육에 대한 중요사항들을 알려주고,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효과적 교육방법 및 각종 규정·실천사항 등에 관해서 논의하는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주로 논의된 이슈는 주로 신입생 선발방식, 전문직업윤리, 대학원생 취업 준비,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및 관계 등에 관한 것인데 관련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University Graduate Recruiting”
- “Ethics in University Research Education”
- “University-wide Graduate Recruitment”
- “Beyond Cloning the Academic: Preparing Doctoral Students for Postgraduate Opportunities”
- “Faculty-Student Relationships: Promoting Mutual Accountability”
- “Re-envisioning the Ph.D. at Penn State for the New Millennium”
- “The Changing Landscape of the Master's Degree at Penn State”
- “International Opportunities in Graduate Education”
- “A Look at Doctoral Examinations”

② 대학원 전시회(The Graduate Exhibition)

대학원은 1986년 이래 매년 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학업 활동에 관한 전시회를 갖는다. 이 행사는 전 전공분야에 걸쳐 대규모로 열리며, 대학원생들은 자기 전공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물들을 보면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자극받고, 연구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눌 커뮤니티 혹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또한 함께 연구할 주제와 연구 동료를 찾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참여 기회를 얻기도 한다.

③ 대학원 집필센터(The Graduate Writing Center: GWC)

GWC는 무료로 대학원 수준의 글쓰기에 관한 동료컨설팅(peer consulting)과 워크숍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주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비판적인 글쓰기와 사고에 관하여 지도를 해준다. 한 주제에 관해 1:1로 혹은 집단으로 토론 시간을 가지면서 논문작성, 세미나 페이지, 프로포절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며, 피드백도 해준다. 특정한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학생의 일반적인 글쓰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과정은 주제 찾기, 브레인스토밍, 체계적인 전략설정, 프로젝트 관리법 등과 효과적인 글쓰기 등으로 상당히 체계적이다. 세미나의 경우에는 논문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함께 토론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과제도 주어진다. 박사학위를 받은 원어민의 학생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상급 수준의 대학원생들과 박사후과정생들 위해 약 2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Graduate Writing Workshops을 개최한다. 분야별로 연구에 있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포절을 쓰는 방식이나 특징까지 세세하게 알려준다.

④ 대학원장과의 면담(Coffee with the Dean)

매월 30여명의 학생들이 대학원장과 커피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의 대학원 생활 전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며 학교와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타 대학 혹은 해외의 연구 기회나 학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 박사과정 프로그램 및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 규정

① 박사학위취득의 절차 및 필수요건

펜스테이트에서는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완료하여 학위를 수여받기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위취득을 위한 필수요건들은 거주기간, 박사과정심사위원회(Doctoral Committee)와 대학원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논문 통과 여부, 최종 구술시험 통과여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석사 학위가 박사과정을

밎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첫 해의 박사과정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M.A. 또는 M.S.를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D.Ed.의 첫 해 프로그램은 M.Ed.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하기도 하다. 종합시험, 최종 구술시험 및 졸업자격, 박사 입후보 지원에 필요한 학점의 커트라인은 평균 3.00으로 규정되어 있다.

박사과정의 학생은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모두 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보 시험에 통과한 이후 8년 이내에 박사 논문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각의 학생은 그 기간을 보다 짧게 설정할 수도 있고, 기간 확장은 필요에 따라 대학원 입학서비스의 디렉터에 의해 허가된다. 그 외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위취득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거의 프로그램 과정 내에서 순차적으로 갖춰지게 구성되어 있다.

㉠ 영어사용능력(English Competence)

Ph.D. 학위 지원자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영어사용에 있어 수준이 높아야만 하고, 그것을 반드시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TOEFL이나 IELTS 같은 영어능력시험을 떠나 프로그램과정에서 교수들과 어드바이저(adviser)에 의해 적정 수준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하는데, 결국 프로그램 자체의 통과여부가 영어능력의 적정수준을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후보 시험 전에 영어사용의 결함은 교수들에 의해 지적, 수정되도록 되어 있고, 박사 종합시험 날짜가 잡히기 이전에 프로그램 과정에서 그 능력이 입증하도록 되어있다.

㉡ 의사소통 및 외국어 능력(Communication and Foreign Language Competence)

때에 따라서 Ph.D. 후보자는 영어능력 외에도 주요 프로그램 내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외국어 능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 후보자 시험(Candidacy Examination)

모든 학생들은 대학원 전공 프로그램의 교수들에 의해 입후보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입후보 시험의 목적은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 및 연구 역량을 제대로 갖

추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시험의 특성은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18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시험은 박사과정에 입문한 후 3학기 이내에 치러지도록 되어 있으며(여름학기는 제외) 휴학 중에는 이 시험을 볼 수 없다. D.Ed.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석사프로그램과 그 외의 다른 작업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얻었을 때 시험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편입학생의 경우에는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에서 25학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종합시험(Comprehensive Examination)

Ph.D.나 D.Ed.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은 모든 코스웍을 마친 후에 종합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다. 시험은 후보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몇몇 프로그램에서는 종합시험 이전에 영역별 시험("area" examinations)이나 연속 누적형 시험("cumulative" examinations)과 같은 다른 형태의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논문 프로포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하기도 한다.) Ph.D. 후보들은 종합시험 이전에 영어사용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 사용 능력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한 평균 학점이 최소 3.00이상이 되어야 지연 또는 낙성적이 없어야 한다. 종합시험 역시 휴학생일 때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 불가하다. 시험은 구술 또는 필기시험의 형태로 박사위원회의 2/3이상이 후보생으로 인정할 것을 찬성해야 한다.

㊤ 최종구술시험(Final Oral Examination)

종합시험이 통과된 후 마지막으로 치르게 되는 시험이다. 이 최종 구술시험은 논문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다.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논문의 초안을 완성하고, 논문심사위원회와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 논문의 주요 개정은 시험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최종 심사에서 박사과정위원회의 2/3이상이 긍정적이어야 통과가 된다.

㊤ 학위논문 통과(Dissertation Acceptance)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들과 위원회의 위원장, 프로그램의 의장, 학과장, 박사위원회의 최소 2/3이 모두 논문을 수용해야만 그 논문이 통과되는 것이다.

㉔ 기타 규정

한 번에 두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Concurrent Candidates)을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이나 Ph.D.나 D.Ed.등 학위명이 다른 두 분야의 학위를 동시에 얻을 수는 없다. 이 후보자는 대학원 사무실 혹은 대학원 프로그램의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 학점이나 과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정한다. 두 학위 프로그램에서 20%이상은 줄일 수가 없으며, 프로젝트나 페이퍼, 학위논문 등은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한다.

㉕ 코스(Courses)와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펜스테이트는 교수들이 따라야 할 많은 규정들이 있고, 교수들 역시 Graduate School Bulletin에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㉖ 400과 500수준의 코스

한 수업에서 400수준과 500수준의 코스(400-and 500-level courses)의 코스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400수준의 코스는 학부생 수준에서 바로 한 단계 위의 수준에 해당하는 낮은 반에 해당한다. 학부생 때의 수준보다는 정교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구성되어있지만, 현재의 쓰이는 교재의 수준 혹은 그 동급정도의 학업수준 이상은 아니다. 반면, 500수준의 코스는 그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상급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위한 과정이다. 여러 이론들과 가설, 연구방법론을 현재 뜨고 있는 혹은 기초적인 논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학생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분석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다른 코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동시에 같은 코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적 욕구나 교육적 과제들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부생 정도의 수준으로 짜여진 코스는 당연히 대학원생들에게 도전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대학원생 수준의 코스는 학부생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에게 너무 난이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대학의 심의회에서는 대학원생들은 500수준의 코스에서 대학원생에게 맞는 수준의 경험을 하길 바란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이 몇몇 한정되어 있는 400수준의 코스를 자신의 학위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듯, 500수준의 코스를 학부생이 들을 수도 있다. 심지어 3.5이

상의 학점을 가진 몇몇 학부생에 한해서는 800수준의 코스까지도 가능하다.

㉠ 복수학위 프로그램(Dual-Title Degree Programs)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일종의 부전공(minor) 프로그램이다. 부전공은 두 전공영역의 공부는 학위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며, 시험이나 학위 논문을 쓰는 것도 이중으로 해야 한다.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3학기 내에 전공 18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에 한하여 허가되며, 복수학위를 받고자 하는 박사학위과정의 학생들은 부전공에 대해서도 전공과 마찬가지로 후보자 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되어있다. 학생들의 졸업장에는 부전공이 별도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전공영역의 타이틀과 복수학위의 명칭이 표시된다.

㉡ 공동학위 프로그램(Joint Degree Program)

약대와 법대에 한하여, 특정한 경력의 기회를 주는 보조적인(complementary) 이중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다. 학생들이 동시에 특정 분야의 대학원 학위와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에서 승인한 JD 또는 MD 같은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를 동시에 받고자 할 때 이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대학원 프로그램과 디킨슨 법대(Dickinson School of Law) 혹은 약대(the College of Medicine)의 학점을 조정하면서 함께 받을 수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두 번 카운트되는 코스로 여겨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경력에 대한 기회를 위해 별도의 부가적인 훈련도 제공된다. 물론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발과정과 절차(recruitment tool)를 거쳐야 한다. 일반 프로그램과는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변경’신청서를 제시해야 하며, 최소한으로 설정된 학위과정 프로그램의 전공필수는 이수해야 한다. 대학원 프로그램의 20%-40% 정도만이 MD 또는 JD의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에서 제공된 코스로 대체될 수 있다.

③ 학점(Grade)에 관한 규정

펜스테이트 학점 규정은 한국의 일반적인 학점 규정과 비슷하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학점 시스템은 4.0만점으로 하여 A, A-, B+, B, B-, C+, C, D or F로 나누어진다. C-, D+, D-는 존재하지 않으며, 패스(P)나 F(Fail)로 측정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credit)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H, HP, P, LP, P, W, WN, R, DF(Deferred), AU가 부여되기도 하는데 각 학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하였다.

<표 III-4> 펜스테이트 학점 규정

항 목	내 용
Grading System for M.D. Candidates	M.D.프로그램에 지원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수를 부여받는다. - H(Honors): 영예로운 성적(매우 뛰어남) - HP(High Passing Grade): 높은 성적 - P(Pass): 적정수준의 통과성적 - LP(Low Passing Grade): 통과는 하지만 낮은 성적 - F(Failing Grade): 학점 이수에 실패
Research Grades (연구학점)	이 학점은 강사가 학점 대신에 기호 R(research)로 표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연구를 위해 시간과 작업 노력을 적정수준으로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구 및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 이 R을 일반학점으로 교체하는데, 일반학점으로 교체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R등급은 성적표에만 기재된 채 졸업요건을 위한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No Grade (학점 없음)	DF나 F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단 NG로 처리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특별한 이유를 해명해야할 때도 있다. 다음 학기 수업의 네 번째 주까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F로 변경이 되며, 학생, 강사, 학과장에게 통보가 된다. 성적표에 NG가 있는 학생은 졸업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

* 출처: Senate Policy 중 학점에 관한 내용을 표로 정리

또한 펜스테이트는 ‘학기 중간평가(Mid-Semester Evaluation)’라고 하여, 가을과 봄 학기(여름학기 제외) 중에 세 번째 주부터 여섯 번째 주까지 강사가 각각의 학생의 성과 혹은 역량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중간고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학생들의 현재 수준 및 현황을 총체적으로 지도교수(advisor)에게 보고하기 위함이다. 정규학생 중 27학점 혹은 그 이하를 취득한 학생, 임시적으로 들어온 학생, 학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 중 C미만의 학점을 소지한 학생이 있다면,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통보되어 그 학생의 학업의 진척사항을 알려주게 된다.

마) 지도교수 및 박사과정위원회의 역할

① 지도교수(Advisor)와 박사과정위원회(Doctoral Committees)

모든 박사과정 학생들은 지도교수(Advisor)와 박사과정위원회(Doctoral Committees)의 지도를 받게 된다. 학위 프로그램에의 입학에 위한 학생들은 전공 학과의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의 협의 내지 면담 과정을 거쳐야만 하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박사과정위원회로부터 학위수여가능 여부를 평가받도록 되어있다. 이 평가를 박사학위심사(Doctoral Examinations)라고 한다.

박사학위심사에는 적어도 3명의 박사과정위원회의 위원(학위논문 지도교수(thesis Adviser)나 위원장을 포함)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시험 3주 전에는 대학원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박사학위수여 가능 여부는 논문을 심사와 최종 구술시험이 치러진 이후에 투표를 통해 판가름되는데, 2/3가 인준하여야만 가능하다. 통과 후에는 학위논문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험을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박사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박사과정위원회는 학생들의 학위프로그램의 전체적 아웃라인을 설정하고 허가하는 역할을 한다. 박사과정후보자(candidate)로 허락받은 학생이 생기면 즉시 학생이 지원하는 해당 프로그램 전반을 검토한다. 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위원회 위원장, 연구지도교수,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이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오해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정기적인 대화를 유도한

다. 박사과정위원회는 적어도 일 년에 한번 학생들과 만나 (1)유용한 조언을 제공하고, (2)학생들의 연구 프로포절을 청취하고 이를 허가하며, (3)연구의 진행과정과 연구의 질을 평가하고, (4)프로그램과 관련한 주요한 이슈 및 쟁점사항을 논의한다.

박사과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위원회의 멤버 중 한 명은 후보자의 전공 외 다른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외부분야멤버(Outside Field Member)”로 불리며, 이는 보다 넓은 영역의 안목과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학업, 세미나 및 박사학위획득 과정을 코칭하면서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이 중 논문 지도교수(The dissertation advisor)는 반드시 이 박사과정위원회의 소속이어야 하며 대부분 위원장의 일을 동시에 담당한다.

②대학원 학생위원회(Graduate Student Committee)

대학원 학생위원회의 역할은 학생의 프로그램의 찬성여부를 알리고, 학생들과 의장, 위원회의 회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함에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돕는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 후보자로 허락받은 학생이 생기면 의장과 해당 학생은 그 학생의 최종 원고를 최종 구술시험 최소 2주전까지 박사위원회에 전달해주며, 대학원등록처(Office of Graduate Enrollment Services)에 알려 시험 스케줄을 잡는다.

나. 영국

1) 제도의 배경

영국의 대학원 체제는 소위 '교육학위'만을 수여할 수 있는 대학(university college) 이하의 기관들의 그룹과, '연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는 대학교(university)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⁶⁾. 이러한 대학원 학위 과정은 석사 학위부터 양분된다.

6) 영국의 고등교육 분야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교(university)와 나머지 고등교육기관으로 양분된다.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로는 전통적인 대학이나 연구

석사학위 수준에서 교육학위는 1~2년간의 풀타임 이수기간 동안의 강의와 시험, 그리고 짧은 논문 등의 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수여되는 학위를 지칭한다. 대표적인 교육학위로는 인문학부와 사회과학부, 신학부 등이 수여하는 인문석사(MA), 순수/응용과학부가 수여하는 과학석사(MSc), 법학부의 법학석사(LL.M, 또는 ML), 스코틀랜드의 인문석사(MLitt)⁷⁾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연구석사학위는 박사학위 전단계의 석사학위로 철학석사(MPhil), 연구석사(MRes), 인문석사(MLitt) 등이 있다. 일부 대학들은 박사학위 과정을 지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연구석사학위의 취득을 요구하기도 하나, 석사와 박사 과정을 제도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대학들은 박사학위과정의 최종 이수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대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영국은 1992년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⁸⁾ 시행과 함께 대학들의 연구학위 수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그 이후 신설된 대학들은 중심으로 연구학위 취득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1994년/95년에 총 86,960명 선이었던 영국 대학의 연구학위 과정 등록자 수는 2001/02년에는 106,995명으로 증가했고(Talyor, 2004),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영국의 고등교육 통계국(HESA)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10년 석박사 학위 과정의 총 재학생 수는 333,660명이었고, 2009년/2010년의 연구학위 취득자 수는 21,680명에 달했다. (HESA, 2010). 이러한 연구학위과정 이수자 수의 증가는 연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교 수의 증가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계속교육및고등교육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50여 개에 불과하던 영국 대학교의 수는 2004년까지 100개로 급증

보다는 교육에 치중하는 대다수 대학(university college)와 각종 전문기술 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colleges), 계속교육기관(further education), 개방대학(open university) 등으로 구성된다(University UK).

- 7) MLitt는 Cambridge와 스코틀랜드 일부 대학에서는 인문학부의 연구석사학위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교육석사학위라는 뜻의 'T'를 앞에 붙이기도 한다.
- 8) 1992년부터 시행된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대학교의 자격을 구분하는 임무를 Privy Council를 부여하면서 연구학위 수여 기준을 완화하여, 사실상 그 전까지 유지해 오던 고등교육분야의 이분 시스템(binary system)을 철폐하였다. 그 결과 35개의 폴리테크닉 대학(polytechnics)들이 연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로 격상되어 연구학위 과정과 학생 수의 급증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이 법안은 기존의 대학 재정 위원회(University Funding Council)를 잉글랜드 전담 위원회인 HEFCE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전담 위원회 FEFC로 나누어 대학 재정과 관련한 정부 권한을 분산시켰다. (University UK, 2009)

하였고, 2010년 현재 115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 77%인 89개의 대학교가 잉글랜드주에 소재하고 있고, 이 89개 중 16개가 타주 소재 대학교 4개와 함께 영국의 아이비리그라 할 수 있는 러셀 그룹(Russel Group)⁹⁾을 구성하고 있다.

Talyor(2004)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주로 파트타임, 여학생, 외국인 학생 수의 급증으로 인해 영국 전체의 연구과정 학위 등록생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92년의 법 개정을 통해 연구학위 수여 자격을 얻게 된 신생 대학(과거 폴리테크닉 대학)들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에 대한 영국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연구학위과정을 개설하는 전공과 기관의 수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이론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전문박사(professional PhD) 과정이 창작미술/디자인, 문헌정보,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 등 신생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가 심화되면서 연구학위 과정의 질적 수준과 박사학위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최소 질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영국의 연구학위 프로그램(RDP) 지원 정책을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개별 고등교육 기관들은 물론 고등교육 분야 전체에서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03년에 발표된 영국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개혁을 위한 백서 '고등교육의 미래(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DfES, 2003)'에서는 영국 대학들의 연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연구 능력이 우수한 소수의 대학들에 대한 집중 투자'와 '기관/전공간의 적극적인 협업(collaboration)'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학위 과정 역시 탁월한 연구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소수의 연구중심대학들의 연구학위 과정 규모는 확대하고, 적절한 연구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임계치(critical mass)를 달성하지 못한 영세한 대학들의 연구학위 과정은 축소하는 소위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백서는 강조했다. 아울러 백서는 향후 연구학위 과정의 목표와 성격도 전통적인 단일 학문 중심/학계 중심의 성격을 탈피하여 학위 취득자의 '전수 가능한 기술(transferable skill)'의 연마를 통해 학계 안팎에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9) 러셀 그룹 회원교 20개 중 18개가 영국 정부의 연구비 수주 상위 20위 대학에 속하며, 2004년에는 영국 대학 재정 위원회(HEFCE)가 교부하는 QR기금의 64%를 수주하였다.

에서 영국 정부는 연구학위 과정 운영과 관련한 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가적 연구비 배분 체계를 경쟁적 방식으로 개선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영국 대학들의 효율적인 연구 능력 강화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2) 대학원 구조

영국의 연구학위 프로그램(RDP)의 질 관리 체계는 잉글랜드 고등교육 재정위원회(이하 HEFCE)가 수립한 '대학원 연구학위 프로그램 수준 향상 체계(Improving standards in postgraduate research degree programmes)'로 대표된다. 이 HEFCE의 질 관리 체계는 기존에 영국 고등교육 분야 전체의 질 관리를 담당해 온 '고등교육 질 관리국(QAA)'의 대학원 질 관리 코드(Code of Practice)의 개정에 반영되었다. HEFCE가 2002년 10월 처음으로 발표한 후 두 차례의 고등교육 관련 기관들의 자문을 거쳐 2004년 최종 합의를 도출한 '대학원 연구학위 프로그램 수준 향상 체계'는 총 8개 영역에 있어 연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대학이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기준(minimum threshold standards)과 HEFCE가 권장하는 우수사례(recommended good practice) 등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I-5>와 같다.

2002년에 발표된 최초안은 개별 연구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임계치(critical mass)로서 (1) 적어도 5명의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연구자(research active staff)와 (2) 적어도 10명의 동료학생을 최소 기준으로 요구했었으나, 2003년 1월의 비공식적 의견 수렴과 2003년 9월의 공식적 자문 절차를 통해 8개 분야로 정리되고 최소기준과 우수 사례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졌다. 2003년 1월의 관련 기관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의견 수렴에서는 '최소기준'이라는 개념의 필요성과 제시된 기준들의 내용적 타당성 및 성취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임계치와 같은 정량화된 성취목표가 각각의 학문분야의 서로 다른 요구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규모가 작거나 특수한 분야의 연구단위의 경우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파트타임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의 학생 등 비전형적인 학생들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표 III-5> HEFCE의 대학원 연구학위 프로그램 수준 향상 체계

영역	최소 기준	우수사례
1. 기관 차원의 조치	각 기관들은 QAA의 질 관리 코드를 준수해야 함.	기관별 질 관리 코드에 대한 감독, 심사 및 적극적인 적용 기관 및 하부 조직의 질 관리 코드 준수 정도와 달성 목표에 대한 정기적인 비교 심사
2. 연구 환경	각 연구 영역은 학생과 다른 연구자들 간의 '효과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해야 함 풀타임 학생의 경우 4년 내 학위 취득자 비율이 70%(파트타임 학생의 경우 8년 내 학위취득률) 이상이어야 함	도서관, IT 설비 등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적절한 환경 조성
3. 학생 선발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학위 취득을 입학 필수 요건으로 지정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이는 교원 2명 이상이 학생 선발에 관여 웹 기반 지원 및 정보 제공 시스템 입학 허가시 학위 과정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고지 학생과 고등교육기관간의 서면 합의 오리엔테이션 및 출석 감독
4. 연구지도	연구지도자 훈련 의무화 연구지도팀 운영 대표 연구지도자는 최소 1명의 선행 연구지도 경험을 보유해야 함 대표 연구지도자당 지도학생수는 최대 6명으로 제한함. 정규적인 연구지도	
5. 초기 심사 및 연구 진행	패널을 통한 연례 연구 진행 심사 2명의 시험관(최소 1명은 외부 인사)에 의한 구두 시험	12개월 후의 연구 진행에 대한 초기 심사 시험관에 의한 구두 심사 전 독립적인 논문 심사
6. 연구 및 기타 기술 개발	학생 대상의 훈련 프로그램 제공	학위 과정 초반에 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필요한 기술 훈련을 결정 훈련 효과성 평가 세미나 및 학회 출석에 대한 대학의 기대수준을 학생에게 명확히 전달
7. 피드백 절차		비밀 피드백 시스템 및 학생, 지도교수, 시험관, 재정지원자 등 모든 관련자들을 위한 합동 심사 시스템
8. 사후구제/고충처리	공평한 사후구제 시스템	

* 출처: McGhee(2004). pp. 209.

HEFCE는 이러한 의견 수렴 결과와 2003년 9월의 유관기관들에 대한 공식적인 자문을 통해 최소기준과 우수사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문제가 되었던 정량적 기준은 일단 삭제하는 대신, 의견수렴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립된 영국 연구학위 프로그램의 질 보장 체계는 국가수준에서 큰 범위의 가이드라인, 즉 절차적 기준만을 제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참조하여 개별 기관들이 자신들의 실정 및 학과의 특성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 운영하며, 정부가 운영 현황과 실적을 추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관련 기관들은 이미 1999년부터 QAA가 실시해 오던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한 질 관리 코드와의 중복이나 혼선을 막기 위해, QAA 질 관리 코드를 HEFCE의 질 관리 체계에 맞게 수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QAA는 1996년 고등교육 질 관리 위원회(HEQC)가 발간한 ‘연구학위 질 보장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Quality Assurance of Research Degrees)’과 HEFCE 질 관리 체계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등교육의 학문적 질 및 기준 보장을 위한 행동 코드(Code of Practice for the assurance of academic quality and standards in higher education)’(이하 질 관리 코드) 중의 연구학위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한 가이드라인을 2004년 9월에 발표하였다(QAA, 2004). QAA의 질 관리 코드는 법규라기보다는 연구학위를 운영하는 대학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정량적인 최소 기준 없이 다음과 같은 10가지 영역의 총 27개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① 기관 차원의 행정체제(institutional arrangements); ② 연구환경(the research environment) - 학술지 게재나 출판과 같은 연구 업적, 교수 수, 박사후 과정 연구자 수, 동료학생 수, 연구 설비 등; ③ 학생 선발과 오리엔테이션(selection, admission and induction of students); ④ 연구지도(supervision); ⑤ 연구 성과에 대한 점검 및 심사(progress and review arrangements); ⑥ 연구 및 기타 기술의 개발(development of research and other skills); ⑦ 피드백 메카니즘(feedback mechanisms); ⑧평가(Assessment); ⑨학생 목소리의 반영(student representations)-고충처리(complaints) 및 사후구제 절차(appeals).

HEFCE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주정부의 RDP (research degree programmes) 펀드를 받는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해 “2005/06년도부터 모든 연구학위 과정을 QAA 질 관리 코드에 부합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QAA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 심사에서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추후의 재정지원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HEFCE, 2004)¹⁰⁾. QAA의 질 보장 코드가 발표된 이후 2005/06년도의 재정 지원과의 연계를 위해 QAA의 연구학위과정 운영실태 특별 감사가 2004년에 이루어졌다. 감사팀은 개별대상들이 수행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수합하여 이를 분석하고, 개별대학들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이후 이루어진 발전과정에 대해 감사팀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감사팀이 개별대학에 대해 작성한 평가보고서는 모두 출판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러한 방식과 함께 HEFCE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학위 프로그램의 질 보장 장치를 추가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① 고등교육 통계국(HESA)의 자료 분석¹¹⁾을 통한 연구학위 과정 학생들의 학위 취득 소요 기간 모니터링; ② 고등교육원(HEA)의 ‘대학원 연구 경험 설문조사(PRES)’¹²⁾

3) 대학원 지원제도

영국 정부의 RDP에 대한 재정지원은 크게 HEFCE의 ‘QR기금(Quality Related funding)¹³⁾’과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의 특별 연구비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

10) HEFCE가 제시한 반영방법에 따르면 QAA가 대학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들의 질 관리 코드 준수 정도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HEFCE에 통보하고, HEFCE는 문제점이 지적된 기관과 상의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QAA는 이후 일정 기간 해당기관들의 개선상황을 후속점검하고 후속점검 결과를 다시 HEFCE에 보고한다. 그 결과 해당기관이 여전히 질 보장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해당기관에서 취한 조치가 문제점 해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HEFCE는 해당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환수한다.

11) HESA Return: HEFCE는 영국 고등교육 통계청에서 학생, 교직원, 대학졸업자들의 경로추적, 재정, 비학점 과정 관련 정보 등 5개 항목에 대해 통계자료 수집하는 시스템을 통해 연구학위 과정 학생들이 학위 취득에 걸리는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HEFCE 차원에서는 연구학위 과정의 질적 수준과 관리하기에 가장 유용한 정량적 데이터 중 하나임. 취득 기간 면에서 평균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교육과정이 발견될 경우 HEFCE는 QAA로 하여금 해당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와 수준에 대한 후속점검을 요청하게 됨.

12) www.heacademy.ac.uk/ourwork/research/surveys/pres: 연구학위 과정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로 질문 일부가 QAA의 질 관리 코드 준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결과 분석 보고서(Overview Report)는 출판되어 대중에게 공개됨.

13) 영국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QR 연구 펀드는 보통 기본 QR, 기부성 지원, 재계 지원, 그리고 RDP 펀드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매년 정액교부금(block grant)의 형태로 제공됨. (HEFCE 2011a)

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학위 과정 이수자들에게 학부과정과 마찬가지로 연간 등록금을 최고 3천 파운드까지 자유롭게 징수할 수 있는 반면, 연구학위 과정 이수자들에 대해서는 위의 두 기관의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등록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¹⁴⁾. HEFCE의 QR기금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RDP 연구 펀드는 현재 ‘연구평가체계(RAE)’에서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고등교육기관(capability funding을 받는 7개 전공의 경우에는 3a와 3b 점수도 가능)에 소속된 학생들 중에서 연구비 수령 자격이 되는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국적의 학생들¹⁵⁾에게 배분된다(HEFCE, 2011b). 20011/12년의 경우 총 2억500만 파운드가 분야별 연구 및 지도비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총 42,700명의 학생들에게 배분되었다. HEFCE는 연구 및 지도비용의 차이에 따라 모든 전공을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그룹의 전공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2010/11년의 경우 연간 5,151 파운드가,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그룹의 전공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3,447 파운드가 지급되었다.

HEFCE는 2011년부터 RDP 연구 펀드의 규모를 3,500만 파운드 가량 늘리고, 이 펀드의 분배를 교육과정 질보장과 연결시키는 한편, 대학이 받는 총 QR 펀드에 대한 RDP 펀드의 비율을 각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생 연구지도 능력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HEFCE, 2011a ; 2011b). 한편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가 연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특별 연구비 제도는 2008년/09년 한 해 동안 총 19,000명의 학생들에게 총 3억 7,600만 파운드를 지원했다. 연구위원회가 이 펀드의 대부분을 박사과정훈련센터(DTCs)들을 위한 정액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연구비 제도는 HEFCE의 RDP 펀드에 비해 소수의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특별 연구비 제도는 DTC가 연구비를 지원할 학생과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장 최근의 동향에 맞춰 연구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할 수

14) HEFCE가 HEPI에 제공한 2007년/2008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 및 EU 회원국 출신 연구학위 과정 학생들은 등록금의 18.9%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감면(institutional waiver)을 통해, 34.1%는 정부 지원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 총 53% 정도를 정부와 대학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교육학위의 대학과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34.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House, 2010)

15) 보통 연구학위 과정 이수 기간이 풀타임의 경우 3년 이내인 학생 중 ‘연구활동설문조사(RSA)’를 통해 정부에 보고된 학생에 해당됨.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있다(Smith, 2010). 2010년 현재 공학 및 물리학 연구위원회는 총 69개의 DTC를 지원하고 있고 경제/사회 연구위원회는 2011년부터 관련 분야의 DTC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개 DTC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접학문들 간의 학제 간 연구 및 동일 학문 분야의 합동 연구 등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프랑스

1) 제도의 배경

역사적으로 파리는 중세 유럽의 초기 대학들 중 하나를 보유한 도시였다. 16세기부터 유럽에서는 대학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 수적 증가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학의 역할도 변화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자율성은 군주의 강한 규제에 의해 약한 상태였으며, 학생 및 교사의 이동을 통한 유럽 내의 전반적인 지식의 생산과 교환은 정치적, 종교적 경계의 강화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는 주로 고위직 공무원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특화된 학교들 혹은 그랑제꼴(Grand écoles)¹⁶⁾이 주로 설립되었고, 이러한 학교들은 현재에도 지속되어 온다. 특히 그랑제꼴은 학부를 넘어서 석사 학위로 함께 인정받는 프랑스의 고유한 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세기에 들

16) 그랑제꼴(grandes écoles)은 프랑스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교육제도로써 전문직의 고급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공, 사립의 교육제도이다. 나폴레옹 시대에 만들어진 국립 토목학교에서부터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국립행정학교(ENA)에 이르기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교육기관은 국립대학교인 Université와 교육의 내용, 목적, 방법 등 모든 것이 확연히 구분된다. 대학이 보수적, 이론적, 학문적이라면 그랑제꼴은 진보적, 실무적 경향을 띠며 모든 학생들이 국비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한다. 이 기관은 프랑스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졸업자들도 그에 부응하는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 외국인의 입학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강만 가능하다. 바칼로레아(BAC)와 2년의 예비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총 기간은 3년 혹은 4년이다. 그랑제꼴의 종류로는 고등사범학교(ENS), 이공계열인 에콜 폴리테크닉(Ecole Polytechnique), 행정계열인 국립행정학교(ENA), 상경계열인 고등상업학교(HEC)가 있다.

어서는 그랑제꼴(Grand écoles)의 수가 증가하고 산업 및 상업 분야로 그 범위가 다양해짐과 동시에 넓어졌다. 19세기까지는 에꼴 노르말 수페리에스(Ecoles normales supérieure)를 제외하고 과학(science)과 인문학(art) 간에 엄격한 분리가 있었다.

1870년대에 프랑스 고등교육은 독일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큰 변화를 겪는다. 1871년, 독일과의 전쟁에서의 패배는 프랑스 교육에 개혁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국가적인 개혁과정이 시작되었다. 대학은 이 시기에 이러한 기관들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유명한 연구기관들과도 경쟁해야 했다. 이러한 경쟁은 고등교육의 대량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고등교육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은 1968년 학생운동에 의해 다시 형성되었고, 그 결과 2002년 이전의 대학 형태의 기본이 되는 Edgar Faure의 1968년 법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학사과정 3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학점 이수 박사과정인 DEA 1년과 박사논문과정 3년)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는 미국식 학제인 학사과정 4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과는 다른 형태를 보였다. 특히 이중 최종학위인 박사학위는 1984년 이전에는 대학박사, 3기 박사, 국가박사라는 세 가지 학위가 존재하였으나, 세 종류의 학위수여형태에서 비롯한 모호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1984년 개혁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단일 박사학위제도로 통합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김선미, 1998; 김진환, 2004).

특히 2002년 4월 8일에는 볼로냐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학위의 체제를 다른 유럽의 기준인 EHEA(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와 같게 변화시키기 위해 LMD 학제를 받아들이고, 고등교육을 개혁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은 학사와 석사에만 큰 영향을 미쳤을 뿐, 기존에 존재하던 박사학위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Lemerle, 2004; Eurydice, 2007). 박사과정 자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기존에 석박사 학위로 인정받지 못했던 일부 전문대학과 특수전문대학이 학제를 일반대학과 일치¹⁷⁾시켜 국가로부터 석사학위과정에 대해 인정받기도 하고, 박사를 신설하기도 하였다(한택수, 2008).

17) 예를 들어, 파리 정치학교는 4년제에서 5년제로, 건축학교는 6년제에서 5년제로 변화하였다.

2006-2007년도를 거치면서 학제는 LMD(Licence-Master-Doctorat) 학제로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에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미국식 학제와 같은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는 LMD에 해당하는 과정 이외에 많은 특수학교들과 직업전문교육이 발달해 있었으며 이러한 기관들은 국가와의 4년 계약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점차 학제 안으로 편입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모든 기관과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LMD학제로 완전히 이행되는 것은 2010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Eurydice, 2007).

2) 대학원 구조¹⁸⁾

프랑스 대학원의 학제는 2002년 4월 8일 처음으로 LMD (Licence-Master-Doctorat) 등급의 학제로 개정되어, 2007년을 기준으로 기존의 학제에서 완전히 LMD(Licence-Master-Doctorat) 학제로 변화하였다. 기존의 세 주기(three cycles) 구조에서 LMD 구조로 변화하였으나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의 학제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후의 학제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학제는 단기과정(short courses)¹⁹⁾과 장기과정(long course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구분은 과정 후 수여받는 학위의 특성에 따라 나뉜다. 대학과 다른 고등교육기관들은 대체로 장기과정에 속하며, 대학원 과정 역시 이 부분에 속한다. 장기과정은 크게 세 주기(three cycles)로 이루어지며, 각 주기는 국가학위를 수여받음으로써 종료된다.

첫 주기는 기본교육과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년 프로그램으로 (DEUG: *Diplôme d'études universitaires générales*)를 받으며 종료된다. 이 학위는 두 번째 주기로의 진학을 위한 준비학위의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 주기는 일반 프

18) 대학원의 구조는 CHEPS(the Center for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에서 2007년에 발간한 [프랑스의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in France: Country report)]를 참고하였다.

19) 단기과정 중의 하나인 고급 기술자 과정(STS: *Section de techniciens supérieurs*)에서는 고등직업학위 또는 고급기술자자격증(BTS: *Brevet de techniciens supérieurs*)를 수여한다. 또 다른 단기과정인 기술전문대학(IUT: *Institut universitaire de technologie*)에서는 기술전문대학졸업증(DUT: *Diplôme de universitaire de technologie*)를 수여한다. 일반 대학의 학생들도 이러한 전문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전문직으로 이어진다.

로그래밍과 전문 프로그램의 두 종류로 이루어진다. 일반 프로그램은 학사학위(Licence)를 주는 첫 해와 그에 이어 석사학위(Maîtrise)를 주는 둘째 해를 포함한다. 이 두 학위는 최종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위취득자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석사(MST: Maîtrise de science et techniques), 경영학석사(MSG: Maîtrise de science de gestion), 경영전산학석사(MIAGE: Maîtrise de méthodes informatiques appliquées à la gestion)의 2년짜리 특수 석사(Maîtrise) 과정이 있다. 또한 1999년 볼로냐 선언의 결과로 설립된 1년 과정의 전문학사(Licence professionnelle), 고급 직업 교육을 위해 대학에서 수여하는 3년 단위의 프로그램인 2기 과정 수료증(Magistère)을 수여하는 과정이 있다. 세 번째 주기 역시 학문적인 과정과 전문적인 과정으로 나뉘는데, 학문적인 프로그램은 박사논문제출자격증에 해당하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제 과정(DEA: Diplôme d'études approfondies)이며, 그 이후에 박사학위(Doctorat)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박사학위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학위는 프랑스 교수자격(HDR: 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기술연구학위(DRT: Dilôme de rescherches techniques)와 전문고등연구학위(DESS: Dilôme d'études supérieures spécialisées)를 수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학위와의 비교는 [그림 III-2]와 같다.

프랑스 대학	대학일반 교양과정 (DEUG)		학사과정 (Licence)	석사과정 (Maîtrise)	박사과정(les études doctorales)				
					학점이수과정 (DEA)		논문과정 (Doctorat)		
	1기(1er cycle)		2기(2ième cycle)		3기(3ième cycle)				
	Bac+1	Bac+2	Bac+3	Bac+4	Bac+5	Bac+6	Bac+7	Bac+8	Bac+9
한국 대학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출처: 김승연(2005). 프랑스와 한국의 고등교육 학제에 대한 비교연구 p. 48 참고.

[그림 III-2] LMD 학제 이전의 프랑스와 한국의 고등교육 학제 비교

2006-2007학년도가 지나면서부터 대학과 그랑에따블리쓰멍(grand établissements)의 모든 프로그램은 새로운 LMD 구조에 따라 조직되고 자리 잡았다. 그 이외의 다른 고등교육 기관들은 여전히 전술한 바와 같이 운영된다. 볼로냐 체제에 동의한 국가들은 자국의 교육체제를 LMD과정에 맞게 재편하였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첫 주기(first cycle)이 20)학사(Licence), 두 번째 주기(second cycle)가 석사(Master), 세 번째 주기(third cycle)가 박사(Doctorat)로 변화하였다.

Licence는 프랑스형 학제에서의 학사(Bachelor)이다. 6학기로 구성되어 있고, 구학제중 2년 프로그램인 DEUG와 1년간의 Licence로 구성되어 있다. 2년 직업과정(BTS, DUT, DEUST)뿐만 아니라 전문학사(Licence Professionnelle) 역시 남아있으며, 이전 학제에서 단기과정에 해당하는 학생들 역시 이 과정에 포함되어 새로운 Licence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Licence(Licence LMD)나 전문학사(Licence Professionnelle)를 가진 학생들은 그 다음 과정인 석사(Master)로 진학할 수 있다. 석사는 연구석사(Master recherche)와 전문석사(Master professionnel)로 나뉜다. 연구석사는 기존의 Maîtrise 과정과 DEA과정의 첫 해를 대체하며, 전문석사는 현존하는 Maîtrise과정과 DESS 과정의 첫 해를 대체한다. 전체 과정은 4학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그랑제꼴 졸업자들은 석사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받는다. 연구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해 박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석사학위 취득자는 별도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박사과정은 총 6학기로 구성된다.

LMD 학제로의 변화 이후 박사과정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박사 진학 대상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던 다른 기관에서의 진학이 가능해졌고, 박사준비과정 이후의 학생들이 논문을 쓰거나 보다 넓은 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강의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박사학위는 대학(universités), 에꼴 노르말 수페리에스(École Normales Supérieures(과학 등을 전공으로 하는 그랑제꼴)), 인증받은 공립 고등교육기관(habilités)에서 고등교육및연구부서의 승인에 따라 단독으로 혹은 함께 수여된다.

20) 기존의 Licence와 구분하기 위해 Licence LMD라고 불린다.

프랑스 대학	학사(Licence)과정			마스페르(Master)과정		박사논문과정 (Doctorat)			
	L1	L2	L3	M1	M2				
	본인이 원하면 DEUG(대학일 반교양과정수료 증)취득 가능함		Licence (학사 학위) 취득	Maîtrise (석사 학위) 취득	Master Recherche ou Master Professionnel 연구석사 또는 전문석사 등급 취득	Doctorat (박사학위)취득			
한국 대학	Bac+1	Bac+2	Bac+3	Bac+4	Bac+5	Bac+6	Bac+7	Bac+8	Bac+9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출처: 김승연(2005). 프랑스와 한국의 고등교육 학제에 대한 비교연구 p. 50 참고.

[그림 III-3] LMD 학제 이후의 프랑스와 한국의 고등교육 학제 비교

3) 대학원 지원제도²¹⁾

프랑스 고등교육은 크게 4개의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에는 고등교육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부서가 있는데, 그 중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는 가장 명확하고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들은 주로 특별 학교들과 기관들을 책임진다. 특히 박사학위과정의 경우는 고등교육및연구부(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주로 관장한다. 2007년에 교육부와 연구부는 두 부서로 나뉘었고, 국가교육부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담당하고, 고등교육및연구부는 그 이후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21) 참여자에 대한 부분은 CHEPS(the Center for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에서 발간한 [프랑스의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in France: Country report), 2007]을 참고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은 국립대학(EPCSCP)과 대학이 아닌 다른 기관들, ENS와 그랑제쥘, EPA(EPCSCP에 속한 것과 자율적인 것으로 나뉘)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다수의 기관들이 중앙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가고등교육및연구위원회(CNESER: National higher educationa and research board)는 교수와 주요 강의자의 임용 및 질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각 전공의 대표자, 각 이익집단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2/3 이상의 구성원이 각 집단의 동료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전체 구성원은 투표나 임명의 방식으로 선출되어 4년의 임기를 가진다.

연구영역에서는 연구부의 부서나 장관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많은 수의 자문위원회가 존재하며 그 중 가장 주요한 것들로는 연구 및 기술 자문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CSRT)), 국가과학위원회(the Conseil national de science), 국가인문과학발전위원회(the Conseil national pour un novel développement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등이 있다. 이들은 각 분야의 학자들로 이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산업, 지역의 대표자들도 파트너로 참여하며, 장관의 연구정책과 연구예산 편성에 관한 의사결정에 조언한다.

국가 연구 정책의 넓은 목표는 각 부처 장관으로 이루어진 과학기술연구위원회(CIRST: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et Technologique)에 의해 결정된다. 연구부의 장관이 최종적으로 정책을 정교화하고 추진한다.

이처럼 프랑스 고등교육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직원 고용, 프로그램의 내용, 예산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이후(1982년 분권법)로 분권화의 과정을 통해 다른 참여자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재정에 관한 부분에서는 2007년 8월에 제정된 새로운 법에 따라 대학들은 그들의 예산 및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학은 예산 문제에 관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게 되었고, 대학 기금을 조성하거나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사기업과의 파트너십은 가능해졌으나 이는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동연구를 하는 정도이며, 대학이 스스로 기업을 만드는 것 역시 가능하지만 고등교육법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사적 분야가 확대되

어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고등교육기관들과 사적 분야의 파트너십을 지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의 성과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복잡한 감시 및 보고 장치의 사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의 공공재정에 관한 새로운 법(LOLF)은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한 고등교육 재정과 결과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Eurydice, 2008).

Eurydice는 2008년에 유럽의 고등교육거버넌스에 대한 출판물을 펴냈는데, 그에 따르면 예산 혹은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포뮬러 펀딩(formula funding) 방식과 전략적 목표에 따른 성과계약(performance contracts based on strategic objectives)방식,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선정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funding for specific research projects, awarded in the framework of competitive bidding procedures)을 채택하고 있다.

포뮬러 펀딩의 경우에는 전년도, 혹은 현재의 등록생 수, 및 기관 활동에 관한 다른 지표들을 사용하여 재정지원을 결정한다. 또한 성과계약에 있어서는 대학들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목표의 질, 연구, 기관의 거버넌스 등이 기준으로 포함된다. 대학들은 반드시 각 대학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정책들을 명시하여 고등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국가 공공 서비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6년의 재정법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은 이러한 기준과 목표들을 포함하여 각 고등교육기관들과 갱신 가능한 성과 계약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는 기관이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성과계약이 재정지원방식의 주를 이룬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 기관은 정부로부터 정액교부금을 받지만 그들은 재정지원기관 혹은 감사기관에 제출한 예산서에 따라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다른 몇몇 유럽국가와 같은 형태를 띤다. 특히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안을 감사기관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특정한 경우(예산균형이 맞지 않거나, 공공 재정지원금의 배당과 관련된 경우)에는 감사기관에 의해 예산안이 승인 혹은 거절되기도 한다(Eurydice, 2008).

2.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선진국의 대학원 체제와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세계 최정상 수준에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대학원 제도는 학과운영의 융통성, 교수들의 연구활동과 교수활동의 효과적인 접목, 연구와 학습의 통합적 연계,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등을 그 강점으로 한다. 특히 미국의 대학원은 ‘학과중심의 대학원 제도라는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형성해 연구-교육-학습의 연계라는 홀볼트적 이상을 실현시켰으며, 대학과 민간, 그리고 정부부문간 효과적인 연계와 조정, 합리적 재정지원체계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1957년 이른바 스푸트닉 쇼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교육개혁의 성과라 여겨지고 있다. 미국의 대학원 구조의 핵심은 다양성과 체계적 인증체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은 학문별, 대학원별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독자적이면서도 목적에 맞는 대학원 교육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학위체제와 학위 과정을 구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학교원과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술학위(Academic Degree; MA, MS, Ph.D)와 고급전문직과 재교육을 위한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 MBA, M. ED. MFA. Ed.D, JD 등)를 위한 교육과정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은 ‘체계적인 인증체제’를 통해 교육과 연구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학단계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단계마다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까다로운 인증체제를 만들고 이를 정부와 민간간의 운영상의 연계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질관리를 유도하고 학위에 대한 전문적 권위와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대학원 체제는 소위 ‘교육학위’만을 수여할 수 있는 대학(university college) 이하의 기관들의 그룹과, ‘연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는 대학교(university) 그룹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영국은 1992년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시행과 함께 대학들의 연구학위 수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그 이후 신설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연구학위 취득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연구학위과정을 개설하는 전공과 기관의 수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다양성을 증진시켰는데, 대표적으로 이론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전문박사(professional PhD) 과정이 신생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가 심화되면서 연구학위 과정의 질적 수준과 박사학위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최소 질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영국의 연구학위 프로그램(RDP) 지원 정책을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개별 고등교육 기관들은 물론 고등교육 분야 전체에서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그 결과 영국 정부는 연구학위 과정 운영과 관련한 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가적 연구비 배분 체계를 경쟁적 방식으로 개선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영국 대학들의 효율적인 연구 능력 강화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연구학위 프로그램(RDP)의 질 관리 체계는 잉글랜드 고등교육 재정위원회(이하 HEFCE)가 수립한 ‘대학원 연구학위 프로그램 수준 향상 체계(Improving standards in postgraduate research degree programmes)’로 대표되는데, 총 8개 영역에 있어 연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대학이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기준(minimum threshold standards)과 HEFCE가 권장하는 우수사례(recommended good practice) 등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연구학위를 운영하는 대학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QAA에서 제시하고 있다. 영국 연구학위 프로그램의 질 보장 체계는 국가수준에서 큰 범위의 가이드라인, 즉 절차적 기준만을 제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참조하여 개별 기관들이 자신들의 실정 및 학과 특성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 운영하며, 정부가 운영 현황과 실적을 추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HEFCE는 ① 고등교육 통계국(HESA)의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학위 과정 학생들의 학위 취득 소요 기간 모니터링, 고등교육원(HEA)의 ‘대학원 연구 경험 설문조사(PRES) 등 연구학위 프로그램의 질 보장 장치를 추가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의 RDP(research degree programmes)에 대한 재정지원은 크게 HEFCE의 ‘QR기금(Quality Related funding)’과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의 특별 연구비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학위 과정 이수자들에 대해서는 위의 두 기관의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등록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 이 편드는 교육과정의 질보장과 연계되어 현재 ‘연구평가체계(RAE)’에서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

들 중에서 연구비 수령 자격이 되는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국적의 학생들에게 배분되고 있다.

셋째, 프랑스의 대학원제도는 2007년을 기준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2007년 이전에는 단기과정(short courses)과 장기과정(long course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기과정은 크게 세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박사과정은 세 번째 주기는 크게 전문과정에서는 기술연구학위(DRT)와 전문고등연구학위(DESS)를, 학문과정으로는 프랑스 교수자격(HDR) 등 국가학위를 수여받음으로써 종료되는 시스템이었다. 2007년 이후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LMD(Licence-Master-Doctorat) 구조에 맞게 재편되었으며, 박사학위는 대학(universités), 그랑제꼴, 인증 받은 공립 고등교육기관(habilités)에서 고등교육 및 연구부서의 승인에 따라 단독으로 혹은 함께 수여되고 있다. 박사과정에 대한 질 관리는 다양한 참여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고등교육및연구위원회(CNESER: National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board)는 교수와 주요 강의자의 임용 및 질 관리에 대한 결정을, 연구 및 기술 자문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CSRT)), 국가과학위원회(the Conseil national de science), 국가인문과학발전위원회(the Conseil national pour un nouvel développement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등은 연구정책과 예산편성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포물러 펀딩(formula funding) 방식과 전략적 목표에 따른 성과계약(performance contracts based on strategic objectives)방식,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선정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funding for specific research projects, awarded in the framework of competitive bidding procedures) 등을 채택하고 있는데, 성과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 시사점

박사학위과정과 관련하여 대학원제도와 질관리체제에 대한 선진 주요국의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여되는 박사학위의 다양화와 차별화이다. 세계 각국은 이른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의 역할과 기능, 학위수여과정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하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에서 수여되는 다양한 형태의 박사학위들(교육학박사, 경제학박사, 행정학박사 등)은 외국의 전문학위에 해당되는 학위들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박사학위 과정에서 수여되는 다양한 학위들은 대학원 체제의 개편이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대학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른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지원이다. 세계 각국은 각 대학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대학원의 입학단계에서부터 최종학위가 수여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교화되고 체계화된 학위과정 인증체제와 질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인증체제와 질관리체제를 바탕으로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가이드라인)들을 권고하고 있고, 지속적인 인증과정을 통하여 학위의 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재정지원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과 학위의 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추면 대학원이 신설되고,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질 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가 유심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박사학위과정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참여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은 정부, 민간부문이 각 대학들과 유기적인 연계되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인증과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국가수준에서 큰 범위의 가이드라인, 즉 절차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이를 참조하여 개별 인증기관들과 질 관리 부서들이 자신들의 실정 및 특성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 운영하며, 자체평가는 물론 민간 인증기관과 정부가 운영 현황과 실적을 추후에 점검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박사학위과정 및 수여학위에 대한 인증 및 질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대학차원, 민간부문(대교협 등) 차원, 정부차원에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알맞은 질 관리 시스템(예를 들면, 정보공시, 자체평가, 인증평가, 재정지원평가 등)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IV. 대학원 설치기준 강화 방안

교과부에서는 2011년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박사과정 설치기준 강화’라는 기본방침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본 장에서의 논의는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러한 2011년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의 내용, 특히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전임교원 강의비율 등 질적 지표 중심으로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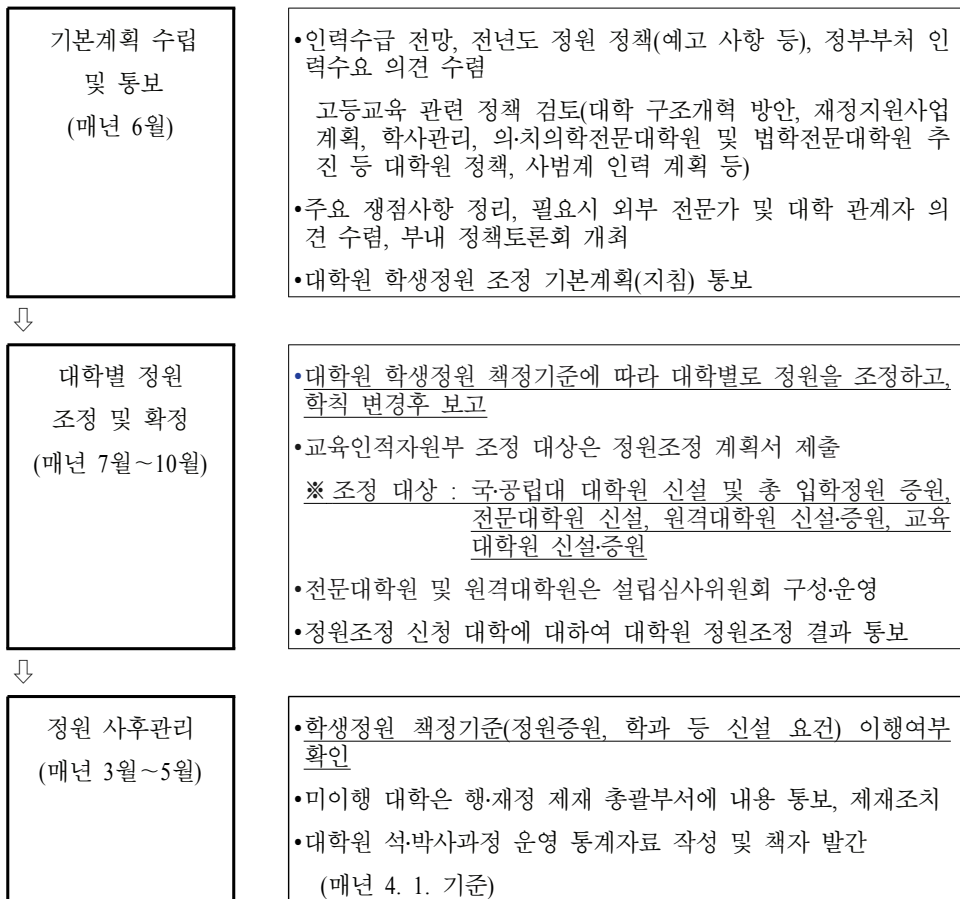
2011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자료 (36 쪽)

- 석사중심의 현 대학원 운영체제를 박사과정 중심으로 개편
 - 우수 대학 중심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확대하여 학부졸업후 박사과정 진학 및 학위 취득기간 단축 (7년 내외 => 5년 내외)
 - 학부정원 감축을 통한 박사과정 증원을 유도하고,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전임교원 강의비율 등 질적 지표 중심으로 강화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현행 박사과정 설치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구체적 대안 도출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의 사례를 검토하고, 정부 차원의 박사과정 설치기준 설정과 관련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심층적인 리뷰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본 작업을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자료에서 발표된 교과부의 박사과정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1. 현행 실태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²²⁾’에 따르면 대학원 등의 설치·세부기준을 교과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대학원의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칙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대학원 설치 절차와 설치 기준을 그림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대학원 설치 절차

22)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표 IV-1> 대학원 설치 기준

구 분		기 준
① 정원 증원 기준 (사립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교사확보율 : 100%이상 - 편제 완성대학 : 재학생 기준 - 편제 미완성대학 : 편제정원 기준 ○ 수익용기본재산·교지확보율 : 100%이상 ○ 캠퍼스별 증원기준 별도 적용
② 총 입학정원 범위내 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을 전년 이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학
③ 학과신설 등 기준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최소 7명이상 확보 ○ 전임교원 중 4명 이상은 국제수준의 학술지 또는 전국 규모의 전문 학술지에 <u>최근 5년 이내에 2편 이상(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은 3편이상)의 논문발표 실적 필요</u> ○ 예·체능계열은 저서, 작품활동을 연구업적으로 인정
	○ 일반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 박사과정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 하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 전문대학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학부 및 특수대학원 폐지 ○ 신설·증원을 위한 교원 기준 : 최소 8명 * 편제정원 100명 미만은 100명 적용 ○ 신설·증원을 위한 교사(校舍) 기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1항 준용 * 편제정원 100명 미만은 100명 적용
	○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최소 7명이상 확보 * 관련교원은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함 ○ 전임교원 중 4명 이상은 국제수준의 학술지 또는 전국 규모의 전문 학술지에 <u>최근 5년 이내에 2편 이상(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은 3편이상)의 논문발표 실적 필요</u> ○ 특허 등록 실적 등을 연구업적으로 인정
	○ 특수대학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신설시 최소 3명 이상의 관련분야 전임교원 확보
④ 정원 책정기준 사후 이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이행시 행·재정 제재조치(事後措置) - 근거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상·재정상 제재규정 (훈령 제689호) - 원칙 : 대학이 행·재정제재 대상사안으로 얻는 득보다 행·재정제재로 인한 실이 더 크도록 적용 - 결정 : 행·재정 제재 심의위원회 - 내용 : 정원동결, 정원감축, 위반 행위의 취소·정지,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재정사업에 참가 제한, 평가점수 감점, 감액지원, 지원 중단 등

2. 문제점

현행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기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대학규모, 지역적 특성 및 학문적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다수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사과정 설치비율이 고등교육의 최강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전체 대학의 12.3%인 270여개 대학에서만 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전체 대학의 87.6%인 155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대학 특성화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의 역할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여 많은 재정투자와 우수인재가 집중되어 있는 연구중심대학에서 전체 박사의 83.7%를 배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거의 모든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연구중심대학에서 배출되는 박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교육과학기술부, 2010.12). 미국에서 흔히 통용되는 카네기 분류기준(Carnegie Classification)처럼 대학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학이 명확히 연구중심대학이나 라고 말하기는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표 IV-2>에서 제시되고 있는 연구역량 우수대학이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에 어느 정도 견줄 수 있는 대학들이라고 한다면 이 대학들에 재학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 수는 미국보다 현저히 낮은 51.6%에 지나지 않는다.

<표 IV-2> 박사과정 운영비율('09년 재학생 기준, 4년제)

유형	연구역량우수 대학 (20교)	산학협력 및 교육역량 강화대학 (48교)	교육역량 개선대학 (48교)	자체 역량강화 및 구조조정 필요대학 (103교)
인원 (비율)	21,748 (51.6%)	13,022 (30.9%)	4,724 (11.2%)	2,653 (6.3%)

* 유형은 개별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해당 대학 교수들의 SCI 논문수 및 피인용 횟수 등을 분석하여 구분하였음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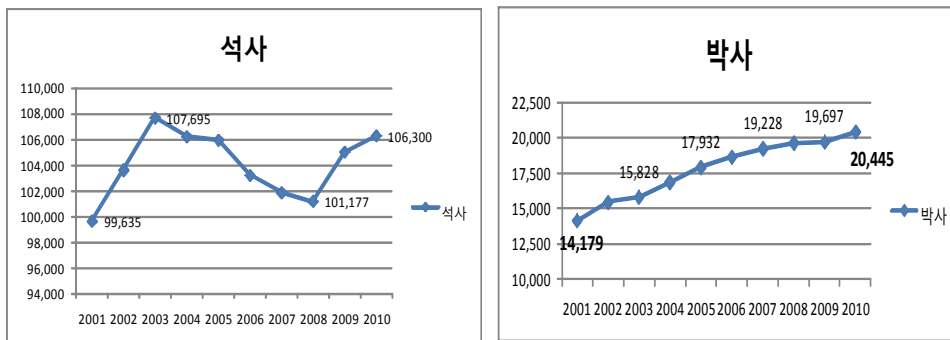
이러한 박사과정의 남설 현상은 박사과정 설치와 관련 오래전에 마련한 매우 느슨한 설치기준을 적용해 온 규정상의 문제와 2004년 이후 총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꾼 절차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르면 박사과정 설치의 경우 관련분야의 전임교원 최소 7명을 확보하면 되고, 그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최근 5년 이내에 2편(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혹은 3편(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이상의 논문발표 실적만 있으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04년 이후 정원조정계획서 사전 제출 의무를 폐지²³⁾하고 교원·교사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최소 연구실적 충족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박사과정의 질적 보장을 위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과거에 설정된 설치기준을 그대로 존치한 상황 속에서 대학에 전폭적인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2004년부터 이후 박사과정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표 IV-3>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 사전통제가 폐지되면서 2007년까지 해마다 거의 1,000명씩 대폭적으로 박사과정 정원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8년 이후에는 그 증가 추세가 상대적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2010년 현재 운영 중인 4,167개 박사과정 학과(전공)의 8%인 330개가 2009~10년 2개 년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신설된 점을 보면 여전히 박사과정 신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사전 심의제도 폐지’라는 규제 완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율의 확대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합당한 책무성 장치가 제대로 함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제도가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여지를 만든 데 있다. 즉, 박사과정을 운영할 만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질 높은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하고, 최소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과 운영과정 점검 등 질적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대학원 교육, 특히 박사과정 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부지불식간에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23) 2004년 정원조정계획서 사전 제출 폐지 이전에는 박사과정 신설시 질적 요건의 심사를 위해 ㉠교육목표, ㉡신설의 필요성·타당성, ㉢신설분야의 국내·외 동향, ㉣관련분야 인력수요 전망 등 “대학원 신설계획서”를 받아 사전에 심사한 후 신설을 하도록 하였다.

<표 IV-3> 대학원 입학정원(2001~201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113,814	119,103	123,523	123,115	123,911	121,877	121,119	120,825	124,720	126,745
석사	99,635	103,625	107,695	106,238	105,979	103,227	101,891	101,177	105,023	106,300
박사	14,179	15,478	15,828	16,877	17,932	18,650	19,228	19,648	19,697	+20,445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2001~2010). <http://cesi.kedi.re.kr/index.jsp>



[그림 IV-2]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입학정원 추이

박사과정 설치기준의 운영과 관련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졸업생수는 공급과잉인 반면, 이공계열은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박사과정 취득자수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배출되더라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고급인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창원(2005)에 의하면 2015년까지 대학원 졸업자 증가 및 고학력화로 향후 인력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3.14%)하고,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석·박사인력의 수요도 전반적으로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05~15년 기간 동안 대학원 졸업생(신규공급)은 91.3만 명, 인력 신규수요는 90.9만 명으로 4천명 초과공급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를 분야별로 보면 교육일반(73.1천명), 중등교육(50.6천명), 의료(42.3천명) 전공은 초과공급, 경영·경제(-27.6천명), 기계·금속(-24.1천명), 생활과학(-23천명) 전공은 초과수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등 주요부문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공학 분야 박사급 인력(-9.1천명), 석·박사급 IT인력(-64천명), 석·박사급 BT인력(-5.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등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분야는 양적으로 문제없으나(+28.7천명), 우수 핵심인력이 부족한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주요 선진국의 대학원 설치 기준

가. 영국

영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문제인식하에서 박사과정 등 연구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심층적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일련의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영국의 사례는 박사과정 설치기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박사학위 과정의 질 보장을 위한 전반적 개선방안을 구안하는데 있어 내용면과 접근 방식 면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2002년 10월, 잉글랜드 고등교육 재정 위원회(HEFCE)는 연구학위 프로그램의 질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Improving standards in postgraduate research degree programmes” October 2002)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가 견지하고 있는 기본적 문제인식은 많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유사하다. 즉, 지나치게 많고 다양한 박사학위 과정의 운영과 이에 대한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사과정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의 (1) 최소기준(minimum threshold standards)과 (2)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기준(an underlying framework of good practice)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HEFCE가 제시한 31개 기준들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10개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① 대학차원의 질 보장 메카니즘(institutional arrangements); ② 교수수, 교수들의 자질, 동료학생 수, 시설 등 연구 환경(the research environment); ③ 선발, 입학, 오리엔테이션 등(selection, admission and induction of students); ④ 학생지도(supervision); ⑤ 성취수준 점검 및 검토 절차(progress and review

arrangements); ⑥ 연구 및 기타 기술들의 개발(development of research and other skills); ⑦ 피드백 메카니즘(feedback mechanisms); 평가(Assessment); ⑧ 학생 목소리의 반영(student representations); ⑨ 고충처리 절차(complaints); ⑩ 사후구제 절차(appeals). 이상의 기준들은 100개 이상의 영국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서베이, 재정 지원 기관, 교수 학생 등 대학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인터뷰, 해당기간 방문, 워킹 등에서 도출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최소기준으로 개별 연구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임계치(critical mass)를 수량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1) 적어도 5명의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연구자(research active staff)와 (2) 적어도 10명의 동료학생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HEFCE는 2003년 1월, 유관기관들(영국 고등교육 질보장기구(Quality Assurance Agency), 대학 등)을 대상으로 이상의 개선방안(기준)에 대한 비공식적 의견수렴(HEFCE 2003/01)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1) ‘최소기준’의 개념과 필요성; (2) 제시된 기준들이 질 높은 연구학위 프로그램의 제공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 (3) 제시된 기준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성취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음과 같은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1) 일부 정량화된 성취목표는 각각의 학문분야의 서로 다른 요구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일부 정량화된 성취목표는 규모가 작거나, 특수한 분야의 연구단위의 경우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점; (3) RAE(Research Assessment Exercise)의 결과와 연구 환경 혹은 지도교수의 학생지도 능력과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 (4) 상대적으로 어린, 전일제 학생 중심의 기준이며, 비전일제, 나이 많은, 혹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음; (5) 31개 기준 중 어떤 것이 ‘최소기준’이고 어떤 것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기준’인지 분명히 적시되지 않고 있다.

셋째, HEFCE는 2003년 9월,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에 대한 공식적 의견수렴(첨부자료 2 참고)하였고, 2003년 1월의 비공식적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31개 기준들에 대해 다시 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 결과 (1) 최소기준(minimum threshold standards)과 (2) 우수사례에 대한 벤

치마킹 기준(an underlying framework of good practice)을 명확하게 나누어 제시하고, 문제가 되었던 정량적 기준은 일단 삭제하고, 의견수렴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해 보라는 요청이 대두되었다.

넷째, 영국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국 연구학위 프로그램(Research Degree Programmes)의 질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우선 국가수준(HEFCE)에서는 큰 범위에서의 가이드라인만 제정하여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중복을 막기 위해 1996년 이후 QAA에서 기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던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것으로 관련기관 간(HEFCE, QAA, Research Council 등)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4년 9월 Code of Practice for the assurance of academic quality and standards in higher education. Section 1: Postgraduate research programmes)이 수정 버전으로 발표되고, 이 전반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개별 대학들이 자신들의 대학의 실정, 학과의 특성에 맞는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논란이 되었던 정량적인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은 최종 제시된 수정본에서는 삭제되었다. 즉, 국가수준에서는 박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절차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박사과정에서 제공되는 내용부분을 직접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제시된 절차적 기준을 참고하여 대학의 사정, 학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 내용은 개별대학이 결정하도록 위임하여 대학에 연구학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1차적 책임을 부여하였다는데 큰 정책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개별대학들이 이 절차적 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제대로 설정하고, 구성원과 이를 충분히 공유하며, 또한 대학본부나 개별 학과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연구학위 과정을 질을 담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섯째, 이와 관련 보다 구체적으로 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단, HEFCE 등 재정지원 기관으로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박사학위 프로그램들(혹은 소속대학)은 2005/06학년도까지 여기에서 제시된 최소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개별 대학과 소속 박사과정 프로그램들이 변화된 환경에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기준의 도입시점과 이를 재정지원에 연계하는 시점에 상당한 시차를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재정지원과 최소기준의 충

족여부를 연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간접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첫째, 영국 고등교육 질보장기구(Quality Assurance Agency, QAA)의 주기적 기관평가(regular programme of institutional audit)의 일부분으로서 QAA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각 대학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QAA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대학들에게 평가결과를 피드백 한다. 만약 어떤 기관이 현저히 기대 수준에 못 미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재정지원기관인 HEFCE에 통보하게 된다. 셋째, HEFCE는 해당 기관과 상의해서,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QAA로 하여금 적절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상황에 대한 후속점검을 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후속점검 결과 해당기관이 여전히 질적 보장 책임을 현저히 미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해당기관에서 취하는 조치가 향후에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 HEFCE는 해당 연구학위 프로그램(RDPs)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국가수준의 가이드라인(Code of Practice for RDPs)이 발표된 이후 2005/06년도 예산지원과의 연계를 위해 2004년에 QAA는 박사과정 운영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중점적 점검사항은 각 대학들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평가팀(Audit teams)을 구성하고 평가팀은 개별대상들이 수행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수합하여 이를 분석하고, 개별대학들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이후 이루어진 발전과정에 대해 평가팀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팀이 개별대학에 대해 작성한 평가보고서는 모두 출판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섯째, 이러한 국가수준의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대학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는 방식과 함께 영국에서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학위 프로그램의 질 보장 장치를 추가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고등교육통계청(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HESA)이 학생, 교직원, 대학졸업자들의 경로추적, 재정, 비학점 과정 관련 정보 등 5개 항목에 대해 통계자료 수집하는 시스템인 Returns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학위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Time to degree) 모니터링하고 있다. HEFCE 차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의 질적 수준과 관련 활용 가능한 가장 유용한 정량적 데

이터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프로그램의 경우 QAA로 하여금 해당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와 수준에 대한 후속점검을 요청한다. 또한 고등교육원(Higher Education Academy, HEA)에서 수행하는 대학원 연구 경험 조사(Postgraduate Research Experience Survey, PRES)를 실시하는데 설문지의 일부분은 QAA의 최소/우수사례 가이드라인(QAA Code of Practice, section 1: postgraduate research programmes and the Research Councils' skills training requirements). 결과 분석 보고서(Overview Report)는 출판되어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www.heacademy.ac.uk/ourwork/research/surveys/pres).

나. 미국

미국의 경우 박사과정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주립대학의 경우 박사과정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주 고등교육위원회 등에서 교수 등을 포함한 교육여건,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 학생 확보가능성 등 박사과정 설치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²⁴⁾ 물론, 이와 함께 사후에 자율적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학문분야별 평가인증 제도 등도 미국 대학 박사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한 질 관리 체계를 Philip G. Altbach(2004)의 논문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에서 박사학위과정 학위 프로그램은 지역별 인증기관들(regional accrediting agencies)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지역별 인정기관들의 성격은 정부기관이라기 보다는 학문공동체에 가깝고,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민간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들은 통상 정부지원금이나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공학, 경영학, 법학, 교사교육 등 몇몇 학문분야는 별도의 전문직업협회들(professional associations)에 의한 통제를 받는 전문인증기관들이 존재하고 이들 기관들이 학위를 제공해주 데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한다.

24) 이는 미국 Univ. of Kansas 김동빈 교수, Univ. of Southern Oregon 대학 학장인 Kempner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이다.

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은 그 역사가 길고,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이러한 기관들은 박사학위 프로그램, 교외 활동 프로그램, 도서관이나 실험실 같은 학문적 기반들, 단과대학의 교수들의 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우 상세한 정보와 자기평가의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학문동료위원들(peer committees)로 구성된 인증평가팀(accreditation team)에 의해 꼼꼼히 평가를 받게 되고 최종적인 결과는 인증기관에 의해 처리된다. 대학이나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어떤 식으로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인증서(provisional accreditation)를 발급 받게 되고 나타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승인을 거절당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부의 의미는 그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주에서는 국공립 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상관없이 특정 학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주정부기관(state agencies)로부터 추가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특정 학위 프로그램 모두가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주 정부의 승인은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질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도서관, 교수진 등 적절한 학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를 관련 주 정부기관(state agencies)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 주에서는 그 주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개설 요구 등을 인증과정에 고려하기도 한다. 사립 기관에 대한 통제는 주마다 다양하고, 그 절차 역시 주립대학에 대한 인증(accreditation)보다 덜 엄격하다는 특징이 있다. 주정부 인증(Accreditation)은 기본적으로 각 대학이나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최소한의 학문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원들을 확보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미국 대학원 시스템에서는 국가나 주정부에서 직접 박사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학위제도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나 학위 기관의 순위를 매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가령 U.S. News & World Report지나 전문 잡지 등에 의해 대학순위를 평가하여 발표하기도 하는데, U.S. News & World Report지의 연차 평가는 대학 기관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그 질을 평가한다. 박사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평가는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국립연구평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에 의해서 시행되는 미국의 연구-박사학위 프로그램(Research-Doctorate Programmes)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평가가 있다. 여기서 경영, 법학 등 전문직업 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박사학위 프로그램의 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4. 강화 방안

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사전적인 검토사항

보다 합리적인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 절에서는 먼저 박사과정 설치기준 설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세부 이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개별 이슈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최종 설치기준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절대적인 답이 있는 문제일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정책적 환경 변화와 정치적 수용가능성의 함수를 적절히 고려한 담당부서의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각 이슈에 대해 장·단점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점에서의 정책기조와 관련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대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둔다.

[검토사항 목록]

1) 이슈 1: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과 범위의 문제

설치기준 개정 논의와 관련 교과부 고시 개정만으로 박사과정 설치기준(조건)으로 SCI급 논문에 대한 가중치 부여, 전임교원 강의비율 규정 추가 등 ‘질적수준’에 대한 고려가 가능한가?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교과부 훈령 및 지침에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이슈 2: 박사과정 설치 인가기준으로서 고려가능한 질적지표 선정

어떤 질적 지표를 대학원 설치기준으로 법령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교원수, 논문편수 등 기존의 법령에 규정된 정량적 지표외에 교육·연구의 질을 보다 타당성있게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지표를 박사과정 설치기준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한가?

3) 이슈 3: 학문계열별 특성을 감안한 ‘최소 연구실적 충족기준’ 설정 문제

질적 지표를 법령(고시, 대통령 등)에 규정할 경우 박사과정 설치인가의 기준이 되는 연구실적의 “최소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어떠한 논리적, 통계적 논거에 근거하여 정책/학문공동체 내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체대학(박사과정 설치학과/계열)의 통계적 분포에 근거하여 최소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현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과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등 학문적 특성과 출판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계열별로 교수 1인당 최소 요구 연구업적 차등 정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4) 이슈 4: “전임교원 강의비율”의 대학원 설치기준으로서 타당성 문제

박사과정 학위 프로그램의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인 ‘설치 인가시점’에서, 계획된 교육과정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대학원 설치기준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만일 도입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적용하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최소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5) 이슈 5: 연구실적 범주간 가중치 부여 문제

- (1) ① 연구재단 등재 vs. 등재후보지; ② SCI급 vs. SCIE, SCORPUS 급; ③ 저서 vs. 역서 간 가중치 등 연구실적 범주내 가중치 부여문제
- (2) 이들 범주 상호간 가중치, 예컨대 ① KCI vs. SCI급; ② 저·역서 vs. 논문간 가중치 문제
- (3) 특허실적(산업체 수주과제, 기술료 수입) 인정 기준
- (4) 복수 저자 논문의 경우 저자기여도 산정방식의 타당성 문제

6) 이슈 6: 학문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유사계열 범위 설정의 문제

궁극적으로 고시 등에서 학문적 특성을 감안하여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계열별 최소 연구실적 기준을 규정할 때 어떤 정도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것인가? 현행처럼 인문사회 및 예체능, 자연과학, 공학 및 의학계열의 2개로 크게 분류한 것은 해당 계열의 출판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타당한가?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학문분야별 최소 연구실적 기준 설정을 위해 대학알리미 자료 수집단위인 대(7개), 중(35개), 소계열(115개) 수준 중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아울러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설치기준인 ‘전임교원 강의비율’ 등의 통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단위 수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7) 이슈 7: 지역서의 인정대상 계열 범위

현행 교과부 고시의 경우 지역서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과 예·체능 계열”에 한해 인정되고 있는데 이공계 등에 대해서는 지역서를 연구실적에서 제외하는 현행규정이 타당한가?

8) 이슈 8: 예체능계 연구업적의 고시에 규정 여부

분야 속성상 모든 대학에 통용될 수 있는 합일된 원칙을 법령차원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예체능계 등 실기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기준’을 국가수준의 법령인 고시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타당한가?

9) 이슈 9: 박사과정 신설시 ‘사전심의 제도’의 타당성 문제

질적 요소의 도입 등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국가가 박사과정의 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과거 2004년에 폐지되었던 ‘박사과정 신설시 사전심의 제도’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10) 이슈 10: 질적 지표에 대한 사후 이행점검 문제

질적 지표를 대학원 설치기준으로 법령에 규정할 경우 어떤 수단을 통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사전심의 vs. 사후 이행점검). 특히 대학원 설치와 관련한 사전심의가 자율화 기조에 역행해서 고려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질적 지표의 충족여부, 즉 법령기준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는가? 만일 현실적으로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지나치게 많은 노력이 들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에도 사후점검이 어려운 질적 지표 혹은 복잡한 지표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1) 이슈 1: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과 범위의 문제

이는 설치기준 개정 논의와 관련 교과부 고시 개정만으로 박사과정 설치기준(조건)으로 SCI급 논문에 대한 가중치 부여, 전임교원 강의비율 규정 추가 등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가능한가?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교과부 훈령 및 지침에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대통령령(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략을 상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연구실적 인정범위(최근 5년 이내 인문/사회/예체능계 등 2편; 자연과학/공학/의학계 등 3편) 규정은 준수하는 범위에서, “SCI급 단독논문 1편을 1편으로, KCI 논문 1편은 1/2의 가중치만 부여하여 1/2편으로 인정하는 방식” 등 사실상 편수계산 방식을 달리 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④항의 입법취지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과부 고시’에 따르면 KCI 단독논문 1편은 100%로 산정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한다고 본다면, SCI급 논문에 추가적 가중치를 주는 것은 모르되 KCI 논문의 가중치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여 단독논문을 1편 이하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사회적 통념으로도, 학문적·논리적 잣대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문제 (편수인정을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과도히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가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학계의 논란을 피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수준에서 구체적 편수를 규정해 놓은 것은 급변하는 학문공동체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법기술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대통령령 수준에서는 박사학위 설치와 관련 교수들의 연구실적 편수 요구 규정은 삭제하고, 이를 고시 수준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3> 관련 법령 개정방향 및 신규대조표

구분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2	개정안
1항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좌동
2항	생략	좌동
3항	③ 제1항 및 제2항(학연산 협동과정 설치)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좌동
4항	<p>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4. 21></p> <p>1.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이 2편 이상일 것</p> <p>2.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이 3편 이상일 것</p>	<p>[대안 1] 대통령령에 기술하기에는 지나치게 기술적(논문편수등)이므로 본항 삭제 후 교과부 고시에게 규정하도록 함; 근거규정은 별도 추가 조항 없이 제③항에 의하면 될 것으로 봄</p>

[대안 2]: 제④항 중 최소 연구실적 충족 교원 비율 존치 (예시)

④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소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때 동연구실적에 포함되는 논문 또는 기타 연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함께 고시한다.

[대안 3] 제④항 중 최소 연구실적 충족 교원 비율 규정도 고시 수준으로 이관

④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최소 연구실적을 충족시켜야 하는 교원의 비율, 동 연구실적에 포함되는 논문 또는 기타 연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령에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법기술적으로만 보자면 [대안 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2에는 제③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 연구실적 충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④항은 단순 삭제하면 되고, 현재 제④항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실적 편수, 인정범위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존의 제③항에 근거하여 독립된 교과부 훈령(고시)이나 매년 발표하고 있는 정 원조정지침(교과부 훈령) 등에 포함하여 함께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법령의 내용을 크게 흔들어 대학 등 관계자들이 불필요하게 제도가 크게 변경되었다는 오해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④항을 존치하고 개정되는 맥락에 맞게 동 조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대안 2 혹은 대안 3]. 후자의 접근방식을 택하는 경우 정책 당사자들이 법령 개정 취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며, 대안 2와 3을 비교해 보면 세부적인 기준을 고시수준으로 이관하여 정책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 개정 취지에 미루어 볼 때 대안 3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법령의 간결성 측면에서 보면 대안 1 > 대안 2 > 대안 3의 수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 측면에서 굳이 제④항의 규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관한 판단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이슈 2: 박사과정 설치인가에 고려가능한 질적지표 선정 문제

두 번째 이슈는 교원수, 논문편수 등 기존의 법령에 규정된 정량적 지표 외에 교육·연구의 질을 보다 타당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지표가 어떤 것이 있으며, 아울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박사과정 설치기준으로 법령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능한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과 관련 고려 가능한 질적 지표(혹은 접근방식)로는 해외 학술지 논문에 대한 가중치 부여, 논문 피인용 횟수와 학술지 영향계수(Impact Factor, IF) 고려,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기술이전 실적, 국제 수준의 학술지 편집위원 등 참여 실적, 국제학회 초청강연 실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평가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해외 학술지에 대한 가중치 부여,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기술이전 실적 등(물론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가능하기는 하지만)을 제외한다면, 이들 지표의 질적 지표로서의 타당성 여부²⁵⁾와는

관계없이 이들 기준을 박사과정 설치기준으로 법령에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입법기술적 어려움과 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저널에 대한 IF나 개별 논문에 대한 피인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개발되어 정착되어 온 선진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KCI)에 대한 IF 구축이 사실상 완성이 되었으므로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에도 최소한 학술지 IF에 따라 개별 논문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IF의 질 의제 가능성에 대해 학문적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예컨대, 윤희운 & 김신영, 2005²⁶⁾), 또한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를 도입하는데 대한 현장의 반발 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안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IF의 경우에는 국내 학계의 인용패턴(사제, 동문관계 인용)과 아직 초기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들을 박사과정 설치기준의 최소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국제 수준의 학술지 편집위원 등 참여 실적, 국제학회 초청강연 실적 등도 교수의 국제적 평판과 연구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타당성 있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학자들의 숫자들이 제한되어 있어 실제적인 적용 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박사과정 설치기준으로서의 타당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25) 사실 임팩트 팩터, 저널 영향계수, 기술이전 실적 등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질적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용회수 등 정량적인 수치에 의해 도출된 지표이고, 방법론적으로도 이러한 지표가 논문의 질적 수준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예컨대, 윤희운 & 김신영, 2005).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혹은 대학 평가 등에서 학위과정의 질적 수준을 의제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가장 많이 활용해 오고 있다는 지표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질적 지표로 논의하는 것이다. 기술이전 실적 등도 동일한 논리에서 질적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넓은 의미에서 연구의 질이 높으면 기술이전 실적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질적 지표로 보고자 한다. 교과부 업무보고에 있는 전임교원 강의비율에 대해서도 유사한 가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26) 윤희운·김신영(2005). 학술지 영향계수와 연구업적 평가비중의 상관성 분석. 정보관리연구, 36(3):1-25

3) 이슈 3: 학문계열별 특성을 감안한 ‘최소 연구실적 충족기준’ 설정 문제

세 번째 이슈는 질적 지표를 법령(고시, 대통령 등)에 규정할 경우 박사과정 설치인가의 기준이 되는 연구실적의 ‘최소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어떠한 논리적, 통계적 논거에 근거하여 정책/학문공동체 내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체대학(박사과정 설치학과/계열)의 통계적 분포에 근거하여 최소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현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과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등 학문적 특성과 출판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계열별로 교수 1인당 최소 요구 연구업적 차등 정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의 문제로 압축된다.

먼저 박사과정 설치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실적 최소기준 설정의 문제와 관련 이론적으로 어떤 수준이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임계치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은 통계적 분포를 판단해서 일단의 기준을 정책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현재 가용한 학문분야별 연구실적 추이를 볼 수 있는 통계자료로는 (1)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KRI) 시스템 정보와 (2) 매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자료가 있는데²⁷⁾ 양 자료간 주요 항목에 대한 자료가 서로 상치하여 어떤 자료가 보다 더 신뢰로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전자는 KRI에 연구자 본인이 직접 입력한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후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대학²⁸⁾의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KRI/KCI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만 통계에 반영하는 방법적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반드시 모든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업적을 입력해야

27) 이외 데이터 소스는 동일하지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서 대학정보공시제 자료가 있지만 이 자료로는 논문 임팩트 팩터, 저널 영향계수, 개별 교수의 기여도를 반영한 통계치를 추출하기 어렵다.

28) 조사대상은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전국의 4년제 국.공.립, 사립 대학교와 2·3년제 대학을 포함한 422개 대학의 2009년 4월 1일 기준 전임교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 외국인 전임교원은 포함되나 겸임 명예 대우 초빙 등의 비전임교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양자 모두 한계가 있지만 후자의 정보가 그래도 보다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⁹⁾. 따라서 후자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계열 수준(8개 분야)³⁰⁾ 교수 1인당 연구업적에 대한 2008년, 2009년 통계치를 제시하면 <표 IV-4>, <표 IV-5>, <표 IV-6>와 같다. 보다 정치한 논의를 위해서 현행 교과부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대한 고시”에서처럼 국내와 국제 전문학술지의 가중치에 차별을 두지 않은 경우(<표 IV-4>), 국제전문학술지(세칭 SCI급)만 KCI급에 비해 2배의 가중치를 준 경우(<표 IV-5>), 국제전문학술지(세칭 SCI급)는 KCI급에 비해 2배, 국제일반학술지(세칭 SCORPUS, SCIE 급)은 1.5배의 가중치를 준 경우(<표 IV-6>)로 각각 나누어 제시하였다³¹⁾. 아울러 연구실적 추이의 변동폭을 보기 위해 습득 가능한 가장 최신자료인 2009년 자료와 함께 2008년 자료도 함께 제시하였다.

학문영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천적으로는 분야별로 최소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현행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의하면 ①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의 경우 최근 5년간 연구실적 2편 이상 그리고 ②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의 경우 3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의 경우 교수 1인당 연구업적이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교수에 비해 1.5배가 높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습득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연구 실태조사 자료(2009, 2010)³²⁾를 볼 때(<표 IV-5>, <표 IV-5>, <표 IV-6> 참조), 국내학술지 논문과 국제학술지 논문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경우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과 자연과학·공학·의학

29) 이 경우 KRI로 연계되어 있는 대학 연구자의 자료는 이 두 가지 자료 소스에서 동일하지만, 문제는 KRI로 연계되지 않은 대학소속 연구자들의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담당자인 한국 연구재단 양정열 연구원에 대한 문의 결과).

3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1) 인문사회계열, (2) 자연과학계열, (3) 공학계열, (4) 예체능계열, (5) 의학계열 5개 계열로 나누고 있다. 이는 새로운 학문영역의 등장과 융복합 학문영역의 강화를 반영한 연구재단의 분류기준과 달라서 추후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31) 저역서의 경우 국제/국내 구분이 없어 현행 교과부 고시에서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KCI 1편과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고, 공동 저자 논문의 경우 저자의 기여도가 반영되어 계산되었다.

32) 조사대상 자료는 2009년 서베이는 2008년 연구실적, 2010년 서베이는 2009년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계열 간에 최소 연구실적 요구기준에 차등을 두는 것이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08-2009 2개년간의 교수 1인당 연구업적 평균치(논문 및 저역서)를 볼 때 인문·사회계와 자연과학·공학계간 연구실적차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BK21 사업단 평가에서처럼 국제전문학술지에 2배의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현행대로 인문·사회 vs. 자연과학·공학계간의 최소 논문 요구편수예의 차등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소기준의 설정과 계열별 연구실적 차등 문제는 추후 논의할 연구실적 범주 간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라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구체적으로 박사과정 설치를 인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로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특정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몇 가지 제시하자면 (1) 먼저 최소기준을 정하기 전에 최소편수 환산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실적 범주(국제 vs. 국내; 논문 vs. 저역서; 논문 대비 계열별 실기실적 인정기준)간 가중치 부여 기준에 대한 ‘정책적 판단³³⁾’을 할 필요가 있다. (2) ‘설치기준’은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기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질 관리 기준’과 다르고, 특히 사전/사후 심의나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령에 규정되어 확립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개별 학문분야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급적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계열별 교수 1인당 평균 연구 실적자료를 참고하여 현행 기준의 형식에 준하여 개괄적인 기준을 제시해 보자면 인문/사회계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편 이상 (연간 1편), 자연/이공계의 경우 최근 5년간 7.5편(연간 1.5편) 정도³⁴⁾로 하는 것이, 분명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연구자를 양성해야 하는 교수라면 최소 1년에 1편 정도의 논문은 써야 한다는 차

33) 이와 관련한 이론적, 논리적 근거는 성격상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였다.

34) 예체능계의 경우 실기실적을 포함한 통계치가 수집되지 않아 교수 1인당 연구실적에 대한 통계 확보가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국가수준의 통계적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사례연구 등을 통한 후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예체능계에 대해 국가수준에서 이러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원에서 가장 대중적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기준과 통계치를 최대한으로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교과부에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거친 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IV-4> 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논문 및 저서(가중치 없음)

연도	연구분야 코드	학문분야	1인당 논문실적(학술지)				저역서 실적	합계
			국내전문	국제전문	국제일반	소계		
2008	A	인문학	0.66	0.01	0.03	0.70	0.20	0.90
	B	사회과학	0.75	0.03	0.03	0.82	0.16	0.98
	C	자연과학	0.36	0.54	0.03	0.93	0.07	1.00
	D	공학	0.48	0.38	0.04	0.91	0.07	0.97
	E	의약학	0.37	0.40	0.02	0.78	0.04	0.83
	F	농수해양학	0.51	0.32	0.02	0.85	0.09	0.94
	G	예술체육학	0.30	0.01	0.01	0.32	0.07	0.39
	H	복합학	0.72	0.11	0.03	0.87	0.15	1.02
	평균		0.52	0.22	0.03	0.77	0.11	0.88
2009	A	인문학	0.70	0.01	0.03	0.74	0.20	0.94
	B	사회과학	0.83	0.04	0.03	0.90	0.10	1.00
	C	자연과학	0.36	0.53	0.02	0.91	0.10	1.01
	D	공학	0.50	0.42	0.04	0.96	0.10	1.06
	E	의약학	0.36	0.39	0.01	0.76	0.00	0.76
	F	농수해양학	0.54	0.36	0.01	0.91	0.10	1.01
	G	예술체육학	0.35	0.01	0.01	0.37	0.10	0.47
	H	복합학	0.83	0.17	0.02	1.02	0.10	1.12
	평균		0.55	0.25	0.03	0.83	0.10	0.93
평균	A	인문학	0.68	0.01	0.03	0.72	0.20	0.92
	B	사회과학	0.79	0.04	0.03	0.86	0.13	0.99
	C	자연과학	0.36	0.54	0.02	0.92	0.08	1.00
	D	공학	0.49	0.40	0.04	0.93	0.08	1.02
	E	의약학	0.37	0.39	0.01	0.77	0.02	0.79
	F	농수해양학	0.53	0.34	0.02	0.88	0.09	0.97
	G	예술체육학	0.33	0.01	0.01	0.35	0.08	0.43
	H	복합학	0.78	0.14	0.03	0.94	0.13	1.07
	평균		0.53	0.24	0.03	0.80	0.10	0.90

<표 IV-5> 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논문 및 저서
(가중치: 국제전문학술지*2)

연도	연구분야 코드	학문분야	1인당 논문실적(학술지)				저역서 실적	합계
			국내전문	국제전문	국제일반	소계		
2008	A	인문학	0.66	0.02	0.03	0.71	0.20	0.91
	B	사회과학	0.75	0.07	0.03	0.85	0.16	1.02
	C	자연과학	0.36	1.09	0.03	1.47	0.07	1.54
	D	공학	0.48	0.76	0.04	1.29	0.07	1.35
	E	의약학	0.37	0.79	0.02	1.18	0.04	1.22
	F	농수해양학	0.51	0.63	0.02	1.17	0.09	1.25
	G	예술체육학	0.30	0.01	0.01	0.33	0.07	0.39
	H	복합학	0.72	0.22	0.03	0.98	0.15	1.13
	평균		0.52	0.45	0.03	1.00	0.11	1.10
2009	A	인문학	0.70	0.02	0.03	0.75	0.20	0.95
	B	사회과학	0.83	0.08	0.03	0.94	0.10	1.04
	C	자연과학	0.36	1.06	0.02	1.44	0.10	1.54
	D	공학	0.50	0.84	0.04	1.38	0.10	1.48
	E	의약학	0.36	0.78	0.01	1.15	0.00	1.15
	F	농수해양학	0.54	0.72	0.01	1.27	0.10	1.37
	G	예술체육학	0.35	0.02	0.01	0.38	0.10	0.48
	H	복합학	0.83	0.34	0.02	1.19	0.10	1.29
	평균		0.55	0.48	0.03	1.06	0.10	1.16
평균	A	인문학	0.68	0.02	0.03	0.73	0.20	0.93
	B	사회과학	0.79	0.07	0.03	0.90	0.13	1.03
	C	자연과학	0.36	1.07	0.02	1.46	0.08	1.54
	D	공학	0.49	0.80	0.04	1.33	0.08	1.42
	E	의약학	0.37	0.79	0.01	1.16	0.02	1.19
	F	농수해양학	0.53	0.68	0.02	1.22	0.09	1.31
	G	예술체육학	0.33	0.02	0.01	0.35	0.08	0.44
	H	복합학	0.78	0.28	0.03	1.08	0.13	1.21
	평균		0.53	0.47	0.03	1.03	0.10	1.13

<표 IV-6> 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논문 및 저서
(가중치: 국제전문학술지*2/국제일반학술지*1.5)

연도	연구분야 코드	학문분야	1인당 논문실적(학술지)				저역서 실적	합계
			국내전문	국제전문	국제일반	소계		
2008	A	인문학	0.66	0.02	0.06	0.74	0.20	0.94
	B	사회과학	0.75	0.07	0.06	0.88	0.16	1.05
	C	자연과학	0.36	1.09	0.05	1.50	0.07	1.57
	D	공학	0.48	0.76	0.09	1.33	0.07	1.40
	E	의약학	0.37	0.79	0.03	1.19	0.04	1.24
	F	농수해양학	0.51	0.63	0.04	1.19	0.09	1.28
	G	예술체육학	0.30	0.01	0.02	0.34	0.07	0.41
	H	복합학	0.72	0.22	0.06	1.01	0.15	1.16
	평균		0.52	0.45	0.05	1.02	0.11	1.13
2009	A	인문학	0.70	0.02	0.06	0.78	0.20	0.98
	B	사회과학	0.83	0.08	0.06	0.97	0.10	1.07
	C	자연과학	0.36	1.06	0.04	1.46	0.10	1.56
	D	공학	0.50	0.84	0.08	1.42	0.10	1.52
	E	의약학	0.36	0.78	0.02	1.16	0.00	1.16
	F	농수해양학	0.54	0.72	0.02	1.28	0.10	1.38
	G	예술체육학	0.35	0.02	0.02	0.39	0.10	0.49
	H	복합학	0.83	0.34	0.04	1.21	0.10	1.31
	평균		0.55	0.48	0.04	1.08	0.10	1.18
평균	A	인문학	0.68	0.02	0.06	0.76	0.20	0.96
	B	사회과학	0.79	0.07	0.06	0.93	0.13	1.06
	C	자연과학	0.36	1.07	0.05	1.48	0.08	1.56
	D	공학	0.49	0.80	0.08	1.37	0.08	1.46
	E	의약학	0.37	0.79	0.03	1.18	0.02	1.20
	F	농수해양학	0.53	0.68	0.03	1.23	0.09	1.33
	G	예술체육학	0.33	0.02	0.02	0.36	0.08	0.45
	H	복합학	0.78	0.28	0.05	1.11	0.13	1.24
	평균		0.53	0.47	0.05	1.05	0.10	1.15

4) 이슈 4: “전임교원 강의비율”의 대학원 설치기준으로서 타당성 문제

네 번째 이슈는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대학원 설치기준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만일 도입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적용하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최소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개별 대학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설치하는 시점은 아직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기껏해야 박사과정 운영계획(교원채용 계획과 교육과정)만이 편성되어 있을 것이고, 정규 교과과정이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으로서의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기준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그리고 추후 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사과정 운영의 질 관리 기준으로서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박사과정 “설치” 기준으로서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지이다.

둘째, 과목개설의 다양성과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통상적으로 상호 상충관계(trade-off) 관계에 있으므로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과목개설의 다양성이라는 또 다른 요소와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만약 박사과정 설치가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서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악용한다면, 쉽게 말해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박사과정 설치학과의 전체 개설교과목 중 단순히 개설 교과목수를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박사과정 설치학과에 대해 이행점검이 쉽지 않은 현 상황 속에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전임교원 강의비율 조항의 도입의 취지와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학생이 수강한 전체졸업 학점(강좌)을 기준으로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따질 것인가’ 혹은 “학과 전체 개설강좌 중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따질 것인가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학과 내 세부전공별 교수수가 극히 소수인 한국 대학의 현실(예컨대,

교육학과 박사과정의 세부전공인 교육행정 전공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전임교원 1-2명에 불과)에서 교육학과내 타 전공 교수(예컨대, 교육심리 전공 교수)보다는 학내 타 유사학과(예컨대, 행정학과와 사회학과)에서 많은 학점을 이수하는 것은 장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설치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떤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원의 경우 1/3까지 겸임 혹은 초빙으로 박사과정 설치에 필요한 교원 확보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과 박사과정 설치기준으로서 ‘전임교원 강의비율’ 부과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즉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만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비율을 낮게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가 라는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이다. 현장 실무와 실천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전문대학원의 성격상 겸임/초빙교수를 일정 비율 인정하고는 있지만, 산학연계의 강화와 학문의 실용지향성 강화, 그리고 지식의 급격한 변화와 전문화로 일반대학원이라 하더라도 학과내의 전임교수 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하게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문대학원에만 전임교원 강의비율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큰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박사과정 설치기준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주요 논거는 전임교원 강의비율 규정은 박사과정을 설치해 놓고 전임교원이 이에 전념하지 않고 외부 활동에 치우쳐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보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교수와 대학원생 등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먼저 “전임교원 강의비율과 교육의 질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설문에서 “관련이 있다”는 평가의견은 82.6%로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박사과정 설치기준으로 법령(교과부 고시 등)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설문한 결과에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47.3%로 부정적인 의견인 18.3%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는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교육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의 관련 부분 참조).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박사과정 설치기준으로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나름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할 점은 여하히,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법령 수준에서 규정함으로써 야기될 수도 있는 (위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결국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서 ‘현재 시점에서 위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비용’과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적으로 얻는 될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볼 것인데, 전임교원 강의비율의 박사과정 설치기준 포함을 지지하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과반수에 이르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대로 이를 법령수준에 규정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것들을 포함한 문제점들도 만만치 않으므로 대학 현장의 전문가들(교무처장, 교과과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또 다른 문제는 ‘박사과정 설치 여부를 판정하는 전임교원 강의비율의 최소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와 관련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일단 논의를 위한 개략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1) 먼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이 다르고 교원 확보 기준도 다르므로 이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둘째, 앞서 제기한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 제기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에 규정하는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지나치게 높지 않게 설정하여 개별 대학이나 학과가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단의 기준을 제시해 보면 2010년 전국 대학원 평균 전임교원 강의비율 통계치를 고려할 때 일단 하위 20% 수준의 평균인 58.4%보다 다소 높은 60% 수준이 앞서 언급한 양 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IV-7> 대학원 전임교원 강의비율(2010년)

대학원 형태별		분위별				전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상위20 %	상위40%	하위20%	하위40%	
74.3%	69.6%	86.6%	77.9%	58.4%	68.1%	73.8%

주: 2010년 연구실적 상위 20개교의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76.2%; 하위 20개교 평균 37.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물론 위의 기준은 논의를 위해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보다 합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대학원에서의 전임교원 강의비율과 교육의 질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대한 동 기준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한 차등적용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현장지향적인 실천적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보다 강한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일단 동 규정 적용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5) 이슈 5: 연구실적 범주 간 가중치 부여 문제

다섯 번째 이슈는 연구실적 범주 간 가중치 부여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1) ① 연구재단 등재 vs. 등재후보지간 가중치; ② SCI급 vs. SCIE, SCORPUS 급; ③ 저서 vs. 역서 간 가중치 등 해당 범주 내 가중치 부여문제; (2) 이들 카테고리 상호간 가중치, 예컨대 ① KCI vs. SCI급; ② 저·역서 vs. 논문 간 가중치 문제; (3) 특허(실용, 신안, 프로그램 저작권 등 포함) 실적 인정 기준; 그리고 (4) 복수 저자 논문의 경우 저자기여도 산정방식의 타당성 문제 등 크게 네 가지 문제로 나뉘어 논의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어떤 방식이 보다 적합한지에 대한 절대적 논리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국내 학술지 발간 논문이 해외 학술지 SCI급에 비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참고자료로서 먼저 현재 국

내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규정을 통해 각 연구실적 범주 간 가중치 부여 현황을 분석해 보면 <표 IV-8>와 같다. 얼핏 보더라도 대학별로 이에 대한 규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수준의 일률적 규정 설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IV-8> 국내 대학들의 업적평가시 국제/국내 학술지 논문, 저서 등에 대한 가중치 부여 현황

대 학	국내 학진 등재지: 국제 학술지(SSC I, SCI급)	국내 학진 등재지: 국제 학술지(SCIE급)	국내 학진 등재지:저서	국내 학진 등재지:번역서
강원대	1:1.33	1:1.2	1:1.67(국제) 1:1.33(국내)	1:1
경북대(인문)	1:1	1:1	1:1	1:1
경북대(자연)	1:1.5	1:1.5	1:1.5	1:1.5
고려대 (인문/사회/ 경영)	1:2	1:1	1:2(국제공통) 1:1.75(국내인문) 1:1.5(국내사회) 1:1(국내경영)	1:1.5(인문연구) 1:1(인문일반) 1:1(사회) 1:0.5(경영)
고려대(자연)	1:2	1:1	1:1.25	1:0.75
동아대(인문)	1:3(SCI) 1:5(SSCI)	1:3(SCI) 1:2(SCORPUS)	1:5(국제전문) 1:2(국내전문) 1:1(대학교재)	1:1
동아대(자연)	1:3(SCI) 1:5(SSCI)	1:3(SCI) 1:2(SCORPUS)	1:5(국제전문) 1:2(국내전문) 1:1(대학교재)	1:1
목포대	1:2	1:2	1:2(A) 1:1.33(B)	1:1(A) 1:0.67(B)
순천대	1:2	1:2	1:2	1:0.6
연세대 (인문/사회)	1:2.67	1:1.6(인문) 1:1.4(사회)	1:2.33(인문A) 1:1.33(인문B) 1:2(사회A) 1:1(사회B)	1:1.33(인문) 1:1(사회)
연세대(자연)	1:2.5	1:1.4	1:1(A) 1:0.8(B)	1:0.7
영남대(인문)	1:1.5	1:1.5	1:1	1:0.75
영남대(자연)	1:3	1:3	1:2	1:1.15
전남대	1:1.67	1:1.25	1:1.25(국제) 1:1(국내)	1:1
충남대(인문)	1:2.67	1:1.33	1:2(국제) 1:1.33(국내)	1:0.67
충남대(자연)	1:4	1:2	1:3(국제) 1:2(국내)	1:1

[국내 연구재단등재지 vs. 국제학술지(SCI, SSCI급)]

범위(이상~미만)	대 학 명
1:1.5미만	강원대, 전남대, 경북대(인문)
1:1.5~2.5	경북대(자연), 고려대(인문,사회,경영,자연), 목포대, 순천대
1:2.5~3.5	동아대(인문,자연/SCI급), 연세대(인문,사회,자연), 영남대(자연), 충남대(인문)
1:3.5이상	동아대(인문,자연/SSCI급), 충남대(자연)

[국내 연구재단등재지 vs. 국제 일반학술지(SCIE급)]

범위(이상~미만)	대 학 명
1:1.5미만	강원대, 경북대(인문), 고려대(인문,사회,경영,자연), 연세대(사회,자연), 전남대, 충남대(인문)
1:1.5~2	경북대(자연), 연세대(인문), 영남대(인문)
1:2~2.5	동아대(인문,자연/SCORPUS급), 목포대, 순천대, 충남대(자연)
1:2.5이상	동아대(인문,자연/SCIE급), 영남대(자연)

[국내 연구재단등재지 vs. 저서]

범위(이상~미만)	대 학 명
1:1 미만	연세대(자연/B)
1:1~1.5	강원대(국내저서), 경북대(인문), 고려대(경영/국내저서), 고려대(자연), 동아대(인문,자연/대학교재), 목포대(B), 연세대(인문,사회/B), 연세대(자연/A), 영남대(인문), 전남대, 충남대(인문/국내저서)
1:1.5~2	강원대(국제저서), 경북대(자연), 고려대(인문,사회/국내저서)
1:2~2.5	고려대(인문,사회,경영/국제저서), 동아대(인문,자연/국내전문 서), 목포대(A), 순천대, 연세대(인문,사회/A), 영남대(자연), 충남대(인문,자연)
1:2.5이상	동아대(인문,자연/국제전문서), 충남대(자연/국제저서)

[국내 연구재단등재지 vs. 역서]

범위(이상~미만)	대 학 명
1:1미만	고려대(경영,자연), 목포대(B), 순천대, 연세대(자연), 영남대(인문), 충남대(인문)
1:1~1.5	강원대, 경북대(인문), 고려대(인문일반,사회), 동아대(인문,자연), 목포대(A), 연세대(인문,사회), 영남대(자연), 전남대, 충남대(자연)
1:1.5이상	경북대(자연), 고려대(인문연구)

이렇게 단일의 절대적 논리적 기준은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시행과 이에 필요한 일단의 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기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접근방식과 (2) 기존에 널리 통용되던 기준을 기본으로 하는 접근방식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예컨대, 각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적 평가규정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논리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적절한 연구실적 범주 간 환산기준을 만드는 방식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별, 대학 내에서도 계열별, 학과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통해 논리적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통계적으로 각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산기준을 단순 평균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열별로 서로 적용되는 바가 달라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워 설득력 있는 기준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쉽게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을 찾아 이에 바탕을 하는 후자의 관점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것인데,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현 시점에서는 “BK21 사업단의 연구실적별 평가기준”에 따르는 것이 그래도 가장 무난한 선택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국내 전문학술지(연구재단 등재지) 기준으로 등재후보지는 0.8편, 국제 전문학술지(SCI 급)는 2편, 국제 일반학술지(SCIE 급)은 1.5편, 기타 국제학술지는 심사위원회의 일정한 심사 등을 거쳐 인정된 학술지에 한해 1편, 학술저서는 2편(학문 영역에 따라 역서도 동일비율로 인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표 IV-8> 참조). 특히 기술이전의 경우에도 국내/국외로 나누어 일반적으로 국내 출원은 0.5건, 등록은 1건으로 하고 해외 출원 및 등록은 국내에 비해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저작권 등 특허 외 산업재산권도 이에 준하여 연구실적을 인정하고 있다(<표 IV-10> 참조). 복수 저자 논문의 경우 저자기여도 산정방식의 경우에는 아래 <표 IV-9>와 같은 BK21 사업단 방식이 현장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나, 현행 고시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

물론 BK21 사업단 수혜자는 극히 소수의 상대적 질적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학과이고 박사과정 설치대상 학과는 이 보다는 훨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학과인 경우가 많아, BK21 사업단 평가기준이 박사과정 설치기준으로서 반드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국가수준의 법령에 규정될 일괄적 기준으로서 본다면 이 보다 나은 현실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제언의 근거이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가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해 온 기준이고, 대학현장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교수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평가받고, 인센티브 지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그 동안 행동해 왔을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입장에서 가장 수용하기가 쉬운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있는데 BK21 사업단 연구실적 평가에서 일정한 연구업적의 인정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표 IV-8>에서 볼 수 있듯이 BK21 사업 연구업적별 평가기준에 따르면, “학진등재(후보) 학술지와 A&HCI, SSCI, SCI, SCIE 학술지 게재 논문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자동 인정되지만, 이외의 모든 연구 업적(저서, A&HCI, SSCI, SCI, SCIE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창작물 포함)은 ‘평가위원회’의 심사 후 인정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특정한 연구실적의 인정범위 설정과 질적 기준에 대한 판단 등 구체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법령 혹은 국가수준의 지침에 의한 일괄적 기준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웅변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확립된 동료평가 시스템에 의해 학계가 수용하는 질적 등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학술지는 달리 뚜렷한 명시적 평가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인 저서, 역서 중

어떤 것까지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영역과 활동이 극히 복잡다단하고 질적 평가도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예체능계 실기실적의 인정 등에 대해 국가가 사전에 획일적으로 그 인정범위와 논문 대비 가중치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³⁵⁾. 따라서 이러한 경우, 즉 질적 수준을 고려한 저역서 인정범위, 예체능 계열의 복잡한 실기실적의 인정 등 구체적 사안의 결정 등 국가 수준의 지침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사항은 BK21 지침의 규정 취지를 살려 교과부 고시에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해결규정을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저역서의 인정범위, 국제적 수준의 판정, 예체능계 실기실적의 인정 등 동 고시에서 정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정은 해당 대학의 교수업적평가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한다. 단 이는 해당 대학의 승진, 재임용 등 업적평가에서 적용되는 규정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등으로 규정한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개별대학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대학 간 박사과정 설치 기준의 대학 간 적용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논문 실적, 특허 실적 등 비교적 정립된 평가 기준이 있는 영역의 경우 국가에서 가급적 지침을 정하여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주는 등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5) 궁극적으로 저·역서에 대해서는 학회 등을 중심으로 동료평가 시스템(서평; 등급부여)을 도입하여 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야 논문에 대비한 저·역서의 상대적 가치 반영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으며, 좀 더 나아가다면 학문분야별 특성과 인용패턴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보다 합리적인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저, 역서와 마찬가지로 합의된 평가방식이 명확히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허실적 등의 인정에서도 동일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표 IV-9> BK21 사업 인문사회분야 연구업적별 평가기준

□ 공통사항

☞ 연구업적은 사업단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학진등재(후보) 학술지와 A&HCI, SSCI, SCI, SCIE 학술지 게재 논문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자동 인정되며, 이외의 모든 연구 업적(저서, A&HCI, SSCI, SCI, SCIE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창작물 포함)은 ‘평가위원회’의 심사 후 인정됨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분야별 세부 연구업적 평가기준 적용 가능
☞ 동일한 업적물은 발간 형태가 다르더라도 중복 계산할 수 없음
☞ 디자인·영상분야에서 특허, 산업체 수주과제, 기술료 수입 등의 실적은 ‘응용과학 및 학제간 융합 분야 업적 환산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함
☞ 공저 및 공동 논문의 경우 2인 공동연구: 70%, 3인 공동연구: 50%, 4인 공동연구: 30%, 5인이상 공동연구: 25%로 인정

□ 업적별 평가 기준 및 인정 범위

구분	평가항목	1건당 인정편수	인정범위
학술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2편	A&HCI, SSCI, SCI 등재학술지
		1.5편	SCIE 등재학술지
	기타 국제학술지	1편	국제저명학술지는 아니나 정식 심사를 거치는 국제 우수 학술지
	국내학술지	1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0.8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학술 저서 (단행본)	학술저서	2편	위탁용역 연구보고서와 교과서 성격의 개론서는 제외하고, 독창적인 이론이 제시된 학술적 가치를 지닌 학술저서에 한함. * 일부 학문영역에서는 역서도 인정.

<표 IV-10> BK21 사업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실적 환산기준

구분	업적 환산기준
특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원의 환산기준은 국내특허출원 1건을 0.5건으로 환산하고(시스템 자동입력), 국제특허출원 1건을 1건으로 환산(직접입력) 2. 등록의 환산기준은 국내특허등록 1건을 1건으로 환산하고(시스템 자동입력), 국제특허등록 1건을 2건으로 환산(직접입력) 3. 국제특허의 경우 동일한 특허로 1개국을 초과하여 출원할 때 초과국 1개국 당 환산건수 0.1건을 가산하되, 동일특허로는 최대 3건까지 인정(예: 5개국에 출원한 경우, 출원건수=5건, 출원환산건수=1.3건) (예: PCT로 출원하는 경우, 출원건수=1건, 환산건수=1.3건) 4. 국제특허의 경우 동일한 특허로 1개국을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 초과국 1개국 당 환산 0.2건을 가산하되, 동일특허로는 최대 3개국까지만 가산 인정(예: 5개국에 개별국가별로 등록한 경우, 등록건수=5건, 등록환산건수=2.6건) 5. 국제특허를 PCT(WO)출원하여 등록된 경우, 개별국가별로 등록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6. 공동명의로 등록한 특허의 경우에는, 공동 논문의 편수 기재 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단 소속 대학원 학과에서 등록된 동일 특허는 1건으로 간주
특허 외 산업재산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저작권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원의 환산기준은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1건을 0.5건으로 환산(시스템 자동입력), 국제 산업재산권 출원 1건을 1건으로 환산(직접입력) 2. 등록의 환산기준은 국내 산업재산권 등록 1건을 1건으로 환산(시스템 자동입력), 국제 산업재산권 등록 1건을 2건으로 환산(직접입력) 3. 국제특허의 경우 동일한 산업재산권으로 1개국을 초과하여 출원할 때 초과국 1개국 당 환산건수 0.1건을 가산하되, 동일한 산업재산권으로 최대 3건까지 인정 4. 국제특허의 경우 동일한 산업재산권으로 1개국을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 초과국 1개국 당 환산 0.2건을 가산하되, 동일한 산업재산권으로 최대 3개국까지만 가산 인정 5. 공동명의로 등록한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공동 논문의 편수 기재 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단 소속 대학원 학과에서 등록된 동일 산업재산권은 1건으로 간주
기술이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기간 동안 참여교수 및 BK21 신진연구인력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이루어지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재원에 따라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기재 3.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기술이전 실적을 특허 관련, 특허이외의 산업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지적재산권 관련, know-how 관련 기술이전으로 구분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특허 관련 기술이전: 특허(등록 및 출원)를 이용한 매매, 라이선스 등의 기술이전을 의미 ▶ 특허 이외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술이전: 특허 이외의 산업재산권(등록 및 출원)을 이용한 매매, 라이선스 등의 기술이전을 의미 ▶ 지적재산권 관련 기술이전: 다양한 지적재산권(전기회로도, DB, Software 등)을 활용한 기술이전을 의미 ▶ Know-how 관련 기술이전: 참여교수의 기술지도, 자문, 기술제휴 등의 형태로써 산업체와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협약이 이루어진 기술이전을 의미

6) 이슈 6: 학문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유사계열 범위 설정

여섯 번째 이슈는 궁극적으로 고시 등에서 학문적 특성을 감안하여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계열별 최소 연구실적 기준을 규정할 때 어떤 정도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연구실적 충족기준을 보다 정치화하기 위해 이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수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울러 최소기준 설정을 위한 학문분야별 통계적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수준까지 활용이 가능한가 등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교수들의 연구실적 최소 충족기준을 설정할 때 매우 크게 (1)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과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의 2개로 나누어 학문분야별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질적 수준이 담보되는 보다 엄격한 설치기준을 통해 박사과정의 설치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현행 규정에서의 이러한 대계열을 다시 통합한 거대 통합계열 수준에서 매우 느슨하게 학문의 특성을 반영하는 소극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세부 학문영역별로 나누어 범주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획함으로써 학문적 특성을 정치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소계열 수준으로 내려가더라도 학문분야별 최소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등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고, 법령 수준에 중/소계열 수준³⁶⁾으로 모든 연구업적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방법은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의 5대 계열이나 이와 유사한 범위의 대계열 수준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최소 연구업적 충족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기술적으로 보면 이와 관련한 최소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학문분야별 연구실적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터인데, 현재 활용한 주요 데이터 소스 중 대학정보공시제의 자료 수집단위는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 7개 대계열이고,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등 8개 대계열로 각각

36) 대학정보공시제 자료의 경우 중계열(35개), 소계열(115개) 수준에서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

나뉘어져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상당한 시간이 들기는 하지만 현재 데이터로도 학문영역별 연구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의 5대 계열을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3개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 구조를 표준화하거나 모듈화하여 보다 쉽게 호환하여 정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7) 이슈 7: 저·역서의 인정대상 계열 범위

일곱 번째 이슈는 현행 교과부 고시의 경우 저·역서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과 예·체능 계열”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있는데 이공계 등에 대해서는 저·역서를 연구실적에서 제외하는 현행규정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즉, 현행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의학계 등은 저·역서가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학문분야별 범주별 인용패턴 분석 등 보다 정치한 데이터에 바탕한 심층분석”이 행해져야 하지만,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 이에 대한 학계 등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본다면, 앞서 언급한 연구실적 범주 간 가중치 설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BK21 사업단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역시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BK21 사업단 과학기술분야에서 인정되는 연구실적에는 저·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의 경우 학술활동이 국제 학회에서의 발표(Proceedings)나 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저·역서의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계통에 비해 논문 외 특허 등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등으로 연구실적을 높일 가능성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저역서 보다는 학술논문, 특허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접근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박사과정 설치기준의 경우 속

성상 인문·사회계열과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 분야의 기존 저역서 실적이 그리 크지 않아(자연 0.08편, 공학 0.08편, 의학 0.02편 ** 2008/09 2개년 간 저역서 연구실적 평균) 지나치게 이 분야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규정의 간결성을 위해서 모든 학문영역에서 저역서를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8) 이슈 8: 예체능계 연구업적 인정기준의 고시 규정 여부

여덟 번째 이슈는 분야 속성상 그 성격이 극히 다양하고,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모든 대학에 통용될 수 있는 합일된 원칙을 법령차원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예체능계 등 실기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기준’을 반드시 국가수준의 법령인 고시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비록 현행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예·체능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기준을 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수준에서 통일된 예체능계열 등 실기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기준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고시의 경우 교과부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이행점검을 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이제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보다 엄격하게 예·체능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기준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이와 관련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논문 등 연구실적 등에 대해서는 그래도 IF를 통한 학술지 등급, 피인용 횟수, BK21을 통한 학술지간의 등급이라는 어느 정도의 정립된 기준이라도 존재하지만, 예체능계의 실기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는 아직까지 지극히 주관적이고, 분야별 특성이 적용되는 영역이어서 국가 수준에서 이러한 기준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대학별 교수 업적 평가규정을 분석한 박남기 외(2006)를 보면 예체능계 연구실적에 대한 각 대학별 평가기준이 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실기실적 평가의 다양성과 주관성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남기 외(2006)의 ‘대학별 교수업적평가 현황 분석 및 교수업적 평가 모형 개발’ 연구내용에 따르면 “예·체능계 평가에 있어 평가영역구분은 크게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전시(행위예술), 체육, 건축설계로 나누어지고, 조금 더 세분하면, 미술/산업디자인·조경·만화예술·사진예술·영상디자인·음악, 국악, 한국음악, 체육, 사회체육, 무용, 건축(설계/계획), 창작실기, 영상문화, 피아노, 문예창작, 창작의상 등으로 구분되고, 또한 각 영역별 평가내용은 크게는 창작·공연·전시·발표·수상이지만, 한 단계 세분하면 공연(음악, 무용, 연극 등)·전시(미술·건축 분야, 의상디자인 및 패션쇼 제외)·발표회·지휘·기획·음반출판·제작, 경기참여·감독·심판·심사위원 등 기타 예체능활동, 수상, 대회입상 등이 개인발표·공동발표(2인, 2인 공동, 3인 공동, 4인 공동, 5인 공동, 10인 공동 등)·기타 발표·단체공연·수상 등으로 계속 세분화되어 나가고 있다(315쪽).” 이런 이유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수업적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한 본격 정책연구인 박남기 외(2006)에서도 예체능계 업적평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굳이 이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개별 학회차원의 본격적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굳이 고시에서 예·체능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기준을 국가수준에서 규정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 경우에는 저역서 등 인정범위를 결정하듯이 구체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별 심사(평가) 위원회에서 그 실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을 위해 전국 교육대학교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예체능계 실기분야 연구실적 평가기준을 제시하면 아래 <표 IV-11>, <표 IV-12>, <표 IV-13>과 같다. 비교적 균질적이고 규모가 작은 교육대학의 예체능계 실기실적 인정기준도 이렇듯 매우 복잡하고, 기준에 규정하지 못한 실적의 인정을 위해 대학별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상기의 접근방식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준다.

<표 IV-11> 교대 음악 실기 업적 평가 기준

구분	내용	최고 점수	비고
개인 발표회 및 연주회 /협연/ 오페라 주역	국제적인 공연장 연주회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도시에 1,000석 이상의 극장에서 60%이상의 관객이 참여한 음악회에 한 함 - 2인 연주회=70%, 3인 연주회=50%, 4인 이상=30% - 협연 : 전 악장 협연 70%, 단악장 협연 50% - 오페라 조연=50%
	공인된 연주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공연장 이외의 공인된 국외 공연장을 모두 포함한다. - 대학의 공인된 연주회장, 권위 있는 단체의 초청에 의한 특별연주회, 문화원 연주회를 포함한다. - 개인 작곡 발표회는 초연에 한 해 100점 - 2인 연주회=70%, 3인 연주회=50%, 4인 이상=30% - 협연 : 전 악장 협연 70%, 단악장 협연 30% - 오페라 조연=50%
음반 및 작곡집 제작	단독 음반 및 작곡집 (작곡집, 채보집, 음반, 개인 작품집)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은 50분 이상의 제작품에 한한다. - 공연 실태의 경우 발표회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작곡 : 관현악곡 및 합창곡 다악장, 오페라 전곡=100%, 단악장=50% - 실내악곡 : 다악장=70%, 단악장=30% - 가곡 1곡=10%
지휘, 연출, 감독	관현악단 또는 합창단 지휘/ 오페라, 창극, 뮤지컬 연출/ 음악회 감독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현악단 또는 합창 프로그램 전체 지휘, 연출, 감독= 100% - 50% 이상=70%, 30% 이상=50%, 20% 이상=30% - 실내악 혹은 중창 프로그램 전체 지휘, 연출, 감독=70% - 50% 이상=50%점, 30% 이상=30%, 20%=이상=20%
반주	전체 프로그램 반주	50	- 연주회 100%= 100%, 50% 이상=70%, 30% 이상=50%, 20% 이상=20%
중주, 중창	전체 프로그램	50	- 연주회 100%=100%, 50% 이상=70%, 30% 이상=50%, 20% 이상=20%

1. 발표회는 그 시간이 1시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공인된 연주회장은 연주회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을 의미하며, 교회, 초·중등학교 강당 및 체육관에서 연주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동일한 곡목으로 1년 이내에 행한 발표는 1회만 인정한다.
4. 연주회 곡목의 70% 이상 새로운 곡으로 대체 되었을 경우 별도의 연주회로 인정한다.
5. 이미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은 연주회에서 발표한 레퍼토리로 제작한 CD, 또는 DVD는 인정하지 않는다.
6.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의 연주회는 주최기관 및 음악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업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표 IV-12> 교대 미술 실기 평가 기준

구분	내용	최고 점수	내용 해설 및 단계별 점수
전시회	국제적인 전시관 개인전 및 단체전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런던, 베이징, 상하이, 도쿄, 쌍 페테레스부르그, 모스크바 등 국제적인 도시에 있는 공인된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단독으로 개최한 경우를 의미한다. - 1인전=100%, 2인전=70%, 3인전=50%, 4인전 이상=30%
	국내 개인전 및 단체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전=100%, 2인전=70%, 3인전=50%, 4인전 이상=30%
공모전	국제전, 대한민국미술 대전, 공예대전, 산업디자인전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100% - 특선=70% - 입선=50%
	전국 단위의 공인된 공모전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100% - 특선=70% - 입선=50% - 시도단위의 공모전 대상=50% - 시도단위의 공모전 특선=30%
전시 기획	국제 전시 총감독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규모 비엔날레 수준의 총감독=100% - 국제 규모 비엔날레 수준의 영역별 감독=70%
	국제 대규모 전시 기획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화랑전 등과 같은 대규모 전시회 기획 - 개인 화랑 기획전은 점수 없음

1. 국외에서의 전시회는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전시만 인정한다.
2. 미 발표작에 한하여 전시 기간이 6일 이상을 전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3. 전시작품에서 70% 이상 새로운 작품으로 대체되었을 경우 별도의 전시회로 인정한다.
4.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의 전시회는 주최기관 및 전시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업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5. 각종 포상은 봉사 점수로 한다.
6. 비평 등 서지 자료에 의한 연구 결과는 인문학의 연구 성과로 별도로 계산한다.

<표 IV-13> 교대 체육 실기 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및 기준		배 점
체육 무용	입 상	국제대회		150
		전국대회		100
무용	개인 발표	국외		130
		국내		100
	단체발표	국외	프로그램 50% 이상	100
			프로그램 50% 미만	70
		국내	프로그램 50% 이상	70
			프로그램 50% 미만	50
	안무	국공립단체		100
		민간단체		90
	출연	국외		70
		국내		50
	연출 및 감독	국외		40
		국내		30

1. 발표회는 공인된 공연장에서의 공연만 인정한다. 단 국외 발표회는 공연장, 공인된 학교의 공연홀, 초청 단체의 권위에 준한 특별공연, 문화원 공연을 포함한다.
2. 동일한 작품으로 2년 이내에 행한 발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동일한 작품으로 여러 지역 순회발표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기본점수+(기본점수×(발표 횟수-1)×0.5)
4. 순회발표라도 원래 발표작품에서 70% 이상 새로운 작품으로 대체되었을 경우는 별도의 발표회로 인정한다.
5. 참가상은 입상에서 제외한다.
6.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의 발표회는 주최기관 및 발표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업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9) 이슈 9: 박사과정 신설시 ‘사전심의 제도’의 타당성 문제

아홉 번째 이슈는 질적 요소의 도입 등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국가가 박사과정의 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과거 2004년에 폐지되었던 ‘박사과정 신설시 사전심의 제도’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정치철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교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정책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과 정치적 수용가능간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박사학위자가 사회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배출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이 염려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박사과정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면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각 대학들이 교과부가 설정한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박사과정의 경우 고차원의 지식을 창출하고 전문 연구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단순한 정량지표로만은 설치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므로 일견 국가의 개입 수단으로서 사전심의 제도를 적극 고려하는 것이 이러한 정책목표를 충족하는 효율적 접근방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자율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정책적 환경과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이미 대학별 자율화한 박사과정 설치에 대해 다시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수용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채택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단기적으로는 박사과정 설치기준 강화 등 박사과정의 남설 방지 및 질 관리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려는 기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는 최소한의 설치기준만을 제시하거나 아예 대학이 자율적으로 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하게 한 후, 사후 평가를 통해 점검하여 정보공시 및 대학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접근방식을 취해 나가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교과부에서는 이러한 사전심의제를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 대학설립 심사에 있어서는 설립을 위한 준칙 기준이 있지만 이 기준이 너무 낮아 심사위원회에서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확보 등 질적 지표를 별도로 심사하고 있고, 이 때 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설립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해당 대학의 신설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극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학 설립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10) 이슈 10: 질적 지표에 대한 사후 이행점검 문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슈는 질적 지표를 대학원 설치기준으로 법령에 규정할 경우 어떤 수단을 통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사전심의 vs. 사후 이행점검). 특히 대학원 설치와 관련한 사전심의가 자율화 기조에 역행해서 고려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질적 지표의 충족여부, 즉 법령기준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는가? 만일 현실적으로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지나치게 많은 노력이 들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에도 사후점검이 어려운 질적 지표 혹은 복잡한 지표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사후적인 점검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복잡한 질적 기준을 최소 설치기준으로 규정할 경우 사후 점검할 방법이 없어 법의 권위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최소 설치기준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규정하면 사실상 이를 점검할 방법이 없게 되고, 점검할 방법이 없게 되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교과부의 ‘2011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에 따르면 박사과정 학과신설에 따른 ‘연구업적 확인방법 개선방안’을 특별히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원 학생정원 설치 세부기준 이행 확인 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www.kri.go.kr)에 등재된 사항에 한하여 인정(단, 실기분야 및 저·역서의 경우는 별도 확인)“, 이러한 조항도 역시 사후 이행점검의 어려움과 동시에 필요성을 동시에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실적 인정 범위와 기준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교과부가 상기 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행점검(연구업적 확인)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총정원 범위 내에서 기본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박사과정 신설 후 사후보고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부서인 교과부에서 수많은 조정대상 프로그램(박사과정 설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러한 복잡한 연구실적 기준 충족여부를 사후적으로 이행 점검하여 대학들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제도의 효율적 시행은 대학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시를 통

한 설치기준의 강화라는 새로운 교과부 정책이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졌을 때, 과연 교과부가 의도한 ‘박사과정 프로그램의 남설 방지 및 질적 수준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교과부에서 박사과정 설치기준 강화방안을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해 본 후(1-2년) 일부 대학에 대한 사례 조사 등을 통해서 고시 규정 강화가 어떤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대학들에 의한 남용과 도덕적 해이 현상은 없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이러한 연구결과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고, 이를 제어할 별다른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면 교과부로서도 설치기준의 강화라는 투입요소 위주의 진입단계 규제방식보다는, 평가인증, 질 평가와 재정지원과의 연계 등 운영 혹은 산출과정에서의 보다 심도 있는 질 관리 체제 강화와 인센티브 구조 구축이라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제도개선 기본방향

1) 박사과정 설치기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원칙

이상의 이슈들을 종합해 본 결과 정책적으로 실현가능한 박사과정 설치기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치기준과 질 관리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설치기준’은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기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질 관리 기준’과 다르고, 특히 사전/사후 심의나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령에 규정되어 획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개별 학문분야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급적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설치기준은 가능하다면 추후 이행점점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간단하고 점점하기 쉽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차원의 획일적인 규정의 제정을 통한 규제보다는 정보공시제 및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의하여 대학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예컨대

박사과정 설치기준은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박사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대학자체평가, 학문분야별 평가 등과 연계하여 점검하고 결과는 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하거나, 교과부 등 정부의 대학지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개선 기본방향

[제1안]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대로 관련규정 및 지침개정을 통하여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강화. 최소기준은 박사과정 설치학과를 대상으로 계열별/학과별 교수 1인당 연간 논문 출판편수 등 지표에 대한 평균값 등을 감안하여 결정

[제2안] 관련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여 확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전공특성, 해당학과의 운영상의 특징들을 보다 정성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대학설립운영규정, 교과부 정원조정 지침)을 개정하여 박사과정 설치의 경우에도 전문대학원 설치 등과 마찬가지로 사전심의 제도 도입

[제3안] 박사과정 설치기준은 현행대로 두되, 영국과 같이 국가수준의 박사과정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기관수준에서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하게 한 후, 주기적 평가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

이와 함께 부실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예컨대,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예컨대 BK 후속사업 등) 지원자격을 박탈하거나 기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도입.

박사과정 설치·운영 실태 평가의 경우 (1) 대교협 등과 협조하여 학문분야별 평가를 활용하거나 (2) 혹은 교과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했던 교원양성기관 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일단 박사과정 설치대학의 대학원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 고려

다. 박사과정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1) 제1안: 박사과정의 신·증설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

현행 법령에 규정된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1안의 경우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1) 현행 가중치 부여방식(현행 고시에 있는 가중치 부여방식, 즉 국내와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유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편수의 증가나 질적 지표를 추가하는 접근방식과 (2) 국제 학술지 등에 가중치를 두어 현행 가중치 부여방식 자체에 전면적 손질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접근방식의 두 가지로 있다고 하겠다. 현행 규정과는 달리 BK21 사업 연구실적 평가기준 등을 통해 이미 국제학술지 등에 대한 가중치가 대학사회에서 보편화 되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는 접근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보다 개선의 효과가 크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후자의 접근방식만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논문과 저·역서 등 서로 다른 연구실적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는 ‘BK 사업단 연구업적별 평가기준’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논문 편수를 산정할 때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단독 저자)을 1편이라고 할 때, SCI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2배, SCIE급은 1.5배, 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의 경우 0.8배, 학술저서의 경우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물론 재정사업 지원 기준과 법령상의 설치기준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겠지만, 그래도 정부재정사업 평가나 학내 교수업적 평가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 온 전례가 있으므로 비교적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절에서 제시되는 모든 대안의 경우 박사과정 신설을 위한 최소 교수수는 현행 수준(7명 이상)을 유지하고, 최소 연구 실적이 요구되는 교수의 범위(수)도 현행 규정과 같이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최소인원 7명중 과반수에게만 요구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대안에서의 최소 연

구실적 기준이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소속교원의 자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한 박사과정의 남설을 막고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 교과부의 정책 목표라면 과반수가 아니라 최소 확보 교수 전원에게 이러한 최소 연구실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도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정치적 수용가능성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전향적 정책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일단 상기한 전제조건하에서 교수들에게 요구되는 최소 연구실적 충족기준과 관련된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대안 1] 최소 연구실적 편수를 늘리는 방안

○ 예시안: 최근 5년간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등 5편/ 자연과학·공학·의약학 계열 7.5편

- 연구재단에서 제시한 계열별 교수 1인당 논문 실적 평균(2008/09 2개년 평균 인문·사회 1.01편; 자연과학·공학 1.51편 - SCI 급은 2배, SCIE급은 1.5배 가중치를 하여 환산한 편수임)을 참고로 하되, 일단 1년에 단독논문 기준 1편은 출판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논리에 바탕함.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학과의 교수 과반수는 최소한 국제학술지 가중치 부여를 전제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1편(자연과학·공학계열은 1.5편)의 실적을 가지는 것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함.
- 아울러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과 자연과학·공학·의약학³⁷⁾ 계열과의 차등 비율은 2008/2009년 2개년 국제학술지 가중 연구실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였음(※ 인문·사회: 1.01 vs. 자연과학·공학·의약학 1.41 * 자연과학·공학만은 1.51). 위에 제시된 자연과학·공학·의약학계열의 연구실적은 논문과 저·역서 실적만 고려한 것이고 기타 특허 등 산업재산권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 평균수치보다 다소 높은 1.5를 기준으로 삼아 인문·사회 계열과 비교함. 참고로 국제학술지에 대한 가중이 없는 경우 이 두 그룹 간 연구실적 차등은 미미하지만 오히려 인문·사회계열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

37)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의학계열로 되어 있으나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의 계열 분류기준은 의약학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계열분류도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타남(※ 인문·사회:0.96편. vs. 자연과학·공학·의약학 0.94 * 자연과학·공학만은 1.01).

- 한편 의·약학 계열의 연구실적은 자연과학·공학계열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자연과학·공학만 1.51편, 의약학 1.20편 * 국제학술지 가중치 적용 2008/09년 실적 평균) 동계열을 현행 규정과는 달리 자연과학, 공학계열과 분리하여 보다 정치하게 학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열별 최소 연구실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예·체능 계열은 분야의 속성상 실기실적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연구재단의 연구실적 데이터 등 가용한 DB에서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하지만, 일단 현행 고시의 예에 따라 인문·사회계열과 동일한 그룹으로 묶어 최소기준을 제시함. 다만, 실기실적 데이터를 포함한 통계가 확보되면 이를 바탕으로 추후 재범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대안 2] 최소 연구실적 편수는 그대로 두되, SCI급 연구실적 등 (저널 IF, 논문당 피인용 횟수, 기술이전실적, 국제수준 학술지 편집위원 참여, 국제학회 초청강연 등) ‘질적 요건’을 추가로 최소 필요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식.

- SCI급 연구실적 등 (저널 IF, 논문당 피인용 횟수, 기술이전실적, 국제수준 학술지 편집위원 참여, 국제학회 초청강연 등) ‘질적 요건’을 교과부 고시 수준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다음의 규정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됨.
- 하지만, 앞서 검토했던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설치기준은 최소기준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질적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짐. 아울러 특히 대부분의 인문(0.01 편)·사회계열(0.04편), 예술체육학 계열(0.01편, 2009년 기준) 교수들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 게재실적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벤치마킹을 위한 질 관리 기준이라면 몰라도 설치기준으로서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음.

[규정방식 예시]

▶ 규정방식 1: 기본적으로 관련 교원 1/2이상은 SCI급 논문 1편이상 요구

예컨대, “관련분야 교원은 모두 최근 5년간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2편/ 자연과학·공학·의약학 계열은 3편 이상의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 중(7명중) 1/2 이상(혹은 00명 이상)은 SCI급 논문 1편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

▶ 규정방식 2: 기본적으로 관련 교원 1/2이상은 복수의 옵션 중 1개 이상 충족 요구

다른 접근방식으로 이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1> 연구실적, 경력 등에 관한 질적 기준을 최소요건으로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

“관련분야 교원은 모두 최근 5년간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2편/자연과학·공학·의약학 계열은 3편 이상의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 중(7명중) 1/2 이상(혹은 00명 이상)은 다음 각호의 조건중 최소한 하나를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1) SCI급 논문 1편 이상; (2) 교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의 국제수준 학술지 편집위원 참여실적 1건 이상; (3) 교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의 국제학회 초청강연 실적 1건 이상.

<2-2> 기술이전 등에 관한 질적 기준을 최소요건으로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

“관련분야 교원은 모두 최근 5년간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2편/ 자연과학·공학·의약학 계열은 3편 이상의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중(7명중) 1/2이상(혹은 00명 이상)은 (1) SCI급 논문 1편 이상 실적이 있거나, 혹은 (2) (교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열 혹은 학과(부)의 경우에는) 기술이전 실적이 1건 이상(혹은 중계열별 평균 기술이전 건수 혹은 금액)이 있어야 한다.

▶ 규정방식 3: 기본적으로 1과 2의 규정방식을 혼합하는 방안

가장 강화된 접근방식으로서 규정방식 2와 동일선상에서 이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임

<3-1> 연구실적, 경력 등에 관한 질적 기준을 최소요건으로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

“관련분야 교원은 모두 최근 5년간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2편/ 자연과학·공학·의약학 계열은 3편 이상의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 중(7명중) 1/2 이상(혹은 00명 이상)은 SCI급 논문 1편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다음 각호의 조건중 최소한 하나를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1) 소계열별 저널 평균 IF 이상의 저널(혹은 통계분포를 보고 IF 00 이상)에 실린 논문 1편 이상; (2) 소계열별 논문당 평균 피인용 회수(혹은 통계분포를 보고 피인용 횟수 00회 이상)를 상회하는 논문이 1편이상; (3) 교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의 국제수준 학술지 편집위원 참여실적 1건 이상; (4) 교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의 국제학회 초청강연 실적 1건 이상.

<3-2> 기술이전 등에 관한 질적 기준을 최소요건으로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

“관련분야 교원은 모두 최근 5년간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2편/ 자연과학·공학·의약학 계열은 3편 이상의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중(7명중) 1/2이상(혹은 00명 이상)은 SCI급 논문 1편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열 혹은 학과(부)의 경우에는 이들 중(7명중) 1/2 이상(혹은 00명 이상)은 기술이전 실적이 1건 이상(혹은 중계열별 평균 기술이전 건수 혹은 금액)이 있어야 한다.

[대안 3] 방안 1과 방안 2을 결합하여 편수도 올리고, 질적 요건도 추가로 부가하는 방안

- [대안 1]과 [대안 2]를 전면적으로 결합하거나, 부분적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방식인 바, 개념적으로 아주 다양한 방안들이 가능할 것이며 각 방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 기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함

2) 제2안: 박사과정 신설시 사전 심의제도 도입

[대안 4] 대학원 신설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질적 통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남설을 예방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확장하여, 동 위원회의 명칭을 “대학 및 대학원 설립심사위원회”로 하고, 위원구성을 보완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여, ①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②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③대학원대학 박사과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시행규칙 중 관련 조항 개정)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율화 정책에 반하므로 대학의 반발이 예상되고, 규제신설에 따른 입법화에 어려움이 예상됨

3) 제3안: 박사과정 설치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박사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 종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도입

박사과정 설치를 총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도에 있어 대학의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음의 두 가지 접근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가지 접근방식 모두 박사과정 설치에 대한 자율성을 개별 대학에 부여하되, 책무성 확보수단으로서 박사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 종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정보공시제와 연계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한편 이를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안 5] 대학의 역량에 따라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등 부여.

- 예컨대 대학평가인증 결과 총체적 연구자 양성 역량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자율적으로 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전폭적 자율성을 부여하되, 일정 등급 이하의 대학에 대해서는 박사과정 신설시 보다 강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
- 이러한 방식의 평가인증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역량별 등급을 의제하는 범주로서 교과부가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수혜액 규모, SCI 논문수, 논문 피인용 횟수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1) 연구역량 우수대학(약 20교; 초일류 지향대학 3교; 연구중심대학 7교 포함), (2) 산학협력 및 교육역량 강화대학(약 48교), (3) 교육역량 개선 필요대학(약 48교), (4) 자체 역량 강화 및 구조조정 필요대학(약 103교)로 구분한 사례를 참조하여 박사과정 설치에 대한 자율권 부여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행 법령상 박사과정 신설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하에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러한 대학의 역량에 따른 자율성의 제약 시도에

대해서는 대학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기술적으로도 법령개정이 필요하므로 규제신설에 따른 입법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안 6] 개별대학에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부여

- 박사과정 설치에 총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1) 박사과정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2) 대교협 등 주관의 학문분야별 평가 혹은 교과부 주관 박사과정 운영실태 평가(기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3) 평가결과는 정보공시제에 공개하고, 나아가 교과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들이 박사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역할을 한정.
- 이와 함께, 영국의 HEA(Higher Education Academy)에서 수행하는 대학원 연구경험 서베이(Postgraduate Research Experience Survey: PRES)와 같은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교사대 평가와는 달리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일반/전문대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시행에 따른 추가적 행정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교과부에 박사과정 정원 강제조정 권한이 없으므로 추후 정보공시제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대학원 관련 재정지원 사업 개편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질 필요가 있음.

4) 종합적 검토의견

제1안에 따라 관련규정 및 지침개정을 통하여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강화하려고 하는 경우 현장 수용성과 정책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K21 사업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구업적별 평가기준 적용을 전제로 [대안 1]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인다. [대안 2]에서 제시된 대로 ‘질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SCI 등 국제저명 학술지 출판실적, 논문 피인용수, 기술이전 실적, 국제수준 학술지 편집위원 참여 실적, 국제학회 초청강연 실적 등을 박사학위 설치기준으로 법령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학들의 많은 반발을 초

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고려하기 어려운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BK21 사업단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박사과정 설치에 필요한 최소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실증적 논거를 찾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임 교원 1인당 연구실적, 특허 실적 등 몇 가지 합의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가용한 통계치(평균값, 중간값, 최소값, 퍼센타일값)를 참고하여 최소기준을 설정하되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과 대학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정치적, 기술적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보다 정치한 수준에서 ‘질적 기준’을 박사과정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기준을 법령, 지침 수준으로 확립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전문대학원 신설의 경우와 같이 일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시에도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앞서 논의한 질적 기준을 포함한 교수들의 연구실적, 설치대상 박사학위 프로그램의 장래전망, 학생유치 가능성, 교수의 업적, 대학의 연구 환경 등을 전문가들이 정성적이고, 합의제로 평가하는 절차를 만드는 <제2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학자율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정책적 환경과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이미 대학별로 자율화한 박사과정 설치에 대해 다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수용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채택하기가 곤란한 면이 커서 실제 정책대안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1안>과 <제2안>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접근방식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관점에서는, <제3안>에서 제시된 두 가지 방안처럼 박사과정 설치의 총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1) 박사과정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2) 대교협 등 주관의 학문분야별 평가 혹은 교과부 혹은 관련기관 주관 박사과정 운영실태 평가(기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3) 평가결과는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하고, 나아가 교과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들이 박사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통제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박사과정

남설의 통제라는 교과부의 단기적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평가인증 등을 통해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들에만 자율성을 부여한다거나[대안 5], 박사과정 신설을 위한 최소기준을 법령에 규정하는[대안 1]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과 같은 방안이 과도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당초 2002년 연구학위 프로그램 개혁방안 마련시 제1안과 같이 정량적인 최소기준 설정을 강력히 추진하다가 대학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이를 포기하고 제3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박사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대안을 포함하여 어떤 대안이 어떤 상황에서나 절대적으로 최선의 대안이라는 증거는 없다. 결국 해당 국가의 고등교육의 발전정도, 대학의 수용성, 향후 1~20년간 사회적 필요에 비추어 본 현재 박사학위 배출자수, 기술적 가능성,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안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인력수급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분야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문·사회계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박사학위 취득자수보다 훨씬 많은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유학중인 많은 학생들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박사학위자의 배출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자원의 사용인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층적 분석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 대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상황변화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정책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개선 방안

1. 현행 실태

가. 대학원제도의 도입과 발전

우리의 경우 해방 후 미군정 체제 하에서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해방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정규 대학으로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광복 이후 일본 방식의 경성제국대학은 소멸되고 미국 방식의 대학을 채택하여 대학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유럽 대학과 달리 학과 조직과 대학원 조직을 분리한 미국 대학체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원은 미국의 대학제도를 모방하였으나 그 장점인 경쟁체제의 확립과 대규모 재정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주도형으로 대학 제도가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대학원 제도의 발전은 다음과 같이 ‘제도 도입기’, ‘제도 정착기’, ‘제도 팽창기 및 발전기’(서정현 외, 2006)로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서 ‘제도 도입기(1946년-1965년)’는 1953년에 문교부 훈령으로 대학원 규정을 제정하여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였다. 1959년에 서울대학교의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최초의 특수대학원으로 설치되었고, 1963년에는 서울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이 설치된 바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1965년에 37개 대학원에 3,482명의 대학원 학생이 인문, 사회, 자연 등 기초학문 분야에 주로 재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인 ‘제도 정착기(1966년-1990년)’ 시기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형태로 대학원 제도가 정착되었다. 1990년에 대학원 수는 289개, 대학원 학생 수는 86,911명으로 확대되었는데 경영학, 법학, 공학, 교육학 등 응용학문 위주의 특수대학원이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졸업정원제를 실시함에 따라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대학원이 팽창한 것도 특기할 사항으로 보인다.

세 번째 단계인 ‘제도 발전기(1991년 이후)’의 시기에 특이한 사항은 1997년에 대학원 규정을 제정하였지만, 이는 1998년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대학원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고 학위를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여 수여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고급 서비스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는바, 2002년에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었고, 2006년에 경영전문대학원 제도가 활성화되었으며, 2009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2010년 현재 179개 일반대학 중 167곳에서 일반대학원을 운영 중이며 박사과정 학과수는 4,167개이고, 입학정원은 20,445명,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자는 2010년 11,093명으로 지금까지 박사학위 취득자는 158,828명이었다(<표 V-1>참조). 그리고 일반대학원 석사를 마친 취업자의 전공별 분포는 공학(38.1%), 자연(18%), 의학(16.5%), 사회(13%), 인문(5.6%), 예체능(4.1%) 등이었다.

<표 V-1> 국내 박사학위 관련 현황

(단위: 명, 개)

구 분	입학정원 (2010)	박사학위 취득자 (2010)	박사학위 취득자 누계	박사과정 학과수 (2010)
인 원	20,445	11,093	158,828	4,167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나. 박사학위 과정 개요

우리나라 박사학위 과정은 학위과정 이수, 논문자격시험, 논문심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정을 개별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대학 자율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2000년 10월 「학위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대학의 장이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및 동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에 따르면,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은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

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하도록 되어 있다.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대학원 대학 제외)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학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하고,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 제외)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도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시간제 등록생을 제외하고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 외 논문제출 절차, 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5인 이상), 논문발표 의무(1년 이내) 등에 관해서는 개별 대학마다 학칙에 정해져 있다.

2. 주요 선진국의 박사과정 운영 체제

가. 미국

1) 대학원의 일반적인 현황

미국 대학원은 크게 전문대학원(professional education)과 일반대학원(graduate education)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은 “학문적 역량을 토대로 한 전문분야의 고급전문가(specialist)를 양성”하는데 있고, 일반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높은 수준의 연구기능 성취와 다양한 학문분야 및 전문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의 습득”에 있다.

미국의 전문대학원은 주로 의사, 변호사, 기술사, MBA 등과 같은 고급 전문직을 주로 연구중심대학의 석·박사과정에 개설된 전문가 준비과정(professional

preparation)을 통해 양성하고 있다(서정현 외, 2006). 미국의 일반대학원은 1872년 하버드대학에 최초로 개설되었지만, 1876년 존스홉킨스 대학에 일반대학원이 설립되면서 연구기능이 강화되었고, 현재는 연구 활동과 교수활동의 접목을 이루고 있다(Rhodes, 2001).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원 제도는 ‘복층형 횡렬구조(two-tier vertical structure)’의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 대학원에서 학과는 대학 신입생의 기초 강좌에서부터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제공하는 하나의 통합적 단위이다. 이러한 학과 중심의 복층형 횡렬구조를 지닌 미국의 대학원 제도는 유럽의 경우보다 더 융통성 있게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의 유형은 카네기재단에 의한 분류 방식이 일반적이다. 즉, ‘대규모 박사/연구중심대학(Doctoral/Research Universities-Extensive)’, ‘집중분야 박사/연구중심대학(Doctoral/Research Universities-Intensive)’, ‘석사학위중심대학 I (Master's Colleges and Universities I)’, ‘석사학위중심대학 II (Master's Colleges and Universities II)’, ‘전문고등교육기관(Specialized Institutions)’ 등으로 분류된다. 그 외에도 카네기 분류에서는 일반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부중심대학(baccalaureate colleges, 606개)을 인문학 분야에서 최소한 50% 이상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baccalaureate colleges-liberal arts), 같은 분야에서 50% 미만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baccalaureate colleges-general), 그리고 최소한 10% 정도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baccalaureate/associate's colleges)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10% 미만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community, junior, technical college 등의 준학사 전문대학(associate's colleges, 1,669개)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2) 대학원 학위체제의 현황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석·박사과정을 통해 크게 ‘학술학위(academic degree)’와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로 구별하고 수여하고 있다. 학술학위는 학문연구능력을, 전문학위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늠하여 수여하고 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의 경우 학술학위는 M.A.(Master of Arts)와 M.S.(Master of Science)가 있고, 특히 M.S.는 엔지니어링이나 농업과 같은 기술 분야나 연구방법, 현장연구와 같은 분야에 주로 수여된다. 대부분의 석사과정에서는 논문제출 혹은 미제출의 선택권이 있지만,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학점이수나 종합 시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의 전문석사과정은 종결석사과정(“terminal” master's programs)이라고 하여 더 이상 박사과정에 진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문석사학위는 매우 구체적으로 표기되며 이를테면,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S.W.(Master of Social Work), M.Ed.(Master of Education), M.F.A.(Master of Fine Arts), M.M.(Master of Music) 등 140여종의 전문석사학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석사학위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받고 36~48학점의 졸업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논문 제출은 요구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사학위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학문학위는 Ph.D.(Doctor of Philosophy)이고, 여기서 철학(Philosophy)이란 학문분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최고의 지성 또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학술연구인으로서의 자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박사학위 경우에도 학술학위 이외에도 법과대학, 의과대학,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의 전문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원이 별도로 있어서 일반대학원과는 달리 별도의 교수진을 가지고 있고 독자적으로 J.D.(Doctor of Juris), Ed.D.(Doctor of Education), M.D.(Doctor of Management), D.B.A.(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등 40여종의 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전문박사학위과정에서는 3~5년 동안 학점을 이수한 후 종합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고, 이후 전문분야의 실무와 관련된 논문을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는 것은 우선 교육과정상의 다양성 확보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은 다양한 교수진과 학생을 수용하여 통합화와 세분화, 선택권 보장으로 순수한 학문발전의 기초를 얻을 수 있는 한편,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문 영역과 전문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원 교육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급 인적자원을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오성삼, 2001).

한편 미국에서 학위수여권자는 주지사, 주 고등교육위원회 의장, 총장, 그리고 재단이사회 이사장 등 주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위수여권은 총·학장에게 있고, 대학원의 정원관리 확인방법의 일환으로 교과부에 학위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3) 박사과정 운영체제 현황

미국 대학원 교육제도는 다양성에 의해 각 대학원에서 적용하는 입학과정, 학위취득 과정과 수학 기간 역시 대학원마다 학과마다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입학 신청서류에는 개인적인 진술(personal statement), 신상정보 양식, 추천서, 에세이, 성적증명서, GRE(혹은 GMAT, LSAT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출된 대학원 입학 신청서류는 대학원의 입학위원회나 혹은 각 학과 사무실로 직접 보내어지고, 이들 서류를 통해 입학결정 여부를 내리는 곳은 학과의 입학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한다. 실질적으로 입학사정, 이수과목 및 필수조건 설정 등의 규정은 대학행정당국, 교수위원회, 일반대학원 사무 부서 등의 연계와 협조를 통해 학과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대학원 신입생은 중앙입학관리사무처에 의해 단과대학별로 입학하는 학부생과는 달리, 학과별로 선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용 외, 1999).

일반대학원 과정의 경우에는 석사과정 이수에 약 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박사과정 이수에는 약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이 학문계열 내에서 박사과정 입학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석사학위 논문을 면제하고, 소정의 교과목 학점이나 논문자격시험(Qualifying Exam)을 요구하고 있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석사학위 논문 대신 박사과정의 기초과목을 이수케 함으로써 더욱 심도 있는 대학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4) 소결

미국의 대학원생들은 입학 이후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과별 필수과목 이수, 학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박사학위 논문자격 검증절차 등의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교수의 연구 활동이 곧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이 되고, 학생의 연구 활동은 곧 자신의 학습활동이 되어 교육·연구의 연계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대학원에서 부여하는 박사학위는 교육학박사, 경제학박사, 행정학박사, 법학박사, 의학박사 등 미국의 전문대학원에서 부여하는 박사학위 명칭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문대학원의 역할과 기능이 전문화되어 전문박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이 일반대학원에서 부여하는 박사학위 명칭과 전문대학원에서의 박사학위 명칭과의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경우에도 대학원 제도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학원제도는 학문의 세분화와 연구기관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대학원 체제도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EU(유럽연합)

1) 고등교육체제의 일반적인 현황

1998년 파리 소르본선언 이후 지속되고 있는 볼로냐 프로세스의 목적은 유럽의 여러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높여서 국제적 호환성과 선호(Attractiveness)를 강화하는 것이다. 볼로냐 개혁의 핵심은 2003년 베를린회의에서 각국의 고등교육관련 장관들에 의해 강조된 세 가지 사항인데, 즉, 학사/석사/박사 3단계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프로그램의 도입, 좀 더 효과적인 학위취득과 연구기간의 확립, 효과적인 질 보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학점교환 및 인정 시스템(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ECTS)과 학위설명서(Diploma Supplement)는 대다수 EU 가입국이 채택하였으며, 학위의 3단계 구조(학사/석사/박사)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 도입되어 있다.

소르본선언 이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ission), 유럽대학·학장·학생연합(the Council of Europe and associations of universities, rectors or European students)과 같은 기관을 포함하여 29개국이 볼로냐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유럽 고등교육 개혁의 로드맵이 확정되었다(서정현 외, 2006).

현재 유럽연합의 고등교육체제는 파리의 소르본선언(1998.5.25), 볼로냐회의(1999.6.19), 프라하회의(2001.5.19), 베를린회의(2003.9.18-19), 베르겐회의(2005.5.19~20)로 이어지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의해 상호 연계 운영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국제표준등급(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1997)에 따르면, 유럽연합 교육체제는 일반교육/직업교육/취업준비교육을 지향하는 차원과 교육 및 고용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차원으로 교육 수준과 분야가 구분되어진다. 현재 ISCED 97은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ISCED 0단계는 취학전 교육, ISCED 1단계는 초등 저학년교육, ISCED 2단계는 초등 고학년 교육, ISCED 3단계는 중학교 교육, ISCED 4단계는 고등학교 교육, ISCED 5단계는 제1단계 대학교육, ISCED 6단계는 제2단계 대학교육이다. 여기서 ISCED 5단계는 주로 이론적인 접근을 하는 학문지향(type A) 프로그램과 type A 보다는 이수기간이 짧고 고용시장 진입에 맞게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인 직업지향(type B) 프로그램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ISCED 6단계는 고급 연구 자격(박사학위)을 얻기 위한 단계이다.

2) 대학원의 학위체제 현황

볼로냐 프로세스에 서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사/석사 이원체제는 구조화되어 있고, 이 구조는 ISCED 5A에만 적용된다. ISCED 5A에서 졸업자격증(학사/석사)은 대학 혹은 유사기관에서 수여되고, 이원체제는 대부분의 연구 분야에 적용된다.

의학과 그 관련분야의 연구는 대개 5~6년간 지속되는 단일의 구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며, 과정을 마치게 되면 바로 석사 수준의 학위소지자격을 얻게 된다. 벨

기에,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 분야의 최종적인 자격이나 학위를 얻기 위해 대개 학사/석사로 코스가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학사학위를 받은지 3년 내에 의사, 치과의사 등에 바로 갈 수 있게 하거나 전문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두 번째 과정(석사)을 거쳐야만 한다.

유럽 국가 대부분의 고등교육 과정은 첫째, 학술적이거나 전문 이론에 기반한 프로그램(ISCED 5A)으로서 박사과정(ISCED 6)에 바로 진학할 수 있는 과정과 둘째, 실용성을 지향하는 전문 프로그램(ISCED 5B)으로서 박사과정에는 진학할 수 없는 과정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전문 자격증에 해당하는 ISCED 5B는 고용시장에 바로 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SCED 5A와 5B 프로그램 사이의 경계는 과정(대학 혹은 대학이 아닌 곳)을 편성하는 기관의 유형과 졸업자격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이처럼 이분화된 편성형식은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는 대학과 비(非)대학기관의 성향에 의해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6개국(핀란드, 그리스, 교황청, 몰타, 노르웨이, 러시아)에서는 대학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개설하는 것이라도 승인된 모든 고등교육 과정은 ISCED 5A로 인정한다. 네덜란드에서는 ISCED 5B의 몇몇 단기 프로그램은 학사 프로그램(ISCED 5A)의 한 부분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하고 있다(서정현 외, 2006).

3) 박사과정 운영체제 현황

2003년 9월 볼로냐선언에 참가한 유럽의 모든 참가국들은 학사/석사 이원체제(two-cycle)에 추가로 박사과정을 고등교육의 세 번째 단계(third cycle)로 간주하고 있다. 볼로냐 프로세스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최근 박사과정 도입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단계 ISCED 5A(석사)의 마지막에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교육기관의 수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석사학위증을 가진 학생들은 개인적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에 높은 수준의 이론적 과정(박사과정 훈련)을 취득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터키, 영국의 학생들은 ISCED 5A 졸업자격을 취득한 후에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개 추가사항이 있는데, 키프로스에서는 ISCED 5A 첫 번째 단계를 이수한 학생들은 ECTS의 60학점을 이수하고 나서 특별 연구훈련(research training)을 받는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음이 그 예이다. 독일에서도 학사학위를 받은 학생들 중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은 바로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국가의 절반정도의 나라에서는 연구 훈련(research training)을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다. 볼로냐선언의 대다수 참가국들은 필수사항이든 선택사항이든지 간에 연구훈련(이론중심의 과정)을 박사학위과정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고, 개별연구(individual research)는 추가사항으로 넣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대개 최소 3년이다.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이태리, 몬테네그로, 노르웨이는 박사과정의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고, 룩셈부르크와 루마니아는 2005/06학년도부터도 이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 스페인에서는 최소 2년 내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의 박사학위과정의 최대한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개 최대 8년까지이다. 하지만 벨기에와 포르투갈에서는 학위과정의 최소,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4) 소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볼로냐 선언 등을 통해 각국의 고등교육을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통용성을 인정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수준이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석·박사학위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평가기준과 학위인증기관의 설립을 모색하여 다른 국가와의 학위 통용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설문조사 분석

박사학위과정 내실화를 위한 설문결과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표본의 일반적 특성

대학원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교수집단과 대학원 교육의 실질적 수요자인 대학원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따라서 표본의 일반적 특성 또한 교수집단과 대학원생집단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먼저 교수집단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344명의 교수 응답자들이 속한 대학원의 규모를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5000명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 1000명~5000명 미만인 경우는 중규모, 1000명 미만은 소규모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각 대학의 알리미에 공시되어 있는 대학원 정보를 바탕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설문에 응답한 교수집단의 경우 응답자의 63.4%(218명)가 중규모(1000명~5000명 미만)의 대학원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대규모 대학원 소속이 25.0%, 소규모 대학원 소속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재직 중인 대학의 설립유형은 사립대 55.2%와 국공립대학 44.8%로 나타나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과정에서 배분된 두 집단 간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응답자의 성별 특성은 남성이 81.8%로 여성응답자 18.2%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 특성에서는 50대 응답자가 4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7.7%, 60대 이상 9.4%등의 순이었고, 재직기간별 특성에서는 10년 미만의 재직자가 35.8%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 재직자 34.3%, 20년 미만재직자 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위별 특성에서는 정교수 이상이 57.8%로 가장 많았고 부교수가 21.5%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별 특성에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21.5%, 대전 충청권 22.4%, 대구 부산 등 영남권 36.0%, 광주 등 호남권 12.8% 등이다.

<표 V-2> 교수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결측치(무응답)
대학원의 규모	대규모	86	25.0	
	중규모	218	63.4	
	소규모	40	11.6	
	합계	344	100.0	
대학의 설립유형	국공립대학	154	44.8	
	사립대학	190	55.2	
	합계	344	100.0	
성별	남	278	81.8	4(1.2%)
	여	62	18.2	
	합계	340	100.0	
연령	30대	20	5.8	2(0.6%)
	40대	129	37.7	
	50대	161	47.1	
	60대 이상	32	9.4	
	합계	342	100.0	
재직기간	5년 미만	56	16.3	
	5년~10년 미만	67	19.5	
	10년~15년 미만	52	15.1	
	15년~20년 미만	51	14.8	
	20년~25년 미만	43	12.5	
	25년~30년 미만	46	13.4	
	30년 이상	29	8.4	
	합계	344	100.0	
직위	전임강사	13	3.8	5(1.5%)
	조교수	57	16.8	
	부교수	73	21.5	
	정교수	196	57.8	
	합계	339	100.0	

<표 V-2> 교수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표계속)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결측치(무응답)
전공분야	인문계열	46	13.4	1(0.3%)
	사회계열	53	15.5	
	경상계열	26	7.6	
	이학계열	47	13.7	
	공학계열	86	25.1	
	농학계열	17	5.0	
	의학계열	23	6.7	
	예체능계열	24	7.0	
	사범계열	15	4.4	
	가정계열	3	0.9	
	기타	3	0.9	
	합계	343	100.0	
대학의 소재지	서울	44	12.8	
	인천, 경기도	30	8.7	
	대전, 충청남북도	77	22.4	
	광주, 전라남북도	44	12.8	
	강원도	8	2.3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124	36.0	
	제주도	17	4.9	
	합계	344	100.0	
재학생 규모	5천명 미만	36	10.5	1(0.3%)
	5천명~1만명 미만	91	26.5	
	1만명~1만5천명 미만	136	39.7	
	1만 5천명 이상	80	23.3	
	합계	343	100.0	

한편 대학원생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479명의 응답자가 속한 대학원의 규모별 특성은 중규모의 대학이 5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규모 31.1%, 소규모 10.0% 등의 순이다. 대학의 설립유형별 특성에서는 사립대 소속 대학원생이 59.7%, 국공립대 소속 대학원생 40.3% 등의 순이다. 대학원생 응답자의 성별 특성은 남성 55.6%, 여성 44.4%로 남성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별 특성에서는 30대가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대 27.8%, 40대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과정별 특성에서는 박사 1학기응답자가 2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박사 3학기 24.1%, 박사과정 수료 19.1%, 박사 2학기 11.1%, 박사 4학기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별 특성에서는 각 계열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공학계열이 17.5%로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회계열 16.4%, 이학계열 15.6%, 인문계열 14.5%, 경상계열 14.1% 등도 비슷한 규모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성에서는 대구·부산 등 영남지역 대학원생이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원생이 28.6%, 대전·충청지역 17.5%, 광주·호남지역 14.6% 등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대학원생들의 신분적 특성에서는 전일제 대학원생이 68.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V-3> 대학원생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결측치(무응답)
대학원의 규모	대규모	149	31.1	
	중규모	282	58.9	
	소규모	48	10.0	
	합계	479	100.0	
설립유형	국공립대학	193	40.3	
	사립대학	286	59.7	
	합계	479	100.0	
성별	남	266	55.6	1(0.2)
	여	212	44.4	
	합계	478	100.0	
연령	20대	133	27.8	1(0.2)
	30대	241	50.4	
	40대	69	14.4	
	50대	34	7.1	
	60대	1	0.2	
	합계	478	100.0	
과정	박사 1학기	117	24.5	2(0.4)
	박사 2학기	53	11.1	
	박사 3학기	115	24.1	
	박사 4학기	45	9.4	
	박사 5학기	31	6.5	
	박사 6학기 이상	25	5.2	
	박사과정 수료	91	19.1	
	합계	477	100.0	

<표 V-3> 대학원생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표계속)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결측치(무응답)
전공분야	인문계열	68	14.5	10(2.1)
	사회계열	77	16.4	
	경상계열	66	14.1	
	이학계열	73	15.6	
	공학계열	82	17.5	
	농학계열	21	4.5	
	의학계열	23	4.9	
	예체능계열	35	7.5	
	사범계열	24	5.1	
	합계	469	100.0	
대학의 소재지	서울	69	14.4	
	인천, 경기도	68	14.2	
	대전, 충청남북도	84	17.5	
	광주, 전라남북도	70	14.6	
	강원도	6	1.3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164	34.2	
	제주도	18	3.8	
	합계	479	100.0	
신분	전일제 학생	325	68.0	1(0.2)
	시간제 학생	153	32.0	
	합계	478	100.0	

나. 교수집단의 의견

1) 신입생 선발과정

가) 선발방법 및 절차

대학원 소속 교수들에게 소속 대학원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 대한 설문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하여 실시한다는 응답이 6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그리고 필기시험” 등을 모두 활용하여 선발한다는 응답도 25.1%에 달하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의 박사과정 선발은 최소한 서류와 면접 심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4> 대학원생 선발 방법에 대한 응답(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서류심사	1	0.3
면접심사	23	6.8
필기시험	2	0.6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227	67.2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그리고 필기시험 모두	85	25.1
합계	338	100.0

결측: 6명(1.7%)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으로 구분하여 선발방법을 비교해 본 결과 수도권 지역 대학원 보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원이 대학원생 선발과정에서 서류심사와 면접과 아울러 필기시험을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5> 대학원생 선발 방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에서는 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십니까?					전 체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필기 시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그리고 필기시험 모두	
대학의 규모	대규모	1 (1.2)	5 (6.0)	0 (0.0)	47 (56.6)	30 (36.1)	83 (100.0)
	중규모	0 (0.0)	14 (6.5)	2 (0.9)	153 (71.2)	46 (21.4)	215 (100.0)
	소규모	0 (0.0)	4 (10.0)	0 (0.0)	27 (67.5)	9 (22.5)	40 (100.0)
전체		1 (0.3)	23 (6.8)	2 (0.6)	227 (67.2)	85 (25.1)	338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0 (0.0)	2 (4.5)	0 (0.0)	28 (63.6)	14 (31.8)	44 (100.0)
	사회+경상	0 (0.0)	10 (12.7)	0 (0.0)	46 (58.2)	23 (29.1)	79 (100.0)
	이학+공학	0 (0.0)	8 (6.2)	0 (0.0)	94 (72.9)	27 (20.9)	129 (100.0)
	농학+의학	0 (0.0)	3 (7.5)	2 (5.0)	28 (70.0)	7 (17.5)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1 (2.2)	0 (0.0)	0 (0.0)	31 (68.9)	13 (28.9)	45 (100.0)
전체		1 (0.3)	23 (6.8)	2 (0.6)	227 (67.4)	84 (24.9)	337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0 (0.0)	4 (5.4)	0 (0.0)	66 (89.2)	4 (5.4)	74 (100.0)
	대전충청	1 (1.4)	4 (5.4)	0 (0.0)	46 (62.2)	23 (31.1)	74 (100.0)
	전라광주	0 (0.0)	0 (0.0)	2 (4.5)	40 (90.9)	2 (4.5)	44 (100.0)
	부산영남	0 (0.0)	2 (9.1)	0 (0.0)	5 (22.7)	15 (68.2)	22 (100.0)
	강원제주	0 (0.0)	13 (10.5)	0 (0.0)	70 (56.5)	41 (33.1)	124 (100.0)
전체		1 (0.3)	23 (6.8)	2 (0.6)	227 (67.2)	85 (25.1)	338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0 (0.0)	4 (5.4)	0 (0.0)	66 (89.2)	4 (5.4)	74 (100.0)
	비수도권	1 (0.4)	19 (7.2)	2 (0.8)	161 (61.0)	81 (30.7)	264 (100.0)
전체		1 (0.3)	23 (6.8)	2 (0.6)	227 (67.2)	85 (25.1)	338 (100.0)

주) *<0.1 / **<0.05 / ***<0.01

한편 대학원에서는 신입생 전형 시 전일제 지원자(풀 타임 대학원생)와 시간제 지원자(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대학원생)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전형방법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차별적으로 운영한다”는 의견이 33.3%인 반면 “동일한 전형방법을 운영한다”는 응답은 5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대학원들의 신입생 선발에서 전일제 지원자와 시간제 지원자간의 차별화된 전형방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6> 전일제 대학원생 및 시간제 대학원생의 전형방법(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7	5.0
대체로 그렇다	97	28.3
그저 그렇다	36	10.5
대체로 아니다	84	24.5
전혀 아니다	109	31.8
합계	343	100.0

결측: 1명(0.3%)

교차분석결과 대규모 대학일수록 전일제 대학원생과 시간제 대학원생의 전형방법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여타 계열보다 특히 인문계열이 전형방법에 있어 차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전일제/시간제 대학원생의 전형방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에서는 신입생 전형 시 전일제 지원자(풀 타임 대학원생)와 시간제 지원자(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대학원생)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전형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 체
		매우 그렇다	대 체 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 체 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6 (7.1)	11 (12.9)	4 (4.7)	25 (29.4)	39 (45.9)	85 (100.0)
	중규모	9 (4.1)	72 (33.0)	30 (13.8)	48 (22.0)	59 (27.1)	218 (100.0)
	소규모	2 (5.0)	14 (35.0)	2 (5.0)	11 (27.5)	11 (27.5)	40 (100.0)
전체		17 (5.0)	97 (28.3)	36 (10.5)	84 (24.5)	109 (31.8)	343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0 (0.0)	5 (10.9)	5 (10.9)	8 (17.4)	28 (60.9)	46 (100.0)
	사회+경상	3 (3.8)	25 (31.6)	7 (8.9)	26 (32.9)	18 (22.8)	79 (100.0)
	이학+공학	9 (6.8)	43 (32.3)	14 (10.5)	27 (20.3)	40 (30.1)	133 (100.0)
	농학+의학	1 (2.6)	13 (33.3)	3 (7.7)	14 (35.9)	8 (20.5)	39 (100.0)
	사범/예체능 /가정	4 (8.9)	10 (22.2)	7 (15.6)	9 (20.0)	15 (33.3)	45 (100.0)
전체		17 (5.0)	96 (28.1)	36 (10.5)	84 (24.6)	109 (31.9)	342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5 (6.8)	22 (29.7)	12 (16.2)	12 (16.2)	23 (31.1)	74 (100.0)
	대전충청	4 (5.2)	13 (16.9)	7 (9.1)	19 (24.7)	34 (44.2)	77 (100.0)
	전라광주	0 (0.0)	14 (31.8)	2 (4.5)	16 (36.4)	12 (27.3)	44 (100.0)
	부산영남	0 (0.0)	5 (20.0)	3 (12.0)	10 (40.0)	7 (28.0)	25 (100.0)
	강원제주	8 (6.5)	43 (35.0)	12 (9.8)	27 (22.0)	33 (26.8)	123 (100.0)
전체		17 (5.0)	97 (28.3)	36 (10.5)	84 (24.5)	109 (31.8)	343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5 (6.8)	22 (29.7)	12 (16.2)	12 (16.2)	23 (31.1)	74 (100.0)
	비수도권	12 (4.5)	75 (27.9)	24 (8.9)	72 (26.8)	86 (32.0)	269 (100.0)
전체		17 (5.0)	97 (28.3)	36 (10.5)	84 (24.5)	109 (31.8)	343 (100.0)

주) *<0.1 / **<0.05 / ***<0.01

나) 입학기준에 대한 평가

교수집단이 소속 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선발 기준에 대한 평가의견을 설문한 결과 입학기준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의견은 13.3%에 불과하였다. 반면 국제적 수준에 비해 입학이 “쉬운 수준”이라는 평가의견은 7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국제적 수준과 비슷하다는 평가의견은 13.7%에 불과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수들은 현재 국내 대학원의 박사과정 선발기준이 국제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8> 국제적 수준과 비교한 국내 대학원의 입학기준(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7	2.0
약간 어려운 수준이다	39	11.3
국제적인 수준과 비슷하다	47	13.7
대체로 쉬운 수준이다	190	55.2
매우 쉬운 수준이다	61	17.7
합계	344	100.0

<표 V-9> 국제적 수준과 비교한 국내 대학원의 입학기준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의 입학기준은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매우 어려운 수준	약간 어려운 수준	국제적인 수준과 비슷	대체로 쉬운 수준	매우 쉬운 수준	
대학의 규모	대규모	1 (1.2)	12 (14.0)	11 (12.8)	49 (57.0)	13 (15.1)	86 (100.0)
	중규모	5 (2.3)	20 (9.2)	31 (14.2)	118 (54.1)	44 (20.2)	218 (100.0)
	소규모	1 (2.5)	7 (17.5)	5 (12.5)	23 (57.5)	4 (10.0)	40 (100.0)
전체		7 (2.0)	39 (11.3)	47 (13.7)	190 (55.2)	61 (17.7)	34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1 (2.2)	10 (21.7)	5 (10.9)	27 (58.7)	3 (6.5)	46 (100.0)
	사회+경상	0 (0.0)	6 (7.6)	13 (16.5)	44 (55.7)	16 (20.3)	79 (100.0)
	이학+공학	6 (4.5)	16 (12.0)	21 (15.8)	66 (49.6)	24 (18.0)	133 (100.0)
	농학+의학	0 (0.0)	5 (12.5)	1 (2.5)	25 (62.5)	9 (22.5)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0 (0.0)	1 (2.2)	7 (15.6)	28 (62.2)	9 (20.0)	45 (100.0)
전체		7 (2.0)	38 (11.1)	47 (13.7)	190 (55.4)	61 (17.8)	343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0 (0.0)	4 (5.4)	10 (13.5)	47 (63.5)	13 (17.6)	74 (100.0)
	대전충청	3 (3.9)	14 (18.2)	9 (11.7)	42 (54.5)	9 (11.7)	77 (100.0)
	전라광주	0 (0.0)	0 (0.0)	0 (0.0)	24 (54.5)	20 (45.5)	44 (100.0)
	부산영남	0 (0.0)	2 (8.0)	0 (0.0)	20 (80.0)	3 (12.0)	25 (100.0)
	강원제주	4 (3.2)	19 (15.3)	28 (22.6)	57 (46.0)	16 (12.9)	124 (100.0)
전체		7 (2.0)	39 (11.3)	47 (13.7)	190 (55.2)	61 (17.7)	344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0 (0.0)	4 (5.4)	10 (13.5)	47 (63.5)	13 (17.6)	74 (100.0)
	비수도권	7 (2.6)	35 (13.0)	37 (13.7)	143 (53.0)	48 (17.8)	270 (100.0)
전 체		7 (2.0)	39 (11.3)	47 (13.7)	190 (55.2)	61 (17.7)	344 (100.0)

주) *<0.1 / **<0.05 / ***<0.01

또한 대학원 신입생 선발의 경쟁률에 대해 “높다”는 평가의견은 32.4%, “낮다”와 “그저 그렇다”는 각각 31.4%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이 없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원의 명성과 전공에 따라 경쟁률에 차이가 나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대학원의 입학 경쟁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V-10> 입학경쟁률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높음	11	3.2
약간 높은 편	104	30.2
그저 그렇다	108	31.4
낮은 편	108	31.4
경쟁이 없다	13	3.8
합계	344	100.0

<표 V-11> 입학경쟁률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입학 경쟁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 체
		매 우 높음	약간 높은 편	그저 그렇 다	낮은 편	경쟁이 없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5 (5.8)	32 (37.2)	27 (31.4)	21 (24.4)	1 (1.2)	86 (100.0)
	중규모	6 (2.8)	50 (22.9)	68 (31.2)	82 (37.6)	12 (5.5)	218 (100.0)
	소규모	0 (0.0)	22 (55.0)	13 (32.5)	5 (12.5)	0 (0.0)	40 (100.0)
전체		11 (3.2)	104 (30.2)	108 (31.4)	108 (31.4)	13 (3.8)	34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2 (4.3)	21 (45.7)	13 (28.3)	10 (21.7)	0 (0.0)	46 (100.0)
	사회+경상	5 (6.3)	26 (32.9)	23 (29.1)	25 (31.6)	0 (0.0)	79 (100.0)
	이학+공학	4 (3.0)	39 (29.3)	42 (31.6)	37 (27.8)	11 (8.3)	133 (100.0)
	농학+의학	0 (0.0)	6 (15.0)	13 (32.5)	19 (47.5)	2 (5.0)	40 (100.0)
	사범/예체 능/가정	0 (0.0)	11 (24.4)	17 (37.8)	17 (37.8)	0 (0.0)	45 (100.0)
전체		11 (3.2)	103 (30.0)	108 (31.5)	108 (31.5)	13 (3.8)	343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2 (2.7)	23 (31.1)	27 (36.5)	21 (28.4)	1 (1.4)	74 (100.0)
	대전충청	2 (2.6)	30 (39.0)	16 (20.8)	26 (33.8)	3 (3.9)	77 (100.0)
	전라광주	0 (0.0)	2 (4.5)	6 (13.6)	30 (68.2)	6 (13.6)	44 (100.0)
	부산영남	0 (0.0)	5 (20.0)	10 (40.0)	9 (36.0)	1 (4.0)	25 (100.0)
	강원제주	7 (5.6)	44 (35.5)	49 (39.5)	22 (17.7)	2 (1.6)	124 (100.0)
전체		11 (3.2)	104 (30.2)	108 (31.4)	108 (31.4)	13 (3.8)	344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2 (2.7)	23 (31.1)	27 (36.5)	21 (28.4)	1 (1.4)	74 (100.0)
	비수도권	9 (3.3)	81 (30.0)	81 (30.0)	87 (32.2)	12 (4.4)	270 (100.0)
전체		11 (3.2)	104 (30.2)	108 (31.4)	108 (31.4)	13 (3.8)	344 (100.0)

주) *<0.1 / **<0.05 / ***<0.01

다) 입학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의견

대학원 박사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GRE, TOEFL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인자료를 통한 입학자격요건 강화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45.1%인 반면 “필요치 않다”는 부정적 의견은 27.6%로 나타났다. 반면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의견도 27.3%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로 비추어볼 때 교수들은 대학원의 질 관리를 위한 진입장벽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표 V-12> 입학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인식(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6	4.7
필요하다	139	40.4
그저 그렇다	94	27.3
필요하지 않다	75	21.8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	5.8
합계	344	100.0

교차분석결과 계열별로는 이학과 공학계열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있는 반면 여타 계열의 교수들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바, 서울·경기 지역 대학의 교수들이 입학요건의 강화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라·광주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입학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GRE, TOEFL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인자료를 통한 입학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체
		매우 필요하 다	필요하 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 지 않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5 (5.8)	43 (50.0)	21 (24.4)	12 (14.0)	5 (5.8)	86 (100.0)
	중규모	9 (4.1)	76 (34.9)	60 (27.5)	58 (26.6)	15 (6.9)	218 (100.0)
	소규모	2 (5.0)	20 (50.0)	13 (32.5)	5 (12.5)	0 (0.0)	40 (100.0)
전체		16 (4.7)	139 (40.4)	94 (27.3)	75 (21.8)	20 (5.8)	34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2 (4.3)	21 (45.7)	15 (32.6)	3 (6.5)	5 (10.9)	46 (100.0)
	사회+경상	3 (3.8)	34 (43.0)	21 (26.6)	18 (22.8)	3 (3.8)	79 (100.0)
	이학+공학	9 (6.8)	40 (30.1)	38 (28.6)	41 (30.8)	5 (3.8)	133 (100.0)
	농학+의학	0 (0.0)	20 (50.0)	11 (27.5)	7 (17.5)	2 (5.0)	40 (100.0)
	사범/예체 능/가정	2 (4.4)	23 (51.1)	9 (20.0)	6 (13.3)	5 (11.1)	45 (100.0)
전체		16 (4.7)	138 (40.2)	94 (27.4)	75 (21.9)	20 (5.8)	343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경기	4 (5.4)	41 (55.4)	19 (25.7)	9 (12.2)	1 (1.4)	74 (100.0)
	대전충청	2 (2.6)	31 (40.3)	23 (29.9)	15 (19.5)	6 (7.8)	77 (100.0)
	전라광주	4 (9.1)	12 (27.3)	10 (22.7)	14 (31.8)	4 (9.1)	44 (100.0)
	부산영남	1 (4.0)	10 (40.0)	5 (20.0)	7 (28.0)	2 (8.0)	25 (100.0)
	강원제주	5 (4.0)	45 (36.3)	37 (29.8)	30 (24.2)	7 (5.6)	124 (100.0)
전체		16 (4.7)	139 (40.4)	94 (27.3)	75 (21.8)	20 (5.8)	344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4 (5.4)	41 (55.4)	19 (25.7)	9 (12.2)	1 (1.4)	74 (100.0)
	비수도권	12 (4.4)	98 (36.3)	75 (27.8)	66 (24.4)	19 (7.0)	270 (100.0)
전체		16 (4.7)	139 (40.4)	94 (27.3)	75 (21.8)	20 (5.8)	344 (100.0)

주) *<0.1 / **<0.05 / ***<0.01

라) 신입생의 출신대학

대학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출신대학, 전일제의 분포 및 입학동기 등을 설문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소속 대학원에 입학하는 대학원 신입생의 출신 대학분포에서 “모교 졸업생이 비모교 졸업생 보다 많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비모교 졸업생이 모교 졸업생 보다 많다” 36.1%, “모교 졸업생과 비모교 졸업생이 비슷하다” 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대학원 입학생들은 주로 동일대학 출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타 대학 졸업생도 상당 부분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V-14> 대학원 신입생의 출신대학 구성(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교 졸업생이 비모교 졸업생보다 많다	149	43.7
비모교 졸업생이 모교 졸업생보다 많다	123	36.1
모교 졸업생과 비모교 졸업생이 비슷하다	69	20.2
합계	341	100.0

결측: 3명(0.9%)

교차분석결과 우선 대학의 규모면에서 볼 때 대규모 대학의 경우 모교 출신자보다 비모교 출신자들의 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중규모 대학의 경우는 비모교 출신자보다 모교 출신자들의 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 사회·경상계열, 사범·예체능·가정계열의 경우가 비모교 출신자들이 모교 출신자들보다 많은 반면 이학·공학계열과 농학·의학계열의 경우는 모교 출신자이 비모교 출신자들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대학원에는 모교 출신자들 보다 비모교 출신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볼 때에도 수도권 지역의 대학원에 비모교 출신자들이 모교 출신자들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 지역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V-15> 대학원 신입생의 출신대학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대학원생의 출신 대학은 주로 어디 입니까?			전 체
		모교 졸업생이 비모교 졸업생보다 많다	비모교 졸업생이 모교 졸업생보다 많다	모교 졸업생과 비모교 졸업생이 비슷하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16 (18.8)	47 (55.3)	22 (25.9)	85 (100.0)
	중규모	125 (57.9)	62 (28.7)	29 (13.4)	216 (100.0)
	소규모	8 (20.0)	14 (35.0)	18 (45.0)	40 (100.0)
전체		149 (43.7)	123 (36.1)	69 (20.2)	341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13 (28.3)	22 (47.8)	11 (23.9)	46 (100.0)
	사회+경상	15 (19.0)	43 (54.4)	21 (26.6)	79 (100.0)
	이학+공학	88 (67.2)	24 (18.3)	19 (14.5)	131 (100.0)
	농학+의학	23 (59.0)	4 (10.3)	12 (30.8)	39 (100.0)
	사범/예체능 /가정	10 (22.2)	29 (64.4)	6 (13.3)	45 (100.0)
전체		149 (43.8)	122 (35.9)	69 (20.3)	340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4 (18.9)	33 (44.6)	27 (36.5)	74 (100.0)
	대전충청	35 (45.5)	29 (37.7)	13 (16.9)	77 (100.0)
	전라광주	34 (77.3)	6 (13.6)	4 (9.1)	44 (100.0)
	부산영남	18 (72.0)	2 (8.0)	5 (20.0)	25 (100.0)
	강원제주	48 (39.7)	53 (43.8)	20 (16.5)	121 (100.0)
전체		149 (43.7)	123 (36.1)	69 (20.2)	341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14 (18.9)	33 (44.6)	27 (36.5)	74 (100.0)
	비수도권	135 (50.6)	90 (33.7)	42 (15.7)	267 (100.0)
전체		149 (43.7)	123 (36.1)	69 (20.2)	341 (100.0)

주) *<0.1 / **<0.05 / ***<0.01

마) 대학원생의 전일제 및 시간제 구성

대학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대학원생의 전일제 유무에 대한 특성에서 “주로 전일제 대학원생”이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으나, “전일제 대학원생과 시간제 대학원생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도 30.3%에 달하였다. 반면 “주로 시간제 대학원생”이라는 응답도 19.8%나 되었다.

<표 V-16> 전일제 및 시간제 대학원생의 구성(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주로 전일제 대학원생이다	171	49.9
주로 시간제 대학원생이다	68	19.8
전일제 대학원생과 시간제 대학원생이 비슷한 수준이다	104	30.3
합계	343	100.0

결측: 1명(0.3%)

교차분석결과 계열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인문계열, 이학·공학계열은 전일제 대학원생이 많은 반면 이학·공학계열, 농학·의학계열, 사범·예체능·가정계열은 시간제 대학원생이 전일제 대학원생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부산·영남지역만이 시간제 대학원생이 전일제 대학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전일제 대학원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 전일제 및 시간제 대학원생의 구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

구 분		귀 대학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대학원생의 특성은 주로 어떠합니까?			전 체
		주로 전일제 대학원생이다	주로 시간제 대학원생이다	전일제와 시간제 대학원생이 비슷한 수준이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47 (54.7)	19 (22.1)	20 (23.3)	86 (100.0)
	중규모	119 (54.8)	40 (18.4)	58 (26.7)	217 (100.0)
	소규모	5 (12.5)	9 (22.5)	26 (65.0)	40 (100.0)
전체		171 (49.9)	68 (19.8)	104 (30.3)	343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26 (56.5)	4 (8.7)	16 (34.8)	46 (100.0)
	사회+경상	20 (25.6)	24 (30.8)	34 (43.6)	78 (100.0)
	이학+공학	99 (74.4)	8 (6.0)	26 (19.5)	133 (100.0)
	농학+의학	13 (32.5)	16 (40.0)	11 (27.5)	40 (100.0)
	사범/예체 능/가정	13 (28.9)	16 (35.6)	16 (35.6)	45 (100.0)
전체		171 (50.0)	68 (19.9)	103 (30.1)	342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37 (50.0)	16 (21.6)	21 (28.4)	74 (100.0)
	대전충청	36 (46.8)	10 (13.0)	31 (40.3)	77 (100.0)
	전라광주	22 (50.0)	14 (31.8)	8 (18.2)	44 (100.0)
	부산영남	4 (16.7)	12 (50.0)	8 (33.3)	24 (100.0)
	강원제주	72 (58.1)	16 (12.9)	36 (29.0)	124 (100.0)
전체		171 (49.9)	68 (19.8)	104 (30.3)	343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37 (50.0)	16 (21.6)	21 (28.4)	74 (100.0)
	비수도권	134 (49.8)	52 (19.3)	83 (30.9)	269 (100.0)
전체		171 (49.9)	68 (19.8)	104 (30.3)	343 (100.0)

주) *<0.1 / **<0.05 / ***<0.01

바) 신입생의 입학동기

대학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대학원생의 입학 동기에 대해서는 “교육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31.6%,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2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원 진학자들이 학위를 취득하여 교육·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교수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학원이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교수들이 가져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V-18> 대학원생의 입학 동기(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103	31.6
사회적 명예를 얻기 위해서	13	4.0
교육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125	38.3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76	23.3
기타	9	2.8
합계	326	100.0

결측: 18명(5.2%)

교차분석결과 계열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과 사범·예체능·가정계열이 특히 교육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으로 인식된 반면, 사회·경상계열의 경우는 단순히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본 결과 수도권 대학원 진학자들이 비수도권에 비해 교육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표 V-19> 대학원생의 입학 동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대학원생의 입학 동기는 주로 무엇입니까?					전 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사회적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육 및 연구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타	
대학의 규모 ***	대규모	24 (30.4)	2 (2.5)	32 (40.5)	13 (16.5)	8 (10.1)	79 (100.0)
	중규모	62 (29.5)	7 (3.3)	83 (39.5)	57 (27.1)	1 (0.5)	210 (100.0)
	소규모	17 (45.9)	4 (10.8)	10 (27.0)	6 (16.2)	0 (0.0)	37 (100.0)
전체		103 (31.6)	13 (4.0)	125 (38.3)	76 (23.3)	9 (2.8)	326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14 (35.0)	0 (0.0)	20 (50.0)	4 (10.0)	2 (5.0)	40 (100.0)
	사회+경상	22 (28.6)	8 (10.4)	19 (24.7)	24 (31.2)	4 (5.2)	77 (100.0)
	이학+공학	45 (35.4)	3 (2.4)	45 (35.4)	33 (26.0)	1 (0.8)	127 (100.0)
	농학+의학	12 (32.4)	2 (5.4)	13 (35.1)	8 (21.6)	2 (5.4)	37 (100.0)
	사범/예체 능/가정	10 (22.7)	0 (0.0)	27 (61.4)	7 (15.9)	0 (0.0)	44 (100.0)
전체		103 (31.7)	13 (4.0)	124 (38.2)	76 (23.4)	9 (2.8)	325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7 (23.0)	7 (9.5)	30 (40.5)	16 (21.6)	4 (5.4)	74 (100.0)
	대전충청	28 (40.0)	1 (1.4)	27 (38.6)	12 (17.1)	2 (2.9)	70 (100.0)
	전라광주	8 (18.2)	2 (4.5)	18 (40.9)	16 (36.4)	0 (0.0)	44 (100.0)
	부산영남	7 (31.8)	1 (4.5)	6 (27.3)	6 (27.3)	2 (9.1)	22 (100.0)
	강원제주	43 (37.1)	2 (1.7)	44 (37.9)	26 (22.4)	1 (0.9)	116 (100.0)
전체		103 (31.6)	13 (4.0)	125 (38.3)	76 (23.3)	9 (2.8)	326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17 (23.0)	7 (9.5)	30 (40.5)	16 (21.6)	4 (5.4)	74 (100.0)
	비수도권	86 (34.1)	6 (2.4)	95 (37.7)	60 (23.8)	5 (2.0)	252 (100.0)
전체		103 (31.6)	13 (4.0)	125 (38.3)	76 (23.3)	9 (2.8)	326 (100.0)

주) *<0.1 / **<0.05 / ***<0.01

2)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가) 논문제출 자격요건

대학원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에 대한 설문에서 “종합시험의 통과 및 중앙학술지(학진등재후보지 이상)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종합시험의 통과 및 일반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24.2%,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21.6%, “종합시험의 통과 및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차분석 결과 계열별로 인문계열의 경우 종합시험 통과 및 중앙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학·공학계열과 농학·의학계열의 경우는 여타 계열에 비해 종합시험 통과 및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인문·사회·경상·기타 계열은 종합시험과 중앙학술지 논문게재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이공학·의학분야는 종합시험과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를 요건으로 하는 대학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20> 논문제출 자격 요건(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1	0.3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74	21.6
종합시험의 통과 및 일반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83	24.2
종합시험의 통과 및 중앙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126	36.7
종합시험의 통과 및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51	14.9
이상의 요건 보다 더 높은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8	2.3
합계	343	100.0

결측: 1명(0.3%)

<표 V-21> 논문제출 자격 요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은 어떠합니까?						전 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종합시 험만 통과하 면 된다	종합시험 의 통과 및 일반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종합시험 의 통과 및 중앙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종합시험 의 통과 및 국제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상의 요건 보다 더 높은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0 (0.0)	20 (23.5)	22 (25.9)	29 (34.1)	13 (15.3)	1 (1.2)	85 (100.0)
	중규모	1 (0.5)	49 (22.5)	56 (25.7)	74 (33.9)	35 (16.1)	3 (1.4)	218 (100.0)
	소규모	0 (0.0)	5 (12.5)	5 (12.5)	23 (57.5)	3 (7.5)	4 (10.0)	40 (100.0)
전체		1 (0.3)	74 (21.6)	83 (24.2)	126 (36.7)	51 (14.9)	8 (2.3)	343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1 (2.2)	8 (17.4)	13 (28.3)	24 (52.2)	0 (0.0)	0 (0.0)	46 (100.0)
	사회+경상	0 (0.0)	29 (36.7)	18 (22.8)	30 (38.0)	2 (2.5)	0 (0.0)	79 (100.0)
	이학+공학	0 (0.0)	27 (20.3)	20 (15.0)	40 (30.1)	38 (28.6)	8 (6.0)	133 (100.0)
	농학+의학	0 (0.0)	6 (15.0)	12 (30.0)	14 (35.0)	8 (20.0)	0 (0.0)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0 (0.0)	4 (9.1)	20 (45.5)	17 (38.6)	3 (6.8)	0 (0.0)	44 (100.0)
전체		1 (0.3)	74 (21.6)	83 (24.3)	125 (36.5)	51 (14.9)	8 (2.3)	342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0 (0.0)	21 (28.4)	25 (33.8)	21 (28.4)	7 (9.5)	0 (0.0)	74 (100.0)
	대전충청	1 (1.3)	12 (15.8)	18 (23.7)	38 (50.0)	3 (3.9)	4 (5.3)	76 (100.0)
	전라광주	0 (0.0)	16 (36.4)	14 (31.8)	10 (22.7)	4 (9.1)	0 (0.0)	44 (100.0)
	부산영남	0 (0.0)	4 (16.0)	3 (12.0)	11 (44.0)	7 (28.0)	0 (0.0)	25 (100.0)
	강원제주	0 (0.0)	21 (16.9)	23 (18.5)	46 (37.1)	30 (24.2)	4 (3.2)	124 (100.0)
전체		1 (0.3)	74 (21.6)	83 (24.2)	126 (36.7)	51 (14.9)	8 (2.3)	343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0 (0.0)	21 (28.4)	25 (33.8)	21 (28.4)	7 (9.5)	0 (0.0)	74 (100.0)
	비수도권	1 (0.4)	53 (19.7)	58 (21.6)	105 (39.0)	44 (16.4)	8 (3.0)	269 (100.0)
전체		1 (0.3)	74 (21.6)	83 (24.2)	126 (36.7)	51 (14.9)	8 (2.3)	343 (100.0)

주) *<0.1 / **<0.05 / ***<0.01

나) 종합시험 탈락률

종합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의 최소요건이 되는 상황에서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탈락률을 설문한 결과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7.0%에 불과한 반면 “낮은 편”이라는 평가의견은 54.2%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종합시험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박사논문제출 자격요건에 있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차분석결과에서 계열별, 지역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이러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종합시험 탈락률(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높다	1	0.3
높은 편이다	23	6.7
보통 수준이다	132	38.7
낮은 편이다	129	37.8
탈락자가 거의 없다	56	16.4
합계	341	100.0

결측: 3명(0.9%)

<표 V-23> 종합시험 탈락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탈락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 체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낮은 편이다	탈락자가 거의 없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0 (0.0)	2 (2.3)	33 (38.4)	41 (47.7)	10 (11.6)	86 (100.0)
	중규모	0 (0.0)	17 (7.8)	80 (36.9)	77 (35.5)	43 (19.8)	217 (100.0)
	소규모	1 (2.6)	4 (10.5)	19 (50.0)	11 (28.9)	3 (7.9)	38 (100.0)
전체		1 (0.3)	23 (6.7)	132 (38.7)	129 (37.8)	56 (16.4)	341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0 (0.0)	9 (19.6)	19 (41.3)	13 (28.3)	5 (10.9)	46 (100.0)
	사회+경상	0 (0.0)	1 (1.3)	35 (45.5)	29 (37.7)	12 (15.6)	77 (100.0)
	이학+공학	1 (0.8)	10 (7.6)	44 (33.3)	42 (31.8)	35 (26.5)	132 (100.0)
	농학+의학	0 (0.0)	0 (0.0)	16 (40.0)	22 (55.0)	2 (5.0)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0 (0.0)	2 (4.4)	18 (40.0)	23 (51.1)	2 (4.4)	45 (100.0)
전체		1 (0.3)	22 (6.5)	132 (38.8)	129 (37.9)	56 (16.5)	340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0 (0.0)	3 (4.2)	24 (33.3)	36 (50.0)	9 (12.5)	72 (100.0)
	대전충청	1 (1.3)	4 (5.2)	35 (45.5)	28 (36.4)	9 (11.7)	77 (100.0)
	전라광주	0 (0.0)	2 (4.5)	12 (27.3)	22 (50.0)	8 (18.2)	44 (100.0)
	부산영남	0 (0.0)	0 (0.0)	9 (37.5)	11 (45.8)	4 (16.7)	24 (100.0)
	강원제주	0 (0.0)	14 (11.3)	52 (41.9)	32 (25.8)	26 (21.0)	124 (100.0)
전체		1 (0.3)	23 (6.7)	132 (38.7)	129 (37.8)	56 (16.4)	341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0 (0.0)	3 (4.2)	24 (33.3)	36 (50.0)	9 (12.5)	72 (100.0)
	비수도권	1 (0.4)	20 (7.4)	108 (40.1)	93 (34.6)	47 (17.5)	269 (100.0)
전체		1 (0.3)	23 (6.7)	132 (38.7)	129 (37.8)	56 (16.4)	341 (100.0)

주) *<0.1 / **<0.05 / ***<0.01

다) 지도교수의 요건

대학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논문 지도교수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설문한 결과 규정이 “있다”는 응답은 70.8%, “없다”는 응답은 29.2%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원에서는 지도교수의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을 규정을 통해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약 30% 정도의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규정조차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차분석결과 계열별로는 이학·공학계열이 여타 계열에 비해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지역별로는 전라·광주지역과 부산·영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가 낮았다.

<표 V-24> 지도교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 유무(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있다	235	70.8
없다	97	29.2
합계	332	100.0

결측: 12명(3.5%)

<표 V-25> 지도교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 유무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은 논문 지도교수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 체
		있다	없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67 (77.9)	19 (22.1)	86 (100.0)
	중규모	136 (65.7)	71 (34.3)	207 (100.0)
	소규모	32 (82.1)	7 (17.9)	39 (100.0)
전체		235 (70.8)	97 (29.2)	332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35 (83.3)	7 (16.7)	42 (100.0)
	사회+경상	56 (72.7)	21 (27.3)	77 (100.0)
	이학+공학	80 (61.5)	50 (38.5)	130 (100.0)
	농학+의학	30 (76.9)	9 (23.1)	39 (100.0)
	사범/예체능 /가정	33 (76.7)	10 (23.3)	43 (100.0)
전체		234 (70.7)	97 (29.3)	331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56 (77.8)	16 (22.2)	72 (100.0)
	대전충청	60 (81.1)	14 (18.9)	74 (100.0)
	전라광주	24 (54.5)	20 (45.5)	44 (100.0)
	부산영남	12 (50.0)	12 (50.0)	24 (100.0)
	강원제주	83 (70.3)	35 (29.7)	118 (100.0)
전체		235 (70.8)	97 (29.2)	332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56 (77.8)	16 (22.2)	72 (100.0)
	비수도권	179 (68.8)	81 (31.2)	260 (100.0)
전체		235 (70.8)	97 (29.2)	332 (100.0)

주) *<0.1 / **<0.05 / ***<0.01

라) 교수 1인당 지도학생 제한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설문에서 그와 같은 규정이 있어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하였다. 특히 “제한 규정은 없으나 적절히 배정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제한 규정도 없고 실제 제한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1.2%에 달하였다. 교차분석결과 계열별, 지역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교수 1인당 지도 학생 수의 실질적인 제한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6> 지도학생 수의 제한(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제한 규정이 있으며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55	16.2
제한 규정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	42	12.4
제한 규정은 없으나 적절히 배정하는 편이다	137	40.3
제한 규정도 없고 실제 제한도 하지 않는다	106	31.2
합계	340	100.0

결측: 4명(1.2%)

<표 V-27> 지도학생 수의 제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은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전체
		제한 규정이 있으며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제한 규정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제한 규정은 없으나 적절히 배정하는 편이다	제한 규정도 없고 실제 제한도 하지 않는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20 (23.8)	3 (3.6)	23 (27.4)	38 (45.2)	84 (100.0)
	중규모	30 (13.9)	26 (12.0)	100 (46.3)	60 (27.8)	216 (100.0)
	소규모	5 (12.5)	13 (32.5)	14 (35.0)	8 (20.0)	40 (100.0)
전체		55 (16.2)	42 (12.4)	137 (40.3)	106 (31.2)	340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인문계열	12 (26.1)	5 (10.9)	14 (30.4)	15 (32.6)	46 (100.0)
	사회+경상	9 (11.7)	15 (19.5)	33 (42.9)	20 (26.0)	77 (100.0)
	이학+공학	18 (13.5)	11 (8.3)	63 (47.4)	41 (30.8)	133 (100.0)
	농학+의학	8 (20.5)	7 (17.9)	10 (25.6)	14 (35.9)	39 (100.0)
	사범/예체능/ 가정	8 (18.2)	4 (9.1)	16 (36.4)	16 (36.4)	44 (100.0)
전체		55 (16.2)	42 (12.4)	136 (40.1)	106 (31.3)	339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0 (13.5)	9 (12.2)	27 (36.5)	28 (37.8)	74 (100.0)
	대전충청	21 (27.6)	16 (21.1)	18 (23.7)	21 (27.6)	76 (100.0)
	전라광주	6 (13.6)	8 (18.2)	12 (27.3)	18 (40.9)	44 (100.0)
	부산영남	6 (24.0)	1 (4.0)	8 (32.0)	10 (40.0)	25 (100.0)
	강원제주	12 (9.9)	8 (6.6)	72 (59.5)	29 (24.0)	121 (100.0)
전체		55 (16.2)	42 (12.4)	137 (40.3)	106 (31.2)	340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10 (13.5)	9 (12.2)	27 (36.5)	28 (37.8)	74 (100.0)
	비수도권	45 (16.9)	33 (12.4)	110 (41.4)	78 (29.3)	266 (100.0)
전체		55 (16.2)	42 (12.4)	137 (40.3)	106 (31.2)	340 (100.0)

주) *<0.1 / **<0.05 / ***<0.01

마) 논문심사과정

대학원의 논문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에서 “공정하다”는 의견은 84.9%인 반면, “공정하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의견은 0.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학원 논문 심사과정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차분석결과 계열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지역별로 전라·광주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 논문심사과정의 공정성(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공정하다	76	22.2
공정한 편이다	215	62.7
그저 그렇다	51	14.9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1	0.3
합계	343	100.0

결측: 1명(0.3%)

<표 V-29> 대학원생의 입학 동기(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의 논문 심사 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공정하다	공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22 (25.6)	57 (66.3)	7 (8.1)	0 (0.0)	86 (100.0)
	중규모	47 (21.7)	131 (60.4)	38 (17.5)	1 (0.5)	217 (100.0)
	소규모	7 (17.5)	27 (67.5)	6 (15.0)	0 (0.0)	40 (100.0)
전체		76 (22.2)	215 (62.7)	51 (14.9)	1 (0.3)	343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17 (37.8)	19 (42.2)	9 (20.0)	0 (0.0)	45 (100.0)
	사회+경상	10 (12.7)	58 (73.4)	11 (13.9)	0 (0.0)	79 (100.0)
	이학+공학	37 (27.8)	79 (59.4)	16 (12.0)	1 (0.8)	133 (100.0)
	농학+의학	6 (15.0)	27 (67.5)	7 (17.5)	0 (0.0)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6 (13.3)	31 (68.9)	8 (17.8)	0 (0.0)	45 (100.0)
전체		76 (22.2)	214 (62.6)	51 (14.9)	1 (0.3)	342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1 (14.9)	52 (70.3)	11 (14.9)	0 (0.0)	74 (100.0)
	대전충청	20 (26.3)	43 (56.6)	12 (15.8)	1 (1.3)	76 (100.0)
	전라광주	2 (4.5)	22 (50.0)	20 (45.5)	0 (0.0)	44 (100.0)
	부산영남	3 (12.0)	19 (76.0)	3 (12.0)	0 (0.0)	25 (100.0)
	강원제주	40 (32.3)	79 (63.7)	5 (4.0)	0 (0.0)	124 (100.0)
전체		76 (22.2)	215 (62.7)	51 (14.9)	1 (0.3)	343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 (14.9)	52 (70.3)	11 (14.9)	0 (0.0)	74 (100.0)
	비수도권	65 (24.2)	163 (60.6)	40 (14.9)	1 (0.4)	269 (100.0)
전체		76 (22.2)	215 (62.7)	51 (14.9)	1 (0.3)	343 (100.0)

주) *<0.1 / **<0.05 / ***<0.01

바)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대학원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을 설문한 결과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응답이 78.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는 의견이 13.2%, “학과장이나 주임교수가 선정한다” 7.1%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원의 대부분이 박사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을 지도교수에게 일임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차분석결과에서도 계열별, 지역별, 규모별로 차이 없이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을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주로 결정된다는 것은 심사의 엄격성과 심층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 V-30>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67	78.5
학과장이나 주임교수가 선정한다	24	7.1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	45	13.2
대학원 본부에서 선정하여 통보한다	1	0.3
기타	3	0.9
합계	340	100.0

결측: 4명(1.2%)

<표 V-31>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은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 체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과장이나 주임교수가 선정한다	학과 교수 회의에서 선정한다	대 학원 본부에서 선정하여 통보한다	기타	
대 학 의 규모 **	대규모	74 (87.1)	3 (3.5)	6 (7.1)	0 (0.0)	2 (2.4)	85 (100.0)
	중규모	159 (74.0)	16 (7.4)	38 (17.7)	1 (0.5)	1 (0.5)	215 (100.0)
	소규모	34 (85.0)	5 (12.5)	1 (2.5)	0 (0.0)	0 (0.0)	40 (100.0)
전체		267 (78.5)	24 (7.1)	45 (13.2)	1 (0.3)	3 (0.9)	340 (100.0)
대 학 원 전 공 계 열 *	인문계열	37 (80.4)	1 (2.2)	6 (13.0)	1 (2.2)	1 (2.2)	46 (100.0)
	사회+경상	53 (68.8)	7 (9.1)	15 (19.5)	0 (0.0)	2 (2.6)	77 (100.0)
	이학+공학	108 (81.8)	6 (4.5)	18 (13.6)	0 (0.0)	0 (0.0)	132 (100.0)
	농학+의학	33 (82.5)	5 (12.5)	2 (5.0)	0 (0.0)	0 (0.0)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36 (81.8)	5 (11.4)	3 (6.8)	0 (0.0)	0 (0.0)	44 (100.0)
전체		267 (78.8)	24 (7.1)	44 (13.0)	1 (0.3)	3 (0.9)	339 (100.0)
대 학 원 소 재 지 역 ***	서울경기	62 (83.8)	7 (9.5)	2 (2.7)	1 (1.4)	2 (2.7)	74 (100.0)
	대전충청	58 (76.3)	2 (2.6)	15 (19.7)	0 (0.0)	1 (1.3)	76 (100.0)
	전라광주	34 (81.0)	8 (19.0)	0 (0.0)	0 (0.0)	0 (0.0)	42 (100.0)
	부산영남	23 (92.0)	2 (8.0)	0 (0.0)	0 (0.0)	0 (0.0)	25 (100.0)
	강원제주	90 (73.2)	5 (4.1)	28 (22.8)	0 (0.0)	0 (0.0)	123 (100.0)
전체		267 (78.5)	24 (7.1)	45 (13.2)	1 (0.3)	3 (0.9)	340 (100.0)
수 도 권 여 부 ***	수도권	62 (83.8)	7 (9.5)	2 (2.7)	1 (1.4)	2 (2.7)	74 (100.0)
	비수도권	205 (77.1)	17 (6.4)	43 (16.2)	0 (0.0)	1 (0.4)	266 (100.0)
전체		267 (78.5)	24 (7.1)	45 (13.2)	1 (0.3)	3 (0.9)	340 (100.0)

주) * <0.1 / ** <0.05 / *** <0.01

사)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일반적으로 박사과정의 논문심사에서 총 심사위원수가 5인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83.9%로 대부분의 대학원들이 5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인으로 구성하는 대학원은 14.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외부 심사위원의 구성은 2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가 54.7%였고, 1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3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의 구성은 내부인력 3인에 외부인력 2인으로 구성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는 대학원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5인의 심사위원 중 1인만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2>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교수집단)

항 목		외부 심사위원수			전 체
		1	2	3	
총 심사위원수	1	1 (100.0)	0 (0.0)	0 (0.0)	1 (100.0)
	3	10 (71.4)	4 (28.6)	0 (0.0)	14 (100.0)
	4	10 (71.4)	4 (28.6)	0 (0.0)	14 (100.0)
	5	49 (30.4)	95 (59.0)	17 (10.6)	161 (100.0)
	6	0 (0.0)	1 (100.0)	0 (0.0)	1 (100.0)
	7	0 (0.0)	1 (100.0)	0 (0.0)	1 (100.0)
전 체		70 (36.5)	105 (54.7)	17 (8.9)	192 (100.0)

아) 표절검색시스템의 운영

연구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논문표절검색시스템 운용되고 있다. 실제 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의 표절방지를 위해 “논문표절검색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운용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은 38.4%에 불과한 반면 “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1.6%에 달하였다. 즉 우리나라 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의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약 40% 정도만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에 있어 소규모 대학이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사회·경상계열이 높은 반면 농학·의학계열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 표절방지시스템의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라·광주지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대학원의 논문표절방지시스템 운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33>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운영(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있다	122	38.4
없다	196	61.6
합계	318	100.0

결측: 26명(7.6%)

<표 V-34>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은 학위논문의 표절방지를 위해 “논문표절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체
		있다	없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32 (39.5)	49 (60.5)	81 (100.0)
	중규모	70 (35.0)	130 (65.0)	200 (100.0)
	소규모	20 (54.1)	17 (45.9)	37 (100.0)
전체		122 (38.4)	196 (61.6)	318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인문계열	16 (39.0)	25 (61.0)	41 (100.0)
	사회+경상	35 (47.9)	38 (52.1)	73 (100.0)
	이학+공학	46 (37.4)	77 (62.6)	123 (100.0)
	농학+의학	9 (25.7)	26 (74.3)	35 (100.0)
	사범/예체능/가정	16 (35.6)	29 (64.4)	45 (100.0)
전체		122 (38.5)	195 (61.5)	317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경기	33 (47.1)	37 (52.9)	70 (100.0)
	대전충청	27 (37.5)	45 (62.5)	72 (100.0)
	전라광주	12 (28.6)	30 (71.4)	42 (100.0)
	부산영남	7 (29.2)	17 (70.8)	24 (100.0)
	강원제주	43 (39.1)	67 (60.9)	110 (100.0)
전체		122 (38.4)	196 (61.6)	318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33 (47.1)	37 (52.9)	70 (100.0)
	비수도권	89 (35.9)	159 (64.1)	248 (100.0)
전체		122 (38.4)	196 (61.6)	318 (100.0)

주) *<0.1 / **<0.05 / ***<0.01

자) 논문심사비의 적절성

대학원에서 논문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되는 논문심사비의 적절성을 설문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26.0%,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평가의견은 26.9%로 나타났다. 반면에 논문심사비가 “적절치 못하다”는 부정적 응답은 4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논문심사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논문심사비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피심사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받으려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교차분석결과 계열별로 인문계열의 교수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농학·의학계열 교수들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계열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35> 논문심사비의 적절성(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2	0.6
적절한 편이다	85	25.4
그저 그렇다	90	26.9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92	27.5
전혀 적절하지 않다	66	19.7
합계	335	100.0

결측: 9명(2.6%)

<표 V-36> 논문심사비의 적절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에서 논문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되는 논문심사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0 (0.0)	18 (21.7)	23 (27.7)	22 (26.5)	20 (24.1)	83 (100.0)
	중규모	2 (0.9)	55 (25.9)	57 (26.9)	62 (29.2)	36 (17.0)	212 (100.0)
	소규모	0 (0.0)	12 (30.0)	10 (25.0)	8 (20.0)	10 (25.0)	40 (100.0)
전체		2 (0.6)	85 (25.4)	90 (26.9)	92 (27.5)	66 (19.7)	335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0 (0.0)	7 (15.2)	9 (19.6)	14 (30.4)	16 (34.8)	46 (100.0)
	사회+경상	0 (0.0)	19 (24.7)	21 (27.3)	21 (27.3)	16 (20.8)	77 (100.0)
	이학+공학	0 (0.0)	33 (26.2)	37 (29.4)	39 (31.0)	17 (13.5)	126 (100.0)
	농학+의학	1 (2.5)	17 (42.5)	11 (27.5)	4 (10.0)	7 (17.5)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1 (2.2)	9 (20.0)	11 (24.4)	14 (31.1)	10 (22.2)	45 (100.0)
전체		2 (0.6)	85 (25.4)	89 (26.6)	92 (27.5)	66 (19.8)	334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경기	0 (0.0)	16 (22.2)	28 (38.9)	14 (19.4)	14 (19.4)	72 (100.0)
	대전충청	0 (0.0)	18 (23.7)	16 (21.1)	24 (31.6)	18 (23.7)	76 (100.0)
	전라광주	0 (0.0)	12 (27.3)	12 (27.3)	12 (27.3)	8 (18.2)	44 (100.0)
	부산영남	1 (4.0)	7 (28.0)	4 (16.0)	9 (36.0)	4 (16.0)	25 (100.0)
	강원제주	1 (0.8)	32 (27.1)	30 (25.4)	33 (28.0)	22 (18.6)	118 (100.0)
전체		2 (0.6)	85 (25.4)	90 (26.9)	92 (27.5)	66 (19.7)	335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0 (0.0)	16 (22.2)	28 (38.9)	14 (19.4)	14 (19.4)	72 (100.0)
	비수도권	2 (0.8)	69 (26.2)	62 (23.6)	78 (29.7)	52 (19.8)	263 (100.0)
전체		2 (0.6)	85 (25.4)	90 (26.9)	92 (27.5)	66 (19.7)	335 (100.0)

주) *<0.1 / **<0.05 / ***<0.01

3) 교육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가)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일부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다”42.3%, “운영하고 있지 않다”35.5%, “모든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다”22.2%로 나타났다. 즉 약 65% 정도의 대학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결과 수도권 지역 대학원의 석·박사 통합운영비율이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이학·공학계열이 모든 학과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경상계열은 일부 학과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7>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모든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75	22.2
일부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143	42.3
운영하고 있지 않다	120	35.5
합계	338	100.0

결측: 6명(1.7%)

<표 V-38>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체
		모든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일부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지 않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19 (22.1)	33 (38.4)	34 (39.5)	86 (100.0)
	중규모	49 (23.1)	86 (40.6)	77 (36.3)	212 (100.0)
	소규모	7 (17.5)	24 (60.0)	9 (22.5)	40 (100.0)
전체		75 (22.2)	143 (42.3)	120 (35.5)	338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1 (2.3)	24 (54.5)	19 (43.2)	44 (100.0)
	사회+경상	13 (16.9)	42 (54.5)	22 (28.6)	77 (100.0)
	이학+공학	40 (30.5)	46 (35.1)	45 (34.4)	131 (100.0)
	농학+의학	11 (27.5)	10 (25.0)	19 (47.5)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10 (22.2)	21 (46.7)	14 (31.1)	45 (100.0)
전체		75 (22.3)	143 (42.4)	119 (35.3)	337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22 (29.7)	38 (51.4)	14 (18.9)	74 (100.0)
	대전충청	10 (13.0)	26 (33.8)	41 (53.2)	77 (100.0)
	전라광주	6 (13.6)	4 (9.1)	34 (77.3)	44 (100.0)
	부산영남	1 (4.0)	9 (36.0)	15 (60.0)	25 (100.0)
	강원제주	36 (30.5)	66 (55.9)	16 (13.6)	118 (100.0)
전체		75 (22.2)	143 (42.3)	120 (35.5)	338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22 (29.7)	38 (51.4)	14 (18.9)	74 (100.0)
	비수도권	53 (20.1)	105 (39.8)	106 (40.2)	264 (100.0)
전체		75 (22.2)	143 (42.3)	120 (35.5)	338 (100.0)

주) *<0.1 / **<0.05 / ***<0.01

한편 대학원의 석·박사 통합과정이 학문의 연속성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설문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5.5%에 달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은 10.5%에 불과하였다. 또한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평가의견이 33.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석박사 과정의 통합운영에 대해 교수들의 절반 이상은 학문적 연속성에 있어 석·박사 통합 과정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결과 계열별로 차이는 보이고 있는 바, 이학·공학계열과 농학·의학계열과 같은 이공계열이 인문·사회계열 등 여타 계열에 비해 석·박사 통합과정이 학문적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석·박사 통합과정과 학문 연속성(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됨	31	9.3
도움 되는 편	154	46.2
그저 그렇다	113	33.9
도움 안됨	33	9.9
전혀 도움 안됨	2	0.6
합계	333	100.0

결측: 11명(3.2%)

<표 V-40> 석·박사 통합과정과 학문 연속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의 석박사 통합과정이 학문의 연속성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도움됨	도움 되는 편	그저 그렇다	도움 안됨	전혀 도움안됨	
대학의 규모	대규모	7 (8.4)	31 (37.3)	36 (43.4)	9 (10.8)	0 (0.0)	83 (100.0)
	중규모	23 (10.9)	103 (48.8)	63 (29.9)	20 (9.5)	2 (0.9)	211 (100.0)
	소규모	1 (2.6)	20 (51.3)	14 (35.9)	4 (10.3)	0 (0.0)	39 (100.0)
전체		31 (9.3)	154 (46.2)	113 (33.9)	33 (9.9)	2 (0.6)	333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1 (2.3)	15 (34.1)	18 (40.9)	10 (22.7)	0 (0.0)	44 (100.0)
	사회+경상	5 (6.7)	27 (36.0)	36 (48.0)	7 (9.3)	0 (0.0)	75 (100.0)
	이학+공학	18 (13.7)	66 (50.4)	33 (25.2)	12 (9.2)	2 (1.5)	131 (100.0)
	농학+의학	1 (2.6)	27 (69.2)	9 (23.1)	2 (5.1)	0 (0.0)	39 (100.0)
	사범/예체능 /가정	6 (14.0)	18 (41.9)	17 (39.5)	2 (4.7)	0 (0.0)	43 (100.0)
전체		31 (9.3)	153 (46.1)	113 (34.0)	33 (9.9)	2 (0.6)	332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경기	5 (6.8)	27 (36.5)	33 (44.6)	8 (10.8)	1 (1.4)	74 (100.0)
	대전충청	5 (6.8)	32 (43.8)	30 (41.1)	6 (8.2)	0 (0.0)	73 (100.0)
	전라광주	4 (9.1)	24 (54.5)	10 (22.7)	6 (13.6)	0 (0.0)	44 (100.0)
	부산영남	1 (4.0)	15 (60.0)	6 (24.0)	3 (12.0)	0 (0.0)	25 (100.0)
	강원제주	16 (13.7)	56 (47.9)	34 (29.1)	10 (8.5)	1 (0.9)	117 (100.0)
전체		31 (9.3)	154 (46.2)	113 (33.9)	33 (9.9)	2 (0.6)	333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5 (6.8)	27 (36.5)	33 (44.6)	8 (10.8)	1 (1.4)	74 (100.0)
	비수도권	26 (10.0)	127 (49.0)	80 (30.9)	25 (9.7)	1 (0.4)	259 (100.0)
전체		31 (9.3)	154 (46.2)	113 (33.9)	33 (9.9)	2 (0.6)	333 (100.0)

주) *<0.1 / **<0.05 / ***<0.01

아울러 대학원의 학위과정이 융·복합 학문분야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고급 인재 배출에 어느 정도로 적합한가를 설문한 결과 “인재발굴에 적합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은 32.8%인 반면 “적절치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의견은 18.8%였으며 유보적 평가의견은 4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 스스로도 현재와 같은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이 융·복합 학문분야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인재 배출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차분석결과 계열별로 사회·경상계열의 교수들이 여타 계열 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소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1> 대학원의 다양한 인재배출 적합성(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적합	17	5.1
적합한 편	93	27.7
그저 그렇다	163	48.5
적합치 않은 편	59	17.6
전혀 적합치 않음	4	1.2
합계	336	100.0

결측: 8명(2.3%)

<표 V-42> 대학원의 다양한 인재배출 적합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의 학위과정이 융복합 학문분야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고급 인재 배출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매 우 적합	적 합한 편	그저 그렇다	적 합치 않은 편	전 혀 적합치 않음	
대 학 의 규모	대규모	5 (5.8)	28 (32.6)	32 (37.2)	19 (22.1)	2 (2.3)	86 (100.0)
	중규모	12 (5.7)	56 (26.7)	108 (51.4)	32 (15.2)	2 (1.0)	210 (100.0)
	소규모	0 (0.0)	9 (22.5)	23 (57.5)	8 (20.0)	0 (0.0)	40 (100.0)
전체		17 (5.1)	93 (27.7)	163 (48.5)	59 (17.6)	4 (1.2)	336 (100.0)
대 학 원 전 공 계 열 ***	인문계열	1 (2.3)	15 (34.1)	21 (47.7)	7 (15.9)	0 (0.0)	44 (100.0)
	사회+경상	1 (1.3)	9 (11.8)	44 (57.9)	19 (25.0)	3 (3.9)	76 (100.0)
	이학+공학	13 (10.0)	42 (32.3)	60 (46.2)	15 (11.5)	0 (0.0)	130 (100.0)
	농학+의학	0 (0.0)	12 (30.0)	18 (45.0)	9 (22.5)	1 (2.5)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2 (4.4)	15 (33.3)	19 (42.2)	9 (20.0)	0 (0.0)	45 (100.0)
전체		17 (5.1)	93 (27.8)	162 (48.4)	59 (17.6)	4 (1.2)	335 (100.0)
대 학 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3 (4.1)	24 (32.4)	33 (44.6)	12 (16.2)	2 (2.7)	74 (100.0)
	대전충청	5 (6.6)	18 (23.7)	39 (51.3)	14 (18.4)	0 (0.0)	76 (100.0)
	전라광주	2 (4.5)	6 (13.6)	26 (59.1)	10 (22.7)	0 (0.0)	44 (100.0)
	부산영남	0 (0.0)	5 (20.0)	14 (56.0)	4 (16.0)	2 (8.0)	25 (100.0)
	강원제주	7 (6.0)	40 (34.2)	51 (43.6)	19 (16.2)	0 (0.0)	117 (100.0)
전체		17 (5.1)	93 (27.7)	163 (48.5)	59 (17.6)	4 (1.2)	336 (100.0)
수 도 권 여 부	수도권	3 (4.1)	24 (32.4)	33 (44.6)	12 (16.2)	2 (2.7)	74 (100.0)
	비수도권	14 (5.3)	69 (26.3)	130 (49.6)	47 (17.9)	2 (0.8)	262 (100.0)
전체		17 (5.1)	93 (27.7)	163 (48.5)	59 (17.6)	4 (1.2)	336 (100.0)

주) *<0.1 / **<0.05 / ***<0.01

나) 대학원의 독립성

대학원의 운영체제가 학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독립적”이라는 의견은 64.4%인 반면 “비독립적”이라는 의견은 19.0%에 불과하였다. 또한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면에서 소규모 대학의 경우 독립적이라는 의견이 다소 낮았으며, 계열별로는 사회·경상계열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여타 계열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43> 대학원의 독립성(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독립	34	10.1
독립된 편	183	54.3
그저 그렇다	56	16.6
독립되지 않은 편	59	17.5
전혀 독립치 않음	5	1.5
합계	337	100.0

결측: 7명(2.0%)

<표 V-44> 대학원의 독립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체제가 학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까?					전체
		매우 독립	독립된 편	그저 그렇다	독립되지 않은 편	전혀 독립치 않음	
대학의 규모	대규모	14 (16.3)	40 (46.5)	15 (17.4)	15 (17.4)	2 (2.3)	86 (100.0)
	중규모	18 (8.5)	124 (58.8)	33 (15.6)	35 (16.6)	1 (0.5)	211 (100.0)
	소규모	2 (5.0)	19 (47.5)	8 (20.0)	9 (22.5)	2 (5.0)	40 (100.0)
전체		34 (10.1)	183 (54.3)	56 (16.6)	59 (17.5)	5 (1.5)	337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인문계열	4 (9.1)	24 (54.5)	4 (9.1)	12 (27.3)	0 (0.0)	44 (100.0)
	사회+경상	6 (7.9)	37 (48.7)	21 (27.6)	10 (13.2)	2 (2.6)	76 (100.0)
	이학+공학	15 (11.5)	80 (61.1)	17 (13.0)	17 (13.0)	2 (1.5)	131 (100.0)
	농학+의학	5 (12.5)	20 (50.0)	6 (15.0)	8 (20.0)	1 (2.5)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4 (8.9)	21 (46.7)	8 (17.8)	12 (26.7)	0 (0.0)	45 (100.0)
전체		34 (10.1)	182 (54.2)	56 (16.7)	59 (17.6)	5 (1.5)	336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1 (14.9)	34 (45.9)	20 (27.0)	7 (9.5)	2 (2.7)	74 (100.0)
	대전충청	8 (10.5)	37 (48.7)	11 (14.5)	18 (23.7)	2 (2.6)	76 (100.0)
	전라광주	0 (0.0)	36 (81.8)	6 (13.6)	2 (4.5)	0 (0.0)	44 (100.0)
	부산영남	0 (0.0)	13 (52.0)	3 (12.0)	9 (36.0)	0 (0.0)	25 (100.0)
	강원제주	15 (12.7)	63 (53.4)	16 (13.6)	23 (19.5)	1 (0.8)	118 (100.0)
전체		34 (10.1)	183 (54.3)	56 (16.6)	59 (17.5)	5 (1.5)	337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11 (14.9)	34 (45.9)	20 (27.0)	7 (9.5)	2 (2.7)	74 (100.0)
	비수도권	23 (8.7)	149 (56.7)	36 (13.7)	52 (19.8)	3 (1.1)	263 (100.0)
전체		34 (10.1)	183 (54.3)	56 (16.6)	59 (17.5)	5 (1.5)	337 (100.0)

주) *<0.1 / **<0.05 / ***<0.01

다)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도입에 대한 의견

대학원에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력 학위과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이공계 분야에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전 학문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2%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도입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은 14.1%에 불과하였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 계열별, 지역별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특정 지역이나 계열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표 V-45>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도입(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 학문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4	34.2
이공계 분야에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5	43.5
비이공계 분야에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3.9
도입하는데 반대한다	47	14.1
기타	14	4.2
합계	333	100.0

결측: 11명(3.2%)

<표 V-46>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도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은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체
		전 학문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공계 분야에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이공계 분야에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입하는데 반대한다	기 타	
대학의 규모 **	대규모	25 (29.1)	40 (46.5)	2 (2.3)	12 (14.0)	7 (8.1)	86 (100.0)
	중규모	75 (36.1)	84 (40.4)	11 (5.3)	34 (16.3)	4 (1.9)	208 (100.0)
	소규모	14 (35.9)	21 (53.8)	0 (0.0)	1 (2.6)	3 (7.7)	39 (100.0)
전체		114 (34.2)	145 (43.5)	13 (3.9)	47 (14.1)	14 (4.2)	333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8 (18.2)	26 (59.1)	1 (2.3)	8 (18.2)	1 (2.3)	44 (100.0)
	사회+경상	34 (44.2)	24 (31.2)	2 (2.6)	6 (7.8)	11 (14.3)	77 (100.0)
	이학+공학	46 (35.7)	55 (42.6)	4 (3.1)	23 (17.8)	1 (0.8)	129 (100.0)
	농학+의학	13 (33.3)	23 (59.0)	2 (5.1)	0 (0.0)	1 (2.6)	39 (100.0)
	사범/예체능 /가정	13 (30.2)	16 (37.2)	4 (9.3)	10 (23.3)	0 (0.0)	43 (100.0)
전체		114 (34.3)	144 (43.4)	13 (3.9)	47 (14.2)	14 (4.2)	332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24 (33.3)	23 (31.9)	4 (5.6)	14 (19.4)	7 (9.7)	72 (100.0)
	대전충청	22 (28.9)	43 (56.6)	2 (2.6)	4 (5.3)	5 (6.6)	76 (100.0)
	전라광주	7 (15.9)	21 (47.7)	4 (9.1)	12 (27.3)	0 (0.0)	44 (100.0)
	부산영남	11 (44.0)	9 (36.0)	1 (4.0)	2 (8.0)	2 (8.0)	25 (100.0)
	강원제주	50 (43.1)	49 (42.2)	2 (1.7)	15 (12.9)	0 (0.0)	116 (100.0)
전체		114 (34.2)	145 (43.5)	13 (3.9)	47 (14.1)	14 (4.2)	333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24 (33.3)	23 (31.9)	4 (5.6)	14 (19.4)	7 (9.7)	72 (100.0)
	비수도권	90 (34.5)	122 (46.7)	9 (3.4)	33 (12.6)	7 (2.7)	261 (100.0)
전체		114 (34.2)	145 (43.5)	13 (3.9)	47 (14.1)	14 (4.2)	333 (100.0)

주) *<0.1 / **<0.05 / ***<0.01

라)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학위유형

산학협력형 학위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수여할 학위유형을 설문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문학위”를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5.0%이고, “학술학위”를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6.7%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 절반 가량의 교수들이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학위유형은 새로운 학위유형이거나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술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V-47>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학위유형(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학술학위	20	6.7
전문학위	135	45.0
새로운 형태의 학위	145	48.3
합계	300	100.0

결측: 44명(12.8%)

<표 V-48>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학위유형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산학협력형 학위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수여할 학위유형은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학술학위	전문학위	새로운 형태의 학위	
대학의 규모	대규모	7 (10.1)	27 (39.1)	35 (50.7)	69 (100.0)
	중규모	11 (5.7)	95 (49.2)	87 (45.1)	193 (100.0)
	소규모	2 (5.3)	13 (34.2)	23 (60.5)	38 (100.0)
전체		20 (6.7)	135 (45.0)	145 (48.3)	300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인문계열	1 (2.4)	13 (31.7)	27 (65.9)	41 (100.0)
	사회+경상	2 (3.2)	26 (41.9)	34 (54.8)	62 (100.0)
	이학+공학	11 (9.1)	58 (47.9)	52 (43.0)	121 (100.0)
	농학+의학	5 (12.5)	18 (45.0)	17 (42.5)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1 (2.9)	19 (54.3)	15 (42.9)	35 (100.0)
전체		20 (6.7)	134 (44.8)	145 (48.5)	299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경기	2 (4.0)	19 (38.0)	29 (58.0)	50 (100.0)
	대전충청	4 (5.6)	35 (48.6)	33 (45.8)	72 (100.0)
	전라광주	2 (4.7)	24 (55.8)	17 (39.5)	43 (100.0)
	부산영남	0 (0.0)	10 (43.5)	13 (56.5)	23 (100.0)
	강원제주	12 (10.7)	47 (42.0)	53 (47.3)	112 (100.0)
전체		20 (6.7)	135 (45.0)	145 (48.3)	300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2 (4.0)	19 (38.0)	29 (58.0)	50 (100.0)
	비수도권	18 (7.2)	116 (46.4)	116 (46.4)	250 (100.0)
전체		20 (6.7)	135 (45.0)	145 (48.3)	300 (100.0)

주) *<0.1 / **<0.05 / ***<0.01

마) 학위유형 개편에 대한 의견

현재의 학위유형을 학술학위, 전문학위, 실무학위 등 3학위 체제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이공계 분야에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39.9%와 “전 학문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33.4%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22.0%나 되었다.

교차분석결과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사회·경상계열과 기타 계열이 전 학문 분야에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인문계열과 이학·공학계열은 여타 계열에 비해 제도 자체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과 강원·제주지역의 교수들이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가 여타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반대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9> 학위유형의 개편(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 학문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8	33.4
이공계 분야에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9	39.9
비이공계 분야에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1.5
도입하는데 반대한다	71	22.0
기타	10	3.1
합계	323	100.0

결측: 21명(6.1%)

<표 V-50> 학위유형의 개편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현재의 학위유형을 학술헌위, 전문학위, 실무학위 등 3학위 체제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체
		전 학문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공계 분야에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이공계 분야에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입하는데 반대한다	기 타	
대학의 규모	대규모	23 (29.5)	29 (37.2)	1 (1.3)	23 (29.5)	2 (2.6)	78 (100.0)
	중규모	71 (34.5)	83 (40.3)	4 (1.9)	43 (20.9)	5 (2.4)	206 (100.0)
	소규모	14 (35.9)	17 (43.6)	0 (0.0)	5 (12.8)	3 (7.7)	39 (100.0)
전체		108 (33.4)	129 (39.9)	5 (1.5)	71 (22.0)	10 (3.1)	323 (100.0)
대학원 전공계열	인문계열	9 (20.9)	20 (46.5)	1 (2.3)	13 (30.2)	0 (0.0)	43 (100.0)
	사회+경상	32 (42.7)	27 (36.0)	0 (0.0)	11 (14.7)	5 (6.7)	75 (100.0)
	이학+공학	35 (28.0)	48 (38.4)	3 (2.4)	35 (28.0)	4 (3.2)	125 (100.0)
	농학+의학	14 (35.0)	18 (45.0)	1 (2.5)	6 (15.0)	1 (2.5)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18 (46.2)	15 (38.5)	0 (0.0)	6 (15.4)	0 (0.0)	39 (100.0)
전체		108 (33.5)	128 (39.8)	5 (1.6)	71 (22.0)	10 (3.1)	322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26 (39.4)	18 (27.3)	0 (0.0)	18 (27.3)	4 (6.1)	66 (100.0)
	대전충청	19 (25.7)	41 (55.4)	1 (1.4)	9 (12.2)	4 (5.4)	74 (100.0)
	전라광주	10 (23.8)	22 (52.4)	0 (0.0)	8 (19.0)	2 (4.8)	42 (100.0)
	부산영남	10 (40.0)	12 (48.0)	1 (4.0)	2 (8.0)	0 (0.0)	25 (100.0)
	강원제주	43 (37.1)	36 (31.0)	3 (2.6)	34 (29.3)	0 (0.0)	116 (100.0)
전체		108 (33.4)	129 (39.9)	5 (1.5)	71 (22.0)	10 (3.1)	323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26 (39.4)	18 (27.3)	0 (0.0)	18 (27.3)	4 (6.1)	66 (100.0)
	비수도권	82 (31.9)	111 (43.2)	5 (1.9)	53 (20.6)	6 (2.3)	257 (100.0)
전체		108 (33.4)	129 (39.9)	5 (1.5)	71 (22.0)	10 (3.1)	323 (100.0)

주) *<0.1 / **<0.05 / ***<0.01

바) 논문심사 과정의 공개

박사학위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박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62.7%인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11.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의 공개에 대해 교수들은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차분석결과 소규모 대학의 경우가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이 여타 계열에 비해 반대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반대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51> 논문심사 과정의 공개(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적극 반대	3	0.9
반대	35	10.4
보통	87	26.0
찬성	154	46.0
적극 찬성	56	16.7
합계	335	100.0

결측: 9명(2.6%)

<표 V-52> 논문심사 과정의 공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박사학위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박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대학의 규모 ***	대규모	0 (0.0)	7 (8.4)	16 (19.3)	47 (56.6)	13 (15.7)	83 (100.0)
	중규모	2 (0.9)	18 (8.5)	56 (26.4)	98 (46.2)	38 (17.9)	212 (100.0)
	소규모	1 (2.5)	10 (25.0)	15 (37.5)	9 (22.5)	5 (12.5)	40 (100.0)
전체		3 (0.9)	35 (10.4)	87 (26.0)	154 (46.0)	56 (16.7)	335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0 (0.0)	8 (18.2)	12 (27.3)	16 (36.4)	8 (18.2)	44 (100.0)
	사회+경상	0 (0.0)	8 (10.5)	25 (32.9)	35 (46.1)	8 (10.5)	76 (100.0)
	이학+공학	1 (0.8)	13 (10.1)	29 (22.5)	67 (51.9)	19 (14.7)	129 (100.0)
	농학+의학	0 (0.0)	3 (7.5)	7 (17.5)	17 (42.5)	13 (32.5)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2 (4.4)	3 (6.7)	14 (31.1)	18 (40.0)	8 (17.8)	45 (100.0)
전체		3 (0.9)	35 (10.5)	87 (26.0)	153 (45.8)	56 (16.8)	33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서울경기	2 (2.8)	9 (12.5)	24 (33.3)	26 (36.1)	11 (15.3)	72 (100.0)
	대전충청	1 (1.3)	16 (20.8)	24 (31.2)	28 (36.4)	8 (10.4)	77 (100.0)
	전라광주	0 (0.0)	3 (6.8)	4 (9.1)	23 (52.3)	14 (31.8)	44 (100.0)
	부산영남	0 (0.0)	0 (0.0)	5 (20.0)	14 (56.0)	6 (24.0)	25 (100.0)
	강원제주	0 (0.0)	7 (6.0)	30 (25.6)	63 (53.8)	17 (14.5)	117 (100.0)
전체		3 (0.9)	35 (10.4)	87 (26.0)	154 (46.0)	56 (16.7)	335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2 (2.8)	9 (12.5)	24 (33.3)	26 (36.1)	11 (15.3)	72 (100.0)
	비수도권	1 (0.4)	26 (9.9)	63 (24.0)	128 (48.7)	45 (17.1)	263 (100.0)
전체		3 (0.9)	35 (10.4)	87 (26.0)	154 (46.0)	56 (16.7)	335 (100.0)

주) *<0.1 / **<0.05 / ***<0.01

사) 학위논문의 공시

학위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위논문을 연구재단 등의 공식적 기관 혹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시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53.3%인 반면 반대하는 부정적 의견은 1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보적이라는 의견은 36.4%로 나타났다.

교차분석결과 소규모 대학의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이학·공학계열과 농학·의학계열이 여타 계열 보다 반대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지역과 전라·광주지역이 반대의견이 다소 높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이 반대 의견이 높았다.

<표 V-53> 학위논문의 공시(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적극 반대	2	0.6
반대	33	9.8
보통	123	36.4
찬성	147	43.5
적극 찬성	33	9.8
합계	338	100.0

결측: 6명(1.7%)

<표 V-54> 학위논문의 공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학위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위논문을 연구재단 등의 공식적 기관 혹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대학의 규모 **	대규모	1 (1.2)	10 (11.6)	21 (24.4)	43 (50.0)	11 (12.8)	86 (100.0)
	중규모	0 (0.0)	15 (7.1)	89 (42.0)	90 (42.5)	18 (8.5)	212 (100.0)
	소규모	1 (2.5)	8 (20.0)	13 (32.5)	14 (35.0)	4 (10.0)	40 (100.0)
전체		2 (0.6)	33 (9.8)	123 (36.4)	147 (43.5)	33 (9.8)	338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인문계열	0 (0.0)	3 (6.8)	16 (36.4)	21 (47.7)	4 (9.1)	44 (100.0)
	사회+경상	0 (0.0)	4 (5.1)	30 (38.0)	37 (46.8)	8 (10.1)	79 (100.0)
	이학+공학	2 (1.6)	13 (10.1)	53 (41.1)	51 (39.5)	10 (7.8)	129 (100.0)
	농학+의학	0 (0.0)	7 (17.5)	13 (32.5)	12 (30.0)	8 (20.0)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0 (0.0)	6 (13.3)	11 (24.4)	25 (55.6)	3 (6.7)	45 (100.0)
전체		2 (0.6)	33 (9.8)	123 (36.5)	146 (43.3)	33 (9.8)	337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경기	0 (0.0)	4 (5.4)	24 (32.4)	38 (51.4)	8 (10.8)	74 (100.0)
	대전충청	1 (1.3)	11 (14.3)	30 (39.0)	29 (37.7)	6 (7.8)	77 (100.0)
	전라광주	0 (0.0)	8 (18.2)	16 (36.4)	16 (36.4)	4 (9.1)	44 (100.0)
	부산영남	0 (0.0)	1 (4.0)	8 (32.0)	11 (44.0)	5 (20.0)	25 (100.0)
	강원제주	1 (0.8)	9 (7.6)	45 (38.1)	53 (44.9)	10 (8.5)	118 (100.0)
전체		2 (0.6)	33 (9.8)	123 (36.4)	147 (43.5)	33 (9.8)	338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0 (0.0)	4 (5.4)	24 (32.4)	38 (51.4)	8 (10.8)	74 (100.0)
	비수도권	2 (0.8)	29 (11.0)	99 (37.5)	109 (41.3)	25 (9.5)	264 (100.0)
전체		2 (0.6)	33 (9.8)	123 (36.4)	147 (43.5)	33 (9.8)	338 (100.0)

주) *<0.1 / **<0.05 / ***<0.01

아) 학부로부터의 독립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대학원과 학부를 독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55.7%인 반면 반대의견은 10.4%에 불과하였다. 교차분석결과 소규모 대학의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편이며, 계열별로는 농학·의학계열이 여타 계열에 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5> 학부로부터의 독립(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적극 반대	4	1.2
반대	31	9.2
보통	114	33.8
찬성	140	41.5
적극 찬성	48	14.2
합계	337	100.0

결측: 7명(2.0%)

<표 V-56> 학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대학원과 학부를 독립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대학의 규모*	대규모	2 (2.4)	11 (12.9)	25 (29.4)	38 (44.7)	9 (10.6)	85 (100.0)
	중규모	0 (0.0)	15 (7.1)	77 (36.3)	87 (41.0)	33 (15.6)	212 (100.0)
	소규모	2 (5.0)	5 (12.5)	12 (30.0)	15 (37.5)	6 (15.0)	40 (100.0)
전체		4 (1.2)	31 (9.2)	114 (33.8)	140 (41.5)	48 (14.2)	337 (100.0)
대학원 전공계열***	인문계열	0 (0.0)	8 (18.2)	11 (25.0)	17 (38.6)	8 (18.2)	44 (100.0)
	사회+경상	0 (0.0)	4 (5.2)	32 (41.6)	34 (44.2)	7 (9.1)	77 (100.0)
	이학+공학	4 (3.1)	12 (9.2)	43 (33.1)	55 (42.3)	16 (12.3)	130 (100.0)
	농학+의학	0 (0.0)	6 (15.0)	6 (15.0)	16 (40.0)	12 (30.0)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0 (0.0)	1 (2.2)	21 (46.7)	18 (40.0)	5 (11.1)	45 (100.0)
전체		4 (1.2)	31 (9.2)	113 (33.6)	140 (41.7)	48 (14.3)	336 (100.0)
대학원 소재지역**	서울경기	0 (0.0)	6 (8.1)	32 (43.2)	28 (37.8)	8 (10.8)	74 (100.0)
	대전충청	2 (2.6)	5 (6.6)	22 (28.9)	38 (50.0)	9 (11.8)	76 (100.0)
	전라광주	0 (0.0)	2 (4.5)	10 (22.7)	22 (50.0)	10 (22.7)	44 (100.0)
	부산영남	0 (0.0)	1 (4.0)	4 (16.0)	16 (64.0)	4 (16.0)	25 (100.0)
	강원제주	2 (1.7)	17 (14.4)	46 (39.0)	36 (30.5)	17 (14.4)	118 (100.0)
전체		4 (1.2)	31 (9.2)	114 (33.8)	140 (41.5)	48 (14.2)	337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0 (0.0)	6 (8.1)	32 (43.2)	28 (37.8)	8 (10.8)	74 (100.0)
	비수도권	4 (1.5)	25 (9.5)	82 (31.2)	112 (42.6)	40 (15.2)	263 (100.0)
전체		4 (1.2)	31 (9.2)	114 (33.8)	140 (41.5)	48 (14.2)	337 (100.0)

주) *<0.1 / **<0.05 / ***<0.01

자) 학부정원의 감축

학부정원을 감축하여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16.4%인 반면 반대하는 부정적 의견이 46.7%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부정원의 감축을 통해 대학원 정원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 교수들은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보적 의견도 36.8%에 달한다는 것은 현재 대학원과 학부의 상황이 입학자원의 변화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면에서 볼 때 대규모 대학의 경우 반대 의견이 높았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의 교수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농학·의학계열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의 소재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지역의 반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라·광주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V-57> 학부정원의 감축(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적극 반대	30	8.8
반대	129	37.9
보통	125	36.8
찬성	45	13.2
적극 찬성	11	3.2
합계	340	100.0

결측: 4명(1.2%)

<표 V-58> 학부정원의 감축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학부정원을 감축하여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대학의 규모 *	대규모	10 (11.6)	36 (41.9)	29 (33.7)	11 (12.8)	0 (0.0)	86 (100.0)
	중규모	14 (6.5)	78 (36.4)	85 (39.7)	30 (14.0)	7 (3.3)	214 (100.0)
	소규모	6 (15.0)	15 (37.5)	11 (27.5)	4 (10.0)	4 (10.0)	40 (100.0)
전체		30 (8.8)	129 (37.9)	125 (36.8)	45 (13.2)	11 (3.2)	340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9 (20.5)	21 (47.7)	12 (27.3)	2 (4.5)	0 (0.0)	44 (100.0)
	사회+경상	4 (5.1)	23 (29.1)	31 (39.2)	16 (20.3)	5 (6.3)	79 (100.0)
	이학+공학	12 (9.2)	42 (32.1)	50 (38.2)	21 (16.0)	6 (4.6)	131 (100.0)
	농학+의학	2 (5.0)	21 (52.5)	13 (32.5)	4 (10.0)	0 (0.0)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3 (6.7)	21 (46.7)	19 (42.2)	2 (4.4)	0 (0.0)	45 (100.0)
전체		30 (8.8)	128 (37.8)	125 (36.9)	45 (13.3)	11 (3.2)	339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6 (8.1)	24 (32.4)	27 (36.5)	11 (14.9)	6 (8.1)	74 (100.0)
	대전충청	11 (14.3)	35 (45.5)	24 (31.2)	6 (7.8)	1 (1.3)	77 (100.0)
	전라광주	2 (4.5)	22 (50.0)	18 (40.9)	2 (4.5)	0 (0.0)	44 (100.0)
	부산영남	3 (12.0)	5 (20.0)	13 (52.0)	4 (16.0)	0 (0.0)	25 (100.0)
	강원제주	8 (6.7)	43 (35.8)	43 (35.8)	22 (18.3)	4 (3.3)	120 (100.0)
전체		30 (8.8)	129 (37.9)	125 (36.8)	45 (13.2)	11 (3.2)	340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6 (8.1)	24 (32.4)	27 (36.5)	11 (14.9)	6 (8.1)	74 (100.0)
	비수도권	24 (9.0)	105 (39.5)	98 (36.8)	34 (12.8)	5 (1.9)	266 (100.0)
전체		30 (8.8)	129 (37.9)	125 (36.8)	45 (13.2)	11 (3.2)	340 (100.0)

주) *<0.1 / **<0.05 / ***<0.01

차) 대학원 정원의 감축

대학원 교육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26.0%인 반면 반대하는 부정적 의견은 39.9%로 높았으며 유보적 의견은 34.0%였다. 교차분석결과 전공계열에 있어 이학·공학계열의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농학·의학계열로 나타나 주로 이·공계열의 반대가 인문·사회계열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59> 대학원 정원의 감축(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적극 반대	16	4.7
반대	119	35.2
보통	115	34.0
찬성	61	18.0
적극 찬성	27	8.0
합계	338	100.0

결측: 6명(1.7%)

<표 V-60> 대학원 정원 감축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 교육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대학의 규모 *	대규모	3 (3.6)	29 (34.5)	26 (31.0)	14 (16.7)	12 (14.3)	84 (100.0)
	중규모	10 (4.7)	75 (35.0)	75 (35.0)	45 (21.0)	9 (4.2)	214 (100.0)
	소규모	3 (7.5)	15 (37.5)	14 (35.0)	2 (5.0)	6 (15.0)	40 (100.0)
전체		16 (4.7)	119 (35.2)	115 (34.0)	61 (18.0)	27 (8.0)	338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2 (4.5)	11 (25.0)	18 (40.9)	7 (15.9)	6 (13.6)	44 (100.0)
	사회+경상	1 (1.3)	21 (26.6)	25 (31.6)	23 (29.1)	9 (11.4)	79 (100.0)
	이학+공학	13 (10.0)	57 (43.8)	42 (32.3)	12 (9.2)	6 (4.6)	130 (100.0)
	농학+의학	0 (0.0)	17 (42.5)	14 (35.0)	9 (22.5)	0 (0.0)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0 (0.0)	12 (27.3)	16 (36.4)	10 (22.7)	6 (13.6)	44 (100.0)
전체		16 (4.7)	118 (35.0)	115 (34.1)	61 (18.1)	27 (8.0)	337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2 (2.7)	23 (31.1)	28 (37.8)	13 (17.6)	8 (10.8)	74 (100.0)
	대전충청	4 (5.3)	25 (33.3)	20 (26.7)	16 (21.3)	10 (13.3)	75 (100.0)
	전라광주	0 (0.0)	12 (27.3)	20 (45.5)	10 (22.7)	2 (4.5)	44 (100.0)
	부산영남	0 (0.0)	10 (40.0)	12 (48.0)	2 (8.0)	1 (4.0)	25 (100.0)
	강원제주	10 (8.3)	49 (40.8)	35 (29.2)	20 (16.7)	6 (5.0)	120 (100.0)
전체		16 (4.7)	119 (35.2)	115 (34.0)	61 (18.0)	27 (8.0)	338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2 (2.7)	23 (31.1)	28 (37.8)	13 (17.6)	8 (10.8)	74 (100.0)
	비수도권	14 (5.3)	96 (36.4)	87 (33.0)	48 (18.2)	19 (7.2)	264 (100.0)
전체		16 (4.7)	119 (35.2)	115 (34.0)	61 (18.0)	27 (8.0)	338 (100.0)

주) *<0.1 / **<0.05 / ***<0.01

카) 대학알리미를 통한 대학원 공시

“대학 알리미”를 통해 학부처럼 대학원에 관한 정보도 상세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70.4%로 반대의견 3.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면에서 대규모나 중규모 대학 보다 소규모 대학의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영남지역과 전라·광주지역의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1> 대학알리미를 통한 대학원 공시(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적극 반대	1	0.3
반대	11	3.3
보통	88	26.0
찬성	176	52.1
적극 찬성	62	18.3
합계	338	100.0

결측: 6명(1.7%)

<표 V-62> 대학알리미를 통한 대학원 공시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 학 알 리 미”를 통해 대학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대학의 규모 **	대규모	0 (0.0)	2 (2.3)	18 (20.9)	52 (60.5)	14 (16.3)	86 (100.0)
	중규모	0 (0.0)	4 (1.9)	58 (27.4)	110 (51.9)	40 (18.9)	212 (100.0)
	소규모	1 (2.5)	5 (12.5)	12 (30.0)	14 (35.0)	8 (20.0)	40 (100.0)
전체		1 (0.3)	11 (3.3)	88 (26.0)	176 (52.1)	62 (18.3)	338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0 (0.0)	5 (11.4)	9 (20.5)	19 (43.2)	11 (25.0)	44 (100.0)
	사회+경상	0 (0.0)	0 (0.0)	28 (35.4)	39 (49.4)	12 (15.2)	79 (100.0)
	이학+공학	1 (0.8)	5 (3.9)	32 (24.8)	77 (59.7)	14 (10.9)	129 (100.0)
	농학+의학	0 (0.0)	1 (2.5)	8 (20.0)	15 (37.5)	16 (40.0)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0 (0.0)	0 (0.0)	11 (24.4)	25 (55.6)	9 (20.0)	45 (100.0)
전체		1 (0.3)	11 (3.3)	88 (26.1)	175 (51.9)	62 (18.4)	337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0 (0.0)	0 (0.0)	25 (33.8)	34 (45.9)	15 (20.3)	74 (100.0)
	대전충청	1 (1.3)	9 (11.7)	19 (24.7)	41 (53.2)	7 (9.1)	77 (100.0)
	전라광주	0 (0.0)	0 (0.0)	10 (22.7)	22 (50.0)	12 (27.3)	44 (100.0)
	부산영남	0 (0.0)	0 (0.0)	4 (16.0)	15 (60.0)	6 (24.0)	25 (100.0)
	강원제주	0 (0.0)	2 (1.7)	30 (25.4)	64 (54.2)	22 (18.6)	118 (100.0)
전체		1 (0.3)	11 (3.3)	88 (26.0)	176 (52.1)	62 (18.3)	338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0 (0.0)	0 (0.0)	25 (33.8)	34 (45.9)	15 (20.3)	74 (100.0)
	비수도권	1 (0.4)	11 (4.2)	63 (23.9)	142 (53.8)	47 (17.8)	264 (100.0)
전체		1 (0.3)	11 (3.3)	88 (26.0)	176 (52.1)	62 (18.3)	338 (100.0)

주) *<0.1 / **<0.05 / ***<0.01

타) 대학원의 평가인증제 도입

대학원에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40.7%인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21.1%로 나타났으며 유보적인 의견은 38.1%로 나타났다. 교차분석결과 전공계열에 있어 이학·공학계열의 찬성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과 전라·광주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반대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63> 대학원의 평가인증제 도입(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적극 반대	21	6.2
반대	51	15.0
보통	129	38.1
찬성	107	31.6
적극 찬성	31	9.1
합계	339	100.0

결측: 5명(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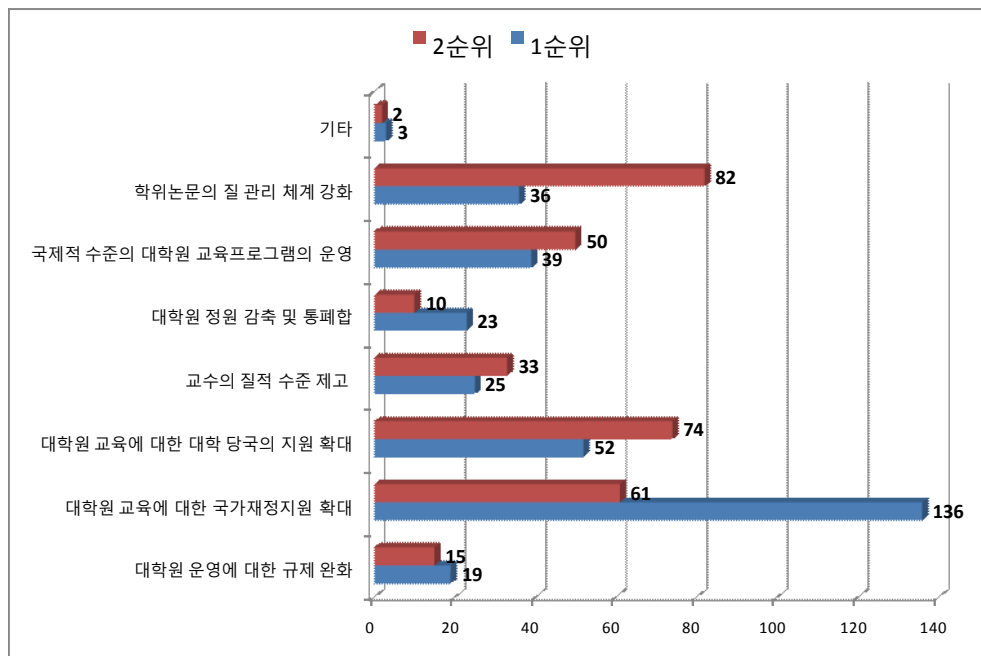
<표 V-64> 대학원의 평가인증제 도입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에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대학의 규모	대규모	7 (8.2)	7 (8.2)	32 (37.6)	32 (37.6)	7 (8.2)	85 (100.0)
	중규모	13 (6.1)	36 (16.8)	82 (38.3)	64 (29.9)	19 (8.9)	214 (100.0)
	소규모	1 (2.5)	8 (20.0)	15 (37.5)	11 (27.5)	5 (12.5)	40 (100.0)
전체		21 (6.2)	51 (15.0)	129 (38.1)	107 (31.6)	31 (9.1)	339 (100.0)
대학원 전공계열 ***	인문계열	4 (9.1)	9 (20.5)	15 (34.1)	14 (31.8)	2 (4.5)	44 (100.0)
	사회+경상	0 (0.0)	10 (12.8)	29 (37.2)	32 (41.0)	7 (9.0)	78 (100.0)
	이학+공학	13 (9.9)	24 (18.3)	56 (42.7)	32 (24.4)	6 (4.6)	131 (100.0)
	농학+의학	1 (2.5)	5 (12.5)	13 (32.5)	10 (25.0)	11 (27.5)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3 (6.7)	3 (6.7)	16 (35.6)	18 (40.0)	5 (11.1)	45 (100.0)
전체		21 (6.2)	51 (15.1)	129 (38.2)	106 (31.4)	31 (9.2)	338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5 (6.8)	5 (6.8)	26 (35.1)	30 (40.5)	8 (10.8)	74 (100.0)
	대전충청	3 (3.9)	17 (22.1)	26 (33.8)	26 (33.8)	5 (6.5)	77 (100.0)
	전라광주	0 (0.0)	6 (13.6)	18 (40.9)	10 (22.7)	10 (22.7)	44 (100.0)
	부산영남	1 (4.0)	4 (16.0)	9 (36.0)	8 (32.0)	3 (12.0)	25 (100.0)
	강원제주	12 (10.1)	19 (16.0)	50 (42.0)	33 (27.7)	5 (4.2)	119 (100.0)
전체		21 (6.2)	51 (15.0)	129 (38.1)	107 (31.6)	31 (9.1)	339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5 (6.8)	5 (6.8)	26 (35.1)	30 (40.5)	8 (10.8)	74 (100.0)
	비수도권	16 (6.0)	46 (17.4)	103 (38.9)	77 (29.1)	23 (8.7)	265 (100.0)
전체		21 (6.2)	51 (15.0)	129 (38.1)	107 (31.6)	31 (9.1)	339 (100.0)

주) *<0.1 / **<0.05 / ***<0.01

파) 박사과정 경쟁력 강화방안

교수들에게 박사과정의 경쟁력 방안에 대해 설문하였다. 즉 우리나라 박사학위 과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설문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두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순위로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136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학원 교육에 대한 대학 당국의 지원 확대”(52명), “국제적 수준의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39명), “학위논문의 질 관리 체계 강화”(36명) 등의 순위였다. 반면 2순위에서는 “학위논문의 질 관리 체계 강화”(82명), “대학원 교육에 대한 대학 당국의 지원 확대”(74명),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6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측: 17명(4.9%)

[그림 V-1] 박사과정 경쟁력 강화방안(교수집단)

4) 대학원 교육의 질에 관한 사항

가) 대학원의 수준평가

대학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높은 편”이라는 평가의견은 48.3%인 반면 “낮은 편”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의견은 12.2%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을 보인 경우는 39.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학원의 질적 수준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면에서 대규모 대학의 경우 대학원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이학·공학계열과 기타 계열의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여타 계열 보다 대학원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여타 지역에 비해 전라·광주지역이 대학원 질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5> 대학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35	10.2
대체로 그렇다	131	38.1
그저 그렇다	136	39.5
대체로 아니다	41	11.9
전혀 아니다	1	0.3
합계	344	100.0

결측: 1명(0.3%)

<표 V-66> 대학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9 (10.5)	50 (58.1)	23 (26.7)	4 (4.7)	0 (0.0)	86 (100.0)
	중규모	21 (9.6)	66 (30.3)	95 (43.6)	35 (16.1)	1 (0.5)	218 (100.0)
	소규모	5 (12.5)	15 (37.5)	18 (45.0)	2 (5.0)	0 (0.0)	40 (100.0)
전체		35 (10.2)	131 (38.1)	136 (39.5)	41 (11.9)	1 (0.3)	34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3 (6.5)	16 (34.8)	20 (43.5)	7 (15.2)	0 (0.0)	46 (100.0)
	사회+경상	1 (1.3)	31 (39.2)	40 (50.6)	6 (7.6)	1 (1.3)	79 (100.0)
	이학+공학	22 (16.5)	56 (42.1)	40 (30.1)	15 (11.3)	0 (0.0)	133 (100.0)
	농학+의학	2 (5.0)	11 (27.5)	18 (45.0)	9 (22.5)	0 (0.0)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7 (15.6)	16 (35.6)	18 (40.0)	4 (8.9)	0 (0.0)	45 (100.0)
전체		35 (10.2)	130 (37.9)	136 (39.7)	41 (12.0)	1 (0.3)	343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8 (10.8)	29 (39.2)	35 (47.3)	2 (2.7)	0 (0.0)	74 (100.0)
	대전충청	11 (14.3)	29 (37.7)	24 (31.2)	13 (16.9)	0 (0.0)	77 (100.0)
	전라광주	0 (0.0)	10 (22.7)	18 (40.9)	16 (36.4)	0 (0.0)	44 (100.0)
	부산영남	0 (0.0)	9 (36.0)	13 (52.0)	2 (8.0)	1 (4.0)	25 (100.0)
	강원제주	16 (12.9)	54 (43.5)	46 (37.1)	8 (6.5)	0 (0.0)	124 (100.0)
전체		35 (10.2)	131 (38.1)	136 (39.5)	41 (11.9)	1 (0.3)	344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8 (10.8)	29 (39.2)	35 (47.3)	2 (2.7)	0 (0.0)	74 (100.0)
	비수도권	27 (10.0)	102 (37.8)	101 (37.4)	39 (14.4)	1 (0.4)	270 (100.0)
전체		35 (10.2)	131 (38.1)	136 (39.5)	41 (11.9)	1 (0.3)	344 (100.0)

주) * <0.1 / ** <0.05 / *** <0.01

나) 대학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대학원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설문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30.0%인 반면 “국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의견은 32.0%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은 38.1%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교수들 중 약 30%만이 국내 대학원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면에서 대규모 대학의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계열별로는 이학·공학계열이 긍정적인 의견인 반면 사회·경상계열과 농학·의학계열은 국제적 수준과 비해 우리나라 대학원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여타 지역에 비해 특히 전라·광주지역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7> 대학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26	7.6
대체로 그렇다	77	22.4
그저 그렇다	131	38.1
대체로 아니다	84	24.4
전혀 아니다	26	7.6
합계	344	100.0

<표 V-68> 대학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의 질적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손색이 없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5 (5.8)	26 (30.2)	39 (45.3)	11 (12.8)	5 (5.8)	86 (100.0)
	중규모	17 (7.8)	44 (20.2)	75 (34.4)	62 (28.4)	20 (9.2)	218 (100.0)
	소규모	4 (10.0)	7 (17.5)	17 (42.5)	11 (27.5)	1 (2.5)	40 (100.0)
전체		26 (7.6)	77 (22.4)	131 (38.1)	84 (24.4)	26 (7.6)	34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2 (4.3)	11 (23.9)	19 (41.3)	7 (15.2)	7 (15.2)	46 (100.0)
	사회+경상	1 (1.3)	13 (16.5)	35 (44.3)	20 (25.3)	10 (12.7)	79 (100.0)
	이학+공학	20 (15.0)	36 (27.1)	45 (33.8)	27 (20.3)	5 (3.8)	133 (100.0)
	농학+의학	0 (0.0)	8 (20.0)	12 (30.0)	19 (47.5)	1 (2.5)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3 (6.7)	8 (17.8)	20 (44.4)	11 (24.4)	3 (6.7)	45 (100.0)
전체		26 (7.6)	76 (22.2)	131 (38.2)	84 (24.5)	26 (7.6)	343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2 (2.7)	18 (24.3)	36 (48.6)	14 (18.9)	4 (5.4)	74 (100.0)
	대전충청	9 (11.7)	10 (13.0)	31 (40.3)	13 (16.9)	14 (18.2)	77 (100.0)
	전라광주	0 (0.0)	2 (4.5)	20 (45.5)	16 (36.4)	6 (13.6)	44 (100.0)
	부산영남	0 (0.0)	5 (20.0)	11 (44.0)	7 (28.0)	2 (8.0)	25 (100.0)
	강원제주	15 (12.1)	42 (33.9)	33 (26.6)	34 (27.4)	0 (0.0)	124 (100.0)
전체		26 (7.6)	77 (22.4)	131 (38.1)	84 (24.4)	26 (7.6)	344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2 (2.7)	18 (24.3)	36 (48.6)	14 (18.9)	4 (5.4)	74 (100.0)
	비수도권	24 (8.9)	59 (21.9)	95 (35.2)	70 (25.9)	22 (8.1)	270 (100.0)
전체		26 (7.6)	77 (22.4)	131 (38.1)	84 (24.4)	26 (7.6)	344 (100.0)

주) *<0.1 / **<0.05 / ***<0.01

다) 영어 강의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 척도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강의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영어로 강의 한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한 반면 “영어로 강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원의 영어 강의 빈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면에서 대규모 대학 보다는 소규모 대학의 영어 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농학·의학계열과 이학·공학계열의 영어 강의 빈도가 여타 계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지역의 영어 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영어 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V-69> 영어 강의(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8	5.2
대체로 그렇다	38	11.0
그저 그렇다	51	14.8
대체로 아니다	119	34.6
전혀 아니다	118	34.3
합계	344	100.0

<표 V-70> 영어 강의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 강의는 주로 영어로 진행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1 (1.2)	7 (8.1)	7 (8.1)	39 (45.3)	32 (37.2)	86 (100.0)
	중규모	13 (6.0)	27 (12.4)	37 (17.0)	69 (31.7)	72 (33.0)	218 (100.0)
	소규모	4 (10.0)	4 (10.0)	7 (17.5)	11 (27.5)	14 (35.0)	40 (100.0)
전체		18 (5.2)	38 (11.0)	51 (14.8)	119 (34.6)	118 (34.3)	34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0 (0.0)	5 (10.9)	8 (17.4)	10 (21.7)	23 (50.0)	46 (100.0)
	사회+경상	0 (0.0)	4 (5.1)	14 (17.7)	34 (43.0)	27 (34.2)	79 (100.0)
	이학+공학	18 (13.5)	18 (13.5)	22 (16.5)	46 (34.6)	29 (21.8)	133 (100.0)
	농학+의학	0 (0.0)	11 (27.5)	5 (12.5)	8 (20.0)	16 (40.0)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0 (0.0)	0 (0.0)	2 (4.4)	21 (46.7)	22 (48.9)	45 (100.0)
전체		18 (5.2)	38 (11.1)	51 (14.9)	119 (34.7)	117 (34.1)	343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0 (0.0)	5 (6.8)	10 (13.5)	33 (44.6)	26 (35.1)	74 (100.0)
	대전충청	4 (5.2)	4 (5.2)	16 (20.8)	26 (33.8)	27 (35.1)	77 (100.0)
	전라광주	0 (0.0)	4 (9.1)	4 (9.1)	14 (31.8)	22 (50.0)	44 (100.0)
	부산영남	0 (0.0)	0 (0.0)	4 (16.0)	8 (32.0)	13 (52.0)	25 (100.0)
	강원제주	14 (11.3)	25 (20.2)	17 (13.7)	38 (30.6)	30 (24.2)	124 (100.0)
전체		18 (5.2)	38 (11.0)	51 (14.8)	119 (34.6)	118 (34.3)	344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0 (0.0)	5 (6.8)	10 (13.5)	33 (44.6)	26 (35.1)	74 (100.0)
	비수도권	18 (6.7)	33 (12.2)	41 (15.2)	86 (31.9)	92 (34.1)	270 (100.0)
전체		18 (5.2)	38 (11.0)	51 (14.8)	119 (34.6)	118 (34.3)	344 (100.0)

주) *<0.1 / **<0.05 / ***<0.01

라)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대학원 강의 담당자가 주로 전임교수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그렇다”는 긍정적 의견은 85.7%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은 3.5%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대학원 강의가 전임 교수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차분석결과 계열별로 인문계열과 농학·의학계열이 전임교수 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경상계열과 기타 계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본 결과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전임교수 강의 담당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71>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27	36.9
대체로 그렇다	168	48.8
그저 그렇다	37	10.8
대체로 아니다	12	3.5
합계	344	100.0

<표 V-72>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 강의는 주로 전임교수가 담당한다				전 체
		매우 그렇다	대 체 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 체 로 아니다	
대 학 의 규 모	대규모	28 (32.6)	45 (52.3)	11 (12.8)	2 (2.3)	86 (100.0)
	중규모	87 (39.9)	106 (48.6)	17 (7.8)	8 (3.7)	218 (100.0)
	소규모	12 (30.0)	17 (42.5)	9 (22.5)	2 (5.0)	40 (100.0)
전체		127 (36.9)	168 (48.8)	37 (10.8)	12 (3.5)	344 (100.0)
대 학 원 전 공 계 열 ***	인문계열	22 (47.8)	24 (52.2)	0 (0.0)	0 (0.0)	46 (100.0)
	사회+경상	20 (25.3)	42 (53.2)	14 (17.7)	3 (3.8)	79 (100.0)
	이학+공학	59 (44.4)	62 (46.6)	11 (8.3)	1 (0.8)	133 (100.0)
	농학+의학	13 (32.5)	18 (45.0)	3 (7.5)	6 (15.0)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13 (28.9)	21 (46.7)	9 (20.0)	2 (4.4)	45 (100.0)
전체		127 (37.0)	167 (48.7)	37 (10.8)	12 (3.5)	343 (100.0)
대 학 원 소 재 지 역 ***	서울경기	14 (18.9)	37 (50.0)	18 (24.3)	5 (6.8)	74 (100.0)
	대전충청	27 (35.1)	45 (58.4)	5 (6.5)	0 (0.0)	77 (100.0)
	전라광주	12 (27.3)	24 (54.5)	2 (4.5)	6 (13.6)	44 (100.0)
	부산영남	12 (48.0)	10 (40.0)	2 (8.0)	1 (4.0)	25 (100.0)
	강원제주	62 (50.0)	52 (41.9)	10 (8.1)	0 (0.0)	124 (100.0)
전체		127 (36.9)	168 (48.8)	37 (10.8)	12 (3.5)	344 (100.0)
수 도 권 여 부 ***	수도권	14 (18.9)	37 (50.0)	18 (24.3)	5 (6.8)	74 (100.0)
	비수도권	113 (41.9)	131 (48.5)	19 (7.0)	7 (2.6)	270 (100.0)
전체		127 (36.9)	168 (48.8)	37 (10.8)	12 (3.5)	344 (100.0)

주) *<0.1 / **<0.05 / ***<0.01

마) 외국 대학원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외국 대학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에서는 “있다”는 의견이 9.1%에 불과한 반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은 75.1%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원이 외국 대학원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저조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외국 대학원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농학·의학계열과 이학·공학계열이 여타 계열에 비해 외국 대학원과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지역과 서울·경기지역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73> 외국 대학원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4	1.2
대체로 그렇다	27	7.9
그저 그렇다	54	15.8
대체로 아니다	108	31.7
전혀 아니다	148	43.4
합계	341	100.0

결측: 3명(0.9%)

<표 V-74> 외국 대학원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외국 대학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2 (2.3)	6 (7.0)	17 (19.8)	28 (32.6)	33 (38.4)	86 (100.0)
	중규모	2 (0.9)	18 (8.4)	32 (14.9)	64 (29.8)	99 (46.0)	215 (100.0)
	소규모	0 (0.0)	3 (7.5)	5 (12.5)	16 (40.0)	16 (40.0)	40 (100.0)
전체		4 (1.2)	27 (7.9)	54 (15.8)	108 (31.7)	148 (43.4)	341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인문계열	0 (0.0)	2 (4.3)	10 (21.7)	16 (34.8)	18 (39.1)	46 (100.0)
	사회+경상	1 (1.3)	5 (6.3)	15 (19.0)	25 (31.6)	33 (41.8)	79 (100.0)
	이학+공학	3 (2.3)	13 (9.8)	14 (10.6)	42 (31.8)	60 (45.5)	132 (100.0)
	농학+의학	0 (0.0)	5 (13.2)	5 (13.2)	11 (28.9)	17 (44.7)	38 (100.0)
	사범/예체능 /가정	0 (0.0)	2 (4.4)	10 (22.2)	14 (31.1)	19 (42.2)	45 (100.0)
전체		4 (1.2)	27 (7.9)	54 (15.9)	108 (31.8)	147 (43.2)	340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0 (0.0)	6 (8.2)	20 (27.4)	20 (27.4)	27 (37.0)	73 (100.0)
	대전충청	0 (0.0)	3 (3.9)	6 (7.8)	26 (33.8)	42 (54.5)	77 (100.0)
	전라광주	0 (0.0)	2 (4.8)	2 (4.8)	14 (33.3)	24 (57.1)	42 (100.0)
	부산영남	0 (0.0)	1 (4.0)	1 (4.0)	12 (48.0)	11 (44.0)	25 (100.0)
	강원제주	4 (3.2)	15 (12.1)	25 (20.2)	36 (29.0)	44 (35.5)	124 (100.0)
전체		4 (1.2)	27 (7.9)	54 (15.8)	108 (31.7)	148 (43.4)	341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0 (0.0)	6 (8.2)	20 (27.4)	20 (27.4)	27 (37.0)	73 (100.0)
	비수도권	4 (1.5)	21 (7.8)	34 (12.7)	88 (32.8)	121 (45.1)	268 (100.0)
전체		4 (1.2)	27 (7.9)	54 (15.8)	108 (31.7)	148 (43.4)	341 (100.0)

주) *<0.1 / **<0.05 / ***<0.01

바) 대학원생과 공동 연구

대학원생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68.0%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0.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많은 교수들이 대학원생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공동 연구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계열별로는 이학·공학계열과 농학·의학계열이 대학원생과의 공동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과 사회·경상계열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에 따라 공동 연구의 빈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75> 대학원생과의 공동 연구(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70	20.3
대체로 그렇다	164	47.7
그저 그렇다	74	21.5
대체로 아니다	29	8.4
전혀 아니다	7	2.0
합계	344	100.0

<표 V-76> 대학원생과의 공동 연구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생과 공동 연구를 한다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14 (16.3)	51 (59.3)	16 (18.6)	5 (5.8)	0 (0.0)	86 (100.0)
	중규모	52 (23.9)	100 (45.9)	39 (17.9)	21 (9.6)	6 (2.8)	218 (100.0)
	소규모	4 (10.0)	13 (32.5)	19 (47.5)	3 (7.5)	1 (2.5)	40 (100.0)
전체		70 (20.3)	164 (47.7)	74 (21.5)	29 (8.4)	7 (2.0)	34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3 (6.5)	16 (34.8)	11 (23.9)	12 (26.1)	4 (8.7)	46 (100.0)
	사회+경상	3 (3.8)	30 (38.0)	35 (44.3)	10 (12.7)	1 (1.3)	79 (100.0)
	이학+공학	46 (34.6)	76 (57.1)	9 (6.8)	2 (1.5)	0 (0.0)	133 (100.0)
	농학+의학	12 (30.0)	17 (42.5)	9 (22.5)	2 (5.0)	0 (0.0)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6 (13.3)	25 (55.6)	9 (20.0)	3 (6.7)	2 (4.4)	45 (100.0)
전체		70 (20.4)	164 (47.8)	73 (21.3)	29 (8.5)	7 (2.0)	343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5 (20.3)	34 (45.9)	18 (24.3)	5 (6.8)	2 (2.7)	74 (100.0)
	대전충청	10 (13.0)	30 (39.0)	21 (27.3)	13 (16.9)	3 (3.9)	77 (100.0)
	전라광주	12 (27.3)	18 (40.9)	8 (18.2)	4 (9.1)	2 (4.5)	44 (100.0)
	부산영남	4 (16.0)	11 (44.0)	10 (40.0)	0 (0.0)	0 (0.0)	25 (100.0)
	강원제주	29 (23.4)	71 (57.3)	17 (13.7)	7 (5.6)	0 (0.0)	124 (100.0)
전체		70 (20.3)	164 (47.7)	74 (21.5)	29 (8.4)	7 (2.0)	344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15 (20.3)	34 (45.9)	18 (24.3)	5 (6.8)	2 (2.7)	74 (100.0)
	비수도권	55 (20.4)	130 (48.1)	56 (20.7)	24 (8.9)	5 (1.9)	270 (100.0)
전체		70 (20.3)	164 (47.7)	74 (21.5)	29 (8.4)	7 (2.0)	344 (100.0)

주) *<0.1 / **<0.05 / ***<0.01

사) 담당교수의 강의 준비

교수가 대학원의 강의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이 76.3%인 반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응답은 5.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학원 강의를 위해 교수들은 전반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차분석결과 계열별로는 여타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학·의학계열의 교수들이 대학원 강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여타 지역에 비해 전라·광주지역의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강의 준비를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7> 담당교수의 강의 준비(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80	23.4
대체로 그렇다	181	52.9
그저 그렇다	66	19.3
대체로 아니다	11	3.2
전혀 아니다	4	1.2
합계	342	100.0

결측: 2명(0.6%)

<표 V-78> 담당교수의 강의 준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의 강의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26 (30.2)	42 (48.8)	16 (18.6)	0 (0.0)	2 (2.3)	86 (100.0)
	중규모	44 (20.4)	118 (54.6)	42 (19.4)	10 (4.6)	2 (0.9)	216 (100.0)
	소규모	10 (25.0)	21 (52.5)	8 (20.0)	1 (2.5)	0 (0.0)	40 (100.0)
전체		80 (23.4)	181 (52.9)	66 (19.3)	11 (3.2)	4 (1.2)	342 (100.0)
대학원 전공계열 ***	인문계열	17 (37.0)	22 (47.8)	6 (13.0)	1 (2.2)	0 (0.0)	46 (100.0)
	사회+경상	16 (20.8)	47 (61.0)	11 (14.3)	1 (1.3)	2 (2.6)	77 (100.0)
	이학+공학	32 (24.1)	74 (55.6)	21 (15.8)	6 (4.5)	0 (0.0)	133 (100.0)
	농학+의학	2 (5.0)	19 (47.5)	16 (40.0)	1 (2.5)	2 (5.0)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13 (28.9)	18 (40.0)	12 (26.7)	2 (4.4)	0 (0.0)	45 (100.0)
전체		80 (23.5)	180 (52.8)	66 (19.4)	11 (3.2)	4 (1.2)	341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23 (31.1)	30 (40.5)	18 (24.3)	1 (1.4)	2 (2.7)	74 (100.0)
	대전충청	17 (22.1)	48 (62.3)	10 (13.0)	2 (2.6)	0 (0.0)	77 (100.0)
	전라광주	6 (13.6)	20 (45.5)	12 (27.3)	4 (9.1)	2 (4.5)	44 (100.0)
	부산영남	2 (8.0)	17 (68.0)	5 (20.0)	1 (4.0)	0 (0.0)	25 (100.0)
	강원제주	32 (26.2)	66 (54.1)	21 (17.2)	3 (2.5)	0 (0.0)	122 (100.0)
전체		80 (23.4)	181 (52.9)	66 (19.3)	11 (3.2)	4 (1.2)	342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23 (31.1)	30 (40.5)	18 (24.3)	1 (1.4)	2 (2.7)	74 (100.0)
	비수도권	57 (21.3)	151 (56.3)	48 (17.9)	10 (3.7)	2 (0.7)	268 (100.0)
전체		80 (23.4)	181 (52.9)	66 (19.3)	11 (3.2)	4 (1.2)	342 (100.0)

주) *<0.1 / **<0.05 / ***<0.01

아) 대학원생의 수업 준비

교수들에게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이 수업 준비를 얼마나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충분히 준비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54.1%인 반면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의견은 11.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은 34.9%로 나타나 대학원생이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교수가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가 큰 대학의 교수일수록 대학원생들이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이학·공학계열의 긍정적 의견이 높은 반면 농학·의학계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전라·광주지역과 부산·영남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대학원생이 충분히 수업 준비를 한다고 보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V-79> 대학원생의 수업 준비(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35	10.2
대체로 그렇다	151	43.9
그저 그렇다	120	34.9
대체로 아니다	34	9.9
전혀 아니다	4	1.2
합계	344	100.0

<표 V-80> 대학원생의 수업 준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생들이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5 (5.8)	46 (53.5)	28 (32.6)	6 (7.0)	1 (1.2)	86 (100.0)
	중규모	27 (12.4)	89 (40.8)	78 (35.8)	21 (9.6)	3 (1.4)	218 (100.0)
	소규모	3 (7.5)	16 (40.0)	14 (35.0)	7 (17.5)	0 (0.0)	40 (100.0)
전체		35 (10.2)	151 (43.9)	120 (34.9)	34 (9.9)	4 (1.2)	344 (100.0)
대학원 전공계열 ***	인문계열	6 (13.0)	21 (45.7)	11 (23.9)	6 (13.0)	2 (4.3)	46 (100.0)
	사회+경상	5 (6.3)	30 (38.0)	27 (34.2)	15 (19.0)	2 (2.5)	79 (100.0)
	이학+공학	16 (12.0)	72 (54.1)	37 (27.8)	8 (6.0)	0 (0.0)	133 (100.0)
	농학+의학	1 (2.5)	13 (32.5)	24 (60.0)	2 (5.0)	0 (0.0)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7 (15.6)	14 (31.1)	21 (46.7)	3 (6.7)	0 (0.0)	45 (100.0)
전체		35 (10.2)	150 (43.7)	120 (35.0)	34 (9.9)	4 (1.2)	343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6 (8.1)	35 (47.3)	22 (29.7)	11 (14.9)	0 (0.0)	74 (100.0)
	대전충청	10 (13.0)	36 (46.8)	19 (24.7)	9 (11.7)	3 (3.9)	77 (100.0)
	전라광주	6 (13.6)	10 (22.7)	26 (59.1)	2 (4.5)	0 (0.0)	44 (100.0)
	부산영남	1 (4.0)	7 (28.0)	15 (60.0)	1 (4.0)	1 (4.0)	25 (100.0)
	강원제주	12 (9.7)	63 (50.8)	38 (30.6)	11 (8.9)	0 (0.0)	124 (100.0)
전체		35 (10.2)	151 (43.9)	120 (34.9)	34 (9.9)	4 (1.2)	344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6 (8.1)	35 (47.3)	22 (29.7)	11 (14.9)	0 (0.0)	74 (100.0)
	비수도권	29 (10.7)	116 (43.0)	98 (36.3)	23 (8.5)	4 (1.5)	270 (100.0)
전체		35 (10.2)	151 (43.9)	120 (34.9)	34 (9.9)	4 (1.2)	344 (100.0)

주) *<0.1 / **<0.05 / ***<0.01

자) 대학원생의 의견 반영

대학원 개설과목은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은 40.6%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29.1%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은 30.3%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원에서 학생들의 필요에 의한 강의보다는 교수 중심으로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학생 중심으로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기타 계열과 농학·의학계열이 여타 계열에 비해 학생 중심의 교과목 운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1> 대학원생의 의견 반영(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9	5.6
대체로 그렇다	119	35.0
그저 그렇다	103	30.3
대체로 아니다	77	22.6
전혀 아니다	22	6.5
합계	340	100.0

결측: 4명(1.2%)

<표 V-82> 대학원생의 의견 반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 개설과목은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2 (2.3)	30 (34.9)	26 (30.2)	23 (26.7)	5 (5.8)	86 (100.0)
	중규모	15 (7.0)	70 (32.7)	65 (30.4)	47 (22.0)	17 (7.9)	214 (100.0)
	소규모	2 (5.0)	19 (47.5)	12 (30.0)	7 (17.5)	0 (0.0)	40 (100.0)
전체		19 (5.6)	119 (35.0)	103 (30.3)	77 (22.6)	22 (6.5)	340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인문계열	3 (6.5)	15 (32.6)	13 (28.3)	14 (30.4)	1 (2.2)	46 (100.0)
	사회+경상	5 (6.3)	31 (39.2)	23 (29.1)	15 (19.0)	5 (6.3)	79 (100.0)
	이학+공학	6 (4.7)	54 (41.9)	39 (30.2)	24 (18.6)	6 (4.7)	129 (100.0)
	농학+의학	3 (7.5)	10 (25.0)	13 (32.5)	11 (27.5)	3 (7.5)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2 (4.4)	8 (17.8)	15 (33.3)	13 (28.9)	7 (15.6)	45 (100.0)
전체		19 (5.6)	118 (34.8)	103 (30.4)	77 (22.7)	22 (6.5)	339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7 (9.5)	23 (31.1)	22 (29.7)	18 (24.3)	4 (5.4)	74 (100.0)
	대전충청	2 (2.6)	22 (28.6)	26 (33.8)	22 (28.6)	5 (6.5)	77 (100.0)
	전라광주	3 (7.1)	13 (31.0)	14 (33.3)	6 (14.3)	6 (14.3)	42 (100.0)
	부산영남	0 (0.0)	7 (29.2)	8 (33.3)	5 (20.8)	4 (16.7)	24 (100.0)
	강원제주	7 (5.7)	54 (43.9)	33 (26.8)	26 (21.1)	3 (2.4)	123 (100.0)
전체		19 (5.6)	119 (35.0)	103 (30.3)	77 (22.6)	22 (6.5)	340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7 (9.5)	23 (31.1)	22 (29.7)	18 (24.3)	4 (5.4)	74 (100.0)
	비수도권	12 (4.5)	96 (36.1)	81 (30.5)	59 (22.2)	18 (6.8)	266 (100.0)
전체		19 (5.6)	119 (35.0)	103 (30.3)	77 (22.6)	22 (6.5)	340 (100.0)

주) *<0.1 / **<0.05 / ***<0.01

차) 인접학과의 수업 권장

교수과목 또는 전공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확장과 사고영역의 확대를 위해 인접 학과의 전공 수업을 수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권장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45.0%인 반면 “권장하지 않는다” 부정적 응답도 29.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은 25.6%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원의 약 절반 이상이 인접학과의 강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교차분석결과 계열별로는 사회·경상계열이 인접학과의 강의를 수강하도록 권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은 인접학과의 강의 수강 권장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 가장 많이 인접학과 수업을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영남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83> 인접학과의 수업 권장(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20	5.8
대체로 그렇다	135	39.2
그저 그렇다	88	25.6
대체로 아니다	81	23.5
전혀 아니다	20	5.8
합계	344	100.0

<표 V-84> 인접 학과의 수업 권장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인접 학과의 전공 수업을 수강하도록 권장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2 (2.3)	38 (44.2)	25 (29.1)	16 (18.6)	5 (5.8)	86 (100.0)
	중규모	14 (6.4)	84 (38.5)	50 (22.9)	56 (25.7)	14 (6.4)	218 (100.0)
	소규모	4 (10.0)	13 (32.5)	13 (32.5)	9 (22.5)	1 (2.5)	40 (100.0)
전체		20 (5.8)	135 (39.2)	88 (25.6)	81 (23.5)	20 (5.8)	34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3 (6.5)	12 (26.1)	15 (32.6)	13 (28.3)	3 (6.5)	46 (100.0)
	사회+경상	6 (7.6)	37 (46.8)	25 (31.6)	8 (10.1)	3 (3.8)	79 (100.0)
	이학+공학	10 (7.5)	52 (39.1)	25 (18.8)	39 (29.3)	7 (5.3)	133 (100.0)
	농학+의학	1 (2.5)	17 (42.5)	13 (32.5)	7 (17.5)	2 (5.0)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0 (0.0)	17 (37.8)	9 (20.0)	14 (31.1)	5 (11.1)	45 (100.0)
전체		20 (5.8)	135 (39.4)	87 (25.4)	81 (23.6)	20 (5.8)	343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6 (8.1)	30 (40.5)	18 (24.3)	17 (23.0)	3 (4.1)	74 (100.0)
	대전충청	4 (5.2)	23 (29.9)	21 (27.3)	22 (28.6)	7 (9.1)	77 (100.0)
	전라광주	0 (0.0)	16 (36.4)	6 (13.6)	16 (36.4)	6 (13.6)	44 (100.0)
	부산영남	1 (4.0)	6 (24.0)	12 (48.0)	3 (12.0)	3 (12.0)	25 (100.0)
	강원제주	9 (7.3)	60 (48.4)	31 (25.0)	23 (18.5)	1 (0.8)	124 (100.0)
전체		20 (5.8)	135 (39.2)	88 (25.6)	81 (23.5)	20 (5.8)	344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6 (8.1)	30 (40.5)	18 (24.3)	17 (23.0)	3 (4.1)	74 (100.0)
	비수도권	14 (5.2)	105 (38.9)	70 (25.9)	64 (23.7)	17 (6.3)	270 (100.0)
전체		20 (5.8)	135 (39.2)	88 (25.6)	81 (23.5)	20 (5.8)	344 (100.0)

주) *<0.1 / **<0.05 / ***<0.01

카) 과제물에 대한 Feed-Back

대학원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 심층적인 Feed-Back을 하고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이 55.3%인 반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10.2%에 불과하였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은 34.6%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의 약 절반 이상이 대학원생이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 심층적인 Feed-Back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과제물에 대한 심층적인 Feed-Back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여타 계열에 비해 농학·의학계열이 심층적인 Feed-Back을 하는 경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5> 과제물에 대한 Feed-Back(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25	7.3
대체로 그렇다	165	48.0
그저 그렇다	119	34.6
대체로 아니다	31	9.0
전혀 아니다	4	1.2
합계	444	100.0

<표 V-86> 과제물에 대한 Feed-Back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제출된 과제물에 대해 심층적인 Feed-Back을 하고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 학 의 규모 *	대규모	5 (5.8)	47 (54.7)	27 (31.4)	7 (8.1)	0 (0.0)	86 (100.0)
	중규모	19 (8.7)	102 (46.8)	70 (32.1)	23 (10.6)	4 (1.8)	218 (100.0)
	소규모	1 (2.5)	16 (40.0)	22 (55.0)	1 (2.5)	0 (0.0)	40 (100.0)
전체		25 (7.3)	165 (48.0)	119 (34.6)	31 (9.0)	4 (1.2)	34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9 (19.6)	16 (34.8)	17 (37.0)	4 (8.7)	0 (0.0)	46 (100.0)
	사회+경상	2 (2.5)	38 (48.1)	37 (46.8)	2 (2.5)	0 (0.0)	79 (100.0)
	이학+공학	9 (6.8)	70 (52.6)	37 (27.8)	13 (9.8)	4 (3.0)	133 (100.0)
	농학+의학	0 (0.0)	11 (27.5)	21 (52.5)	8 (20.0)	0 (0.0)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5 (11.1)	29 (64.4)	7 (15.6)	4 (8.9)	0 (0.0)	45 (100.0)
전체		25 (7.3)	164 (47.8)	119 (34.7)	31 (9.0)	4 (1.2)	343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7 (9.5)	35 (47.3)	26 (35.1)	6 (8.1)	0 (0.0)	74 (100.0)
	대전충청	8 (10.4)	29 (37.7)	33 (42.9)	7 (9.1)	0 (0.0)	77 (100.0)
	전라광주	0 (0.0)	30 (68.2)	10 (22.7)	2 (4.5)	2 (4.5)	44 (100.0)
	부산영남	1 (4.0)	7 (28.0)	12 (48.0)	5 (20.0)	0 (0.0)	25 (100.0)
	강원제주	9 (7.3)	64 (51.6)	38 (30.6)	11 (8.9)	2 (1.6)	124 (100.0)
전체		25 (7.3)	165 (48.0)	119 (34.6)	31 (9.0)	4 (1.2)	344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7 (9.5)	35 (47.3)	26 (35.1)	6 (8.1)	0 (0.0)	74 (100.0)
	비수도권	18 (6.7)	130 (48.1)	93 (34.4)	25 (9.3)	4 (1.5)	270 (100.0)
전체		25 (7.3)	165 (48.0)	119 (34.6)	31 (9.0)	4 (1.2)	344 (100.0)

주) *<0.1 / **<0.05 / ***<0.01

5) 대학원의 교육여건에 관한 사항

가) 대학원 전용 연구 공간의 확보

대학원생을 위한 전용 연구 공간의 확보수준을 설문한 결과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은 39.0%인 반면 “충분치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의견도 38.5%로 나타났다. 교차분석결과 대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대학원생을 위한 전용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이학·공학계열이 상대적으로 전용 공간 확보 수준이 여타 계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부산·영남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전용 공간 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본 결과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V-87> 대학원 전용 연구 공간의 확보(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34	10.0
대체로 그렇다	99	29.0
그저 그렇다	77	22.6
대체로 아니다	81	23.8
전혀 아니다	50	14.7
합계	341	100.0

결측: 3명(0.9%)

<표 V-88> 대학원 전용 연구 공간의 확보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생을 위한 전용 연구 공간이 충분하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8 (9.5)	26 (31.0)	21 (25.0)	14 (16.7)	15 (17.9)	84 (100.0)
	중규모	25 (11.5)	62 (28.6)	46 (21.2)	59 (27.2)	25 (11.5)	217 (100.0)
	소규모	1 (2.5)	11 (27.5)	10 (25.0)	8 (20.0)	10 (25.0)	40 (100.0)
전체		34 (10.0)	99 (29.0)	77 (22.6)	81 (23.8)	50 (14.7)	341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8 (17.4)	7 (15.2)	12 (26.1)	9 (19.6)	10 (21.7)	46 (100.0)
	사회+경상	2 (2.5)	22 (27.8)	19 (24.1)	12 (15.2)	24 (30.4)	79 (100.0)
	이학+공학	17 (12.9)	51 (38.6)	24 (18.2)	34 (25.8)	6 (4.5)	132 (100.0)
	농학+의학	1 (2.5)	7 (17.5)	13 (32.5)	13 (32.5)	6 (15.0)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6 (14.0)	11 (25.6)	9 (20.9)	13 (30.2)	4 (9.3)	43 (100.0)
전체		34 (10.0)	98 (28.8)	77 (22.6)	81 (23.8)	50 (14.7)	340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8 (11.1)	13 (18.1)	24 (33.3)	7 (9.7)	20 (27.8)	72 (100.0)
	대전충청	7 (9.1)	20 (26.0)	12 (15.6)	20 (26.0)	18 (23.4)	77 (100.0)
	전라광주	2 (4.5)	12 (27.3)	10 (22.7)	18 (40.9)	2 (4.5)	44 (100.0)
	부산영남	2 (8.3)	2 (8.3)	7 (29.2)	11 (45.8)	2 (8.3)	24 (100.0)
	강원제주	15 (12.1)	52 (41.9)	24 (19.4)	25 (20.2)	8 (6.5)	124 (100.0)
전체		34 (10.0)	99 (29.0)	77 (22.6)	81 (23.8)	50 (14.7)	341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8 (11.1)	13 (18.1)	24 (33.3)	7 (9.7)	20 (27.8)	72 (100.0)
	비수도권	26 (9.7)	86 (32.0)	53 (19.7)	74 (27.5)	30 (11.2)	269 (100.0)
전체		34 (10.0)	99 (29.0)	77 (22.6)	81 (23.8)	50 (14.7)	341 (100.0)

주) *<0.1 / **<0.05 / ***<0.01

나) 대학원 강의평가제도의 도입 여부

대학원에서도 대학원 강의에 대한 강의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55.4%인 반면 “도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5.3%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은 19.2%였다. 따라서 아직 많은 대학원에서 강의평가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가 중규모인 경우가 강의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영남지역과 전라·광주지역이 강의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이 강의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89> 대학원 강의평가제도의 도입 여부(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83	24.2
대체로 그렇다	107	31.2
그저 그렇다	66	19.2
대체로 아니다	45	13.1
전혀 아니다	42	12.2
합계	343	100.0

결측: 1명(0.3%)

<표 V -90> 대학원 강의평가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은 대학원 강의에도 강의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21 (24.4)	39 (45.3)	10 (11.6)	7 (8.1)	9 (10.5)	86 (100.0)
	중규모	50 (22.9)	52 (23.9)	47 (21.6)	36 (16.5)	33 (15.1)	218 (100.0)
	소규모	12 (30.8)	16 (41.0)	9 (23.1)	2 (5.1)	0 (0.0)	39 (100.0)
전체		83 (24.2)	107 (31.2)	66 (19.2)	45 (13.1)	42 (12.2)	343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17 (37.0)	12 (26.1)	7 (15.2)	6 (13.0)	4 (8.7)	46 (100.0)
	사회+경상	19 (24.1)	29 (36.7)	17 (21.5)	8 (10.1)	6 (7.6)	79 (100.0)
	이학+공학	31 (23.3)	34 (25.6)	22 (16.5)	24 (18.0)	22 (16.5)	133 (100.0)
	농학+의학	7 (17.9)	10 (25.6)	10 (25.6)	5 (12.8)	7 (17.9)	39 (100.0)
	사범/예체능 /가정	9 (20.0)	21 (46.7)	10 (22.2)	2 (4.4)	3 (6.7)	45 (100.0)
전체		83 (24.3)	106 (31.0)	66 (19.3)	45 (13.2)	42 (12.3)	342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24 (32.4)	23 (31.1)	16 (21.6)	7 (9.5)	4 (5.4)	74 (100.0)
	대전충청	24 (31.6)	29 (38.2)	15 (19.7)	7 (9.2)	1 (1.3)	76 (100.0)
	전라광주	2 (4.5)	10 (22.7)	10 (22.7)	8 (18.2)	14 (31.8)	44 (100.0)
	부산영남	2 (8.0)	3 (12.0)	6 (24.0)	7 (28.0)	7 (28.0)	25 (100.0)
	강원제주	31 (25.0)	42 (33.9)	19 (15.3)	16 (12.9)	16 (12.9)	124 (100.0)
전체		83 (24.2)	107 (31.2)	66 (19.2)	45 (13.1)	42 (12.2)	343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24 (32.4)	23 (31.1)	16 (21.6)	7 (9.5)	4 (5.4)	74 (100.0)
	비수도권	59 (21.9)	84 (31.2)	50 (18.6)	38 (14.1)	38 (14.1)	269 (100.0)
전체		83 (24.2)	107 (31.2)	66 (19.2)	45 (13.1)	42 (12.2)	343 (100.0)

주) *<0.1 / **<0.05 / ***<0.01

다) 각종 기자재의 확보

대학원 강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응답이 38.3%인 반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28.0%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33.6%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원 강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확보에 대해 약 60% 이상의 교수들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에 있어 중규모 대학이 기자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사회·경상계열과 농학·의학계열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여타 계열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부산·영남지역과 전라·광주지역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91> 각종 기자재의 확보(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41	12.0
대체로 그렇다	90	26.3
그저 그렇다	115	33.6
대체로 아니다	60	17.5
전혀 아니다	36	10.5
합계	342	100.0

결측: 2명(0.6%)

<표 V-92> 각종 기자재의 확보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 강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9 (10.5)	37 (43.0)	22 (25.6)	13 (15.1)	5 (5.8)	86 (100.0)
	중규모	27 (12.5)	41 (19.0)	80 (37.0)	45 (20.8)	23 (10.6)	216 (100.0)
	소규모	5 (12.5)	12 (30.0)	13 (32.5)	2 (5.0)	8 (20.0)	40 (100.0)
전체		41 (12.0)	90 (26.3)	115 (33.6)	60 (17.5)	36 (10.5)	342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인문계열	5 (10.9)	15 (32.6)	10 (21.7)	10 (21.7)	6 (13.0)	46 (100.0)
	사회+경상	6 (7.6)	19 (24.1)	34 (43.0)	13 (16.5)	7 (8.9)	79 (100.0)
	이학+공학	23 (17.6)	33 (25.2)	43 (32.8)	18 (13.7)	14 (10.7)	131 (100.0)
	농학+의학	3 (7.5)	10 (25.0)	15 (37.5)	7 (17.5)	5 (12.5)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4 (8.9)	13 (28.9)	12 (26.7)	12 (26.7)	4 (8.9)	45 (100.0)
전체		41 (12.0)	90 (26.4)	114 (33.4)	60 (17.6)	36 (10.6)	341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1 (14.9)	24 (32.4)	22 (29.7)	13 (17.6)	4 (5.4)	74 (100.0)
	대전충청	4 (5.2)	22 (28.6)	26 (33.8)	14 (18.2)	11 (14.3)	77 (100.0)
	전라광주	0 (0.0)	10 (23.8)	14 (33.3)	14 (33.3)	4 (9.5)	42 (100.0)
	부산영남	0 (0.0)	4 (16.0)	9 (36.0)	6 (24.0)	6 (24.0)	25 (100.0)
	강원제주	26 (21.0)	30 (24.2)	44 (35.5)	13 (10.5)	11 (8.9)	124 (100.0)
전체		41 (12.0)	90 (26.3)	115 (33.6)	60 (17.5)	36 (10.5)	342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 (14.9)	24 (32.4)	22 (29.7)	13 (17.6)	4 (5.4)	74 (100.0)
	비수도권	30 (11.2)	66 (24.6)	93 (34.7)	47 (17.5)	32 (11.9)	268 (100.0)
전체		41 (12.0)	90 (26.3)	115 (33.6)	60 (17.5)	36 (10.5)	342 (100.0)

주) *<0.1 / **<0.05 / ***<0.01

라) 장학금 제도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은 34.6%인 반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33.1%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32.3%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원 박사과정에 대한 장학금 제도의 여건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차분석결과 계열별로 농학·의학계열이 장학금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여타 계열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라·광주지역과 부산·영남지역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V-93> 장학금 제도(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37	10.8
대체로 그렇다	82	23.8
그저 그렇다	111	32.3
대체로 아니다	84	24.4
전혀 아니다	30	8.7
합계	344	100.0

<표 V-94> 장학금 제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3 (3.5)	22 (25.6)	32 (37.2)	21 (24.4)	8 (9.3)	86 (100.0)
	중규모	30 (13.8)	52 (23.9)	62 (28.4)	56 (25.7)	18 (8.3)	218 (100.0)
	소규모	4 (10.0)	8 (20.0)	17 (42.5)	7 (17.5)	4 (10.0)	40 (100.0)
전체		37 (10.8)	82 (23.8)	111 (32.3)	84 (24.4)	30 (8.7)	34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4 (8.7)	15 (32.6)	14 (30.4)	9 (19.6)	4 (8.7)	46 (100.0)
	사회+경상	5 (6.3)	21 (26.6)	23 (29.1)	19 (24.1)	11 (13.9)	79 (100.0)
	이학+공학	26 (19.5)	27 (20.3)	43 (32.3)	33 (24.8)	4 (3.0)	133 (100.0)
	농학+의학	0 (0.0)	7 (17.5)	12 (30.0)	14 (35.0)	7 (17.5)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2 (4.4)	12 (26.7)	18 (40.0)	9 (20.0)	4 (8.9)	45 (100.0)
전체		37 (10.8)	82 (23.9)	110 (32.1)	84 (24.5)	30 (8.7)	343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1 (14.9)	19 (25.7)	21 (28.4)	14 (18.9)	9 (12.2)	74 (100.0)
	대전충청	2 (2.6)	15 (19.5)	27 (35.1)	23 (29.9)	10 (13.0)	77 (100.0)
	전라광주	0 (0.0)	4 (9.1)	12 (27.3)	24 (54.5)	4 (9.1)	44 (100.0)
	부산영남	0 (0.0)	4 (16.0)	11 (44.0)	5 (20.0)	5 (20.0)	25 (100.0)
	강원제주	24 (19.4)	40 (32.3)	40 (32.3)	18 (14.5)	2 (1.6)	124 (100.0)
전체		37 (10.8)	82 (23.8)	111 (32.3)	84 (24.4)	30 (8.7)	344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 (14.9)	19 (25.7)	21 (28.4)	14 (18.9)	9 (12.2)	74 (100.0)
	비수도권	26 (9.6)	63 (23.3)	90 (33.3)	70 (25.9)	21 (7.8)	270 (100.0)
전체		37 (10.8)	82 (23.8)	111 (32.3)	84 (24.4)	30 (8.7)	344 (100.0)

주) *<0.1 / **<0.05 / ***<0.01

마) 기숙사 시설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시설에 대해 설문한 결과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응답은 27.9%에 불과한 반면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4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25.0%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시설은 아직 부족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교차분석결과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기숙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전라·광주지역이 기숙시설의 확보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0%일 정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서울·경기 지역도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낮았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95> 기숙사 시설(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33	9.6
대체로 그렇다	63	18.3
그저 그렇다	86	25.0
대체로 아니다	82	23.8
전혀 아니다	80	23.3
합계	344	100.0

<표 V-96> 기숙사 시설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6 (7.0)	27 (31.4)	24 (27.9)	16 (18.6)	13 (15.1)	86 (100.0)
	중규모	25 (11.5)	33 (15.1)	49 (22.5)	54 (24.8)	57 (26.1)	218 (100.0)
	소규모	2 (5.0)	3 (7.5)	13 (32.5)	12 (30.0)	10 (25.0)	40 (100.0)
전체		33 (9.6)	63 (18.3)	86 (25.0)	82 (23.8)	80 (23.3)	34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인문계열	6 (13.0)	11 (23.9)	9 (19.6)	13 (28.3)	7 (15.2)	46 (100.0)
	사회+경상	2 (2.5)	12 (15.2)	26 (32.9)	20 (25.3)	19 (24.1)	79 (100.0)
	이학+공학	20 (15.0)	26 (19.5)	30 (22.6)	32 (24.1)	25 (18.8)	133 (100.0)
	농학+의학	2 (5.0)	7 (17.5)	9 (22.5)	7 (17.5)	15 (37.5)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3 (6.7)	7 (15.6)	11 (24.4)	10 (22.2)	14 (31.1)	45 (100.0)
전체		33 (9.6)	63 (18.4)	85 (24.8)	82 (23.9)	80 (23.3)	343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 (1.4)	7 (9.5)	21 (28.4)	22 (29.7)	23 (31.1)	74 (100.0)
	대전충청	9 (11.7)	17 (22.1)	12 (15.6)	18 (23.4)	21 (27.3)	77 (100.0)
	전라광주	0 (0.0)	0 (0.0)	8 (18.2)	12 (27.3)	24 (54.5)	44 (100.0)
	부산영남	0 (0.0)	5 (20.0)	8 (32.0)	3 (12.0)	9 (36.0)	25 (100.0)
	강원제주	23 (18.5)	34 (27.4)	37 (29.8)	27 (21.8)	3 (2.4)	124 (100.0)
전체		33 (9.6)	63 (18.3)	86 (25.0)	82 (23.8)	80 (23.3)	344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1 (1.4)	7 (9.5)	21 (28.4)	22 (29.7)	23 (31.1)	74 (100.0)
	비수도권	32 (11.9)	56 (20.7)	65 (24.1)	60 (22.2)	57 (21.1)	270 (100.0)
전체		33 (9.6)	63 (18.3)	86 (25.0)	82 (23.8)	80 (23.3)	344 (100.0)

주) *<0.1 / **<0.05 / ***<0.01

바)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

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자의 취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취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42.7%인 반면 “잘 안된다”는 응답은 23.3%인 것을 나타냈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34.0%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 60%정도의 교수들이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졸업생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계열별로는 이학·공학계열과 농학·의학계열이 졸업생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높게 보이고 있는 반면 인문계열은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여타 지역에 비해 부산·영남지역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본 결과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97>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43	12.5
대체로 그렇다	104	30.2
그저 그렇다	117	34.0
대체로 아니다	68	19.8
전혀 아니다	12	3.5
합계	344	100.0

<표 V-98>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자의 취업이 잘 되고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13 (15.1)	33 (38.4)	23 (26.7)	14 (16.3)	3 (3.5)	86 (100.0)
	중규모	29 (13.3)	60 (27.5)	82 (37.6)	41 (18.8)	6 (2.8)	218 (100.0)
	소규모	1 (2.5)	11 (27.5)	12 (30.0)	13 (32.5)	3 (7.5)	40 (100.0)
전체		43 (12.5)	104 (30.2)	117 (34.0)	68 (19.8)	12 (3.5)	34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6 (13.0)	4 (8.7)	17 (37.0)	14 (30.4)	5 (10.9)	46 (100.0)
	사회+경상	6 (7.6)	22 (27.8)	37 (46.8)	11 (13.9)	3 (3.8)	79 (100.0)
	이학+공학	27 (20.3)	47 (35.3)	35 (26.3)	23 (17.3)	1 (0.8)	133 (100.0)
	농학+의학	2 (5.0)	17 (42.5)	12 (30.0)	6 (15.0)	3 (7.5)	40 (100.0)
	사범/예체능/가정	2 (4.4)	14 (31.1)	16 (35.6)	13 (28.9)	0 (0.0)	45 (100.0)
전체		43 (12.5)	104 (30.3)	117 (34.1)	67 (19.5)	12 (3.5)	343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3 (17.6)	25 (33.8)	21 (28.4)	13 (17.6)	2 (2.7)	74 (100.0)
	대전충청	4 (5.2)	25 (32.5)	25 (32.5)	17 (22.1)	6 (7.8)	77 (100.0)
	전라광주	4 (9.1)	12 (27.3)	14 (31.8)	12 (27.3)	2 (4.5)	44 (100.0)
	부산영남	1 (4.0)	6 (24.0)	9 (36.0)	7 (28.0)	2 (8.0)	25 (100.0)
	강원제주	21 (16.9)	36 (29.0)	48 (38.7)	19 (15.3)	0 (0.0)	124 (100.0)
전체		43 (12.5)	104 (30.2)	117 (34.0)	68 (19.8)	12 (3.5)	344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13 (17.6)	25 (33.8)	21 (28.4)	13 (17.6)	2 (2.7)	74 (100.0)
	비수도권	30 (11.1)	79 (29.3)	96 (35.6)	55 (20.4)	10 (3.7)	270 (100.0)
전체		43 (12.5)	104 (30.2)	117 (34.0)	68 (19.8)	12 (3.5)	344 (100.0)

주) *<0.1 / **<0.05 / ***<0.01

사) 대학원 행정서비스체제에 대한 만족도

대학원의 행정서비스체제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32.0%인 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2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41.0%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원 행정서비스체제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면에서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응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대학원 행정서비스체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여타 지역에 비해 부산·영남지역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9> 대학원 행정서비스체제에 대한 만족도(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21	6.1
대체로 그렇다	89	25.9
그저 그렇다	141	41.0
대체로 아니다	63	18.3
전혀 아니다	30	8.7
합계	344	100.0

<표 V-100> 대학원 행정서비스체제에 대한 만족도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대학원의 행정서비스체제에 만족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0 (.0)	28 (32.6)	34 (39.5)	19 (22.1)	5 (5.8)	86 (100.0)
	중규모	19 (8.7)	55 (25.2)	85 (39.0)	36 (16.5)	23 (10.6)	218 (100.0)
	소규모	2 (5.0)	6 (15.0)	22 (55.0)	8 (20.0)	2 (5.0)	40 (100.0)
전체		21 (6.1)	89 (25.9)	141 (41.0)	63 (18.3)	30 (8.7)	344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3 (6.5)	10 (21.7)	23 (50.0)	5 (10.9)	5 (10.9)	46 (100.0)
	사회+경상	2 (2.5)	19 (24.1)	34 (43.0)	15 (19.0)	9 (11.4)	79 (100.0)
	이학+공학	16 (12.0)	32 (24.1)	53 (39.8)	23 (17.3)	9 (6.8)	133 (100.0)
	농학+의학	0 (.0)	14 (35.0)	16 (40.0)	9 (22.5)	1 (2.5)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0 (.0)	14 (31.1)	14 (31.1)	11 (24.4)	6 (13.3)	45 (100.0)
전체		21 (6.1)	89 (25.9)	140 (40.8)	63 (18.4)	30 (8.7)	343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경기	4 (5.4)	22 (29.7)	25 (33.8)	14 (18.9)	9 (12.2)	74 (100.0)
	대전충청	3 (3.9)	16 (20.8)	34 (44.2)	17 (22.1)	7 (9.1)	77 (100.0)
	전라광주	2 (4.5)	14 (31.8)	18 (40.9)	6 (13.6)	4 (9.1)	44 (100.0)
	부산영남	0 (.0)	2 (8.0)	12 (48.0)	9 (36.0)	2 (8.0)	25 (100.0)
	강원제주	12 (9.7)	35 (28.2)	52 (41.9)	17 (13.7)	8 (6.5)	124 (100.0)
전체		21 (6.1)	89 (25.9)	141 (41.0)	63 (18.3)	30 (8.7)	344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4 (5.4)	22 (29.7)	25 (33.8)	14 (18.9)	9 (12.2)	74 (100.0)
	비수도권	17 (6.3)	67 (24.8)	116 (43.0)	49 (18.1)	21 (7.8)	270 (100.0)
전체		21 (6.1)	89 (25.9)	141 (41.0)	63 (18.3)	30 (8.7)	344 (100.0)

주) *<0.1 / **<0.05 / ***<0.01

6)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기준에 대한 의견

가) 전임교원의 수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전임교원이 7명 이상 되어야 하는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적합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57.6%인 반면 “적합치 않다”는 부정적 의견은 “20.7%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은 21.6%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전임교원이 7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교수들은 적합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현행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계열별로는 이학·공학계열과 사회·경상계열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01> 학위논문의 공시(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적합	61	18.0
적합한 편	134	39.6
그저 그렇다	73	21.6
적합치 않은 편	54	16.0
전혀 적합치 않음	16	4.7
합계	338	100.0

결측: 6명(1.7%)

<표 V-102> 학위논문의 공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교수집단)

구 분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전임교원 확보가 7명이상 되어야 하는 기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적합	적합한 편	그저 그렇다	적합치 않은 편	전혀 적합치 않음	
대학의 규모 ***	대규모	18 (20.9)	41 (47.7)	11 (12.8)	14 (16.3)	2 (2.3)	86 (100.0)
	중규모	40 (18.9)	82 (38.7)	53 (25.0)	26 (12.3)	11 (5.2)	212 (100.0)
	소규모	3 (7.5)	11 (27.5)	9 (22.5)	14 (35.0)	3 (7.5)	40 (100.0)
전체		61 (18.0)	134 (39.6)	73 (21.6)	54 (16.0)	16 (4.7)	338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인문계열	9 (20.0)	17 (37.8)	13 (28.9)	4 (8.9)	2 (4.4)	45 (100.0)
	사회+경상	8 (10.5)	30 (39.5)	18 (23.7)	15 (19.7)	5 (6.6)	76 (100.0)
	이학+공학	31 (23.7)	46 (35.1)	31 (23.7)	19 (14.5)	4 (3.1)	131 (100.0)
	농학+의학	6 (15.0)	17 (42.5)	4 (10.0)	10 (25.0)	3 (7.5)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7 (15.6)	23 (51.1)	7 (15.6)	6 (13.3)	2 (4.4)	45 (100.0)
전체		61 (18.1)	133 (39.5)	73 (21.7)	54 (16.0)	16 (4.7)	337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경기	11 (14.9)	30 (40.5)	14 (18.9)	14 (18.9)	5 (6.8)	74 (100.0)
	대전충청	14 (19.2)	28 (38.4)	15 (20.5)	14 (19.2)	2 (2.7)	73 (100.0)
	전라광주	8 (18.2)	16 (36.4)	14 (31.8)	4 (9.1)	2 (4.5)	44 (100.0)
	부산영남	2 (8.0)	10 (40.0)	8 (32.0)	4 (16.0)	1 (4.0)	25 (100.0)
	강원제주	26 (21.3)	50 (41.0)	22 (18.0)	18 (14.8)	6 (4.9)	122 (100.0)
전체		61 (18.0)	134 (39.6)	73 (21.6)	54 (16.0)	16 (4.7)	338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 (14.9)	30 (40.5)	14 (18.9)	14 (18.9)	5 (6.8)	74 (100.0)
	비수도권	50 (18.9)	104 (39.4)	59 (22.3)	40 (15.2)	11 (4.2)	264 (100.0)
전체		61 (18.0)	134 (39.6)	73 (21.6)	54 (16.0)	16 (4.7)	338 (100.0)

주) *<0.1 / **<0.05 / ***<0.01

나) 전임교원 강의비율과 교육의 질 관련성

전임교원 강의비율과 교육의 질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설문에서 “관련이 있다”는 평가의견은 82.6%로 나타났으며, “관련이 없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을 높이는 것이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03> 전임교원 강의비율과 교육의 질 관련성(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관련	101	29.7
어느 정도 관련	180	52.9
그저 그렇다	46	13.5
관련이 낮은 편	11	3.2
전혀 관련이 없다	2	0.6
합계	340	100.0

결측: 4명(1.2%)

<표 V-104> 전임교원 강의비율과 교육의 질 관련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교육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매 우 관련	어 느 정 도 관련	그 저 그 령 다	관 련 이 낮 은 편	전 혀 관 련 이 없 다	
대 학 의 규모 ***	대규모	30 (34.9)	48 (55.8)	7 (8.1)	1 (1.2)	0 (0.0)	86 (100.0)
	중규모	60 (28.0)	111 (51.9)	37 (17.3)	6 (2.8)	0 (0.0)	214 (100.0)
	소규모	11 (27.5)	21 (52.5)	2 (5.0)	4 (10.0)	2 (5.0)	40 (100.0)
전체		101 (29.7)	180 (52.9)	46 (13.5)	11 (3.2)	2 (0.6)	340 (100.0)
대 학 원 전 공 계 열	인문계열	13 (28.9)	20 (44.4)	10 (22.2)	2 (4.4)	0 (0.0)	45 (100.0)
	사회+경상	27 (34.6)	36 (46.2)	12 (15.4)	3 (3.8)	0 (0.0)	78 (100.0)
	이학+공학	42 (32.1)	71 (54.2)	13 (9.9)	3 (2.3)	2 (1.5)	131 (100.0)
	농학+의학	10 (25.0)	22 (55.0)	8 (20.0)	0 (0.0)	0 (0.0)	40 (100.0)
	사범/예체능 /가정	8 (17.8)	31 (68.9)	3 (6.7)	3 (6.7)	0 (0.0)	45 (100.0)
전체		100 (29.5)	180 (53.1)	46 (13.6)	11 (3.2)	2 (0.6)	339 (100.0)
대 학 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9 (25.7)	40 (54.1)	11 (14.9)	4 (5.4)	0 (0.0)	74 (100.0)
	대전충청	24 (32.9)	37 (50.7)	5 (6.8)	5 (6.8)	2 (2.7)	73 (100.0)
	전라광주	10 (22.7)	28 (63.6)	6 (13.6)	0 (0.0)	0 (0.0)	44 (100.0)
	부산영남	6 (24.0)	12 (48.0)	7 (28.0)	0 (0.0)	0 (0.0)	25 (100.0)
	강원제주	42 (33.9)	63 (50.8)	17 (13.7)	2 (1.6)	0 (0.0)	124 (100.0)
전체		101 (29.7)	180 (52.9)	46 (13.5)	11 (3.2)	2 (0.6)	340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19 (25.7)	40 (54.1)	11 (14.9)	4 (5.4)	0 (0.0)	74 (100.0)
	비수도권	82 (30.8)	140 (52.6)	35 (13.2)	7 (2.6)	2 (0.8)	266 (100.0)
전체		101 (29.7)	180 (52.9)	46 (13.5)	11 (3.2)	2 (0.6)	340 (100.0)

주) *<0.1 / **<0.05 / ***<0.01

다) 전임교원 강의비율의 법령화

전임교원의 강의비율과 교육의 질 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한 경우,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박사과정 설치기준으로 법령(교과부 고시 등)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설문하였다. 그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은 47.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18.3%만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경우는 34.3%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박사과정 설치기준으로 법령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교수들이 많은 가운데 유보적 입장이나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교수들도 약 절반 가량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차분석결과 대규모 대학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기타 계열의 긍정적 응답이 높은 반면 농학·의학계열의 긍정적 응답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전라·광주지역과 부산·영남지역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V-105> 전임교원의 강의비율 법령화(교수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35	11.4
대체로 그렇다	110	35.9
그저 그렇다	105	34.3
대체로 아니다	43	14.1
전혀 아니다	13	4.2
합계	306	100.0

결측: 38명(11.1%)

<표 V-106> 전임교원의 강의비율 법령화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교수집단)

구 분		6번 문항에서 ①, ②에 응답하신 경우,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박사과정 설치기준으로 법령(교과부 고시 등)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9 (11.4)	41 (51.9)	17 (21.5)	8 (10.1)	4 (5.1)	79 (100.0)
	중규모	20 (10.3)	58 (29.7)	82 (42.1)	26 (13.3)	9 (4.6)	195 (100.0)
	소규모	6 (18.8)	11 (34.4)	6 (18.8)	9 (28.1)	0 (0.0)	32 (100.0)
전체		35 (11.4)	110 (35.9)	105 (34.3)	43 (14.1)	13 (4.2)	306 (100.0)
대학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5 (12.5)	18 (45.0)	5 (12.5)	12 (30.0)	0 (0.0)	40 (100.0)
	사회+경상	11 (15.9)	22 (31.9)	23 (33.3)	7 (10.1)	6 (8.7)	69 (100.0)
	이학+공학	14 (11.9)	39 (33.1)	51 (43.2)	10 (8.5)	4 (3.4)	118 (100.0)
	농학+의학	2 (5.7)	10 (28.6)	14 (40.0)	9 (25.7)	0 (0.0)	35 (100.0)
	사범/예체능/가정	3 (7.0)	20 (46.5)	12 (27.9)	5 (11.6)	3 (7.0)	43 (100.0)
전체		35 (11.5)	109 (35.7)	105 (34.4)	43 (14.1)	13 (4.3)	305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0 (15.2)	26 (39.4)	19 (28.8)	7 (10.6)	4 (6.1)	66 (100.0)
	대전충청	5 (7.7)	31 (47.7)	14 (21.5)	15 (23.1)	0 (0.0)	65 (100.0)
	전라광주	0 (0.0)	12 (30.0)	26 (65.0)	2 (5.0)	0 (0.0)	40 (100.0)
	부산영남	1 (5.3)	4 (21.1)	10 (52.6)	3 (15.8)	1 (5.3)	19 (100.0)
	강원제주	19 (16.4)	37 (31.9)	36 (31.0)	16 (13.8)	8 (6.9)	116 (100.0)
전체		35 (11.4)	110 (35.9)	105 (34.3)	43 (14.1)	13 (4.2)	306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10 (15.2)	26 (39.4)	19 (28.8)	7 (10.6)	4 (6.1)	66 (100.0)
	비수도권	25 (10.4)	84 (35.0)	86 (35.8)	36 (15.0)	9 (3.8)	240 (100.0)
전체		35 (11.4)	110 (35.9)	105 (34.3)	43 (14.1)	13 (4.2)	306 (100.0)

주) *<0.1 / **<0.05 / ***<0.01

다. 대학원생 집단의 의견

1) 대학원생의 학습여건에 관한 사항

가) 시간제 대학원생의 직업

시간제 대학원생의 경우 종사하는 직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연구·교육직”종사자가 3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문직” 23.4%, “회사원” 15.1%, “기타” 9.8%, “공무원”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박사과정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전문직 관련 종사자가 5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07> 시간제 대학원생의 직업(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회사원	31	15.1
자영업	16	7.8
전문직	48	23.4
연구교육직	67	32.7
공무원	19	9.3
전업주부	4	2.0
기타	20	9.8
합계	205	100.0

나) 대학원 입학동기와 학부전공 일치도

박사과정 재학생에게 대학원 입학 동기를 설문한 결과 “교육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33.4%,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80.8%가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연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혹은 더 수준 높은 학문을 배우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08> 대학원생의 입학동기(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158	33.4
사회적 명예를 얻기 위해서	23	4.9
교육 및 연구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224	47.4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57	12.1
기타	11	2.3
합계	473	100.0

결측: 6명(1.3%)

박사과정 재학생이 대학원 전공과 학부 전공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학부와 동일 전공”이라는 응답자가 6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부와 인접한 동일계열 전공”이라는 응답이 26.8%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박사과정 전공자들은 최소한 학부에서 전공한 동일계열의 전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학부와 전혀 다른 계열의 전공을 선택하는 사례는 11.3%에 불과하였다.

<표 V-109> 전공일치도(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학부와 동일 전공	296	61.9
학부와 인접한 동일계열 전공	128	26.8
학부와 전혀 다른 계열 전공	54	11.3
합계	478	100.0

결측: 1명(0.2%)

다) 학자금 충당방법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충당 방법은 “장학금과 자비로 충당”한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액 자비 부담” 36.2%, “전액 장학금 수혜” 15.6%, “직장의 보조금”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장학금 수혜 수준이 저조한 상태에서 자비부담이 큰 편이며, 대부분은 자비와 장학금이 공동 분담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10> 학자금 충당방법(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전액 자비 부담	171	36.2
전액 장학금 수혜	74	15.6
장학금과 자비로 충당	207	43.8
직장의 보조금	7	1.5
기타	14	3.0
합계	473	100.0

결측: 6명(1.3%)

2)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입학 절차와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대학원생에게 입학과정을 설문한 결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하여 입학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6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그리고 필기시험 모두”거쳤다는 응답 21.5%, “면접심사”만 거친 경우 6.7%, “서류심사”만 거친 경우 1.9%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박사과정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11> 대학원생의 입학절차(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서류심사	9	1.9
면접심사	32	6.7
필기시험	5	1.1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327	68.8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그리고 필기 시험 모두	102	21.5
합계	475	100.0

결측: 4명(0.8%)

대학원생의 입학절차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연령,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 소재지역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문영역별로는 예체능계와 사범계열 대학원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그리고 필기시험 모두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있었고, 대학의 설립 유형 면에서는 사립대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2> 대학원생의 입학절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하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대학원에 입학하셧습니까?					전 체
		서류심사	면접심사	필기시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그리고 필기 모두	
대학의 규모	대규모	1 (0.7)	9 (6.1)	2 (1.4)	99 (67.3)	36 (24.5)	147 (100.0)
	중규모	6 (2.1)	22 (7.9)	3 (1.1)	195 (69.6)	54 (19.3)	280 (100.0)
	소규모	2 (4.2)	1 (2.1)	0 (0.0)	33 (68.8)	12 (25.0)	48 (100.0)
전체		9 (1.9)	32 (6.7)	5 (1.1)	327 (68.8)	102 (21.5)	475 (100.0)
성별	남	7 (2.7)	21 (8.0)	2 (0.8)	173 (65.8)	60 (22.8)	263 (100.0)
	여	2 (0.9)	11 (5.2)	3 (1.4)	153 (72.5)	42 (19.9)	211 (100.0)
전체		9 (1.9)	32 (6.8)	5 (1.1)	326 (68.8)	102 (21.5)	474 (100.0)
연령**	20대	4 (3.1)	13 (9.9)	0 (0.0)	91 (69.5)	23 (17.6)	131 (100.0)
	30대	1 (0.4)	16 (6.7)	2 (0.8)	164 (68.6)	56 (23.4)	239 (100.0)
	40대이상	4 (3.8)	3 (2.9)	3 (2.9)	72 (69.2)	22 (21.2)	104 (100.0)
전체		9 (1.9)	32 (6.8)	5 (1.1)	327 (69.0)	101 (21.3)	474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4 (1.0)	27 (7.1)	3 (0.8)	264 (69.1)	84 (22.0)	382 (100.0)
	수료자	5 (5.5)	5 (5.5)	2 (2.2)	62 (68.1)	17 (18.7)	91 (100.0)
전체		9 (1.9)	32 (6.8)	5 (1.1)	326 (68.9)	101 (21.4)	473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1+2학기	0 (0.0)	11 (6.5)	1 (0.6)	121 (71.6)	36 (21.3)	169 (100.0)
	3+4학기	3 (1.9)	12 (7.6)	1 (0.6)	108 (68.8)	33 (21.0)	157 (100.0)
	5학기이상	6 (4.1)	9 (6.1)	3 (2.0)	97 (66.0)	32 (21.8)	147 (100.0)
전체		9 (1.9)	32 (6.8)	5 (1.1)	326 (68.9)	101 (21.4)	473 (100.0)

주) *<0.1 / **<0.05 / ***<0.01

<표 V-112> 대학원생의 입학절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하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대학원에 입학하셧습니까?					전 체
		서류심사	면접심사	필기시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그리고 필기 모두	
전공 계열 **	인문계열	2 (3.0)	2 (3.0)	1 (1.5)	49 (74.2)	12 (18.2)	66 (100.0)
	사회+경영	0 (0.0)	7 (4.9)	2 (1.4)	100 (69.9)	34 (23.8)	143 (100.0)
	이학+공학	7 (4.5)	18 (11.6)	0 (0.0)	109 (70.3)	21 (13.5)	155 (100.0)
	농학+의학	0 (0.0)	0 (0.0)	1 (2.3)	31 (70.5)	12 (27.3)	44 (100.0)
	예체능+사범	0 (0.0)	4 (7.0)	1 (1.8)	31 (54.4)	21 (36.8)	57 (100.0)
전체		9 (1.9)	31 (6.7)	5 (1.1)	320 (68.8)	100 (21.5)	465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 (0.7)	10 (7.3)	0 (0.0)	112 (81.8)	14 (10.2)	137 (100.0)
	대전충청	3 (3.7)	4 (4.9)	1 (1.2)	49 (59.8)	25 (30.5)	82 (100.0)
	호남	0 (0.0)	6 (8.6)	2 (2.9)	58 (82.9)	4 (5.7)	70 (100.0)
	강원제주	0 (0.0)	3 (12.5)	1 (4.2)	8 (33.3)	12 (50.0)	24 (100.0)
	영남	5 (3.1)	9 (5.6)	1 (0.6)	100 (61.7)	47 (29.0)	162 (100.0)
전체		9 (1.9)	32 (6.7)	5 (1.1)	327 (68.8)	102 (21.5)	475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1 (0.7)	10 (7.3)	0 (0.0)	112 (81.8)	14 (10.2)	137 (100.0)
	비수도권	8 (2.4)	22 (6.5)	5 (1.5)	215 (63.6)	88 (26.0)	338 (100.0)
전체		9 (1.9)	32 (6.7)	5 (1.1)	327 (68.8)	102 (21.5)	475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	국공립대학	5 (2.6)	11 (5.8)	1 (0.5)	114 (59.7)	60 (31.4)	191 (100.0)
	사립대학	4 (1.4)	21 (7.4)	4 (1.4)	213 (75.0)	42 (14.8)	284 (100.0)
전체		9 (1.9)	32 (6.7)	5 (1.1)	327 (68.8)	102 (21.5)	475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8 (2.5)	23 (7.2)	2 (0.6)	223 (69.5)	65 (20.2)	321 (100.0)
	시간제	1 (0.7)	9 (5.9)	3 (2.0)	103 (67.3)	37 (24.2)	153 (100.0)
전체		9 (1.9)	32 (6.8)	5 (1.1)	326 (68.8)	102 (21.5)	474 (100.0)

주) *<0.1 / **<0.05 / ***<0.01

대학원생이 소속 대학원의 입학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의견은 31.1%인 반면 “쉬운 편”이라는 평가의견은 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해 보통이라는 유보적인 의견이 54.7%인 것은 비교상대가 불분명하고 특히 여러 대학원의 입학시험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경우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13> 대학원생이 생각하는 입학수준(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31	6.5
약간 어려운 수준이다	118	24.6
보통이다	262	54.7
대체로 쉬운 수준이다	54	11.3
매우 쉬운 수준이다	14	2.9
합계	479	100.0

대학원생이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의 입학수준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 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연령, 전공계열 및 대학원생의 신분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연령이 많고 전일제 학생일수록 대학원 입학수준이 어려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표 V-114> 입학수준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의 입학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이다	보통이다	다체로 쉬운 수준이다	매우 쉬운 수준이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18 (12.1)	46 (30.9)	64 (43.0)	19 (12.8)	2 (1.3)	149 (100.0)
	중규모	11 (3.9)	58 (20.6)	170 (60.3)	31 (11.0)	12 (4.3)	282 (100.0)
	소규모	2 (4.2)	14 (29.2)	28 (58.3)	4 (8.3)	0 (0.0)	48 (100.0)
전체		31 (6.5)	118 (24.6)	262 (54.7)	54 (11.3)	14 (2.9)	479 (100.0)
성별	남	16 (6.0)	58 (21.8)	152 (57.1)	32 (12.0)	8 (3.0)	266 (100.0)
	여	15 (7.1)	59 (27.8)	110 (51.9)	22 (10.4)	6 (2.8)	212 (100.0)
전체		31 (6.5)	117 (24.5)	262 (54.8)	54 (11.3)	14 (2.9)	478 (100.0)
연령 *	20대	8 (6.0)	30 (22.6)	78 (58.6)	12 (9.0)	5 (3.8)	133 (100.0)
	30대	14 (5.8)	66 (27.4)	117 (48.5)	36 (14.9)	8 (3.3)	241 (100.0)
	40대이상	9 (8.7)	21 (20.2)	67 (64.4)	6 (5.8)	1 (1.0)	104 (100.0)
전체		31 (6.5)	117 (24.5)	262 (54.8)	54 (11.3)	14 (2.9)	478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25 (6.5)	99 (25.6)	209 (54.1)	42 (10.9)	11 (2.8)	386 (100.0)
	수료자	6 (6.6)	18 (19.8)	52 (57.1)	12 (13.2)	3 (3.3)	91 (100.0)
전체		31 (6.5)	117 (24.5)	261 (54.7)	54 (11.3)	14 (2.9)	477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3범주)	1+2학기	12 (7.1)	48 (28.2)	91 (53.5)	15 (8.8)	4 (2.4)	170 (100.0)
	3+4학기	5 (3.1)	38 (23.8)	93 (58.1)	18 (11.3)	6 (3.8)	160 (100.0)
	5학기이상	14 (9.5)	31 (21.1)	77 (52.4)	21 (14.3)	4 (2.7)	147 (100.0)
전체		31 (6.5)	117 (24.5)	261 (54.7)	54 (11.3)	14 (2.9)	477 (100.0)

주) *<0.1 / **<0.05 / ***<0.01

<표 V-114> 입학수준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 대학원의 입학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쉬운 수준이다	매우 쉬운 수준이다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12 (7.1)	48 (28.2)	91 (53.5)	15 (8.8)	4 (2.4)	170 (100.0)
	3+4학기	5 (3.1)	38 (23.8)	93 (58.1)	18 (11.3)	6 (3.8)	160 (100.0)
	5+6학기이상	8 (14.3)	13 (23.2)	25 (44.6)	9 (16.1)	1 (1.8)	56 (100.0)
	수료자	6 (6.6)	18 (19.8)	52 (57.1)	12 (13.2)	3 (3.3)	91 (100.0)
전체		31 (6.5)	117 (24.5)	261 (54.7)	54 (11.3)	14 (2.9)	477 (100.0)
전공 계열 **	인문계열	2 (2.9)	18 (26.5)	36 (52.9)	10 (14.7)	2 (2.9)	68 (100.0)
	사회+경영	8 (5.6)	42 (29.4)	77 (53.8)	13 (9.1)	3 (2.1)	143 (100.0)
	이학+공학	11 (7.1)	28 (18.1)	89 (57.4)	22 (14.2)	5 (3.2)	155 (100.0)
	농학+의학	1 (2.3)	4 (9.1)	33 (75.0)	3 (6.8)	3 (6.8)	44 (100.0)
	예체능+사범	9 (15.3)	24 (40.7)	20 (33.9)	6 (10.2)	0 (0.0)	59 (100.0)
전체		31 (6.6)	116 (24.7)	255 (54.4)	54 (11.5)	13 (2.8)	469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경기	12 (8.8)	34 (24.8)	74 (54.0)	16 (11.7)	1 (0.7)	137 (100.0)
	대전충청	6 (7.1)	29 (34.5)	37 (44.0)	10 (11.9)	2 (2.4)	84 (100.0)
	호남	2 (2.9)	9 (12.9)	48 (68.6)	7 (10.0)	4 (5.7)	70 (100.0)
	강원제주	1 (4.2)	5 (20.8)	14 (58.3)	4 (16.7)	0 (0.0)	24 (100.0)
	영남	10 (6.1)	41 (25.0)	89 (54.3)	17 (10.4)	7 (4.3)	164 (100.0)
전체		31 (6.5)	118 (24.6)	262 (54.7)	54 (11.3)	14 (2.9)	479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8 (4.1)	50 (25.9)	108 (56.0)	21 (10.9)	6 (3.1)	193 (100.0)
	사립대학	23 (8.0)	68 (23.8)	154 (53.8)	33 (11.5)	8 (2.8)	286 (100.0)
전체		31 (6.5)	118 (24.6)	262 (54.7)	54 (11.3)	14 (2.9)	479 (100.0)
대학원생 신분 **	전일제	19 (5.8)	91 (28.0)	163 (50.2)	41 (12.6)	11 (3.4)	325 (100.0)
	시간제	12 (7.8)	27 (17.6)	98 (64.1)	13 (8.5)	3 (2.0)	153 (100.0)
전체		31 (6.5)	118 (24.7)	261 (54.6)	54 (11.3)	14 (2.9)	478 (100.0)

주) *<0.1 / **<0.05 / ***<0.01

한편 대학원의 입학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GRE, TOEFL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인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에서는 “필요하다”는 긍정적 평가의견이 41.0%인 반면 “필요치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의견은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의견이 39.3%에 달하는 상황에서 입학기준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인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준비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 응답결과라고 할 것이다.

<표 V-115> 대학원입학과정에서의 공인자료 활용의 필요성(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5	3.1
필요하다	181	37.9
그저 그렇다	188	39.3
필요하지 않다	72	15.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	4.6
합계	478	100.0

결측: 1명(0.2%)

대학원 입학과정에서 GRE, TOEFL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인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재학 중인 대학의 규모, 성별, 연령 및 대학원이수학기 및 대학의 소재 지역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학원 이수학기가 많을수록 공인자료의 활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16> 공인자료 활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GRE, TOEFL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인자료를 통한 입학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7 (4.7)	50 (33.8)	52 (35.1)	27 (18.2)	12 (8.1)	148 (100.0)
	중규모	6 (2.1)	106 (37.6)	123 (43.6)	39 (13.8)	8 (2.8)	282 (100.0)
	소규모	2 (4.2)	25 (52.1)	13 (27.1)	6 (12.5)	2 (4.2)	48 (100.0)
전체		15 (3.1)	181 (37.9)	188 (39.3)	72 (15.1)	22 (4.6)	478 (100.0)
성별 **	남	13 (4.9)	90 (34.0)	100 (37.7)	43 (16.2)	19 (7.2)	265 (100.0)
	여	2 (0.9)	91 (42.9)	87 (41.0)	29 (13.7)	3 (1.4)	212 (100.0)
전체		15 (3.1)	181 (37.9)	187 (39.2)	72 (15.1)	22 (4.6)	477 (100.0)
연령 *	20대	1 (0.8)	62 (46.6)	53 (39.8)	15 (11.3)	2 (1.5)	133 (100.0)
	30대	9 (3.7)	84 (34.9)	90 (37.3)	44 (18.3)	14 (5.8)	241 (100.0)
	40대이상	5 (4.9)	34 (33.0)	45 (43.7)	13 (12.6)	6 (5.8)	103 (100.0)
전체		15 (3.1)	180 (37.7)	188 (39.4)	72 (15.1)	22 (4.6)	477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7 (1.8)	142 (36.8)	156 (40.4)	65 (16.8)	16 (4.1)	386 (100.0)
	수료자	8 (8.9)	38 (42.2)	31 (34.4)	7 (7.8)	6 (6.7)	90 (100.0)
전체		15 (3.2)	180 (37.8)	187 (39.3)	72 (15.1)	22 (4.6)	476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1 (0.6)	68 (40.0)	76 (44.7)	23 (13.5)	2 (1.2)	170 (100.0)
	3+4학기	5 (3.1)	51 (31.9)	62 (38.8)	34 (21.3)	8 (5.0)	160 (100.0)
	5+6학기이상	1 (1.8)	23 (41.1)	18 (32.1)	8 (14.3)	6 (10.7)	56 (100.0)
	수료자	8 (8.9)	38 (42.2)	31 (34.4)	7 (7.8)	6 (6.7)	90 (100.0)
전체		15 (3.2)	180 (37.8)	187 (39.3)	72 (15.1)	22 (4.6)	476 (100.0)

주) *<0.1 / **<0.05 / ***<0.01

<표 V-116> 공인자료 활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GRE, TOEFL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인자료를 통한 입학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공 계열	인문계열	1 (1.5)	21 (30.9)	26 (38.2)	16 (23.5)	4 (5.9)	68 (100.0)
	사회+경영	2 (1.4)	56 (39.2)	59 (41.3)	18 (12.6)	8 (5.6)	143 (100.0)
	이학+공학	7 (4.5)	59 (38.1)	60 (38.7)	20 (12.9)	9 (5.8)	155 (100.0)
	농학+의학	1 (2.3)	14 (32.6)	22 (51.2)	6 (14.0)	0 (0.0)	43 (100.0)
	예체능+사범	4 (6.8)	25 (42.4)	17 (28.8)	12 (20.3)	1 (1.7)	59 (100.0)
전체		15 (3.2)	175 (37.4)	184 (39.3)	72 (15.4)	22 (4.7)	468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경기	2 (1.5)	49 (35.8)	55 (40.1)	23 (16.8)	8 (5.8)	137 (100.0)
	대전충청	4 (4.8)	47 (56.0)	18 (21.4)	14 (16.7)	1 (1.2)	84 (100.0)
	호남	0 (0.0)	16 (22.9)	41 (58.6)	11 (15.7)	2 (2.9)	70 (100.0)
	강원제주	1 (4.3)	9 (39.1)	11 (47.8)	2 (8.7)	0 (0.0)	23 (100.0)
	영남	8 (4.9)	60 (36.6)	63 (38.4)	22 (13.4)	11 (6.7)	164 (100.0)
전체		15 (3.1)	181 (37.9)	188 (39.3)	72 (15.1)	22 (4.6)	478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8 (4.1)	76 (39.4)	71 (36.8)	27 (14.0)	11 (5.7)	193 (100.0)
	사립대학	7 (2.5)	105 (36.8)	117 (41.1)	45 (15.8)	11 (3.9)	285 (100.0)
전체		15 (3.1)	181 (37.9)	188 (39.3)	72 (15.1)	22 (4.6)	478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14 (4.3)	122 (37.5)	121 (37.2)	54 (16.6)	14 (4.3)	325 (100.0)
	시간제	1 (0.7)	58 (38.2)	67 (44.1)	18 (11.8)	8 (5.3)	152 (100.0)
전체		15 (3.1)	180 (37.7)	188 (39.4)	72 (15.1)	22 (4.6)	477 (100.0)

주) *<0.1 / **<0.05 / ***<0.01

나) 전일제 및 시간제 대학원생의 구성

대학원 신입생의 특성은 “주로 시간제 대학원생”이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로 전일제 대학원생” 35.2%, “전일제 대학원생과 시간제 대학원생이 비슷한 수준” 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대학원에는 전일제 대학원생 보다 직장을 갖고 대학원을 다니는 시간제 대학원생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117> 전일제 및 시간제 대학원생의 구성(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주로 전일제 대학원생이다	168	35.2
주로 시간제 대학원생이다	183	38.4
전일제 대학원생과 시간제 대학원생이 비슷한 수준이다	126	26.4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대학원 신입생의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 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응답자의 성별, 연령 및 대학원 과정 수료여부, 전공계열, 대학의 지역 및 성립유형과 대학원생의 신분 등 9개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경상계열과 예체능·사범계열, 사립대에서 시간제 대학원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18> 전일제 및 시간제 대학원생의 구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 대학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대학원생의 특성은 주로 어떠합니까?			전 체
		주로 전일제 대학원생이다	주로 시간제 대학원생이다	전일제와 시간제 대학원생이 비슷한 수준	
대학의 규모 **	대규모	55 (36.9)	59 (39.6)	35 (23.5)	149 (100.0)
	중규모	106 (37.9)	99 (35.4)	75 (26.8)	280 (100.0)
	소규모	7 (14.6)	25 (52.1)	16 (33.3)	48 (100.0)
전체		168 (35.2)	183 (38.4)	126 (26.4)	477 (100.0)
성별 *	남	96 (36.1)	110 (41.4)	60 (22.6)	266 (100.0)
	여	72 (34.3)	72 (34.3)	66 (31.4)	210 (100.0)
전체		168 (35.3)	182 (38.2)	126 (26.5)	476 (100.0)
연령 ***	20대	77 (58.8)	24 (18.3)	30 (22.9)	131 (100.0)
	30대	78 (32.4)	93 (38.6)	70 (29.0)	241 (100.0)
	40대이상	12 (11.5)	66 (63.5)	26 (25.0)	104 (100.0)
전체		167 (35.1)	183 (38.4)	126 (26.5)	476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128 (33.3)	159 (41.4)	97 (25.3)	384 (100.0)
	수료자	39 (42.9)	23 (25.3)	29 (31.9)	91 (100.0)
전체		167 (35.2)	182 (38.3)	126 (26.5)	475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55 (32.7)	71 (42.3)	42 (25.0)	168 (100.0)
	3+4학기	52 (32.5)	65 (40.6)	43 (26.9)	160 (100.0)
	5+6학기이상	21 (37.5)	23 (41.1)	12 (21.4)	56 (100.0)
	수료자	39 (42.9)	23 (25.3)	29 (31.9)	91 (100.0)
전체		167 (35.2)	182 (38.3)	126 (26.5)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18> 전일제 및 시간제 대학원생의 구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 대학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대학원생의 특성은 주로 어떠합니까?			전 체
		주로 전일제 대학원생이다	주로 시간제 대학원생이다	전일제와 시간제 대학원생이 비슷한 수준	
전공 계열 ***	인문계열	18 (26.5)	26 (38.2)	24 (35.3)	68 (100.0)
	사회+경영	22 (15.4)	83 (58.0)	38 (26.6)	143 (100.0)
	이학+공학	108 (69.7)	27 (17.4)	20 (12.9)	155 (100.0)
	농학+의학	11 (25.0)	16 (36.4)	17 (38.6)	44 (100.0)
	예체능+사범	7 (11.9)	31 (52.5)	21 (35.6)	59 (100.0)
전체		166 (35.4)	183 (39.0)	120 (25.6)	469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44 (32.1)	64 (46.7)	29 (21.2)	137 (100.0)
	대전충청	24 (28.6)	28 (33.3)	32 (38.1)	84 (100.0)
	호남	10 (14.7)	46 (67.6)	12 (17.6)	68 (100.0)
	강원제주	7 (29.2)	11 (45.8)	6 (25.0)	24 (100.0)
	영남	83 (50.6)	34 (20.7)	47 (28.7)	164 (100.0)
전체		168 (35.2)	183 (38.4)	126 (26.4)	477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44 (32.1)	64 (46.7)	29 (21.2)	137 (100.0)
	비수도권	124 (36.5)	119 (35.0)	97 (28.5)	340 (100.0)
전체		168 (35.2)	183 (38.4)	126 (26.4)	477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	국공립대학	72 (37.5)	56 (29.2)	64 (33.3)	192 (100.0)
	사립대학	96 (33.7)	127 (44.6)	62 (21.8)	285 (100.0)
전체		168 (35.2)	183 (38.4)	126 (26.4)	477 (100.0)
대학원생 신분 ***	전일제	133 (41.2)	104 (32.2)	86 (26.6)	323 (100.0)
	시간제	34 (22.2)	79 (51.6)	40 (26.1)	153 (100.0)
전체		167 (35.1)	183 (38.4)	126 (26.5)	476 (100.0)

주) *<0.1 / **<0.05 / ***<0.01

다)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 및 종합시험

대학원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에 대한 평가의견에서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은 50.8%이고 반대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의견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통”이라는 유보적인 평가의견이 42.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학위과정에 있고 다른 대학들의 자격요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수준이 불분명하여 보인 응답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약 절반정도의 대학원생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이 높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표 V-119>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요건(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높은 수준이다	40	8.4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203	42.4
보통이다	205	42.8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26	5.4
매우 낮은 수준이다	5	1.0
합계	479	100.0

라) 종합시험의 탈락률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종합시험이 있다. 이 종합시험의 탈락률이 청구논문의 제출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탈락률에 대해 설문한 결과 “탈락률이 높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한 반면 “탈락률이 높지 않거나 탈락자가 거의 없다”는 응답이 4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시험이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의 한 자격요건으로 요식행위처럼 운용되고 있는 상황을 반증한 응답결과라고 할 것이다.

<표 V-120> 종합시험의 탈락율(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높다	4	0.8
높은 편이다	33	6.9
보통이다	232	48.8
높지 않은 편이다	158	33.3
탈락자가 거의 없다	48	10.1
합계	475	100.0

결측: 4명(0.8%)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으로서의 종합시험 탈락률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연령에 따라, 대학원과정의 이수정도에 따라, 대학원의 소재지역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이수학기가 적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대학원생들이 종합시험 탈락율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21> 종합시험 탈락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탈락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 체
		매 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지 않은 편이다	탈락자가 거의 없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0 (0.0)	6 (4.1)	76 (51.4)	49 (33.1)	17 (11.5)	148 (100.0)
	중규모	4 (1.4)	27 (9.6)	139 (49.5)	88 (31.3)	23 (8.2)	281 (100.0)
	소규모	0 (0.0)	0 (0.0)	17 (37.0)	21 (45.7)	8 (17.4)	46 (100.0)
전체		4 (0.8)	33 (6.9)	232 (48.8)	158 (33.3)	48 (10.1)	475 (100.0)
성별	남	3 (1.1)	14 (5.3)	131 (49.8)	91 (34.6)	24 (9.1)	263 (100.0)
	여	1 (0.5)	19 (9.0)	101 (47.9)	66 (31.3)	24 (11.4)	211 (100.0)
전체		4 (0.8)	33 (7.0)	232 (48.9)	157 (33.1)	48 (10.1)	474 (100.0)
연령 ***	20대	0 (0.0)	15 (11.3)	56 (42.1)	46 (34.6)	16 (12.0)	133 (100.0)
	30대	0 (0.0)	12 (5.0)	126 (52.5)	82 (34.2)	20 (8.3)	240 (100.0)
	40대이상	4 (4.0)	6 (5.9)	49 (48.5)	30 (29.7)	12 (11.9)	101 (100.0)
전체		4 (0.8)	33 (7.0)	231 (48.7)	158 (33.3)	48 (10.1)	474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1 (0.3)	28 (7.3)	188 (49.2)	123 (32.2)	42 (11.0)	382 (100.0)
	수료자	3 (3.3)	5 (5.5)	42 (46.2)	35 (38.5)	6 (6.6)	91 (100.0)
전체		4 (0.8)	33 (7.0)	230 (48.6)	158 (33.4)	48 (10.1)	473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3범주) ***	1+2학기	0 (0.0)	17 (10.2)	91 (54.5)	42 (25.1)	17 (10.2)	167 (100.0)
	3+4학기	0 (0.0)	7 (4.4)	73 (45.6)	61 (38.1)	19 (11.9)	160 (100.0)
	5학기이상	4 (2.7)	9 (6.2)	66 (45.2)	55 (37.7)	12 (8.2)	146 (100.0)
전체		4 (0.8)	33 (7.0)	230 (48.6)	158 (33.4)	48 (10.1)	473 (100.0)

주) *<0.1 / **<0.05 / ***<0.01

<표 V-121> 종합시험 탈락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탈락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지 않은 편이다	탈락자가 거의 없다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0 (0.0)	17 (10.2)	91 (54.5)	42 (25.1)	17 (10.2)	167 (100.0)
	3+4학기	0 (0.0)	7 (4.4)	73 (45.6)	61 (38.1)	19 (11.9)	160 (100.0)
	5+6학기이상	1 (1.8)	4 (7.3)	24 (43.6)	20 (36.4)	6 (10.9)	55 (100.0)
	수료자	3 (3.3)	5 (5.5)	42 (46.2)	35 (38.5)	6 (6.6)	91 (100.0)
전체		4 (0.8)	33 (7.0)	230 (48.6)	158 (33.4)	48 (10.1)	473 (100.0)
전공 계열	인문계열	0 (0.0)	10 (14.7)	31 (45.6)	24 (35.3)	3 (4.4)	68 (100.0)
	사회+경영	2 (1.4)	3 (2.1)	73 (51.8)	47 (33.3)	16 (11.3)	141 (100.0)
	이학+공학	2 (1.3)	11 (7.1)	71 (46.1)	54 (35.1)	16 (10.4)	154 (100.0)
	농학+의학	0 (0.0)	4 (9.1)	18 (40.9)	18 (40.9)	4 (9.1)	44 (100.0)
	예체능+사범	0 (0.0)	5 (8.6)	32 (55.2)	13 (22.4)	8 (13.8)	58 (100.0)
전체		4 (0.9)	33 (7.1)	225 (48.4)	156 (33.5)	47 (10.1)	465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0 (0.0)	3 (2.2)	66 (48.9)	50 (37.0)	16 (11.9)	135 (100.0)
	대전충청	0 (0.0)	4 (4.8)	44 (53.0)	29 (34.9)	6 (7.2)	83 (100.0)
	호남	1 (1.4)	9 (12.9)	20 (28.6)	33 (47.1)	7 (10.0)	70 (100.0)
	강원제주	1 (4.2)	1 (4.2)	14 (58.3)	6 (25.0)	2 (8.3)	24 (100.0)
	영남	2 (1.2)	16 (9.8)	88 (54.0)	40 (24.5)	17 (10.4)	163 (100.0)
전체		4 (0.8)	33 (6.9)	232 (48.8)	158 (33.3)	48 (10.1)	475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0 (0.0)	3 (2.2)	66 (48.9)	50 (37.0)	16 (11.9)	135 (100.0)
	비수도권	4 (1.2)	30 (8.8)	166 (48.8)	108 (31.8)	32 (9.4)	340 (100.0)
전체		4 (0.8)	33 (6.9)	232 (48.8)	158 (33.3)	48 (10.1)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21> 종합시험 탈락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탈락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 체
		매 우 높 다	높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높 지 않 은 편 이 다	탈락자가 거 의 없 다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1 (0.5)	14 (7.3)	102 (53.1)	61 (31.8)	14 (7.3)	192 (100.0)
	사립대학	3 (1.1)	19 (6.7)	130 (45.9)	97 (34.3)	34 (12.0)	283 (100.0)
전 체		4 (0.8)	33 (6.9)	232 (48.8)	158 (33.3)	48 (10.1)	475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4 (1.2)	22 (6.8)	165 (51.1)	101 (31.3)	31 (9.6)	323 (100.0)
	시간제	0 (0.0)	11 (7.3)	66 (43.7)	57 (37.7)	17 (11.3)	151 (100.0)
전 체		4 (0.8)	33 (7.0)	231 (48.7)	158 (33.3)	48 (10.1)	474 (100.0)

주) *<0.1 / **<0.05 / ***<0.01

마) 논문지도교수에 관한 사항

대학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선정방법에 대해 설문한 결과 “논문의 세부전공에 따라” 선정한다는 응답이 47.8%, “대학원생의 희망에 따라” 선정한다는 응답 43.6%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과에서 학과 교수간의 안배로 배정되는 경우는 6.8%에 불과하므로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도교수가 배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22> 논문지도교수 선정방법(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대학원생의 희망에 따라	206	43.6
논문의 세부전공에 따라	226	47.8
학과 교수 간의 안배에 따라	32	6.8
기타	9	1.9
합계	473	100.0

결측: 6명(1.3%)

논문지도교수 선정방법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연령, 대학원 이수수준, 전공계열 및 거주지역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에서, 전공계열에서는 인문·공학계열, 예체능·사범계열에서, 소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도권 대학원이 대학원생의 의견에 따라 지도교수가 결정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23> 논문지도교수 선정방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를 주로 어떻게 선정하니까?				전체
		대학원생의 회합에 따라	논문의 세부전공 에 따라	학과 교수 간의 안배에 따라	기타	
대학의 대규모**	대규모	82 (55.4)	53 (35.8)	10 (6.8)	3 (2.0)	148 (100.0)
	중규모	102 (36.8)	150 (54.2)	19 (6.9)	6 (2.2)	277 (100.0)
	소규모	22 (45.8)	23 (47.9)	3 (6.3)	0 (0.0)	48 (100.0)
전체		206 (43.6)	226 (47.8)	32 (6.8)	9 (1.9)	473 (100.0)
성별	남	124 (47.5)	119 (45.6)	14 (5.4)	4 (1.5)	261 (100.0)
	여	81 (38.4)	107 (50.7)	18 (8.5)	5 (2.4)	211 (100.0)
전체		205 (43.4)	226 (47.9)	32 (6.8)	9 (1.9)	472 (100.0)
연령**	20대	43 (33.6)	75 (58.6)	10 (7.8)	0 (0.0)	128 (100.0)
	30대	117 (48.8)	98 (40.8)	19 (7.9)	6 (2.5)	240 (100.0)
	40대이상	46 (44.2)	52 (50.0)	3 (2.9)	3 (2.9)	104 (100.0)
전체		206 (43.6)	225 (47.7)	32 (6.8)	9 (1.9)	472 (100.0)
대학원 과과정 수료	비수료자	161 (42.4)	182 (47.9)	28 (7.4)	9 (2.4)	380 (100.0)
	수료자	45 (49.5)	42 (46.2)	4 (4.4)	0 (0.0)	91 (100.0)
전체		206 (43.7)	224 (47.6)	32 (6.8)	9 (1.9)	471 (100.0)
대학원 수학기 (3범주)*	1+2학기	60 (36.6)	85 (51.8)	16 (9.8)	3 (1.8)	164 (100.0)
	3+4학기	68 (42.5)	78 (48.8)	9 (5.6)	5 (3.1)	160 (100.0)
	5학기이상	78 (53.1)	61 (41.5)	7 (4.8)	1 (0.7)	147 (100.0)
전체		206 (43.7)	224 (47.6)	32 (6.8)	9 (1.9)	471 (100.0)
대학원 수학기 (4범주)*	1+2학기	60 (36.6)	85 (51.8)	16 (9.8)	3 (1.8)	164 (100.0)
	3+4학기	68 (42.5)	78 (48.8)	9 (5.6)	5 (3.1)	160 (100.0)
	5+6학기이상	33 (58.9)	19 (33.9)	3 (5.4)	1 (1.8)	56 (100.0)
	수료자	45 (49.5)	42 (46.2)	4 (4.4)	0 (0.0)	91 (100.0)
전체		206 (43.7)	224 (47.6)	32 (6.8)	9 (1.9)	471 (100.0)

주) *<0.1 / **<0.05 / ***<0.01

<표 V-123> 논문지도교수 선정방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를 주로 어떻게 선정하니까?				전체
		대학원생의 희망에 따라	논문의 세부전공 에 따라	학과 교수 간의 안배에 따라	기타	
전공열 **	인문계열	17 (25.0)	41 (60.3)	8 (11.8)	2 (2.9)	68 (100.0)
	사회+경영	66 (46.2)	57 (39.9)	15 (10.5)	5 (3.5)	143 (100.0)
	이학+공학	77 (50.7)	68 (44.7)	6 (3.9)	1 (0.7)	152 (100.0)
	농학+의학	12 (28.6)	28 (66.7)	2 (4.8)	0 (0.0)	42 (100.0)
	예체능+사범	31 (53.4)	25 (43.1)	1 (1.7)	1 (1.7)	58 (100.0)
전체		203 (43.8)	219 (47.3)	32 (6.9)	9 (1.9)	463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76 (55.5)	50 (36.5)	9 (6.6)	2 (1.5)	137 (100.0)
	대전충청	33 (39.8)	42 (50.6)	7 (8.4)	1 (1.2)	83 (100.0)
	호남	3 (4.5)	50 (75.8)	10 (15.2)	3 (4.5)	66 (100.0)
	강원제주	9 (37.5)	14 (58.3)	1 (4.2)	0 (0.0)	24 (100.0)
	영남	85 (52.1)	70 (42.9)	5 (3.1)	3 (1.8)	163 (100.0)
전체		206 (43.6)	226 (47.8)	32 (6.8)	9 (1.9)	473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76 (55.5)	50 (36.5)	9 (6.6)	2 (1.5)	137 (100.0)
	비수도권	130 (38.7)	176 (52.4)	23 (6.8)	7 (2.1)	336 (100.0)
전체		206 (43.6)	226 (47.8)	32 (6.8)	9 (1.9)	473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83 (43.7)	94 (49.5)	9 (4.7)	4 (2.1)	190 (100.0)
	사립대학	123 (43.5)	132 (46.6)	23 (8.1)	5 (1.8)	283 (100.0)
전체		206 (43.6)	226 (47.8)	32 (6.8)	9 (1.9)	473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141 (43.9)	152 (47.4)	24 (7.5)	4 (1.2)	321 (100.0)
	시간제	65 (43.0)	73 (48.3)	8 (5.3)	5 (3.3)	151 (100.0)
전체		206 (43.6)	225 (47.7)	32 (6.8)	9 (1.9)	472 (100.0)

주) *<0.1 / **<0.05 / ***<0.01

한편 응답자의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에 대한 평가의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71.2%인 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4.6%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24> 논문지도에 대한 만족도(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45	30.3
만족	196	40.9
보통	116	24.2
불만족	21	4.4
매우 불만족	1	0.2
합계	479	100.0

결측: 1명(0.2%)

논문지도의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 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대학원 이수학기 수준, 전공계열, 대학원 소재지역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에서, 대학원 이수학기가 많을수록 지도교수의 논문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5> 논문지도에 대한 만족도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하께서는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대학의 규모**	대규모	54 (36.2)	64 (43.0)	29 (19.5)	2 (1.3)	0 (0.0)	149 (100.0)
	중규모	77 (27.3)	107 (37.9)	80 (28.4)	17 (6.0)	1 (0.4)	282 (100.0)
	소규모	14 (29.2)	25 (52.1)	7 (14.6)	2 (4.2)	0 (0.0)	48 (100.0)
전체		145 (30.3)	196 (40.9)	116 (24.2)	21 (4.4)	1 (0.2)	479 (100.0)
성별	남	86 (32.3)	108 (40.6)	62 (23.3)	9 (3.4)	1 (0.4)	266 (100.0)
	여	58 (27.4)	88 (41.5)	54 (25.5)	12 (5.7)	0 (0.0)	212 (100.0)
전체		144 (30.1)	196 (41.0)	116 (24.3)	21 (4.4)	1 (0.2)	478 (100.0)
연령	20대	29 (21.8)	65 (48.9)	34 (25.6)	5 (3.8)	0 (0.0)	133 (100.0)
	30대	82 (34.0)	92 (38.2)	56 (23.2)	11 (4.6)	0 (0.0)	241 (100.0)
	40대이상	33 (31.7)	39 (37.5)	26 (25.0)	5 (4.8)	1 (1.0)	104 (100.0)
전체		144 (30.1)	196 (41.0)	116 (24.3)	21 (4.4)	1 (0.2)	478 (100.0)
대학원 과목 수료	비수료자	110 (28.5)	166 (43.0)	90 (23.3)	19 (4.9)	1 (0.3)	386 (100.0)
	수료자	34 (37.4)	30 (33.0)	25 (27.5)	2 (2.2)	0 (0.0)	91 (100.0)
전체		144 (30.2)	196 (41.1)	115 (24.1)	21 (4.4)	1 (0.2)	477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3범주) **	1+2학기	44 (25.9)	79 (46.5)	41 (24.1)	6 (3.5)	0 (0.0)	170 (100.0)
	3+4학기	40 (25.0)	71 (44.4)	39 (24.4)	9 (5.6)	1 (0.6)	160 (100.0)
	5학기이상	60 (40.8)	46 (31.3)	35 (23.8)	6 (4.1)	0 (0.0)	147 (100.0)
전체		144 (30.2)	196 (41.1)	115 (24.1)	21 (4.4)	1 (0.2)	477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44 (25.9)	79 (46.5)	41 (24.1)	6 (3.5)	0 (0.0)	170 (100.0)
	3+4학기	40 (25.0)	71 (44.4)	39 (24.4)	9 (5.6)	1 (0.6)	160 (100.0)
	5+6학기이상	26 (46.4)	16 (28.6)	10 (17.9)	4 (7.1)	0 (0.0)	56 (100.0)
	수료자	34 (37.4)	30 (33.0)	25 (27.5)	2 (2.2)	0 (0.0)	91 (100.0)
전체		144 (30.2)	196 (41.1)	115 (24.1)	21 (4.4)	1 (0.2)	477 (100.0)

주) *<0.1 / **<0.05 / ***<0.01

<표 V-125> 논문지도에 대한 만족도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하께서는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공 계열 *	인문계열	16 (23.5)	34 (50.0)	17 (25.0)	1 (1.5)	0 (0.0)	68 (100.0)
	사회+경영	46 (32.2)	47 (32.9)	44 (30.8)	6 (4.2)	0 (0.0)	143 (100.0)
	이학+공학	46 (29.7)	72 (46.5)	26 (16.8)	10 (6.5)	1 (0.6)	155 (100.0)
	농학+의학	9 (20.5)	20 (45.5)	13 (29.5)	2 (4.5)	0 (0.0)	44 (100.0)
	예체능+사범	27 (45.8)	20 (33.9)	10 (16.9)	2 (3.4)	0 (0.0)	59 (100.0)
전체		144 (30.7)	193 (41.2)	110 (23.5)	21 (4.5)	1 (0.2)	469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57 (41.6)	54 (39.4)	26 (19.0)	0 (0.0)	0 (0.0)	137 (100.0)
	대전충청	26 (31.0)	43 (51.2)	13 (15.5)	2 (2.4)	0 (0.0)	84 (100.0)
	호남	2 (2.9)	16 (22.9)	38 (54.3)	13 (18.6)	1 (1.4)	70 (100.0)
	강원제주	8 (33.3)	12 (50.0)	4 (16.7)	0 (0.0)	0 (0.0)	24 (100.0)
	영남	52 (31.7)	71 (43.3)	35 (21.3)	6 (3.7)	0 (0.0)	164 (100.0)
전체		145 (30.3)	196 (40.9)	116 (24.2)	21 (4.4)	1 (0.2)	479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48 (24.9)	88 (45.6)	47 (24.4)	10 (5.2)	0 (0.0)	193 (100.0)
	사립대학	97 (33.9)	108 (37.8)	69 (24.1)	11 (3.8)	1 (0.3)	286 (100.0)
전체		145 (30.3)	196 (40.9)	116 (24.2)	21 (4.4)	1 (0.2)	479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104 (32.0)	124 (38.2)	79 (24.3)	17 (5.2)	1 (0.3)	325 (100.0)
	시간제	41 (26.8)	71 (46.4)	37 (24.2)	4 (2.6)	0 (0.0)	153 (100.0)
전체		145 (30.3)	195 (40.8)	116 (24.3)	21 (4.4)	1 (0.2)	478 (100.0)

주) *<0.1 / **<0.05 / ***<0.01

바) 논문심사과정에 대한 의견

대학원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공정하다”는 평가의견은 80.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는 유보의견 15.2%와 “공정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의견이 4.2%로 나타나 이들 평가의견을 합하면 약 20% 정도의 응답자들이 현재의 논문심사절차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하거나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26> 논문심사과정의 공정성(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공정하다	92	19.4
공정한 편이다	291	61.3
그저 그렇다	72	15.2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16	3.4
전혀 공정하지 않다	4	.8
합계	475	100.0

결측: 4명(0.8%)

논문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 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원의 소재지역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지역 소재 대학원의 대학원생들이 논문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7> 논문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공정하다	공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37 (25.2)	91 (61.9)	15 (10.2)	3 (2.0)	1 (0.7)	147 (100.0)
	중규모	45 (16.1)	168 (60.0)	53 (18.9)	12 (4.3)	2 (0.7)	280 (100.0)
	소규모	10 (20.8)	32 (66.7)	4 (8.3)	1 (2.1)	1 (2.1)	48 (100.0)
전체		92 (19.4)	291 (61.3)	72 (15.2)	16 (3.4)	4 (0.8)	475 (100.0)
성별	남	55 (20.7)	159 (59.8)	42 (15.8)	6 (2.3)	4 (1.5)	266 (100.0)
	여	36 (17.3)	132 (63.5)	30 (14.4)	10 (4.8)	0 (0.0)	208 (100.0)
전체		91 (19.2)	291 (61.4)	72 (15.2)	16 (3.4)	4 (0.8)	474 (100.0)
연령	20대	22 (16.5)	78 (58.6)	29 (21.8)	3 (2.3)	1 (0.8)	133 (100.0)
	30대	50 (20.9)	151 (63.2)	26 (10.9)	10 (4.2)	2 (0.8)	239 (100.0)
	40대이상	19 (18.6)	62 (60.8)	17 (16.7)	3 (2.9)	1 (1.0)	102 (100.0)
전체		91 (19.2)	291 (61.4)	72 (15.2)	16 (3.4)	4 (0.8)	474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69 (18.1)	238 (62.3)	62 (16.2)	11 (2.9)	2 (0.5)	382 (100.0)
	수료자	22 (24.2)	53 (58.2)	9 (9.9)	5 (5.5)	2 (2.2)	91 (100.0)
전체		91 (19.2)	291 (61.5)	71 (15.0)	16 (3.4)	4 (0.8)	473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29 (17.1)	107 (62.9)	29 (17.1)	5 (2.9)	0 (0.0)	170 (100.0)
	3+4학기	24 (15.4)	101 (64.7)	25 (16.0)	4 (2.6)	2 (1.3)	156 (100.0)
	5+6학기이상	16 (28.6)	30 (53.6)	8 (14.3)	2 (3.6)	0 (0.0)	56 (100.0)
	수료자	22 (24.2)	53 (58.2)	9 (9.9)	5 (5.5)	2 (2.2)	91 (100.0)
전체		91 (19.2)	291 (61.5)	71 (15.0)	16 (3.4)	4 (0.8)	473 (100.0)

주) *<0.1 / **<0.05 / ***<0.01

<표 V-127> 논문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 대학원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공정하다	공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	
전공 계열	인문계열	12 (18.2)	45 (68.2)	7 (10.6)	2 (3.0)	0 (0.0)	66 (100.0)
	사회+경영	29 (20.6)	83 (58.9)	27 (19.1)	2 (1.4)	0 (0.0)	141 (100.0)
	이학+공학	33 (21.3)	92 (59.4)	24 (15.5)	4 (2.6)	2 (1.3)	155 (100.0)
	농학+의학	4 (9.1)	27 (61.4)	9 (20.5)	3 (6.8)	1 (2.3)	44 (100.0)
	예체능+사범	13 (22.0)	36 (61.0)	5 (8.5)	5 (8.5)	0 (0.0)	59 (100.0)
전체		91 (19.6)	283 (60.9)	72 (15.5)	16 (3.4)	3 (0.6)	465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33 (24.8)	88 (66.2)	10 (7.5)	2 (1.5)	0 (0.0)	133 (100.0)
	대전충청	19 (22.6)	54 (64.3)	6 (7.1)	2 (2.4)	3 (3.6)	84 (100.0)
	호남	2 (2.9)	27 (38.6)	31 (44.3)	10 (14.3)	0 (0.0)	70 (100.0)
	강원제주	5 (20.8)	17 (70.8)	2 (8.3)	0 (0.0)	0 (0.0)	24 (100.0)
	영남	33 (20.1)	105 (64.0)	23 (14.0)	2 (1.2)	1 (0.6)	164 (100.0)
전체		92 (19.4)	291 (61.3)	72 (15.2)	16 (3.4)	4 (0.8)	475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33 (24.8)	88 (66.2)	10 (7.5)	2 (1.5)	0 (0.0)	133 (100.0)
	비수도권	59 (17.3)	203 (59.4)	62 (18.1)	14 (4.1)	4 (1.2)	342 (100.0)
전체		92 (19.4)	291 (61.3)	72 (15.2)	16 (3.4)	4 (0.8)	475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33 (17.1)	117 (60.6)	32 (16.6)	9 (4.7)	2 (1.0)	193 (100.0)
	사립대학	59 (20.9)	174 (61.7)	40 (14.2)	7 (2.5)	2 (0.7)	282 (100.0)
전체		92 (19.4)	291 (61.3)	72 (15.2)	16 (3.4)	4 (0.8)	475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65 (20.1)	195 (60.2)	49 (15.1)	13 (4.0)	2 (0.6)	324 (100.0)
	시간제	27 (18.0)	95 (63.3)	23 (15.3)	3 (2.0)	2 (1.3)	150 (100.0)
전체		92 (19.4)	290 (61.2)	72 (15.2)	16 (3.4)	4 (0.8)	474 (100.0)

주) *<0.1 / **<0.05 / ***<0.01

사)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의 구성

대학원에서는 어떻게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는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 한다”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학원생이 희망하는 위원들로 구성 한다” 12.1%, “학과장이나 주임교수가 선정 한다” 9.6%,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정 한다”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원에서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은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구성 과정에서 이미 심사의 엄격성이 훼손될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28> 논문심사위원의 구성방법(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대학원생이 희망하는 위원들로 구성한다	57	12.1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한다	305	64.8
학과장이나 주임교수가 선정한다	45	9.6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	38	8.1
대학원 본부에서 선정하여 통보한다	4	0.8
기타	22	4.7
합계	471	100.0

결측: 8명(1.7%)

논문심사위원의 구성방법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 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성별, 연령, 전공계열, 대학원 소재지역 및 설립유형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9> 논문심사위원의 구성방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은 논문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전 체
		대학원 생이 희망하는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도 교수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한다	학과장 이나 주임 교수가 선정한다	학과 교수회의 에서 선정한다	대학원 본부에서 선정하여 통보한다	기타	
대학원 규모**	대규모	27 (18.4)	91 (61.9)	6 (4.1)	13 (8.8)	0 (0.0)	10 (6.8)	147 (100.0)
	중규모	27 (9.8)	180 (65.2)	35 (12.7)	23 (8.3)	4 (1.4)	7 (2.5)	276 (100.0)
	소규모	3 (6.3)	34 (70.8)	4 (8.3)	2 (4.2)	0 (0.0)	5 (10.4)	48 (100.0)
전체		57 (12.1)	305 (64.8)	45 (9.6)	38 (8.1)	4 (0.8)	22 (4.7)	471 (100.0)
성별*	남	32 (12.1)	162 (61.4)	30 (11.4)	26 (9.8)	4 (1.5)	10 (3.8)	264 (100.0)
	여	25 (12.1)	142 (68.9)	15 (7.3)	12 (5.8)	0 (0.0)	12 (5.8)	206 (100.0)
전체		57 (12.1)	304 (64.7)	45 (9.6)	38 (8.1)	4 (0.9)	22 (4.7)	470 (100.0)
연령**	20대	21 (15.8)	93 (69.9)	13 (9.8)	3 (2.3)	1 (0.8)	2 (1.5)	133 (100.0)
	30대	28 (11.8)	158 (66.4)	17 (7.1)	20 (8.4)	2 (0.8)	13 (5.5)	238 (100.0)
	40대이상	8 (8.1)	53 (53.5)	15 (15.2)	15 (15.2)	1 (1.0)	7 (7.1)	99 (100.0)
전체		57 (12.1)	304 (64.7)	45 (9.6)	38 (8.1)	4 (0.9)	22 (4.7)	470 (100.0)
대학원 과 수료	비수료자	44 (11.6)	236 (62.1)	42 (11.1)	34 (8.9)	4 (1.1)	20 (5.3)	380 (100.0)
	수료자	13 (14.6)	67 (75.3)	3 (3.4)	4 (4.5)	0 (0.0)	2 (2.2)	89 (100.0)
전체		57 (12.2)	303 (64.6)	45 (9.6)	38 (8.1)	4 (0.9)	22 (4.7)	469 (100.0)
대학원 수 학기 (4범주)	1+2학기	20 (12.0)	103 (61.7)	18 (10.8)	14 (8.4)	1 (0.6)	11 (6.6)	167 (100.0)
	3+4학기	16 (10.1)	98 (62.0)	19 (12.0)	13 (8.2)	3 (1.9)	9 (5.7)	158 (100.0)
	5+6학기이 상	8 (14.5)	35 (63.6)	5 (9.1)	7 (12.7)	0 (0.0)	0 (0.0)	55 (100.0)
	수료자	13 (14.6)	67 (75.3)	3 (3.4)	4 (4.5)	0 (0.0)	2 (2.2)	89 (100.0)
전체		57 (12.2)	303 (64.6)	45 (9.6)	38 (8.1)	4 (0.9)	22 (4.7)	469 (100.0)

주) *<0.1 / **<0.05 / ***<0.01

<표 V-129> 논문심사위원의 구성방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 대학원은 논문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전 체
		대학원 생이 희망하는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도 교수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한다	학과장 이나 주임 교수가 선정한다	학과 교수 회의에서 선정한다	대학원 본부에서 선정하여 통보한다	기 타	
전 공 계 열 **	인문계열	3 (4.7)	44 (68.8)	7 (10.9)	5 (7.8)	0 (0.0)	5 (7.8)	64 (100.0)
	사회+경영	20 (14.0)	78 (54.5)	17 (11.9)	15 (10.5)	1 (0.7)	12 (8.4)	143 (100.0)
	이학+공학	25 (16.3)	104 (68.0)	9 (5.9)	11 (7.2)	2 (1.3)	2 (1.3)	153 (100.0)
	농학+의학	3 (7.0)	34 (79.1)	3 (7.0)	0 (0.0)	0 (0.0)	3 (7.0)	43 (100.0)
	예체능+사범	4 (6.8)	44 (74.6)	6 (10.2)	5 (8.5)	0 (0.0)	0 (0.0)	59 (100.0)
전체		55 (11.9)	304 (65.8)	42 (9.1)	36 (7.8)	3 (0.6)	22 (4.8)	462 (100.0)
대 학 원 소 재 지 역 **	서울경기	21 (15.8)	82 (61.7)	10 (7.5)	10 (7.5)	0 (0.0)	10 (7.5)	133 (100.0)
	대전충청	4 (4.8)	58 (69.0)	7 (8.3)	9 (10.7)	3 (3.6)	3 (3.6)	84 (100.0)
	호남	3 (4.3)	46 (65.7)	16 (22.9)	2 (2.9)	1 (1.4)	2 (2.9)	70 (100.0)
	강원제주	2 (8.3)	15 (62.5)	3 (12.5)	2 (8.3)	0 (0.0)	2 (8.3)	24 (100.0)
	영남	27 (16.9)	104 (65.0)	9 (5.6)	15 (9.4)	0 (0.0)	5 (3.1)	160 (100.0)
전체		57 (12.1)	305 (64.8)	45 (9.6)	38 (8.1)	4 (0.8)	22 (4.7)	471 (100.0)
대 학 원 설 립 유 형 **	국공립대학	15 (7.9)	132 (69.5)	17 (8.9)	20 (10.5)	0 (0.0)	6 (3.2)	190 (100.0)
	사립대학	42 (14.9)	173 (61.6)	28 (10.0)	18 (6.4)	4 (1.4)	16 (5.7)	281 (100.0)
전체		57 (12.1)	305 (64.8)	45 (9.6)	38 (8.1)	4 (0.8)	22 (4.7)	471 (100.0)
대 학 원 생 신 분	전일제	40 (12.4)	215 (66.8)	33 (10.2)	21 (6.5)	2 (0.6)	11 (3.4)	322 (100.0)
	시간제	17 (11.5)	89 (60.1)	12 (8.1)	17 (11.5)	2 (1.4)	11 (7.4)	148 (100.0)
전체		57 (12.1)	304 (64.7)	45 (9.6)	38 (8.1)	4 (0.9)	22 (4.7)	470 (100.0)

주) *<0.1 / **<0.05 / ***<0.01

논문심사위원 수는 5인으로 구성한다는 응답이 86.4%로 가장 많았고, 특히 5인의 심사위원 중 외부 심사위원의 수는 2인이라는 응답이 5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인만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응답도 27.7%나 되었다.

<표 V-130> 논문심사위원 중 외부 심사위원의 구성(대학원생 집단)

항 목		외부 심사위원 수					전 체
		1	2	3	4	5	
총 심사 위원 수	1	2 (40.0)	0 (0.0)	0 (0.0)	1 (20.0)	2 (40.0)	5 (100.0)
	2	4 (66.7)	2 (33.3)	0 (0.0)	0 (0.0)	0 (0.0)	6 (100.0)
	3	17 (89.5)	2 (10.5)	0 (0.0)	0 (0.0)	0 (0.0)	19 (100.0)
	4	9 (81.8)	2 (18.2)	0 (0.0)	0 (0.0)	0 (0.0)	11 (100.0)
	5	86 (27.7)	181 (58.4)	40 (12.9)	3 (1.0)	0 (0.0)	310 (100.0)
	6	6 (75.0)	1 (12.5)	1 (12.5)	0 (0.0)	0 (0.0)	8 (100.0)
전 체		124 (34.5)	188 (52.4)	41 (11.4)	4 (1.1)	2 (0.6)	359 (100.0)

아) 논문심사비의 적절성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심사비에 대한 의견에서는 “비싼 편”이라는 응답이 32.3%, 반면 “싼 편”이라는 응답은 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4.6%로 나타나 현재의 논문심사비에 대해 대학원생들은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31> 논문심사비의 적절성(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비싸다	38	8.1
비싼 편이다	114	24.2
보통이다	257	54.6
비싸지 않은 편이다	43	9.1
전혀 비싸지 않다	19	4.0
합계	471	100.0

결측: 8명(1.7%)

박사과정 논문심사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원학기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 소재지역, 대학원 설립유형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2> 박사과정 논문심사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의 논문심사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비싸다	비싸 편이다	보통이다	비싸지 않은 편이다	전혀 비싸지 않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14 (9.5)	39 (26.4)	77 (52.0)	16 (10.8)	2 (1.4)	148 (100.0)
	중규모	24 (8.7)	67 (24.4)	148 (53.8)	21 (7.6)	15 (5.5)	275 (100.0)
	소규모	0 (0.0)	8 (16.7)	32 (66.7)	6 (12.5)	2 (4.2)	48 (100.0)
전체		38 (8.1)	114 (24.2)	257 (54.6)	43 (9.1)	19 (4.0)	471 (100.0)
성별	남	18 (6.9)	58 (22.2)	144 (55.2)	28 (10.7)	13 (5.0)	261 (100.0)
	여	20 (9.6)	56 (26.8)	113 (54.1)	14 (6.7)	6 (2.9)	209 (100.0)
전체		38 (8.1)	114 (24.3)	257 (54.7)	42 (8.9)	19 (4.0)	470 (100.0)
연령	20대	12 (9.2)	37 (28.2)	66 (50.4)	9 (6.9)	7 (5.3)	131 (100.0)
	30대	22 (9.3)	56 (23.6)	131 (55.3)	20 (8.4)	8 (3.4)	237 (100.0)
	40대이상	4 (3.9)	21 (20.6)	60 (58.8)	13 (12.7)	4 (3.9)	102 (100.0)
전체		38 (8.1)	114 (24.3)	257 (54.7)	42 (8.9)	19 (4.0)	470 (100.0)
대학원 과 수료	비수료자	29 (7.7)	88 (23.3)	210 (55.6)	35 (9.3)	16 (4.2)	378 (100.0)
	수료자	9 (9.9)	26 (28.6)	47 (51.6)	6 (6.6)	3 (3.3)	91 (100.0)
전체		38 (8.1)	114 (24.3)	257 (54.8)	41 (8.7)	19 (4.1)	469 (100.0)
대학원 인 수 학기 (4범주) **	1+2학기	16 (9.8)	46 (28.0)	84 (51.2)	13 (7.9)	5 (3.0)	164 (100.0)
	3+4학기	13 (8.1)	33 (20.6)	96 (60.0)	11 (6.9)	7 (4.4)	160 (100.0)
	5+6학기이상	0 (0.0)	9 (16.7)	30 (55.6)	11 (20.4)	4 (7.4)	54 (100.0)
	수료자	9 (9.9)	26 (28.6)	47 (51.6)	6 (6.6)	3 (3.3)	91 (100.0)
전체		38 (8.1)	114 (24.3)	257 (54.8)	41 (8.7)	19 (4.1)	469 (100.0)

주) *<0.1 / **<0.05 / ***<0.01

<표 V-132> 박사과정 논문심사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 대학원의 논문심사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비싸다	비싸 편이다	보통이다	비싸지 않은 편이다	전혀 비싸지 않다	
전체 공영 ***	인문계열	6 (9.2)	8 (12.3)	43 (66.2)	8 (12.3)	0 (0.0)	65 (100.0)
	사회+경영	7 (4.9)	34 (23.8)	81 (56.6)	14 (9.8)	7 (4.9)	143 (100.0)
	이학+공학	10 (6.6)	39 (25.8)	84 (55.6)	9 (6.0)	9 (6.0)	151 (100.0)
	농학+의학	8 (18.2)	15 (34.1)	19 (43.2)	2 (4.5)	0 (0.0)	44 (100.0)
	예체능+사범	7 (12.1)	14 (24.1)	24 (41.4)	10 (17.2)	3 (5.2)	58 (100.0)
전체		38 (8.2)	110 (23.9)	251 (54.4)	43 (9.3)	19 (4.1)	461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14 (10.4)	32 (23.7)	81 (60.0)	6 (4.4)	2 (1.5)	135 (100.0)
	대전충청	1 (1.2)	23 (27.7)	45 (54.2)	13 (15.7)	1 (1.2)	83 (100.0)
	호남	17 (24.3)	24 (34.3)	20 (28.6)	7 (10.0)	2 (2.9)	70 (100.0)
	강원제주	1 (4.3)	5 (21.7)	16 (69.6)	1 (4.3)	0 (0.0)	23 (100.0)
	영남	5 (3.1)	30 (18.8)	95 (59.4)	16 (10.0)	14 (8.8)	160 (100.0)
전체		38 (8.1)	114 (24.2)	257 (54.6)	43 (9.1)	19 (4.0)	471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14 (10.4)	32 (23.7)	81 (60.0)	6 (4.4)	2 (1.5)	135 (100.0)
	비수도권	24 (7.1)	82 (24.4)	176 (52.4)	37 (11.0)	17 (5.1)	336 (100.0)
전체		38 (8.1)	114 (24.2)	257 (54.6)	43 (9.1)	19 (4.0)	471 (100.0)
대학원 유형 ***	국공립대학	10 (5.3)	42 (22.1)	114 (60.0)	22 (11.6)	2 (1.1)	190 (100.0)
	사립대학	28 (10.0)	72 (25.6)	143 (50.9)	21 (7.5)	17 (6.0)	281 (100.0)
전체		38 (8.1)	114 (24.2)	257 (54.6)	43 (9.1)	19 (4.0)	471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25 (7.8)	84 (26.1)	170 (52.8)	32 (9.9)	11 (3.4)	322 (100.0)
	시간제	13 (8.8)	30 (20.3)	86 (58.1)	11 (7.4)	8 (5.4)	148 (100.0)
전체		38 (8.1)	114 (24.3)	256 (54.5)	43 (9.1)	19 (4.0)	470 (100.0)

주) *<0.1 / **<0.05 / ***<0.01

자) 등록금의 적절성

대학원의 등록금에 대한 의견에서 “비싸다”는 의견은 52.7%인 반면 “비싸지 않다”는 의견은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라는 의견도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3> 등록금의 적절성(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비싸다	99	20.8
비싼 편이다	152	31.9
보통이다	164	34.4
비싸지 않은 편이다	51	10.7
전혀 비싸지 않다	11	2.3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대학원생의 등록금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원의 규모, 성별, 연령,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원의 설립유형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원일수록,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일수록 등록금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4> 등록금의 적절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의 등록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비싸다	비싼 편이다	보통이다	비싸지 않은 편이다	전혀 비싸지 않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41 (27.5)	49 (32.9)	41 (27.5)	16 (10.7)	2 (1.3)	149 (100.0)
	중규모	58 (20.7)	88 (31.4)	101 (36.1)	25 (8.9)	8 (2.9)	280 (100.0)
	소규모	0 (0.0)	15 (31.3)	22 (45.8)	10 (20.8)	1 (2.1)	48 (100.0)
전체		99 (20.8)	152 (31.9)	164 (34.4)	51 (10.7)	11 (2.3)	477 (100.0)
성별 ***	남	35 (13.2)	87 (32.8)	99 (37.4)	34 (12.8)	10 (3.8)	265 (100.0)
	여	64 (30.3)	65 (30.8)	65 (30.8)	16 (7.6)	1 (0.5)	211 (100.0)
전체		99 (20.8)	152 (31.9)	164 (34.5)	50 (10.5)	11 (2.3)	476 (100.0)
연령 ***	20대	29 (21.8)	43 (32.3)	39 (29.3)	18 (13.5)	4 (3.0)	133 (100.0)
	30대	57 (23.8)	82 (34.2)	69 (28.7)	26 (10.8)	6 (2.5)	240 (100.0)
	40대이상	13 (12.6)	27 (26.2)	55 (53.4)	7 (6.8)	1 (1.0)	103 (100.0)
전체		99 (20.8)	152 (31.9)	163 (34.2)	51 (10.7)	11 (2.3)	476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78 (20.3)	121 (31.5)	134 (34.9)	41 (10.7)	10 (2.6)	384 (100.0)
	수료자	21 (23.1)	30 (33.0)	29 (31.9)	10 (11.0)	1 (1.1)	91 (100.0)
전체		99 (20.8)	151 (31.8)	163 (34.3)	51 (10.7)	11 (2.3)	475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37 (21.8)	53 (31.2)	59 (34.7)	20 (11.8)	1 (0.6)	170 (100.0)
	3+4학기	34 (21.4)	55 (34.6)	52 (32.7)	13 (8.2)	5 (3.1)	159 (100.0)
	5+6학기이상	7 (12.7)	13 (23.6)	23 (41.8)	8 (14.5)	4 (7.3)	55 (100.0)
	수료자	21 (23.1)	30 (33.0)	29 (31.9)	10 (11.0)	1 (1.1)	91 (100.0)
전체		99 (20.8)	151 (31.8)	163 (34.3)	51 (10.7)	11 (2.3)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34> 등록금의 적절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 대학원의 등록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비싸다	비싸 편이다	보통이다	비싸지 않은 편이다	전혀 비싸지 않다	
전체 공영	인문계열	18 (26.5)	19 (27.9)	22 (32.4)	8 (11.8)	1 (1.5)	68 (100.0)
	사회+경영	21 (14.7)	50 (35.0)	56 (39.2)	14 (9.8)	2 (1.4)	143 (100.0)
	이학+공학	31 (20.3)	48 (31.4)	56 (36.6)	12 (7.8)	6 (3.9)	153 (100.0)
	농학+의학	10 (22.7)	16 (36.4)	13 (29.5)	5 (11.4)	0 (0.0)	44 (100.0)
	예체능+사범	16 (27.1)	14 (23.7)	15 (25.4)	12 (20.3)	2 (3.4)	59 (100.0)
전체		96 (20.6)	147 (31.5)	162 (34.7)	51 (10.9)	11 (2.4)	467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45 (32.8)	55 (40.1)	35 (25.5)	2 (1.5)	0 (0.0)	137 (100.0)
	대전충청	12 (14.3)	24 (28.6)	26 (31.0)	20 (23.8)	2 (2.4)	84 (100.0)
	호남	26 (37.1)	24 (34.3)	15 (21.4)	4 (5.7)	1 (1.4)	70 (100.0)
	강원제주	2 (8.3)	4 (16.7)	15 (62.5)	3 (12.5)	0 (0.0)	24 (100.0)
	영남	14 (8.6)	45 (27.8)	73 (45.1)	22 (13.6)	8 (4.9)	162 (100.0)
전체		99 (20.8)	152 (31.9)	164 (34.4)	51 (10.7)	11 (2.3)	477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45 (32.8)	55 (40.1)	35 (25.5)	2 (1.5)	0 (0.0)	137 (100.0)
	비수도권	54 (15.9)	97 (28.5)	129 (37.9)	49 (14.4)	11 (3.2)	340 (100.0)
전체		99 (20.8)	152 (31.9)	164 (34.4)	51 (10.7)	11 (2.3)	477 (100.0)
대학원 설립형태 ***	국공립대학	17 (8.8)	45 (23.3)	92 (47.7)	35 (18.1)	4 (2.1)	193 (100.0)
	사립대학	82 (28.9)	107 (37.7)	72 (25.4)	16 (5.6)	7 (2.5)	284 (100.0)
전체		99 (20.8)	152 (31.9)	164 (34.4)	51 (10.7)	11 (2.3)	477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69 (21.3)	106 (32.7)	106 (32.7)	35 (10.8)	8 (2.5)	324 (100.0)
	시간제	30 (19.7)	46 (30.3)	57 (37.5)	16 (10.5)	3 (2.0)	152 (100.0)
전체		99 (20.8)	152 (31.9)	163 (34.2)	51 (10.7)	11 (2.3)	476 (100.0)

주) *<0.1 / **<0.05 / ***<0.01

차) 석·박사통합과정에 대한 의견

대학원의 석·박사 통합과정이 대학원생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를 설문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의견은 43.9% 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의견은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응답이 3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석·박사 통합과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실제 약 절반 이상의 대학원생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35> 석·박사통합과정에 대한 의견(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32	6.7
도움이 되는 편이다	178	37.2
그저 그렇다	187	39.1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54	11.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7	5.6
합계	478	100.0

결측: 1명(0.2%)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 집단의 특성을 보면 성별, 연령, 대학원과정 수료여부, 대학원 학기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 소재지역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계열에서는 이학·공학계열과 예체능·사범계열의 전공자들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36>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대학원의 석박사 통합과정이 대학원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별 ***	남	26 (9.8)	106 (39.8)	94 (35.3)	24 (9.0)	16 (6.0)	266 (100.0)
	여	6 (2.8)	72 (34.1)	92 (43.6)	30 (14.2)	11 (5.2)	211 (100.0)
전체		32 (6.7)	178 (37.3)	186 (39.0)	54 (11.3)	27 (5.7)	477 (100.0)
연령 ***	20대	7 (5.3)	62 (46.6)	43 (32.3)	10 (7.5)	11 (8.3)	133 (100.0)
	30대	18 (7.5)	68 (28.2)	106 (44.0)	34 (14.1)	15 (6.2)	241 (100.0)
	40대이상	7 (6.8)	48 (46.6)	38 (36.9)	9 (8.7)	1 (1.0)	103 (100.0)
전체		32 (6.7)	178 (37.3)	187 (39.2)	53 (11.1)	27 (5.7)	477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27 (7.0)	139 (36.1)	151 (39.2)	44 (11.4)	24 (6.2)	385 (100.0)
	수료자	5 (5.5)	38 (41.8)	36 (39.6)	9 (9.9)	3 (3.3)	91 (100.0)
전체		32 (6.7)	177 (37.2)	187 (39.3)	53 (11.1)	27 (5.7)	476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11 (6.5)	69 (40.8)	66 (39.1)	17 (10.1)	6 (3.6)	169 (100.0)
	3+4학기	10 (6.3)	51 (31.9)	62 (38.8)	26 (16.3)	11 (6.9)	160 (100.0)
	5+6학기이상	6 (10.7)	19 (33.9)	23 (41.1)	1 (1.8)	7 (12.5)	56 (100.0)
	수료자	5 (5.5)	38 (41.8)	36 (39.6)	9 (9.9)	3 (3.3)	91 (100.0)
전체		32 (6.7)	177 (37.2)	187 (39.3)	53 (11.1)	27 (5.7)	476 (100.0)

주) *<0.1 / **<0.05 / ***<0.01

<표 V-136>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대학원의 석박사 통합과정이 대학원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공 계열 ***	인문계열	1 (1.5)	18 (26.9)	31 (46.3)	17 (25.4)	0 (0.0)	67 (100.0)
	사회+경영	5 (3.5)	47 (32.9)	61 (42.7)	23 (16.1)	7 (4.9)	143 (100.0)
	이학+공학	15 (9.7)	69 (44.5)	55 (35.5)	5 (3.2)	11 (7.1)	155 (100.0)
	농학+의학	1 (2.3)	16 (36.4)	19 (43.2)	4 (9.1)	4 (9.1)	44 (100.0)
	예체능+사범	10 (16.9)	24 (40.7)	16 (27.1)	5 (8.5)	4 (6.8)	59 (100.0)
전체		32 (6.8)	174 (37.2)	182 (38.9)	54 (11.5)	26 (5.6)	468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8 (5.9)	44 (32.4)	58 (42.6)	18 (13.2)	8 (5.9)	136 (100.0)
	대전충청	7 (8.3)	38 (45.2)	24 (28.6)	8 (9.5)	7 (8.3)	84 (100.0)
	호남	5 (7.1)	40 (57.1)	18 (25.7)	5 (7.1)	2 (2.9)	70 (100.0)
	강원제주	1 (4.2)	11 (45.8)	9 (37.5)	2 (8.3)	1 (4.2)	24 (100.0)
	영남	11 (6.7)	45 (27.4)	78 (47.6)	21 (12.8)	9 (5.5)	164 (100.0)
전체		32 (6.7)	178 (37.2)	187 (39.1)	54 (11.3)	27 (5.6)	478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10 (5.2)	67 (34.7)	87 (45.1)	19 (9.8)	10 (5.2)	193 (100.0)
	사립대학	22 (7.7)	111 (38.9)	100 (35.1)	35 (12.3)	17 (6.0)	285 (100.0)
전체		32 (6.7)	178 (37.2)	187 (39.1)	54 (11.3)	27 (5.6)	478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23 (7.1)	120 (36.9)	126 (38.8)	38 (11.7)	18 (5.5)	325 (100.0)
	시간제	9 (5.9)	57 (37.5)	61 (40.1)	16 (10.5)	9 (5.9)	152 (100.0)
전체		32 (6.7)	177 (37.1)	187 (39.2)	54 (11.3)	27 (5.7)	477 (100.0)

주) *<0.1 / **<0.05 / ***<0.01

카) 대학원의 인재양성 역할

대학원의 학위과정이 융·복합 학문분야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고급 인재 배출에 적합한지를 설문한 결과 “적합하다”는 평가의견은 43.6%인 반면 “적합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의견은 10.1%로 나타났다. 특히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6.4%에 달하는 것은 대학원생들이 융·복합 학문분야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한 이해도 불분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융·복합 학문에 대한 논의가 보편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37> 대학원의 인재양성 역할(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적합하다	28	5.9
적합한 편이다	180	37.7
그저 그렇다	222	46.4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42	8.8
전혀 적합하지 않다	6	1.3
합계	478	100.0

결측: 1명(0.2%)

융·복합 학문과정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원 설립유형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융복합적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의견을 표시하였다. 특히 전공별로는 이학·공학계열과 예체능·사범계열 전공자들이 융·복합적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38> 대학원의 인재양성 역할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융복합 학문분야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인재 배출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 다	그저 그렇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17 (11.4)	49 (32.9)	65 (43.6)	16 (10.7)	2 (1.3)	149 (100.0)
	중규모	9 (3.2)	106 (37.7)	142 (50.5)	21 (7.5)	3 (1.1)	281 (100.0)
	소규모	2 (4.2)	25 (52.1)	15 (31.3)	5 (10.4)	1 (2.1)	48 (100.0)
전체		28 (5.9)	180 (37.7)	222 (46.4)	42 (8.8)	6 (1.3)	478 (100.0)
성별	남	16 (6.0)	104 (39.1)	116 (43.6)	26 (9.8)	4 (1.5)	266 (100.0)
	여	12 (5.7)	76 (36.0)	105 (49.8)	16 (7.6)	2 (0.9)	211 (100.0)
전체		28 (5.9)	180 (37.7)	221 (46.3)	42 (8.8)	6 (1.3)	477 (100.0)
연령	20대	2 (1.5)	53 (39.8)	68 (51.1)	8 (6.0)	2 (1.5)	133 (100.0)
	30대	17 (7.1)	83 (34.4)	114 (47.3)	24 (10.0)	3 (1.2)	241 (100.0)
	40대이상	9 (8.7)	43 (41.7)	40 (38.8)	10 (9.7)	1 (1.0)	103 (100.0)
전체		28 (5.9)	179 (37.5)	222 (46.5)	42 (8.8)	6 (1.3)	477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22 (5.7)	146 (37.9)	174 (45.2)	37 (9.6)	6 (1.6)	385 (100.0)
	수료자	6 (6.6)	33 (36.3)	47 (51.6)	5 (5.5)	0 (0.0)	91 (100.0)
전체		28 (5.9)	179 (37.6)	221 (46.4)	42 (8.8)	6 (1.3)	476 (100.0)
대학원 입학 학기 (4범주)	1+2학기	8 (4.7)	61 (36.1)	80 (47.3)	19 (11.2)	1 (0.6)	169 (100.0)
	3+4학기	11 (6.9)	61 (38.1)	73 (45.6)	12 (7.5)	3 (1.9)	160 (100.0)
	5+6학기이상	3 (5.4)	24 (42.9)	21 (37.5)	6 (10.7)	2 (3.6)	56 (100.0)
	수료자	6 (6.6)	33 (36.3)	47 (51.6)	5 (5.5)	0 (0.0)	91 (100.0)
전체		28 (5.9)	179 (37.6)	221 (46.4)	42 (8.8)	6 (1.3)	476 (100.0)

주) *<0.1 / **<0.05 / ***<0.01

<표 V-138> 대학원의 인재양성 역할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 대학원의 학위과정(이)응용복합 학문분야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고급 인재 배출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 다	그저 그렇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전공 계열 **	인문계열	7 (10.4)	19 (28.4)	33 (49.3)	7 (10.4)	1 (1.5)	67 (100.0)
	사회+경영	8 (5.6)	46 (32.2)	70 (49.0)	19 (13.3)	0 (0.0)	143 (100.0)
	이학+공학	7 (4.5)	68 (43.9)	71 (45.8)	7 (4.5)	2 (1.3)	155 (100.0)
	농학+의학	0 (0.0)	18 (40.9)	20 (45.5)	6 (13.6)	0 (0.0)	44 (100.0)
	예체능+사범	6 (10.2)	27 (45.8)	21 (35.6)	3 (5.1)	2 (3.4)	59 (100.0)
전체		28 (6.0)	178 (38.0)	215 (45.9)	42 (9.0)	5 (1.1)	468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7 (12.5)	57 (41.9)	47 (34.6)	15 (11.0)	0 (0.0)	136 (100.0)
	대전충청	3 (3.6)	37 (44.0)	32 (38.1)	8 (9.5)	4 (4.8)	84 (100.0)
	호남	1 (1.4)	21 (30.0)	41 (58.6)	7 (10.0)	0 (0.0)	70 (100.0)
	강원제주	1 (4.2)	6 (25.0)	14 (58.3)	3 (12.5)	0 (0.0)	24 (100.0)
	영남	6 (3.7)	59 (36.0)	88 (53.7)	9 (5.5)	2 (1.2)	164 (100.0)
전체		28 (5.9)	180 (37.7)	222 (46.4)	42 (8.8)	6 (1.3)	478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17 (12.5)	57 (41.9)	47 (34.6)	15 (11.0)	0 (0.0)	136 (100.0)
	비수도권	11 (3.2)	123 (36.0)	175 (51.2)	27 (7.9)	6 (1.8)	342 (100.0)
전체		28 (5.9)	180 (37.7)	222 (46.4)	42 (8.8)	6 (1.3)	478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	국공립대학	4 (2.1)	71 (36.8)	98 (50.8)	17 (8.8)	3 (1.6)	193 (100.0)
	사립대학	24 (8.4)	109 (38.2)	124 (43.5)	25 (8.8)	3 (1.1)	285 (100.0)
전체		28 (5.9)	180 (37.7)	222 (46.4)	42 (8.8)	6 (1.3)	478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22 (6.8)	115 (35.4)	151 (46.5)	34 (10.5)	3 (0.9)	325 (100.0)
	시간제	6 (3.9)	65 (42.8)	70 (46.1)	8 (5.3)	3 (2.0)	152 (100.0)
전체		28 (5.9)	180 (37.7)	221 (46.3)	42 (8.8)	6 (1.3)	477 (100.0)

주) *<0.1 / **<0.05 / ***<0.01

타)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운영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력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는 “찬성”의견이 53.3%이고 “반대”의견은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경우에도 보통이라는 회피적 응답이 39.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이 나타난 배경에서는 산학협력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관심의 부족을 보여준 응답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교육 수요자인 대학원생들은 기업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과 함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39>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운영(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적극 찬성	59	12.4
찬성	195	40.9
보통	189	39.6
반대	29	6.1
적극 반대	5	1.0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산학협력과정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대학원 학기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 소재 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대학원생의 신분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규모의 대학원에 재적중인 응답자, 전공계열별로는 농학·의학 전공자들이 산학협력 학위과정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V-140>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하는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력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체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적극 반대	
대학의 규모 **	대규모	24 (16.3)	61 (41.5)	48 (32.7)	10 (6.8)	4 (2.7)	147 (100.0)
	중규모	28 (9.9)	112 (39.7)	127 (45.0)	14 (5.0)	1 (0.4)	282 (100.0)
	소규모	7 (14.6)	22 (45.8)	14 (29.2)	5 (10.4)	0 (0.0)	48 (100.0)
전체		59 (12.4)	195 (40.9)	189 (39.6)	29 (6.1)	5 (1.0)	477 (100.0)
성별	남	36 (13.5)	114 (42.9)	100 (37.6)	13 (4.9)	3 (1.1)	266 (100.0)
	여	23 (11.0)	81 (38.6)	89 (42.4)	15 (7.1)	2 (1.0)	210 (100.0)
전체		59 (12.4)	195 (41.0)	189 (39.7)	28 (5.9)	5 (1.1)	476 (100.0)
연령	20대	10 (7.5)	58 (43.6)	56 (42.1)	9 (6.8)	0 (0.0)	133 (100.0)
	30대	36 (14.9)	93 (38.6)	90 (37.3)	18 (7.5)	4 (1.7)	241 (100.0)
	40대이상	13 (12.7)	44 (43.1)	42 (41.2)	2 (2.0)	1 (1.0)	102 (100.0)
전체		59 (12.4)	195 (41.0)	188 (39.5)	29 (6.1)	5 (1.1)	476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49 (12.7)	160 (41.5)	157 (40.7)	16 (4.1)	4 (1.0)	386 (100.0)
	수료자	10 (11.2)	35 (39.3)	30 (33.7)	13 (14.6)	1 (1.1)	89 (100.0)
전체		59 (12.4)	195 (41.1)	187 (39.4)	29 (6.1)	5 (1.1)	475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24 (14.1)	68 (40.0)	72 (42.4)	6 (3.5)	0 (0.0)	170 (100.0)
	3+4학기	14 (8.8)	64 (40.0)	70 (43.8)	8 (5.0)	4 (2.5)	160 (100.0)
	5+6학기이상	11 (19.6)	28 (50.0)	15 (26.8)	2 (3.6)	0 (0.0)	56 (100.0)
	수료자	10 (11.2)	35 (39.3)	30 (33.7)	13 (14.6)	1 (1.1)	89 (100.0)
전체		59 (12.4)	195 (41.1)	187 (39.4)	29 (6.1)	5 (1.1)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40>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하는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력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 체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적극 반대	
전 공 계 열	인문계열	6 (8.8)	25 (36.8)	32 (47.1)	5 (7.4)	0 (0.0)	68 (100.0)
	사회+경영	17 (11.9)	60 (42.0)	57 (39.9)	7 (4.9)	2 (1.4)	143 (100.0)
	이학+공학	20 (12.9)	72 (46.5)	50 (32.3)	13 (8.4)	0 (0.0)	155 (100.0)
	농 학+의학	4 (9.1)	13 (29.5)	23 (52.3)	2 (4.5)	2 (4.5)	44 (100.0)
	예체능+사범	10 (17.5)	21 (36.8)	23 (40.4)	2 (3.5)	1 (1.8)	57 (100.0)
전체		57 (12.2)	191 (40.9)	185 (39.6)	29 (6.2)	5 (1.1)	467 (100.0)
대 학 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26 (19.3)	59 (43.7)	43 (31.9)	5 (3.7)	2 (1.5)	135 (100.0)
	대전충청	8 (9.5)	40 (47.6)	30 (35.7)	6 (7.1)	0 (0.0)	84 (100.0)
	호남	4 (5.7)	20 (28.6)	44 (62.9)	2 (2.9)	0 (0.0)	70 (100.0)
	강원제주	2 (8.3)	12 (50.0)	9 (37.5)	0 (0.0)	1 (4.2)	24 (100.0)
	영남	19 (11.6)	64 (39.0)	63 (38.4)	16 (9.8)	2 (1.2)	164 (100.0)
전체		59 (12.4)	195 (40.9)	189 (39.6)	29 (6.1)	5 (1.0)	477 (100.0)
수 도 권 여 부 **	수도권	26 (19.3)	59 (43.7)	43 (31.9)	5 (3.7)	2 (1.5)	135 (100.0)
	비수도권	33 (9.6)	136 (39.8)	146 (42.7)	24 (7.0)	3 (0.9)	342 (100.0)
전체		59 (12.4)	195 (40.9)	189 (39.6)	29 (6.1)	5 (1.0)	477 (100.0)
대 학 원 설 립 유 형 *	국공립대학	16 (8.3)	78 (40.4)	80 (41.5)	16 (8.3)	3 (1.6)	193 (100.0)
	사립대학	43 (15.1)	117 (41.2)	109 (38.4)	13 (4.6)	2 (0.7)	284 (100.0)
전체		59 (12.4)	195 (40.9)	189 (39.6)	29 (6.1)	5 (1.0)	477 (100.0)
대 학 원 생 신 분 **	전일제	37 (11.5)	145 (44.9)	115 (35.6)	23 (7.1)	3 (0.9)	323 (100.0)
	시간제	22 (14.4)	50 (32.7)	74 (48.4)	5 (3.3)	2 (1.3)	153 (100.0)
전체		59 (12.4)	195 (41.0)	189 (39.7)	28 (5.9)	5 (1.1)	476 (100.0)

주) *<0.1 / **<0.05 / ***<0.01

산학협력 학위과정을 도입할 경우 수여할 학위유형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5.7%였고, “전문학위”를 수여하자는 의견이 41.3%로 비슷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술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13.1%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산학협력 학위과정을 통해 취득한 박사학위에 대해 “학술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원생들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41> 산학협력형 학위과정의 학위유형(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학술학위	56	13.1
전문학위	177	41.3
새로운 형태의 학위	196	45.7
합계	429	100.0

결측: 50명(10.4%)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도입시 학위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성별, 연령, 대학원 학기 이수수준, 전공 계열, 대학원 소재지역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고 이수학기가 높을수록 “학술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2>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학위유형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산학협력형 학위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수여할 학위유형은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학술 학위	전 문 학위	새로운 형태의 학위	
대 학 의 규 모	대규모	14 (10.4)	50 (37.3)	70 (52.2)	134 (100.0)
	중규모	37 (14.6)	108 (42.7)	108 (42.7)	253 (100.0)
	소규모	5 (11.9)	19 (45.2)	18 (42.9)	42 (100.0)
전체		56 (13.1)	177 (41.3)	196 (45.7)	429 (100.0)
성 별 **	남	39 (16.3)	100 (41.8)	100 (41.8)	239 (100.0)
	여	17 (9.0)	76 (40.2)	96 (50.8)	189 (100.0)
전체		56 (13.1)	176 (41.1)	196 (45.8)	428 (100.0)
연 령 **	20대	21 (16.9)	54 (43.5)	49 (39.5)	124 (100.0)
	30대	26 (12.3)	79 (37.3)	107 (50.5)	212 (100.0)
	40대이상	9 (9.7)	44 (47.3)	40 (43.0)	93 (100.0)
전체		56 (13.1)	177 (41.3)	196 (45.7)	429 (100.0)
대 학 원 과 정 수료	비수료자	49 (13.9)	148 (41.9)	156 (44.2)	353 (100.0)
	수료자	7 (9.3)	29 (38.7)	39 (52.0)	75 (100.0)
전체		56 (13.1)	177 (41.4)	195 (45.6)	428 (100.0)
대 학 원 이 수 학 기 (4범주) *	1+2학기	26 (16.9)	73 (47.4)	55 (35.7)	154 (100.0)
	3+4학기	18 (12.4)	50 (34.5)	77 (53.1)	145 (100.0)
	5+6학기이상	5 (9.3)	25 (46.3)	24 (44.4)	54 (100.0)
	수료자	7 (9.3)	29 (38.7)	39 (52.0)	75 (100.0)
전체		56 (13.1)	177 (41.4)	195 (45.6)	428 (100.0)

주) *<0.1 / **<0.05 / ***<0.01

<표 V-142> 산학협력 학위과정의 학위유형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산학협력형 학위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수여할 학위유형은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학술학위	전문학위	새로운 형태의 학위	
전공 계열 ***	인문계열	3 (5.0)	23 (38.3)	34 (56.7)	60 (100.0)
	사회+경영	14 (10.8)	55 (42.3)	61 (46.9)	130 (100.0)
	이학+공학	22 (15.6)	64 (45.4)	55 (39.0)	141 (100.0)
	농학+의학	14 (37.8)	8 (21.6)	15 (40.5)	37 (100.0)
	예체능+사범	3 (5.6)	24 (44.4)	27 (50.0)	54 (100.0)
전체		56 (13.3)	174 (41.2)	192 (45.5)	422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0 (7.9)	55 (43.3)	62 (48.8)	127 (100.0)
	대전충청	8 (10.8)	34 (45.9)	32 (43.2)	74 (100.0)
	호남	17 (26.2)	24 (36.9)	24 (36.9)	65 (100.0)
	강원제주	2 (9.1)	9 (40.9)	11 (50.0)	22 (100.0)
	영남	19 (13.5)	55 (39.0)	67 (47.5)	141 (100.0)
전체		56 (13.1)	177 (41.3)	196 (45.7)	429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24 (14.4)	71 (42.5)	72 (43.1)	167 (100.0)
	사립대학	32 (12.2)	106 (40.5)	124 (47.3)	262 (100.0)
전체		56 (13.1)	177 (41.3)	196 (45.7)	429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37 (12.8)	125 (43.1)	128 (44.1)	290 (100.0)
	시간제	19 (13.8)	52 (37.7)	67 (48.6)	138 (100.0)
전체		56 (13.1)	177 (41.4)	195 (45.6)	428 (100.0)

주) *<0.1 / **<0.05 / ***<0.01

파) 대학원 운영과정의 개선방안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대학원과 학부를 독립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견은 33.5% 인 반면 “반대”의견은 21.1%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이라는 중립적 평가의견이 45.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원과 학부독립이 대학원 발전에 대해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나타낸 반응으로 판단된다.

<표 V-143> 대학원과 학부의 독립에 대한 의견(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적극 반대	12	2.5
반대	89	18.6
보통	217	45.4
찬성	127	26.6
적극 찬성	33	6.9
합계	478	100.0

결측: 1명(0.2%)

대학원과 학부의 독립운영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성별, 연령, 대학과 학위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체능·사범 계열 전공자들이 학부와 독립운영에 적극적인 반면 이학·공학계열의 전공자들은 독립운영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4> 대학원과 학부의 독립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하는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대학원과 학부를 독립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대학의 규모	대규모	3 (2.0)	21 (14.1)	68 (45.6)	46 (30.9)	11 (7.4)	149 (100.0)
	중규모	9 (3.2)	59 (21.0)	133 (47.3)	62 (22.1)	18 (6.4)	281 (100.0)
	소규모	0 (0.0)	9 (18.8)	16 (33.3)	19 (39.6)	4 (8.3)	48 (100.0)
전체		12 (2.5)	89 (18.6)	217 (45.4)	127 (26.6)	33 (6.9)	478 (100.0)
성별 ***	남	12 (4.5)	62 (23.4)	113 (42.6)	59 (22.3)	19 (7.2)	265 (100.0)
	여	0 (0.0)	27 (12.7)	104 (49.1)	68 (32.1)	13 (6.1)	212 (100.0)
전체		12 (2.5)	89 (18.7)	217 (45.5)	127 (26.6)	32 (6.7)	477 (100.0)
연령 **	20대	2 (1.5)	34 (25.6)	68 (51.1)	24 (18.0)	5 (3.8)	133 (100.0)
	30대	6 (2.5)	35 (14.6)	110 (45.8)	68 (28.3)	21 (8.8)	240 (100.0)
	40대이상	4 (3.8)	19 (18.3)	39 (37.5)	35 (33.7)	7 (6.7)	104 (100.0)
전체		12 (2.5)	88 (18.4)	217 (45.5)	127 (26.6)	33 (6.9)	477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8 (2.1)	77 (19.9)	179 (46.4)	94 (24.4)	28 (7.3)	386 (100.0)
	수료자	4 (4.4)	11 (12.2)	37 (41.1)	33 (36.7)	5 (5.6)	90 (100.0)
전체		12 (2.5)	88 (18.5)	216 (45.4)	127 (26.7)	33 (6.9)	476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1 (0.6)	30 (17.6)	78 (45.9)	44 (25.9)	17 (10.0)	170 (100.0)
	3+4학기	6 (3.8)	32 (20.0)	76 (47.5)	36 (22.5)	10 (6.3)	160 (100.0)
	5+6학기이상	1 (1.8)	15 (26.8)	25 (44.6)	14 (25.0)	1 (1.8)	56 (100.0)
	수료자	4 (4.4)	11 (12.2)	37 (41.1)	33 (36.7)	5 (5.6)	90 (100.0)
전체		12 (2.5)	88 (18.5)	216 (45.4)	127 (26.7)	33 (6.9)	476 (100.0)

주) *<0.1 / **<0.05 / ***<0.01

<표 V-144> 대학원과 학부의 독립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하는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대학원과 학부를 독립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전공 계열 ***	인문계열	1 (1.5)	18 (26.5)	25 (36.8)	18 (26.5)	6 (8.8)	68 (100.0)
	사회+경영	2 (1.4)	18 (12.6)	68 (47.6)	48 (33.6)	7 (4.9)	143 (100.0)
	이학+공학	7 (4.5)	37 (24.0)	74 (48.1)	23 (14.9)	13 (8.4)	154 (100.0)
	농학+의학	1 (2.3)	3 (6.8)	24 (54.5)	15 (34.1)	1 (2.3)	44 (100.0)
	예체능+사범	1 (1.7)	13 (22.0)	21 (35.6)	18 (30.5)	6 (10.2)	59 (100.0)
전체		12 (2.6)	89 (19.0)	212 (45.3)	122 (26.1)	33 (7.1)	468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2 (1.5)	15 (10.9)	60 (43.8)	46 (33.6)	14 (10.2)	137 (100.0)
	대전충청	0 (0.0)	26 (31.0)	29 (34.5)	25 (29.8)	4 (4.8)	84 (100.0)
	호남	1 (1.4)	8 (11.4)	47 (67.1)	8 (11.4)	6 (8.6)	70 (100.0)
	강원제주	1 (4.3)	3 (13.0)	8 (34.8)	8 (34.8)	3 (13.0)	23 (100.0)
	영남	8 (4.9)	37 (22.6)	73 (44.5)	40 (24.4)	6 (3.7)	164 (100.0)
전체		12 (2.5)	89 (18.6)	217 (45.4)	127 (26.6)	33 (6.9)	478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2 (1.5)	15 (10.9)	60 (43.8)	46 (33.6)	14 (10.2)	137 (100.0)
	비수도권	10 (2.9)	74 (21.7)	157 (46.0)	81 (23.8)	19 (5.6)	341 (100.0)
전체		12 (2.5)	89 (18.6)	217 (45.4)	127 (26.6)	33 (6.9)	478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5 (2.6)	34 (17.7)	87 (45.3)	54 (28.1)	12 (6.3)	192 (100.0)
	사립대학	7 (2.4)	55 (19.2)	130 (45.5)	73 (25.5)	21 (7.3)	286 (100.0)
전체		12 (2.5)	89 (18.6)	217 (45.4)	127 (26.6)	33 (6.9)	478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10 (3.1)	60 (18.5)	142 (43.8)	88 (27.2)	24 (7.4)	324 (100.0)
	시간제	2 (1.3)	28 (18.3)	75 (49.0)	39 (25.5)	9 (5.9)	153 (100.0)
전체		12 (2.5)	88 (18.4)	217 (45.5)	127 (26.6)	33 (6.9)	477 (100.0)

주) *<0.1 / **<0.05 / ***<0.01

“대학 알리미”를 통해 대학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62.4%인 반면 “반대”의견은 5.0%에 불과하였다.

<표 V-145> “대학 알리미”의 운용에 대한 의견(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적극 반대	4	0.8
반대	20	4.2
보통	156	32.6
찬성	223	46.7
적극 찬성	75	15.7
합계	478	100.0

결측: 1명(0.2%)

정보공시제도에 따라 보편화 되고 있는 “대학 알리미”서비스의 활용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연령과 대학원생의 신분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 수록 정보공시제도의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시간제 대학원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낮았다.

<표 V-146> “대학 알리미”의 운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하는 “대학 알리미”를 통해 대학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대학의 규모	대규모	1 (0.7)	6 (4.0)	40 (26.8)	74 (49.7)	28 (18.8)	149 (100.0)
	중규모	3 (1.1)	14 (5.0)	99 (35.2)	121 (43.1)	44 (15.7)	281 (100.0)
	소규모	0 (0.0)	0 (0.0)	17 (35.4)	28 (58.3)	3 (6.3)	48 (100.0)
전체		4 (0.8)	20 (4.2)	156 (32.6)	223 (46.7)	75 (15.7)	478 (100.0)
성별	남	4 (1.5)	11 (4.2)	81 (30.6)	122 (46.0)	47 (17.7)	265 (100.0)
	여	0 (0.0)	9 (4.2)	75 (35.4)	101 (47.6)	27 (12.7)	212 (100.0)
전체		4 (0.8)	20 (4.2)	156 (32.7)	223 (46.8)	74 (15.5)	477 (100.0)
연령**	20대	0 (0.0)	5 (3.8)	42 (31.6)	66 (49.6)	20 (15.0)	133 (100.0)
	30대	1 (0.4)	7 (2.9)	82 (34.2)	104 (43.3)	46 (19.2)	240 (100.0)
	40대이상	3 (2.9)	8 (7.7)	32 (30.8)	52 (50.0)	9 (8.7)	104 (100.0)
전체		4 (0.8)	20 (4.2)	156 (32.7)	222 (46.5)	75 (15.7)	477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2 (0.5)	16 (4.1)	127 (32.9)	180 (46.6)	61 (15.8)	386 (100.0)
	수료자	2 (2.2)	3 (3.3)	29 (32.2)	42 (46.7)	14 (15.6)	90 (100.0)
전체		4 (0.8)	19 (4.0)	156 (32.8)	222 (46.6)	75 (15.8)	476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0 (0.0)	10 (5.9)	50 (29.4)	83 (48.8)	27 (15.9)	170 (100.0)
	3+4학기	2 (1.3)	4 (2.5)	57 (35.6)	72 (45.0)	25 (15.6)	160 (100.0)
	5+6학기이상	0 (0.0)	2 (3.6)	20 (35.7)	25 (44.6)	9 (16.1)	56 (100.0)
	수료자	2 (2.2)	3 (3.3)	29 (32.2)	42 (46.7)	14 (15.6)	90 (100.0)
전체		4 (0.8)	19 (4.0)	156 (32.8)	222 (46.6)	75 (15.8)	476 (100.0)

주) *<0.1 / **<0.05 / ***<0.01

<표 V-146> “대학 알리미”의 운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하는 “대학 알리미”를 통해 대학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전공 계열	인문계열	0 (0.0)	1 (1.5)	24 (35.3)	33 (48.5)	10 (14.7)	68 (100.0)
	사회+경영	2 (1.4)	8 (5.6)	47 (32.9)	69 (48.3)	17 (11.9)	143 (100.0)
	이학+공학	2 (1.3)	8 (5.2)	44 (28.6)	75 (48.7)	25 (16.2)	154 (100.0)
	농학+의학	0 (0.0)	1 (2.3)	18 (40.9)	18 (40.9)	7 (15.9)	44 (100.0)
	예체능+사범	0 (0.0)	2 (3.4)	16 (27.1)	26 (44.1)	15 (25.4)	59 (100.0)
전체		4 (0.9)	20 (4.3)	149 (31.8)	221 (47.2)	74 (15.8)	468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경기	0 (0.0)	3 (2.2)	42 (30.7)	67 (48.9)	25 (18.2)	137 (100.0)
	대전충청	1 (1.2)	4 (4.8)	27 (32.1)	41 (48.8)	11 (13.1)	84 (100.0)
	호남	1 (1.4)	4 (5.7)	35 (50.0)	18 (25.7)	12 (17.1)	70 (100.0)
	강원제주	0 (0.0)	2 (8.7)	4 (17.4)	13 (56.5)	4 (17.4)	23 (100.0)
	영남	2 (1.2)	7 (4.3)	48 (29.3)	84 (51.2)	23 (14.0)	164 (100.0)
전체		4 (0.8)	20 (4.2)	156 (32.6)	223 (46.7)	75 (15.7)	478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1 (0.5)	9 (4.7)	66 (34.4)	89 (46.4)	27 (14.1)	192 (100.0)
	사립대학	3 (1.0)	11 (3.8)	90 (31.5)	134 (46.9)	48 (16.8)	286 (100.0)
전체		4 (0.8)	20 (4.2)	156 (32.6)	223 (46.7)	75 (15.7)	478 (100.0)
대학원생 신분 **	전일제	4 (1.2)	10 (3.1)	96 (29.6)	158 (48.8)	56 (17.3)	324 (100.0)
	시간제	0 (0.0)	10 (6.5)	60 (39.2)	64 (41.8)	19 (12.4)	153 (100.0)
전체		4 (0.8)	20 (4.2)	156 (32.7)	222 (46.5)	75 (15.7)	477 (100.0)

주) *<0.1 / **<0.05 / ***<0.01

대학원에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50.0%인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0.2%에 불과하였으며, 유모적인 의견은 39.7%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원의 평가인증제 도입에 대해 대학원생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47> 대학원 평가인증제에 대한 의견(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적극 반대	5	1.0
반대	44	9.2
보통	190	39.7
찬성	191	40.0
적극 찬성	48	10.0
합계	478	100.0

결측: 1명(0.2%)

대학원 평가인증제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대학과 학위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대학원생의 신분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규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반면 수도권지역 소재 대학원생들이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대학의 설립 유형면에서는 사립대의 대학원생들이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고, 전일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48> 대학원 평가인증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하는 대학원에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대학의 규모 ***	대규모	1 (0.7)	13 (8.7)	40 (26.8)	84 (56.4)	11 (7.4)	149 (100.0)
	중규모	4 (1.4)	23 (8.2)	139 (49.5)	82 (29.2)	33 (11.7)	281 (100.0)
	소규모	0 (0.0)	8 (16.7)	11 (22.9)	25 (52.1)	4 (8.3)	48 (100.0)
전체		5 (1.0)	44 (9.2)	190 (39.7)	191 (40.0)	48 (10.0)	478 (100.0)
성별	남	5 (1.9)	27 (10.2)	107 (40.4)	96 (36.2)	30 (11.3)	265 (100.0)
	여	0 (0.0)	17 (8.0)	83 (39.2)	94 (44.3)	18 (8.5)	212 (100.0)
전체		5 (1.0)	44 (9.2)	190 (39.8)	190 (39.8)	48 (10.1)	477 (100.0)
연령	20대	1 (0.8)	10 (7.5)	65 (48.9)	45 (33.8)	12 (9.0)	133 (100.0)
	30대	1 (0.4)	25 (10.4)	83 (34.6)	103 (42.9)	28 (11.7)	240 (100.0)
	40대이상	3 (2.9)	9 (8.7)	41 (39.4)	43 (41.3)	8 (7.7)	104 (100.0)
전체		5 (1.0)	44 (9.2)	189 (39.6)	191 (40.0)	48 (10.1)	477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3 (0.8)	26 (6.7)	161 (41.7)	160 (41.5)	36 (9.3)	386 (100.0)
	수료자	2 (2.2)	18 (20.0)	27 (30.0)	31 (34.4)	12 (13.3)	90 (100.0)
전체		5 (1.1)	44 (9.2)	188 (39.5)	191 (40.1)	48 (10.1)	476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0 (0.0)	10 (5.9)	69 (40.6)	77 (45.3)	14 (8.2)	170 (100.0)
	3+4학기	2 (1.3)	10 (6.3)	65 (40.6)	65 (40.6)	18 (11.3)	160 (100.0)
	5+6학기이상	1 (1.8)	6 (10.7)	27 (48.2)	18 (32.1)	4 (7.1)	56 (100.0)
	수료자	2 (2.2)	18 (20.0)	27 (30.0)	31 (34.4)	12 (13.3)	90 (100.0)
전체		5 (1.1)	44 (9.2)	188 (39.5)	191 (40.1)	48 (10.1)	476 (100.0)

주) *<0.1 / **<0.05 / ***<0.01

<표 V-148> 대학원 평가인증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하는 대학원에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전공계열 ***	인문계열	0 (0.0)	10 (14.7)	29 (42.6)	22 (32.4)	7 (10.3)	68 (100.0)
	사회+경영	1 (0.7)	3 (2.1)	55 (38.5)	75 (52.4)	9 (6.3)	143 (100.0)
	이학+공학	4 (2.6)	23 (14.9)	62 (40.3)	53 (34.4)	12 (7.8)	154 (100.0)
	농학+의학	0 (0.0)	3 (6.8)	17 (38.6)	19 (43.2)	5 (11.4)	44 (100.0)
	예체능+사범	0 (0.0)	5 (8.5)	22 (37.3)	20 (33.9)	12 (20.3)	59 (100.0)
전체		5 (1.1)	44 (9.4)	185 (39.5)	189 (40.4)	45 (9.6)	468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0 (0.0)	7 (5.1)	39 (28.5)	82 (59.9)	9 (6.6)	137 (100.0)
	대전충청	0 (0.0)	15 (17.9)	24 (28.6)	34 (40.5)	11 (13.1)	84 (100.0)
	호남	1 (1.4)	3 (4.3)	40 (57.1)	12 (17.1)	14 (20.0)	70 (100.0)
	강원제주	0 (0.0)	2 (8.7)	7 (30.4)	11 (47.8)	3 (13.0)	23 (100.0)
	영남	4 (2.4)	17 (10.4)	80 (48.8)	52 (31.7)	11 (6.7)	164 (100.0)
전체		5 (1.0)	44 (9.2)	190 (39.7)	191 (40.0)	48 (10.0)	478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0 (0.0)	7 (5.1)	39 (28.5)	82 (59.9)	9 (6.6)	137 (100.0)
	비수도권	5 (1.5)	37 (10.9)	151 (44.3)	109 (32.0)	39 (11.4)	341 (100.0)
전체		5 (1.0)	44 (9.2)	190 (39.7)	191 (40.0)	48 (10.0)	478 (100.0)
대학원 설립유형 **	국공립대학	1 (0.5)	26 (13.5)	83 (43.2)	63 (32.8)	19 (9.9)	192 (100.0)
	사립대학	4 (1.4)	18 (6.3)	107 (37.4)	128 (44.8)	29 (10.1)	286 (100.0)
전체		5 (1.0)	44 (9.2)	190 (39.7)	191 (40.0)	48 (10.0)	478 (100.0)
대학원생 신분 **	전일제	5 (1.5)	33 (10.2)	122 (37.7)	124 (38.3)	40 (12.3)	324 (100.0)
	시간제	0 (0.0)	11 (7.2)	67 (43.8)	67 (43.8)	8 (5.2)	153 (100.0)
전체		5 (1.0)	44 (9.2)	189 (39.6)	191 (40.0)	48 (10.1)	477 (100.0)

주) *<0.1 / **<0.05 / ***<0.01

학위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위논문을 연구재단 등의 공식적 기관 혹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시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2.2%인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7.3%에 불과하였으며, 유모적인 의견은 40.5%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은 그들의 학위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위논문의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49> 학위논문 공시제도에 대한 의견(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적극 반대	3	0.6
반대	32	6.7
보통	193	40.5
찬성	209	43.8
적극 찬성	40	8.4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학위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위논문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성별, 연령, 전공계열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계열별 특성에서 농학·의학전공계열이 학위논문공시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예체능·사범계열의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50> 학위논문 공시제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하는 학위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위논문을 연구재단 등의 공식적 기관 혹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대학의 규모	대규모	0 (0.0)	9 (6.0)	55 (36.9)	69 (46.3)	16 (10.7)	149 (100.0)
	중규모	3 (1.1)	21 (7.5)	124 (44.1)	113 (40.2)	20 (7.1)	281 (100.0)
	소규모	0 (0.0)	2 (4.3)	14 (29.8)	27 (57.4)	4 (8.5)	47 (100.0)
전체		3 (0.6)	32 (6.7)	193 (40.5)	209 (43.8)	40 (8.4)	477 (100.0)
성별 ***	남	3 (1.1)	20 (7.5)	101 (38.1)	108 (40.8)	33 (12.5)	265 (100.0)
	여	0 (0.0)	12 (5.7)	92 (43.6)	100 (47.4)	7 (3.3)	211 (100.0)
전체		3 (0.6)	32 (6.7)	193 (40.5)	208 (43.7)	40 (8.4)	476 (100.0)
연령 ***	20대	0 (0.0)	14 (10.5)	52 (39.1)	59 (44.4)	8 (6.0)	133 (100.0)
	30대	0 (0.0)	11 (4.6)	103 (43.1)	99 (41.4)	26 (10.9)	239 (100.0)
	40대이상	3 (2.9)	7 (6.7)	38 (36.5)	50 (48.1)	6 (5.8)	104 (100.0)
전체		3 (0.6)	32 (6.7)	193 (40.5)	208 (43.7)	40 (8.4)	476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1 (0.3)	29 (7.5)	157 (40.7)	166 (43.0)	33 (8.5)	386 (100.0)
	수료자	2 (2.2)	3 (3.4)	35 (39.3)	42 (47.2)	7 (7.9)	89 (100.0)
전체		3 (0.6)	32 (6.7)	192 (40.4)	208 (43.8)	40 (8.4)	475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0 (0.0)	14 (8.2)	71 (41.8)	75 (44.1)	10 (5.9)	170 (100.0)
	3+4학기	1 (0.6)	14 (8.8)	65 (40.6)	63 (39.4)	17 (10.6)	160 (100.0)
	5+6학기이상	0 (0.0)	1 (1.8)	21 (37.5)	28 (50.0)	6 (10.7)	56 (100.0)
	수료자	2 (2.2)	3 (3.4)	35 (39.3)	42 (47.2)	7 (7.9)	89 (100.0)
전체		3 (0.6)	32 (6.7)	192 (40.4)	208 (43.8)	40 (8.4)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50> 학위논문 공시제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하는 학위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위논문을 연구재단 등의 공식적 기관 혹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전공 계열 **	인문계열	0 (0.0)	0 (0.0)	30 (44.8)	30 (44.8)	7 (10.4)	67 (100.0)
	사회+경영	1 (0.7)	10 (7.0)	54 (37.8)	72 (50.3)	6 (4.2)	143 (100.0)
	이학+공학	2 (1.3)	14 (9.1)	58 (37.7)	67 (43.5)	13 (8.4)	154 (100.0)
	농학+의학	0 (0.0)	3 (6.8)	27 (61.4)	11 (25.0)	3 (6.8)	44 (100.0)
	예체능+사범	0 (0.0)	4 (6.8)	18 (30.5)	26 (44.1)	11 (18.6)	59 (100.0)
전체		3 (0.6)	31 (6.6)	187 (40.0)	206 (44.1)	40 (8.6)	467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경기	0 (0.0)	7 (5.1)	52 (38.0)	70 (51.1)	8 (5.8)	137 (100.0)
	대전충청	0 (0.0)	3 (3.6)	27 (32.5)	41 (49.4)	12 (14.5)	83 (100.0)
	호남	1 (1.4)	5 (7.1)	34 (48.6)	24 (34.3)	6 (8.6)	70 (100.0)
	강원제주	0 (0.0)	3 (13.0)	6 (26.1)	12 (52.2)	2 (8.7)	23 (100.0)
	영남	2 (1.2)	14 (8.5)	74 (45.1)	62 (37.8)	12 (7.3)	164 (100.0)
전체		3 (0.6)	32 (6.7)	193 (40.5)	209 (43.8)	40 (8.4)	477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0 (0.0)	12 (6.3)	78 (40.8)	82 (42.9)	19 (9.9)	191 (100.0)
	사립대학	3 (1.0)	20 (7.0)	115 (40.2)	127 (44.4)	21 (7.3)	286 (100.0)
전체		3 (0.6)	32 (6.7)	193 (40.5)	209 (43.8)	40 (8.4)	477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3 (0.9)	23 (7.1)	125 (38.7)	139 (43.0)	33 (10.2)	323 (100.0)
	시간제	0 (0.0)	9 (5.9)	67 (43.8)	70 (45.8)	7 (4.6)	153 (100.0)
전체		3 (0.6)	32 (6.7)	192 (40.3)	209 (43.9)	40 (8.4)	476 (100.0)

주) *<0.1 / **<0.05 / ***<0.01

박사학위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박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41.9%인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5.8%로 나타났으며, 유보적인 의견은 42.3%로 나타났다. 따라서 논문 심사과정의 공개에 대해 대학원생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51> 박사학위논문 심사과정의 공개(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적극 반대	6	1.3
반대	69	14.5
보통	202	42.3
찬성	157	32.9
적극 찬성	43	9.0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박사학위논문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성별, 연령, 대학과 학위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및 대학원생의 신분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 학기의 수료수준에 높을수록 심사과정의 공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고 농학·의학 전공계열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대학설립유형별 특성에서는 국공립대학재학생들과 전일제 대학원생들이 보다 긍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2> 박사학위논문 심사과정의 공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박사학위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박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대학의 규모	대규모	0 (0.0)	27 (18.1)	55 (36.9)	54 (36.2)	13 (8.7)	149 (100.0)
	중규모	6 (2.1)	37 (13.2)	128 (45.6)	82 (29.2)	28 (10.0)	281 (100.0)
	소규모	0 (0.0)	5 (10.6)	19 (40.4)	21 (44.7)	2 (4.3)	47 (100.0)
전체		6 (1.3)	69 (14.5)	202 (42.3)	157 (32.9)	43 (9.0)	477 (100.0)
성별 *	남	4 (1.5)	35 (13.2)	103 (38.9)	92 (34.7)	31 (11.7)	265 (100.0)
	여	2 (0.9)	34 (16.1)	99 (46.9)	64 (30.3)	12 (5.7)	211 (100.0)
전체		6 (1.3)	69 (14.5)	202 (42.4)	156 (32.8)	43 (9.0)	476 (100.0)
연령 ***	20대	1 (0.8)	20 (15.0)	58 (43.6)	45 (33.8)	9 (6.8)	133 (100.0)
	30대	2 (0.8)	22 (9.2)	110 (46.0)	80 (33.5)	25 (10.5)	239 (100.0)
	40대이상	3 (2.9)	27 (26.0)	34 (32.7)	32 (30.8)	8 (7.7)	104 (100.0)
전체		6 (1.3)	69 (14.5)	202 (42.4)	157 (33.0)	42 (8.8)	476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4 (1.0)	61 (15.8)	171 (44.3)	120 (31.1)	30 (7.8)	386 (100.0)
	수료자	2 (2.2)	7 (7.9)	31 (34.8)	37 (41.6)	12 (13.5)	89 (100.0)
전체		6 (1.3)	68 (14.3)	202 (42.5)	157 (33.1)	42 (8.8)	475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1 (0.6)	24 (14.1)	71 (41.8)	61 (35.9)	13 (7.6)	170 (100.0)
	3+4학기	1 (0.6)	26 (16.3)	75 (46.9)	44 (27.5)	14 (8.8)	160 (100.0)
	5+6학기이상	2 (3.6)	11 (19.6)	25 (44.6)	15 (26.8)	3 (5.4)	56 (100.0)
	수료자	2 (2.2)	7 (7.9)	31 (34.8)	37 (41.6)	12 (13.5)	89 (100.0)
전체		6 (1.3)	68 (14.3)	202 (42.5)	157 (33.1)	42 (8.8)	4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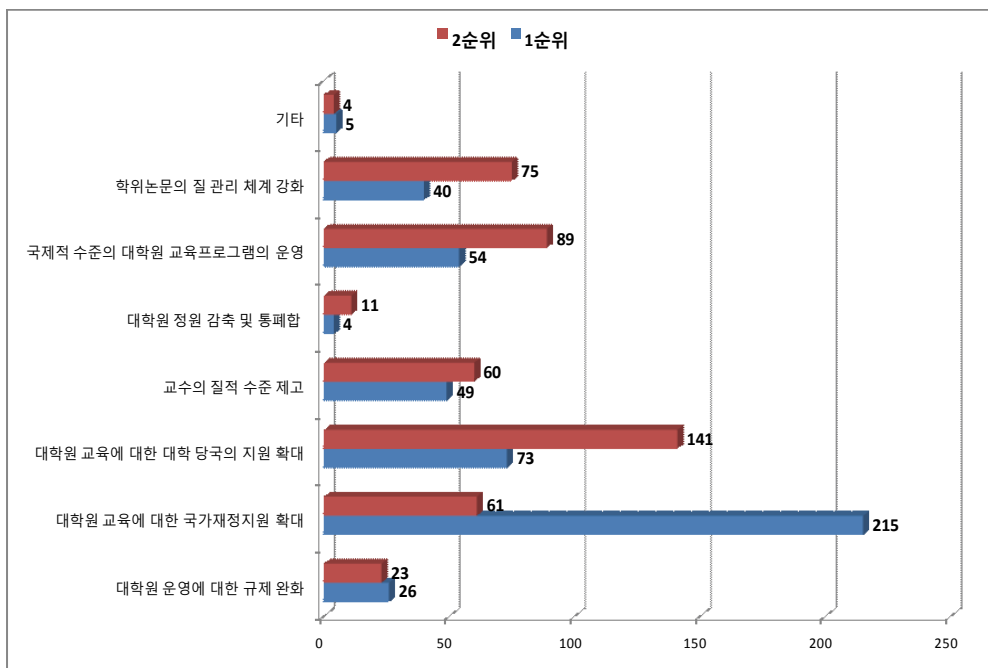
주) *<0.1 / **<0.05 / ***<0.01

<표 V-152> 박사학위논문 심사과정의 공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박사학위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박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체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전공 계열 ***	인문계열	0 (0.0)	6 (9.0)	36 (53.7)	19 (28.4)	6 (9.0)	67 (100.0)
	사회+경영	1 (0.7)	30 (21.0)	50 (35.0)	53 (37.1)	9 (6.3)	143 (100.0)
	이학+공학	2 (1.3)	17 (11.0)	69 (44.8)	53 (34.4)	13 (8.4)	154 (100.0)
	농학+의학	1 (2.3)	5 (11.4)	24 (54.5)	13 (29.5)	1 (2.3)	44 (100.0)
	예체능+사범	2 (3.4)	10 (16.9)	18 (30.5)	17 (28.8)	12 (20.3)	59 (100.0)
전체		6 (1.3)	68 (14.6)	197 (42.2)	155 (33.2)	41 (8.8)	467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2 (1.5)	31 (22.6)	49 (35.8)	51 (37.2)	4 (2.9)	137 (100.0)
	대전충청	0 (0.0)	10 (12.0)	31 (37.3)	27 (32.5)	15 (18.1)	83 (100.0)
	호남	1 (1.4)	11 (15.7)	32 (45.7)	14 (20.0)	12 (17.1)	70 (100.0)
	강원제주	0 (0.0)	2 (8.7)	10 (43.5)	9 (39.1)	2 (8.7)	23 (100.0)
	영남	3 (1.8)	15 (9.1)	80 (48.8)	56 (34.1)	10 (6.1)	164 (100.0)
전체		6 (1.3)	69 (14.5)	202 (42.3)	157 (32.9)	43 (9.0)	477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2 (1.5)	31 (22.6)	49 (35.8)	51 (37.2)	4 (2.9)	137 (100.0)
	비수도권	4 (1.2)	38 (11.2)	153 (45.0)	106 (31.2)	39 (11.5)	340 (100.0)
전체		6 (1.3)	69 (14.5)	202 (42.3)	157 (32.9)	43 (9.0)	477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	국공립대학	0 (0.0)	15 (7.9)	88 (46.1)	67 (35.1)	21 (11.0)	191 (100.0)
	사립대학	6 (2.1)	54 (18.9)	114 (39.9)	90 (31.5)	22 (7.7)	286 (100.0)
전체		6 (1.3)	69 (14.5)	202 (42.3)	157 (32.9)	43 (9.0)	477 (100.0)
대학원생 신분 ***	전일제	3 (0.9)	38 (11.8)	134 (41.5)	111 (34.4)	37 (11.5)	323 (100.0)
	시간제	3 (2.0)	31 (20.3)	68 (44.4)	45 (29.4)	6 (3.9)	153 (100.0)
전체		6 (1.3)	69 (14.5)	202 (42.4)	156 (32.8)	43 (9.0)	476 (100.0)

주) *<0.1 / **<0.05 / ***<0.01

한편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박사학위 과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설문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에서는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라는 의견이 2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원 교육에 대한 대학 당국의 지원 확대” 73명, “국제적 수준의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54명 등의 순이다. 2순위에서는 “대학원 교육에 대한 대학 당국의 지원 확대”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국제적 수준의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89명, “학위논문의 질 관리 체계 강화”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2] 우리나라 박사학위과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대 학원생 집단)

3) 대학원 교육의 질

가) 교육수준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응답자가 소속된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여타 국내 대학과 비교한 결과 “수준이 높다”는 평가의견은 58.7%인 반면 “수준이 낮다”는 평가의견은 11.9%에 불과하였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평가의견은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3> 소속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63	13.2
대체로 그렇다	217	45.4
그저 그렇다	141	29.5
대체로 아니다	43	9.0
전혀 아니다	14	2.9
합계	478	100.0

결측: 1명(0.2%)

소속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대학과 학위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 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규모가 중규모의 대학 소속 응답자,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원 소속의 응답자, 국립대 소속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대학원 교육수준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54> 소속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은 여타 국내 대학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28 (18.8)	74 (49.7)	40 (26.8)	7 (4.7)	0 (0.0)	149 (100.0)
	중규모	27 (9.6)	121 (43.1)	85 (30.2)	35 (12.5)	13 (4.6)	281 (100.0)
	소규모	8 (16.7)	22 (45.8)	16 (33.3)	1 (2.1)	1 (2.1)	48 (100.0)
전체		63 (13.2)	217 (45.4)	141 (29.5)	43 (9.0)	14 (2.9)	478 (100.0)
성별	남	35 (13.2)	114 (43.0)	88 (33.2)	21 (7.9)	7 (2.6)	265 (100.0)
	여	28 (13.2)	102 (48.1)	53 (25.0)	22 (10.4)	7 (3.3)	212 (100.0)
전체		63 (13.2)	216 (45.3)	141 (29.6)	43 (9.0)	14 (2.9)	477 (100.0)
연령	20대	16 (12.0)	55 (41.4)	42 (31.6)	12 (9.0)	8 (6.0)	133 (100.0)
	30대	30 (12.5)	110 (45.8)	68 (28.3)	26 (10.8)	6 (2.5)	240 (100.0)
	40대이상	17 (16.3)	51 (49.0)	31 (29.8)	5 (4.8)	0 (0.0)	104 (100.0)
전체		63 (13.2)	216 (45.3)	141 (29.6)	43 (9.0)	14 (2.9)	477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54 (14.0)	164 (42.5)	122 (31.6)	32 (8.3)	14 (3.6)	386 (100.0)
	수료자	9 (10.0)	52 (57.8)	18 (20.0)	11 (12.2)	0 (0.0)	90 (100.0)
전체		63 (13.2)	216 (45.4)	140 (29.4)	43 (9.0)	14 (2.9)	476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23 (13.5)	78 (45.9)	54 (31.8)	10 (5.9)	5 (2.9)	170 (100.0)
	3+4학기	21 (13.1)	58 (36.3)	52 (32.5)	21 (13.1)	8 (5.0)	160 (100.0)
	5+6학기이상	10 (17.9)	28 (50.0)	16 (28.6)	1 (1.8)	1 (1.8)	56 (100.0)
	수료자	9 (10.0)	52 (57.8)	18 (20.0)	11 (12.2)	0 (0.0)	90 (100.0)
전체		63 (13.2)	216 (45.4)	140 (29.4)	43 (9.0)	14 (2.9)	476 (100.0)

주) *<0.1 / **<0.05 / ***<0.01

<표 V-154> 소속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은 여타 국내 대학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계열 ***	인문계열	10 (14.7)	37 (54.4)	11 (16.2)	6 (8.8)	4 (5.9)	68 (100.0)
	사회+경영	13 (9.1)	66 (46.2)	50 (35.0)	11 (7.7)	3 (2.1)	143 (100.0)
	이학+공학	24 (15.6)	75 (48.7)	41 (26.6)	10 (6.5)	4 (2.6)	154 (100.0)
	농학+의학	4 (9.1)	11 (25.0)	18 (40.9)	9 (20.5)	2 (4.5)	44 (100.0)
	예체능+사범	12 (20.3)	26 (44.1)	14 (23.7)	7 (11.9)	0 (0.0)	59 (100.0)
전체		63 (13.5)	215 (45.9)	134 (28.6)	43 (9.2)	13 (2.8)	468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24 (17.5)	66 (48.2)	42 (30.7)	4 (2.9)	1 (0.7)	137 (100.0)
	대전충청	14 (16.7)	41 (48.8)	19 (22.6)	7 (8.3)	3 (3.6)	84 (100.0)
	호남	3 (4.3)	27 (38.6)	15 (21.4)	15 (21.4)	10 (14.3)	70 (100.0)
	강원제주	2 (8.7)	8 (34.8)	12 (52.2)	1 (4.3)	0 (0.0)	23 (100.0)
	영남	20 (12.2)	75 (45.7)	53 (32.3)	16 (9.8)	0 (0.0)	164 (100.0)
전체		63 (13.2)	217 (45.4)	141 (29.5)	43 (9.0)	14 (2.9)	478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24 (17.5)	66 (48.2)	42 (30.7)	4 (2.9)	1 (0.7)	137 (100.0)
	비수도권	39 (11.4)	151 (44.3)	99 (29.0)	39 (11.4)	13 (3.8)	341 (100.0)
전체		63 (13.2)	217 (45.4)	141 (29.5)	43 (9.0)	14 (2.9)	478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14 (7.3)	88 (45.8)	66 (34.4)	18 (9.4)	6 (3.1)	192 (100.0)
	사립대학	49 (17.1)	129 (45.1)	75 (26.2)	25 (8.7)	8 (2.8)	286 (100.0)
전체		63 (13.2)	217 (45.4)	141 (29.5)	43 (9.0)	14 (2.9)	478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44 (13.6)	141 (43.5)	95 (29.3)	31 (9.6)	13 (4.0)	324 (100.0)
	시간제	19 (12.4)	75 (49.0)	46 (30.1)	12 (7.8)	1 (0.7)	153 (100.0)
전체		63 (13.2)	216 (45.3)	141 (29.6)	43 (9.0)	14 (2.9)	477 (100.0)

주) *<0.1 / **<0.05 / ***<0.01

담당교수의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긍정적 평가의견은 69.6%인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의견은 6.3%였다. 따라서 대학원 교수의 강의내용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55> 담당교수의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02	21.4
대체로 그렇다	230	48.2
그저 그렇다	115	24.1
대체로 아니다	20	4.2
전혀 아니다	10	2.1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담당교수의 강의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성별, 연령, 대학과 학위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및 대학원생의 신분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의 규모가 중급규모의 대학원생들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인문계열과 사회·경영계열 전공자들이 담당교수의 강의 애용에 대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소재 대학, 사립대 및 시간제 신분의 대학원생들이 담당교수의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56> 담당교수의 강의 만족도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담당교수의 강의 내용에 만족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40 (26.8)	73 (49.0)	27 (18.1)	6 (4.0)	3 (2.0)	149 (100.0)
	중규모	50 (17.9)	130 (46.4)	82 (29.3)	11 (3.9)	7 (2.5)	280 (100.0)
	소규모	12 (25.0)	27 (56.3)	6 (12.5)	3 (6.3)	0 (0.0)	48 (100.0)
성별 ***	남	60 (22.6)	118 (44.5)	67 (25.3)	14 (5.3)	6 (2.3)	265 (100.0)
	여	41 (19.4)	112 (53.1)	48 (22.7)	6 (2.8)	4 (1.9)	211 (100.0)
전체		101 (21.2)	230 (48.3)	115 (24.2)	20 (4.2)	10 (2.1)	476 (100.0)
연령 *	20대	20 (15.0)	53 (39.8)	46 (34.6)	10 (7.5)	4 (3.0)	133 (100.0)
	30대	54 (22.6)	128 (53.6)	44 (18.4)	7 (2.9)	6 (2.5)	239 (100.0)
	40대이상	28 (26.9)	48 (46.2)	25 (24.0)	3 (2.9)	0 (0.0)	104 (100.0)
전체		102 (21.4)	229 (48.1)	115 (24.2)	20 (4.2)	10 (2.1)	476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90 (23.4)	180 (46.8)	90 (23.4)	18 (4.7)	7 (1.8)	385 (100.0)
	수료자	12 (13.3)	49 (54.4)	25 (27.8)	1 (1.1)	3 (3.3)	90 (100.0)
전체		102 (21.5)	229 (48.2)	115 (24.2)	19 (4.0)	10 (2.1)	475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3범주) *	1+2학기	43 (25.4)	76 (45.0)	43 (25.4)	5 (3.0)	2 (1.2)	169 (100.0)
	3+4학기	32 (20.0)	80 (50.0)	32 (20.0)	12 (7.5)	4 (2.5)	160 (100.0)
	5학기이상	27 (18.5)	73 (50.0)	40 (27.4)	2 (1.4)	4 (2.7)	146 (100.0)
전체		102 (21.5)	229 (48.2)	115 (24.2)	19 (4.0)	10 (2.1)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56> 담당교수의 강의 만족도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담당교수의 강의 내용에 만족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 계열 ***	인문계열	21 (30.9)	36 (52.9)	10 (14.7)	1 (1.5)	0 (0.0)	68 (100.0)
	사회+경영	37 (25.9)	74 (51.7)	29 (20.3)	3 (2.1)	0 (0.0)	143 (100.0)
	이학+공학	27 (17.5)	73 (47.4)	44 (28.6)	8 (5.2)	2 (1.3)	154 (100.0)
	농학+의학	8 (18.6)	16 (37.2)	12 (27.9)	3 (7.0)	4 (9.3)	43 (100.0)
	예체능+사범	9 (15.3)	25 (42.4)	17 (28.8)	5 (8.5)	3 (5.1)	59 (100.0)
전체		102 (21.8)	224 (48.0)	112 (24.0)	20 (4.3)	9 (1.9)	467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43 (31.4)	73 (53.3)	15 (10.9)	4 (2.9)	2 (1.5)	137 (100.0)
	대전충청	20 (23.8)	44 (52.4)	14 (16.7)	5 (6.0)	1 (1.2)	84 (100.0)
	호남	4 (5.7)	25 (35.7)	31 (44.3)	6 (8.6)	4 (5.7)	70 (100.0)
	강원제주	3 (13.0)	14 (60.9)	5 (21.7)	1 (4.3)	0 (0.0)	23 (100.0)
	영남	32 (19.6)	74 (45.4)	50 (30.7)	4 (2.5)	3 (1.8)	163 (100.0)
전체		102 (21.4)	230 (48.2)	115 (24.1)	20 (4.2)	10 (2.1)	477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43 (31.4)	73 (53.3)	15 (10.9)	4 (2.9)	2 (1.5)	137 (100.0)
	비수도권	59 (17.4)	157 (46.2)	100 (29.4)	16 (4.7)	8 (2.4)	340 (100.0)
전체		102 (21.4)	230 (48.2)	115 (24.1)	20 (4.2)	10 (2.1)	477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	국공립대학	22 (11.5)	99 (51.6)	58 (30.2)	10 (5.2)	3 (1.6)	192 (100.0)
	사립대학	80 (28.1)	131 (46.0)	57 (20.0)	10 (3.5)	7 (2.5)	285 (100.0)
전체		102 (21.4)	230 (48.2)	115 (24.1)	20 (4.2)	10 (2.1)	477 (100.0)
대학원생 신분 **	전일제	58 (18.0)	155 (48.0)	86 (26.6)	14 (4.3)	10 (3.1)	323 (100.0)
	시간제	44 (28.8)	74 (48.4)	29 (19.0)	6 (3.9)	0 (0.0)	153 (100.0)
전체		102 (21.4)	229 (48.1)	115 (24.2)	20 (4.2)	10 (2.1)	476 (100.0)

주) *<0.1 / **<0.05 / ***<0.01

나) 대학원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대학원 교육이 관련분야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의견은 69.2%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의견은 5.9%에 불과하였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24.8%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교육이 전문성을 향상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57> 대학원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88	18.5
대체로 그렇다	241	50.7
그저 그렇다	118	24.8
대체로 아니다	22	4.6
전혀 아니다	6	1.3
합계	475	100.0

결측: 4명(0.8%)

대학원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제고되는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계열별 특성에서는 인문계열전공자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반면 농학·의학계열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의견이 가장 낮았다. 특히 사립대 대학원 소속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8> 대학원교육의 성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대학원 교육이 관련분야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29 (19.5)	85 (57.0)	28 (18.8)	7 (4.7)	0 (0.0)	149 (100.0)
	중규모	52 (18.7)	130 (46.8)	79 (28.4)	13 (4.7)	4 (1.4)	278 (100.0)
	소규모	7 (14.6)	26 (54.2)	11 (22.9)	2 (4.2)	2 (4.2)	48 (100.0)
전체		88 (18.5)	241 (50.7)	118 (24.8)	22 (4.6)	6 (1.3)	475 (100.0)
성별	남	46 (17.4)	131 (49.4)	72 (27.2)	14 (5.3)	2 (0.8)	265 (100.0)
	여	41 (19.6)	110 (52.6)	46 (22.0)	8 (3.8)	4 (1.9)	209 (100.0)
전체		87 (18.4)	241 (50.8)	118 (24.9)	22 (4.6)	6 (1.3)	474 (100.0)
연령	20대	19 (14.3)	69 (51.9)	34 (25.6)	7 (5.3)	4 (3.0)	133 (100.0)
	30대	47 (19.7)	120 (50.2)	59 (24.7)	11 (4.6)	2 (0.8)	239 (100.0)
	40대이상	22 (21.6)	51 (50.0)	25 (24.5)	4 (3.9)	0 (0.0)	102 (100.0)
전체		88 (18.6)	240 (50.6)	118 (24.9)	22 (4.6)	6 (1.3)	474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74 (19.3)	194 (50.7)	96 (25.1)	15 (3.9)	4 (1.0)	383 (100.0)
	수료자	14 (15.6)	46 (51.1)	21 (23.3)	7 (7.8)	2 (2.2)	90 (100.0)
전체		88 (18.6)	240 (50.7)	117 (24.7)	22 (4.7)	6 (1.3)	473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37 (22.2)	77 (46.1)	40 (24.0)	10 (6.0)	3 (1.8)	167 (100.0)
	3+4학기	27 (16.9)	92 (57.5)	38 (23.8)	2 (1.3)	1 (0.6)	160 (100.0)
	5+6학기이상	10 (17.9)	25 (44.6)	18 (32.1)	3 (5.4)	0 (0.0)	56 (100.0)
	수료자	14 (15.6)	46 (51.1)	21 (23.3)	7 (7.8)	2 (2.2)	90 (100.0)
전체		88 (18.6)	240 (50.7)	117 (24.7)	22 (4.7)	6 (1.3)	473 (100.0)

주) *<0.1 / **<0.05 / ***<0.01

<표 V-158> 대학원교육의 성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대학원 교육이 관련분야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계열 ***	인문계열	21 (30.9)	30 (44.1)	16 (23.5)	1 (1.5)	0 (0.0)	68 (100.0)
	사회+경영	21 (14.9)	75 (53.2)	35 (24.8)	8 (5.7)	2 (1.4)	141 (100.0)
	이학+공학	32 (20.8)	82 (53.2)	33 (21.4)	7 (4.5)	0 (0.0)	154 (100.0)
	농학+의학	6 (14.0)	20 (46.5)	13 (30.2)	0 (0.0)	4 (9.3)	43 (100.0)
	예체능+사범	8 (13.6)	30 (50.8)	15 (25.4)	6 (10.2)	0 (0.0)	59 (100.0)
전체		88 (18.9)	237 (51.0)	112 (24.1)	22 (4.7)	6 (1.3)	465 (100.0)
대학원소재지역 ***	서울경기	30 (21.9)	81 (59.1)	20 (14.6)	6 (4.4)	0 (0.0)	137 (100.0)
	대전충청	22 (26.2)	37 (44.0)	20 (23.8)	3 (3.6)	2 (2.4)	84 (100.0)
	호남	1 (1.4)	28 (40.0)	30 (42.9)	7 (10.0)	4 (5.7)	70 (100.0)
	강원제주	5 (21.7)	13 (56.5)	4 (17.4)	1 (4.3)	0 (0.0)	23 (100.0)
	영남	30 (18.6)	82 (50.9)	44 (27.3)	5 (3.1)	0 (0.0)	161 (100.0)
전체		88 (18.5)	241 (50.7)	118 (24.8)	22 (4.6)	6 (1.3)	475 (100.0)
수도권여부 ***	수도권	30 (21.9)	81 (59.1)	20 (14.6)	6 (4.4)	0 (0.0)	137 (100.0)
	비수도권	58 (17.2)	160 (47.3)	98 (29.0)	16 (4.7)	6 (1.8)	338 (100.0)
전체		88 (18.5)	241 (50.7)	118 (24.8)	22 (4.6)	6 (1.3)	475 (100.0)
대학원설립유형*	국공립대학	25 (13.2)	98 (51.6)	55 (28.9)	8 (4.2)	4 (2.1)	190 (100.0)
	사립대학	63 (22.1)	143 (50.2)	63 (22.1)	14 (4.9)	2 (0.7)	285 (100.0)
전체		88 (18.5)	241 (50.7)	118 (24.8)	22 (4.6)	6 (1.3)	475 (100.0)
대학원생신분	전일제	56 (17.3)	161 (49.8)	85 (26.3)	15 (4.6)	6 (1.9)	323 (100.0)
	시간제	32 (21.2)	80 (53.0)	32 (21.2)	7 (4.6)	0 (0.0)	151 (100.0)
전체		88 (18.6)	241 (50.8)	117 (24.7)	22 (4.6)	6 (1.3)	474 (100.0)

주) *<0.1 / **<0.05 / ***<0.01

한편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문적 연구능력이 신장되었다는 의견은 74.8%인 반면 연구능력의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5.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이 실질적인 연구능력의 신장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159> 대학원 교육의 학문적 연구능력 신장(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25	26.2
대체로 그렇다	232	48.6
그저 그렇다	96	20.1
대체로 아니다	24	5.0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대학원 교육의 학문적 연구능력의 신장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 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성별, 대학과 학위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의 규모가 클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대학원과정 수료자가 비수료자보다 긍정적이었다. 전공계열별 특성에서는 이학·공학계열의 응답자들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의견을 보인 반면 사회·경영계열과 농학·의학계열의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의견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60> 대학원 교육의 학문적 연구능력 신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집단)

구 분		대 학 원 을 다 니 면 서 학 문 적 연 구 능 력 이 신 장 되 었 다				전 체
		매 우 그 령 다	대 체 로 그 령 다	그 저 그 령 다	대 체 로 아 니 다	
대 학 의 규 모 **	대 규모	48 (32.2)	72 (48.3)	24 (16.1)	5 (3.4)	149 (100.0)
	중 규모	65 (23.2)	132 (47.1)	68 (24.3)	15 (5.4)	280 (100.0)
	소 규모	12 (25.0)	28 (58.3)	4 (8.3)	4 (8.3)	48 (100.0)
전 체		125 (26.2)	232 (48.6)	96 (20.1)	24 (5.0)	477 (100.0)
성 별 ***	남	72 (27.2)	120 (45.3)	66 (24.9)	7 (2.6)	265 (100.0)
	여	52 (24.6)	112 (53.1)	30 (14.2)	17 (8.1)	211 (100.0)
전 체		124 (26.1)	232 (48.7)	96 (20.2)	24 (5.0)	476 (100.0)
연 령	20대	33 (24.8)	67 (50.4)	27 (20.3)	6 (4.5)	133 (100.0)
	30대	70 (29.3)	114 (47.7)	42 (17.6)	13 (5.4)	239 (100.0)
	40대 이상	22 (21.2)	50 (48.1)	27 (26.0)	5 (4.8)	104 (100.0)
전 체		125 (26.3)	231 (48.5)	96 (20.2)	24 (5.0)	476 (100.0)
대 학 원 과 정 수 료 *	비 수 료 자	97 (25.2)	189 (49.1)	84 (21.8)	15 (3.9)	385 (100.0)
	수 료 자	28 (31.1)	42 (46.7)	12 (13.3)	8 (8.9)	90 (100.0)
전 체		125 (26.3)	231 (48.6)	96 (20.2)	23 (4.8)	475 (100.0)
대 학 원 이 수 학 기 (4범 주)	1+2 학 기	43 (25.4)	80 (47.3)	40 (23.7)	6 (3.6)	169 (100.0)
	3+4 학 기	41 (25.6)	78 (48.8)	33 (20.6)	8 (5.0)	160 (100.0)
	5+6 학 기 이상	13 (23.2)	31 (55.4)	11 (19.6)	1 (1.8)	56 (100.0)
	수 료 자	28 (31.1)	42 (46.7)	12 (13.3)	8 (8.9)	90 (100.0)
전 체		125 (26.3)	231 (48.6)	96 (20.2)	23 (4.8)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60> 대학원 교육의 학문적 연구능력 신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대 학 원 을 다 니 면 서 학 문 적 연 구 능 령 이 신 장 되 었 다				전 체
		매 우 그 려 다	대 체 로 그 려 다	그 저 그 려 다	대 체 로 아 니 다	
전 공 계 열 ***	인문계열	22 (32.4)	32 (47.1)	10 (14.7)	4 (5.9)	68 (100.0)
	사회+경영	18 (12.6)	77 (53.8)	39 (27.3)	9 (6.3)	143 (100.0)
	이학+공학	53 (34.4)	79 (51.3)	19 (12.3)	3 (1.9)	154 (100.0)
	농학+의학	15 (34.9)	14 (32.6)	10 (23.3)	4 (9.3)	43 (100.0)
	예체능+사범	16 (27.1)	26 (44.1)	14 (23.7)	3 (5.1)	59 (100.0)
전체		124 (26.6)	228 (48.8)	92 (19.7)	23 (4.9)	467 (100.0)
대 학 원 소 재 지 역 ***	서울경기	43 (31.4)	68 (49.6)	22 (16.1)	4 (2.9)	137 (100.0)
	대전충청	27 (32.1)	40 (47.6)	9 (10.7)	8 (9.5)	84 (100.0)
	호남	0 (0.0)	27 (38.6)	32 (45.7)	11 (15.7)	70 (100.0)
	강원제주	9 (39.1)	11 (47.8)	3 (13.0)	0 (0.0)	23 (100.0)
	영남	46 (28.2)	86 (52.8)	30 (18.4)	1 (0.6)	163 (100.0)
전체		125 (26.2)	232 (48.6)	96 (20.1)	24 (5.0)	477 (100.0)
대 학 원 설 립 유 형	국공립대학	46 (24.0)	95 (49.5)	42 (21.9)	9 (4.7)	192 (100.0)
	사립대학	79 (27.7)	137 (48.1)	54 (18.9)	15 (5.3)	285 (100.0)
전체		125 (26.2)	232 (48.6)	96 (20.1)	24 (5.0)	477 (100.0)
대 학 원 생 신 분	전일제	86 (26.6)	155 (48.0)	62 (19.2)	20 (6.2)	323 (100.0)
	시간제	39 (25.5)	76 (49.7)	34 (22.2)	4 (2.6)	153 (100.0)
전체		125 (26.3)	231 (48.5)	96 (20.2)	24 (5.0)	476 (100.0)

주) *<0.1 / **<0.05 / ***<0.01

다)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대학원 강의는 주로 전임교수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76.7%로 나타난 반면 전임교수 이외의 인력이 강의를 담당한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학원 강의는 전반적으로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61>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64	34.4
대체로 그렇다	202	42.3
그저 그렇다	77	16.1
대체로 아니다	34	7.1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전임교수의 대학원 강의담당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원생의 신분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대학원생의 평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62>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대학원 강의는 주로 전임교수가 담당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43 (28.9)	75 (50.3)	21 (14.1)	10 (6.7)	149 (100.0)
	중규모	97 (34.6)	110 (39.3)	51 (18.2)	22 (7.9)	280 (100.0)
	소규모	24 (50.0)	17 (35.4)	5 (10.4)	2 (4.2)	48 (100.0)
전체		164 (34.4)	202 (42.3)	77 (16.1)	34 (7.1)	477 (100.0)
성별	남	90 (34.1)	109 (41.3)	46 (17.4)	19 (7.2)	264 (100.0)
	여	73 (34.4)	93 (43.9)	31 (14.6)	15 (7.1)	212 (100.0)
전체		163 (34.2)	202 (42.4)	77 (16.2)	34 (7.1)	476 (100.0)
연령	20대	52 (39.4)	47 (35.6)	20 (15.2)	13 (9.8)	132 (100.0)
	30대	71 (29.6)	116 (48.3)	39 (16.3)	14 (5.8)	240 (100.0)
	40대이상	40 (38.5)	39 (37.5)	18 (17.3)	7 (6.7)	104 (100.0)
전체		163 (34.2)	202 (42.4)	77 (16.2)	34 (7.1)	476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129 (33.5)	165 (42.9)	64 (16.6)	27 (7.0)	385 (100.0)
	수료자	34 (37.8)	36 (40.0)	13 (14.4)	7 (7.8)	90 (100.0)
전체		163 (34.3)	201 (42.3)	77 (16.2)	34 (7.2)	475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59 (34.9)	72 (42.6)	25 (14.8)	13 (7.7)	169 (100.0)
	3+4학기	55 (34.4)	65 (40.6)	26 (16.3)	14 (8.8)	160 (100.0)
	5+6학기이상	15 (26.8)	28 (50.0)	13 (23.2)	0 (0.0)	56 (100.0)
	수료자	34 (37.8)	36 (40.0)	13 (14.4)	7 (7.8)	90 (100.0)
전체		163 (34.3)	201 (42.3)	77 (16.2)	34 (7.2)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62> 전임교수의 감의 담당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대학원 강의는 주로 전임교수가 담당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공 계열	인문계열	25 (36.8)	26 (38.2)	12 (17.6)	5 (7.4)	68 (100.0)
	사회+경영	39 (27.5)	76 (53.5)	16 (11.3)	11 (7.7)	142 (100.0)
	이학+공학	59 (38.3)	57 (37.0)	28 (18.2)	10 (6.5)	154 (100.0)
	농학+의학	20 (45.5)	18 (40.9)	4 (9.1)	2 (4.5)	44 (100.0)
	예체능+사범	19 (32.2)	22 (37.3)	12 (20.3)	6 (10.2)	59 (100.0)
전체		162 (34.7)	199 (42.6)	72 (15.4)	34 (7.3)	467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46 (33.6)	65 (47.4)	18 (13.1)	8 (5.8)	137 (100.0)
	대전충청	32 (38.1)	34 (40.5)	12 (14.3)	6 (7.1)	84 (100.0)
	호남	6 (8.7)	21 (30.4)	33 (47.8)	9 (13.0)	69 (100.0)
	강원제주	10 (43.5)	10 (43.5)	1 (4.3)	2 (8.7)	23 (100.0)
	영남	70 (42.7)	72 (43.9)	13 (7.9)	9 (5.5)	164 (100.0)
전체		164 (34.4)	202 (42.3)	77 (16.1)	34 (7.1)	477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65 (33.9)	82 (42.7)	29 (15.1)	16 (8.3)	192 (100.0)
	사립대학	99 (34.7)	120 (42.1)	48 (16.8)	18 (6.3)	285 (100.0)
전체		164 (34.4)	202 (42.3)	77 (16.1)	34 (7.1)	477 (100.0)
대학원생 신분 **	전일제	98 (30.2)	144 (44.4)	57 (17.6)	25 (7.7)	324 (100.0)
	시간제	66 (43.4)	58 (38.2)	20 (13.2)	8 (5.3)	152 (100.0)
전체		164 (34.5)	202 (42.4)	77 (16.2)	33 (6.9)	476 (100.0)

주) *<0.1 / **<0.05 / ***<0.01

라) 과제물에 대한 Feed-Back

담당 교수가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 심층적인 Feed-Back을 해준다는 응답은 53.6%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저 그렇다는 부정적 유보의견이 32.2%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수의 교수들이 과제물 관리의 내실화 측면에서 부실한 관리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응답결과라 할 것이다.

<표 V-163> 과제물에 대한 Feed-Back (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57	11.9
대체로 그렇다	199	41.7
그저 그렇다	153	32.1
대체로 아니다	51	10.7
전혀 아니다	17	3.6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과제물에 대한 심층적 Feed-Back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연령, 대학과 학위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및 대학원생의 신분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 평가의견이 높았고, 수도권 지역의 대학원이 비수도권지역 대학원생의 의견보다 높았다. 대학설립유형별 특성에서는 사립대학 재학생들과 시간제 대학원생들이 보다 긍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4> 과제물의 Feed-Back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교수는 제출된 과제물에 대해 심층적인 Feed-Back을 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25 (16.8)	64 (43.0)	41 (27.5)	17 (11.4)	2 (1.3)	149 (100.0)
	중규모	27 (9.6)	114 (40.7)	98 (35.0)	28 (10.0)	13 (4.6)	280 (100.0)
	소규모	5 (10.4)	21 (43.8)	14 (29.2)	6 (12.5)	2 (4.2)	48 (100.0)
전체		57 (11.9)	199 (41.7)	153 (32.1)	51 (10.7)	17 (3.6)	477 (100.0)
성별	남	30 (11.3)	110 (41.5)	89 (33.6)	26 (9.8)	10 (3.8)	265 (100.0)
	여	26 (12.3)	89 (42.2)	64 (30.3)	25 (11.8)	7 (3.3)	211 (100.0)
전체		56 (11.8)	199 (41.8)	153 (32.1)	51 (10.7)	17 (3.6)	476 (100.0)
연령 **	20대	10 (7.5)	51 (38.3)	46 (34.6)	21 (15.8)	5 (3.8)	133 (100.0)
	30대	28 (11.7)	103 (43.1)	72 (30.1)	25 (10.5)	11 (4.6)	239 (100.0)
	40대이상	19 (18.3)	44 (42.3)	35 (33.7)	5 (4.8)	1 (1.0)	104 (100.0)
전체		57 (12.0)	198 (41.6)	153 (32.1)	51 (10.7)	17 (3.6)	476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52 (13.5)	152 (39.5)	124 (32.2)	44 (11.4)	13 (3.4)	385 (100.0)
	수료자	5 (5.6)	46 (51.1)	28 (31.1)	7 (7.8)	4 (4.4)	90 (100.0)
전체		57 (12.0)	198 (41.7)	152 (32.0)	51 (10.7)	17 (3.6)	475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25 (14.8)	69 (40.8)	51 (30.2)	21 (12.4)	3 (1.8)	169 (100.0)
	3+4학기	14 (8.8)	66 (41.3)	53 (33.1)	19 (11.9)	8 (5.0)	160 (100.0)
	5+6학기이상	13 (23.2)	17 (30.4)	20 (35.7)	4 (7.1)	2 (3.6)	56 (100.0)
	수료자	5 (5.6)	46 (51.1)	28 (31.1)	7 (7.8)	4 (4.4)	90 (100.0)
전체		57 (12.0)	198 (41.7)	152 (32.0)	51 (10.7)	17 (3.6)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64> 과제물의 Feed-Back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교수는 제출된 과제물에 대해 심층적인 Feed-Back을 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계열 ***	인문계열	9 (13.2)	31 (45.6)	17 (25.0)	9 (13.2)	2 (2.9)	68 (100.0)
	사회+경영	18 (12.6)	65 (45.5)	49 (34.3)	9 (6.3)	2 (1.4)	143 (100.0)
	이학+공학	16 (10.4)	67 (43.5)	47 (30.5)	20 (13.0)	4 (2.6)	154 (100.0)
	농학+의학	3 (7.0)	16 (37.2)	12 (27.9)	5 (11.6)	7 (16.3)	43 (100.0)
	예체능+사범	11 (18.6)	19 (32.2)	22 (37.3)	6 (10.2)	1 (1.7)	59 (100.0)
전체		57 (12.2)	198 (42.4)	147 (31.5)	49 (10.5)	16 (3.4)	467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25 (18.2)	67 (48.9)	36 (26.3)	9 (6.6)	0 (0.0)	137 (100.0)
	대전충청	13 (15.5)	37 (44.0)	18 (21.4)	12 (14.3)	4 (4.8)	84 (100.0)
	호남	0 (0.0)	15 (21.4)	28 (40.0)	21 (30.0)	6 (8.6)	70 (100.0)
	강원제주	3 (13.0)	12 (52.2)	7 (30.4)	0 (0.0)	1 (4.3)	23 (100.0)
	영남	16 (9.8)	68 (41.7)	64 (39.3)	9 (5.5)	6 (3.7)	163 (100.0)
전체		57 (11.9)	199 (41.7)	153 (32.1)	51 (10.7)	17 (3.6)	477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25 (18.2)	67 (48.9)	36 (26.3)	9 (6.6)	0 (0.0)	137 (100.0)
	비수도권	32 (9.4)	132 (38.8)	117 (34.4)	42 (12.4)	17 (5.0)	340 (100.0)
전체		57 (11.9)	199 (41.7)	153 (32.1)	51 (10.7)	17 (3.6)	477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	국공립대학	21 (10.9)	72 (37.5)	64 (33.3)	23 (12.0)	12 (6.3)	192 (100.0)
	사립대학	36 (12.6)	127 (44.6)	89 (31.2)	28 (9.8)	5 (1.8)	285 (100.0)
전체		57 (11.9)	199 (41.7)	153 (32.1)	51 (10.7)	17 (3.6)	477 (100.0)
대학원생 신분 *	전일제	32 (9.9)	130 (40.2)	109 (33.7)	37 (11.5)	15 (4.6)	323 (100.0)
	시간제	25 (16.3)	68 (44.4)	44 (28.8)	14 (9.2)	2 (1.3)	153 (100.0)
전체		57 (12.0)	198 (41.6)	153 (32.1)	51 (10.7)	17 (3.6)	476 (100.0)

주) *<0.1 / **<0.05 / ***<0.01

마) 담당교수의 수업 충실성

대학원 담당교수가 수업준비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고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수업을 준비한다는 응답은 66.4%인 반면 수업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부정적 평가의견은 7.1%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담당교수가 대학원 강의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65> 담당교수의 수업충실성(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82	17.2
대체로 그렇다	235	49.2
그저 그렇다	127	26.6
대체로 아니다	27	5.6
전혀 아니다	7	1.5
합계	478	100.0

결측: 1명(0.2%)

충실한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의 할애정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성별, 연령,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 지역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규모가 중규모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응답자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공별 특성에서는 인문계열 전공자가 가장 긍정적인 반면 농학·이학계열 전공자가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의견이 가장 낮았다.

<표 V-166> 담당교수의 수업충실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수업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27 (18.1)	81 (54.4)	35 (23.5)	4 (2.7)	2 (1.3)	149 (100.0)
	중규모	41 (14.6)	129 (45.9)	85 (30.2)	21 (7.5)	5 (1.8)	281 (100.0)
	소규모	14 (29.2)	25 (52.1)	7 (14.6)	2 (4.2)	0 (0.0)	48 (100.0)
전체		82 (17.2)	235 (49.2)	127 (26.6)	27 (5.6)	7 (1.5)	478 (100.0)
성별 **	남	46 (17.4)	115 (43.4)	84 (31.7)	14 (5.3)	6 (2.3)	265 (100.0)
	여	35 (16.5)	120 (56.6)	43 (20.3)	13 (6.1)	1 (0.5)	212 (100.0)
전체		81 (17.0)	235 (49.3)	127 (26.6)	27 (5.7)	7 (1.5)	477 (100.0)
연령 ***	20대	13 (9.8)	67 (50.4)	39 (29.3)	12 (9.0)	2 (1.5)	133 (100.0)
	30대	39 (16.3)	124 (51.7)	61 (25.4)	11 (4.6)	5 (2.1)	240 (100.0)
	40대이상	30 (28.8)	43 (41.3)	27 (26.0)	4 (3.8)	0 (0.0)	104 (100.0)
전체		82 (17.2)	234 (49.1)	127 (26.6)	27 (5.7)	7 (1.5)	477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67 (17.4)	185 (47.9)	106 (27.5)	21 (5.4)	7 (1.8)	386 (100.0)
	수료자	15 (16.7)	48 (53.3)	21 (23.3)	6 (6.7)	0 (0.0)	90 (100.0)
전체		82 (17.2)	233 (48.9)	127 (26.7)	27 (5.7)	7 (1.5)	476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36 (21.2)	84 (49.4)	41 (24.1)	7 (4.1)	2 (1.2)	170 (100.0)
	3+4학기	25 (15.6)	73 (45.6)	44 (27.5)	14 (8.8)	4 (2.5)	160 (100.0)
	5+6학기이상	6 (10.7)	28 (50.0)	21 (37.5)	0 (0.0)	1 (1.8)	56 (100.0)
	수료자	15 (16.7)	48 (53.3)	21 (23.3)	6 (6.7)	0 (0.0)	90 (100.0)
전체		82 (17.2)	233 (48.9)	127 (26.7)	27 (5.7)	7 (1.5)	476 (100.0)

주) *<0.1 / **<0.05 / ***<0.01

<표 V-166> 담당교수의 수업충실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수업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 계열**	인문계열	19 (27.9)	36 (52.9)	10 (14.7)	1 (1.5)	2 (2.9)	68 (100.0)
	사회+경영	22 (15.4)	81 (56.6)	34 (23.8)	6 (4.2)	0 (0.0)	143 (100.0)
	이학+공학	21 (13.6)	74 (48.1)	44 (28.6)	13 (8.4)	2 (1.3)	154 (100.0)
	농학+의학	10 (22.7)	13 (29.5)	15 (34.1)	4 (9.1)	2 (4.5)	44 (100.0)
	예체능+사범	10 (16.9)	26 (44.1)	19 (32.2)	3 (5.1)	1 (1.7)	59 (100.0)
전체		82 (17.5)	230 (49.1)	122 (26.1)	27 (5.8)	7 (1.5)	468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서울경기	29 (21.2)	77 (56.2)	28 (20.4)	2 (1.5)	1 (0.7)	137 (100.0)
	대전충청	16 (19.0)	46 (54.8)	17 (20.2)	5 (6.0)	0 (0.0)	84 (100.0)
	호남	1 (1.4)	18 (25.7)	36 (51.4)	11 (15.7)	4 (5.7)	70 (100.0)
	강원제주	6 (26.1)	15 (65.2)	0 (0.0)	2 (8.7)	0 (0.0)	23 (100.0)
	영남	30 (18.3)	79 (48.2)	46 (28.0)	7 (4.3)	2 (1.2)	164 (100.0)
전체		82 (17.2)	235 (49.2)	127 (26.6)	27 (5.6)	7 (1.5)	478 (10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29 (21.2)	77 (56.2)	28 (20.4)	2 (1.5)	1 (0.7)	137 (100.0)
	비수도권	53 (15.5)	158 (46.3)	99 (29.0)	25 (7.3)	6 (1.8)	341 (100.0)
전체		82 (17.2)	235 (49.2)	127 (26.6)	27 (5.6)	7 (1.5)	478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28 (14.6)	92 (47.9)	53 (27.6)	15 (7.8)	4 (2.1)	192 (100.0)
	사립대학	54 (18.9)	143 (50.0)	74 (25.9)	12 (4.2)	3 (1.0)	286 (100.0)
전체		82 (17.2)	235 (49.2)	127 (26.6)	27 (5.6)	7 (1.5)	478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53 (16.4)	160 (49.4)	87 (26.9)	17 (5.2)	7 (2.2)	324 (100.0)
	시간제	29 (19.0)	75 (49.0)	39 (25.5)	10 (6.5)	0 (0.0)	153 (100.0)
전체		82 (17.2)	235 (49.3)	126 (26.4)	27 (5.7)	7 (1.5)	477 (100.0)

주) *<0.1 / **<0.05 / ***<0.01

바) 대학원생의 수업 충실성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응답은 58.9%인 반면 충분한 수업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0.9%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은 30.2%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 절반 정도의 대학원생은 스스로 수업 준비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67> 대학원생의 수업 충실성(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52	10.9
대체로 그렇다	229	48.0
그저 그렇다	144	30.2
대체로 아니다	42	8.8
전혀 아니다	10	2.1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대학원생의 수업에 임하는 태도의 충실성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성별, 연령, 대학과 학위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 지역 및 대학원생의 신분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계열별 특성에서는 사회·경영계열과 인문계열이 가장 높은 충실성을 보인 반면 농학+의학계열과 이학·공학계열이 상대적으로 낮은 충실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8> 대학원생의 수업 충실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대학원생들이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20 (13.4)	78 (52.3)	37 (24.8)	12 (8.1)	2 (1.3)	149 (100.0)
	중규모	27 (9.6)	124 (44.3)	95 (33.9)	27 (9.6)	7 (2.5)	280 (100.0)
	소규모	5 (10.4)	27 (56.3)	12 (25.0)	3 (6.3)	1 (2.1)	48 (100.0)
전체		52 (10.9)	229 (48.0)	144 (30.2)	42 (8.8)	10 (2.1)	477 (100.0)
성별 **	남	22 (8.3)	119 (44.9)	90 (34.0)	29 (10.9)	5 (1.9)	265 (100.0)
	여	30 (14.2)	109 (51.7)	54 (25.6)	13 (6.2)	5 (2.4)	211 (100.0)
전체		52 (10.9)	228 (47.9)	144 (30.3)	42 (8.8)	10 (2.1)	476 (100.0)
연령 **	20대	14 (10.5)	53 (39.8)	54 (40.6)	10 (7.5)	2 (1.5)	133 (100.0)
	30대	27 (11.3)	115 (48.1)	62 (25.9)	28 (11.7)	7 (2.9)	239 (100.0)
	40대이상	11 (10.6)	60 (57.7)	28 (26.9)	4 (3.8)	1 (1.0)	104 (100.0)
전체		52 (10.9)	228 (47.9)	144 (30.3)	42 (8.8)	10 (2.1)	476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48 (12.5)	185 (48.1)	114 (29.6)	33 (8.6)	5 (1.3)	385 (100.0)
	수료자	4 (4.4)	43 (47.8)	30 (33.3)	8 (8.9)	5 (5.6)	90 (100.0)
전체		52 (10.9)	228 (48.0)	144 (30.3)	41 (8.6)	10 (2.1)	475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21 (12.4)	84 (49.7)	50 (29.6)	12 (7.1)	2 (1.2)	169 (100.0)
	3+4학기	21 (13.1)	75 (46.9)	49 (30.6)	12 (7.5)	3 (1.9)	160 (100.0)
	5+6학기이상	6 (10.7)	26 (46.4)	15 (26.8)	9 (16.1)	0 (0.0)	56 (100.0)
	수료자	4 (4.4)	43 (47.8)	30 (33.3)	8 (8.9)	5 (5.6)	90 (100.0)
전체		52 (10.9)	228 (48.0)	144 (30.3)	41 (8.6)	10 (2.1)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68> 대학원생의 수업 충실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대학원생들이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 계열 ***	인문계열	13 (19.1)	34 (50.0)	14 (20.6)	6 (8.8)	1 (1.5)	68 (100.0)
	사회+경영	11 (7.7)	91 (63.6)	37 (25.9)	4 (2.8)	0 (0.0)	143 (100.0)
	이학+공학	14 (9.1)	60 (39.0)	60 (39.0)	18 (11.7)	2 (1.3)	154 (100.0)
	농학+의학	6 (14.0)	14 (32.6)	12 (27.9)	7 (16.3)	4 (9.3)	43 (100.0)
	예체능+사범	7 (11.9)	26 (44.1)	18 (30.5)	6 (10.2)	2 (3.4)	59 (100.0)
전체		51 (10.9)	225 (48.2)	141 (30.2)	41 (8.8)	9 (1.9)	467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20 (14.6)	69 (50.4)	37 (27.0)	11 (8.0)	0 (0.0)	137 (100.0)
	대전충청	16 (19.0)	41 (48.8)	21 (25.0)	3 (3.6)	3 (3.6)	84 (100.0)
	호남	5 (7.1)	19 (27.1)	33 (47.1)	11 (15.7)	2 (2.9)	70 (100.0)
	강원제주	3 (13.0)	16 (69.6)	1 (4.3)	3 (13.0)	0 (0.0)	23 (100.0)
	영남	8 (4.9)	84 (51.5)	52 (31.9)	14 (8.6)	5 (3.1)	163 (100.0)
전체		52 (10.9)	229 (48.0)	144 (30.2)	42 (8.8)	10 (2.1)	477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15 (7.8)	98 (51.0)	55 (28.6)	20 (10.4)	4 (2.1)	192 (100.0)
	사립대학	37 (13.0)	131 (46.0)	89 (31.2)	22 (7.7)	6 (2.1)	285 (100.0)
전체		52 (10.9)	229 (48.0)	144 (30.2)	42 (8.8)	10 (2.1)	477 (100.0)
대학원생 신분 **	전일제	35 (10.8)	143 (44.3)	111 (34.4)	28 (8.7)	6 (1.9)	323 (100.0)
	시간제	17 (11.1)	86 (56.2)	32 (20.9)	14 (9.2)	4 (2.6)	153 (100.0)
전체		52 (10.9)	229 (48.1)	143 (30.0)	42 (8.8)	10 (2.1)	476 (100.0)

주) *<0.1 / **<0.05 / ***<0.01

사) 대학원 교육을 통한 학문적 발전

대학원 교육을 통해 전공분야의 최신 학문적 경향과 새로운 이론을 습득하고 있다는 응답은 64.0%인 반면 “그렇지 못하다”는 부정적 응답은 8.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대학원 교육이 최신 학문적 경향과 새로운 이론 습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69> 대학원 교육을 통한 학문적 발전(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78	16.4
대체로 그렇다	226	47.6
그저 그렇다	132	27.8
대체로 아니다	32	6.7
전혀 아니다	7	1.5
합계	475	100.0

결측: 4명(0.8%)

수업을 통해 학문적 경향과 새로운 이론의 습득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및 대학원생의 신분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규모별 특성에서는 중규모의 대학원과 전공계열별로는 농학+의학계열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의견을 보였다. 대학원의 지역별 특성에서는 수도권대학이 학문적 발전에 긍정적인 평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립대 보다는 사립대 소속 대학원생들의 평가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70> 대학원 교육을 통한 학문적 발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수업을 통해 전공분야의 최신 학문적 경향과 새로운 이론을 습득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30 (20.1)	75 (50.3)	28 (18.8)	14 (9.4)	2 (1.3)	149 (100.0)
	중규모	40 (14.4)	124 (44.6)	96 (34.5)	13 (4.7)	5 (1.8)	278 (100.0)
	소규모	8 (16.7)	27 (56.3)	8 (16.7)	5 (10.4)	0 (0.0)	48 (100.0)
전체		78 (16.4)	226 (47.6)	132 (27.8)	32 (6.7)	7 (1.5)	475 (100.0)
성별	남	40 (15.2)	115 (43.7)	83 (31.6)	21 (8.0)	4 (1.5)	263 (100.0)
	여	37 (17.5)	111 (52.6)	49 (23.2)	11 (5.2)	3 (1.4)	211 (100.0)
전체		77 (16.2)	226 (47.7)	132 (27.8)	32 (6.8)	7 (1.5)	474 (100.0)
연령	20대	19 (14.3)	55 (41.4)	48 (36.1)	8 (6.0)	3 (2.3)	133 (100.0)
	30대	37 (15.5)	118 (49.4)	63 (26.4)	17 (7.1)	4 (1.7)	239 (100.0)
	40대이상	21 (20.6)	53 (52.0)	21 (20.6)	7 (6.9)	0 (0.0)	102 (100.0)
전체		77 (16.2)	226 (47.7)	132 (27.8)	32 (6.8)	7 (1.5)	474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67 (17.4)	183 (47.5)	108 (28.1)	22 (5.7)	5 (1.3)	385 (100.0)
	수료자	10 (11.4)	43 (48.9)	23 (26.1)	10 (11.4)	2 (2.3)	88 (100.0)
전체		77 (16.3)	226 (47.8)	131 (27.7)	32 (6.8)	7 (1.5)	473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33 (19.5)	74 (43.8)	51 (30.2)	9 (5.3)	2 (1.2)	169 (100.0)
	3+4학기	24 (15.0)	81 (50.6)	44 (27.5)	9 (5.6)	2 (1.3)	160 (100.0)
	5+6학기이상	10 (17.9)	28 (50.0)	13 (23.2)	4 (7.1)	1 (1.8)	56 (100.0)
	수료자	10 (11.4)	43 (48.9)	23 (26.1)	10 (11.4)	2 (2.3)	88 (100.0)
전체		77 (16.3)	226 (47.8)	131 (27.7)	32 (6.8)	7 (1.5)	473 (100.0)

주) *<0.1 / **<0.05 / ***<0.01

<표 V-170> 대학원 교육을 통한 학문적 발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수업을 통해 전공분야의 최신 학문적 경향과 새로운 이론을 습득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계열 ***	인문계열	23 (33.8)	29 (42.6)	14 (20.6)	2 (2.9)	0 (0.0)	68 (100.0)
	사회+경영	17 (11.9)	84 (58.7)	35 (24.5)	7 (4.9)	0 (0.0)	143 (100.0)
	이학+공학	23 (15.1)	70 (46.1)	49 (32.2)	9 (5.9)	1 (0.7)	152 (100.0)
	농학+의학	5 (11.6)	14 (32.6)	16 (37.2)	4 (9.3)	4 (9.3)	43 (100.0)
	예체능+사범	10 (16.9)	26 (44.1)	11 (18.6)	10 (16.9)	2 (3.4)	59 (100.0)
전체		78 (16.8)	223 (48.0)	125 (26.9)	32 (6.9)	7 (1.5)	465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27 (19.7)	81 (59.1)	19 (13.9)	8 (5.8)	2 (1.5)	137 (100.0)
	대전충청	23 (27.4)	32 (38.1)	22 (26.2)	7 (8.3)	0 (0.0)	84 (100.0)
	호남	2 (2.9)	20 (28.6)	36 (51.4)	8 (11.4)	4 (5.7)	70 (100.0)
	강원제주	5 (21.7)	11 (47.8)	7 (30.4)	0 (0.0)	0 (0.0)	23 (100.0)
	영남	21 (13.0)	82 (50.9)	48 (29.8)	9 (5.6)	1 (0.6)	161 (100.0)
전체		78 (16.4)	226 (47.6)	132 (27.8)	32 (6.7)	7 (1.5)	475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27 (19.7)	81 (59.1)	19 (13.9)	8 (5.8)	2 (1.5)	137 (100.0)
	비수도권	51 (15.1)	145 (42.9)	113 (33.4)	24 (7.1)	5 (1.5)	338 (100.0)
전체		78 (16.4)	226 (47.6)	132 (27.8)	32 (6.7)	7 (1.5)	475 (100.0)
대학원 설립유형 ***	국공립대학	22 (11.5)	85 (44.3)	69 (35.9)	14 (7.3)	2 (1.0)	192 (100.0)
	사립대학	56 (19.8)	141 (49.8)	63 (22.3)	18 (6.4)	5 (1.8)	283 (100.0)
전체		78 (16.4)	226 (47.6)	132 (27.8)	32 (6.7)	7 (1.5)	475 (100.0)
대학원생 신분 ***	전일제	52 (16.2)	136 (42.4)	103 (32.1)	23 (7.2)	7 (2.2)	321 (100.0)
	시간제	26 (17.0)	89 (58.2)	29 (19.0)	9 (5.9)	0 (0.0)	153 (100.0)
전체		78 (16.5)	225 (47.5)	132 (27.8)	32 (6.8)	7 (1.5)	474 (100.0)

주) *<0.1 / **<0.05 / ***<0.01

아) 대학원의 영어 강의

대학원 강의가 주로 영어로 진행된다는 응답은 16.8%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원 수업에서 영어 강의 수업은 극히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표 V-171> 대학원의 영어 강의(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9	4.0
대체로 그렇다	61	12.8
그저 그렇다	129	27.0
대체로 아니다	162	34.0
전혀 아니다	106	22.2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대학원 영어 강의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연령, 대학과 학위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규모면에서는 중급규모의 대학이 영어로 강의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학·공학계열의 대학원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비중이 높았다. 한편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비중이 높았고 국립대보다는 사립대에서 영어 강의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2> 대학원의 영어 강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대학원 강의는 주로 영어로 진행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2 (1.3)	7 (4.7)	45 (30.2)	62 (41.6)	33 (22.1)	149 (100.0)
	중규모	16 (5.7)	53 (18.9)	74 (26.4)	87 (31.1)	50 (17.9)	280 (100.0)
	소규모	1 (2.1)	1 (2.1)	10 (20.8)	13 (27.1)	23 (47.9)	48 (100.0)
전체		19 (4.0)	61 (12.8)	129 (27.0)	162 (34.0)	106 (22.2)	477 (100.0)
성별	남	15 (5.7)	37 (14.0)	71 (26.8)	84 (31.7)	58 (21.9)	265 (100.0)
	여	4 (1.9)	24 (11.4)	58 (27.5)	77 (36.5)	48 (22.7)	211 (100.0)
전체		19 (4.0)	61 (12.8)	129 (27.1)	161 (33.8)	106 (22.3)	476 (100.0)
연령 ***	20대	12 (9.0)	27 (20.3)	35 (26.3)	35 (26.3)	24 (18.0)	133 (100.0)
	30대	5 (2.1)	17 (7.1)	64 (26.7)	96 (40.0)	58 (24.2)	240 (100.0)
	40대이상	2 (1.9)	17 (16.5)	30 (29.1)	30 (29.1)	24 (23.3)	103 (100.0)
전체		19 (4.0)	61 (12.8)	129 (27.1)	161 (33.8)	106 (22.3)	476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15 (3.9)	56 (14.5)	88 (22.9)	138 (35.8)	88 (22.9)	385 (100.0)
	수료자	4 (4.4)	5 (5.6)	40 (44.4)	23 (25.6)	18 (20.0)	90 (100.0)
전체		19 (4.0)	61 (12.8)	128 (26.9)	161 (33.9)	106 (22.3)	475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7 (4.1)	27 (15.9)	42 (24.7)	61 (35.9)	33 (19.4)	170 (100.0)
	3+4학기	2 (1.3)	20 (12.5)	33 (20.6)	61 (38.1)	44 (27.5)	160 (100.0)
	5+6학기이상	6 (10.9)	9 (16.4)	13 (23.6)	16 (29.1)	11 (20.0)	55 (100.0)
	수료자	4 (4.4)	5 (5.6)	40 (44.4)	23 (25.6)	18 (20.0)	90 (100.0)
전체		19 (4.0)	61 (12.8)	128 (26.9)	161 (33.9)	106 (22.3)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72> 대학원의 영어 강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대학원 강의는 주로 영어로 진행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 계열 ***	인문계열	0 (0.0)	3 (4.4)	13 (19.1)	23 (33.8)	29 (42.6)	68 (100.0)
	사회+경영	2 (1.4)	17 (11.9)	33 (23.1)	59 (41.3)	32 (22.4)	143 (100.0)
	이학+공학	17 (11.1)	31 (20.3)	53 (34.6)	38 (24.8)	14 (9.2)	153 (100.0)
	농학+의학	0 (0.0)	5 (11.4)	10 (22.7)	15 (34.1)	14 (31.8)	44 (100.0)
	예체능+사범	0 (0.0)	5 (8.5)	15 (25.4)	23 (39.0)	16 (27.1)	59 (100.0)
전체		19 (4.1)	61 (13.1)	124 (26.6)	158 (33.8)	105 (22.5)	467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3 (2.2)	5 (3.6)	38 (27.7)	61 (44.5)	30 (21.9)	137 (100.0)
	대전충청	1 (1.2)	3 (3.6)	23 (27.4)	31 (36.9)	26 (31.0)	84 (100.0)
	호남	0 (0.0)	12 (17.1)	15 (21.4)	29 (41.4)	14 (20.0)	70 (100.0)
	강원제주	0 (0.0)	5 (21.7)	6 (26.1)	8 (34.8)	4 (17.4)	23 (100.0)
	영남	15 (9.2)	36 (22.1)	47 (28.8)	33 (20.2)	32 (19.6)	163 (100.0)
전체		19 (4.0)	61 (12.8)	129 (27.0)	162 (34.0)	106 (22.2)	477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3 (2.2)	5 (3.6)	38 (27.7)	61 (44.5)	30 (21.9)	137 (100.0)
	비수도권	16 (4.7)	56 (16.5)	91 (26.8)	101 (29.7)	76 (22.4)	340 (100.0)
전체		19 (4.0)	61 (12.8)	129 (27.0)	162 (34.0)	106 (22.2)	477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	국공립대학	1 (0.5)	25 (13.0)	59 (30.7)	62 (32.3)	45 (23.4)	192 (100.0)
	사립대학	18 (6.3)	36 (12.6)	70 (24.6)	100 (35.1)	61 (21.4)	285 (100.0)
전체		19 (4.0)	61 (12.8)	129 (27.0)	162 (34.0)	106 (22.2)	477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12 (3.7)	45 (13.9)	88 (27.2)	106 (32.8)	72 (22.3)	323 (100.0)
	시간제	6 (3.9)	16 (10.5)	41 (26.8)	56 (36.6)	34 (22.2)	153 (100.0)
전체		18 (3.8)	61 (12.8)	129 (27.1)	162 (34.0)	106 (22.3)	476 (100.0)

주) *<0.1 / **<0.05 / ***<0.01

자) 개설과목에 대학원생 의견 반영

대학원 과정에서 강의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그 개설과목의 선정을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응답은 35.5%에 불과하였다. 반면,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의견 34.3%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 30.1%를 종합해 보면 개설과목 선정에 있어서 대학원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대학원들이 상당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V-173> 개설과목에 대학원생 의견 반영(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25	5.2
대체로 그렇다	145	30.3
그저 그렇다	164	34.3
대체로 아니다	109	22.8
전혀 아니다	35	7.3
합계	478	100.0

결측: 1명(0.2%)

개설과목 선정 시 대학원생의 의견반영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연령, 대학과 학위 이수수준,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및 대학원생의 신분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기가 올라갈수록 개설과목에 대한 의견수렴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립대 보다는 국립대에서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V-174> 개설과목에 대학원생 의견 반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대 학 원 개 설 과 목 은 대 학 원 생 들 의 의 견 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전 체
		매 우 그 렵 다	대 체 로 그 렵 다	그 저 그 렵 다	대 체 로 아 니 다	전 혀 아 니 다	
대 학 의 규 모	대 규모	9 (6.0)	40 (26.8)	52 (34.9)	38 (25.5)	10 (6.7)	149 (100.0)
	중 규모	13 (4.6)	92 (32.7)	95 (33.8)	61 (21.7)	20 (7.1)	281 (100.0)
	소 규모	3 (6.3)	13 (27.1)	17 (35.4)	10 (20.8)	5 (10.4)	48 (100.0)
전 체		25 (5.2)	145 (30.3)	164 (34.3)	109 (22.8)	35 (7.3)	478 (100.0)
성 별	남	9 (3.4)	83 (31.3)	88 (33.2)	64 (24.2)	21 (7.9)	265 (100.0)
	여	16 (7.5)	61 (28.8)	76 (35.8)	45 (21.2)	14 (6.6)	212 (100.0)
전 체		25 (5.2)	144 (30.2)	164 (34.4)	109 (22.9)	35 (7.3)	477 (100.0)
연 령 **	20대	4 (3.0)	37 (27.8)	41 (30.8)	40 (30.1)	11 (8.3)	133 (100.0)
	30대	9 (3.8)	73 (30.4)	83 (34.6)	54 (22.5)	21 (8.8)	240 (100.0)
	40대이상	11 (10.6)	35 (33.7)	40 (38.5)	15 (14.4)	3 (2.9)	104 (100.0)
전 체		24 (5.0)	145 (30.4)	164 (34.4)	109 (22.9)	35 (7.3)	477 (100.0)
대 학 원 과 정 수료 **	비 수료 자	23 (6.0)	124 (32.1)	128 (33.2)	81 (21.0)	30 (7.8)	386 (100.0)
	수료 자	1 (1.1)	21 (23.3)	35 (38.9)	28 (31.1)	5 (5.6)	90 (100.0)
전 체		24 (5.0)	145 (30.5)	163 (34.2)	109 (22.9)	35 (7.4)	476 (100.0)
대 학 원 이 수 학 기 (4범 주) *	1+2 학 기	12 (7.1)	59 (34.7)	51 (30.0)	37 (21.8)	11 (6.5)	170 (100.0)
	3+4 학 기	8 (5.0)	43 (26.9)	59 (36.9)	32 (20.0)	18 (11.3)	160 (100.0)
	5+6 학 기 이상	3 (5.4)	22 (39.3)	18 (32.1)	12 (21.4)	1 (1.8)	56 (100.0)
	수료 자	1 (1.1)	21 (23.3)	35 (38.9)	28 (31.1)	5 (5.6)	90 (100.0)
전 체		24 (5.0)	145 (30.5)	163 (34.2)	109 (22.9)	35 (7.4)	476 (100.0)

주) *<0.1 / **<0.05 / ***<0.01

<표 V-174> 개설과목에 대학원생 의견 반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대 학 원 개 설 과 목 은 대 학 원 생 들 의 의 견 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전 체
		매 우 그렇다	대 체 로 그렇다	그 저 그렇다	대 체 로 아니다	전 혀 아니다	
전 공 계 열	인문계열	6 (8.8)	18 (26.5)	19 (27.9)	15 (22.1)	10 (14.7)	68 (100.0)
	사회+경영	6 (4.2)	48 (33.6)	55 (38.5)	28 (19.6)	6 (4.2)	143 (100.0)
	이학+공학	8 (5.2)	50 (32.5)	50 (32.5)	38 (24.7)	8 (5.2)	154 (100.0)
	농학+의학	1 (2.3)	12 (27.3)	14 (31.8)	12 (27.3)	5 (11.4)	44 (100.0)
	예체능+사범	4 (6.8)	15 (25.4)	21 (35.6)	14 (23.7)	5 (8.5)	59 (100.0)
전체		25 (5.3)	143 (30.6)	159 (34.0)	107 (22.9)	34 (7.3)	468 (100.0)
대 학 원 소 재 지 역 **	서울경기	8 (5.8)	35 (25.5)	59 (43.1)	26 (19.0)	9 (6.6)	137 (100.0)
	대전충청	6 (7.1)	28 (33.3)	21 (25.0)	24 (28.6)	5 (6.0)	84 (100.0)
	호남	1 (1.4)	14 (20.0)	24 (34.3)	21 (30.0)	10 (14.3)	70 (100.0)
	강원제주	3 (13.0)	10 (43.5)	3 (13.0)	4 (17.4)	3 (13.0)	23 (100.0)
	영남	7 (4.3)	58 (35.4)	57 (34.8)	34 (20.7)	8 (4.9)	164 (100.0)
전체		25 (5.2)	145 (30.3)	164 (34.3)	109 (22.8)	35 (7.3)	478 (100.0)
수 도 권 여 부	수도권	8 (5.8)	35 (25.5)	59 (43.1)	26 (19.0)	9 (6.6)	137 (100.0)
	비수도권	17 (5.0)	110 (32.3)	105 (30.8)	83 (24.3)	26 (7.6)	341 (100.0)
전체		25 (5.2)	145 (30.3)	164 (34.3)	109 (22.8)	35 (7.3)	478 (100.0)
대 학 원 설 립 유 형 ***	국공립대학	11 (5.7)	71 (37.0)	47 (24.5)	50 (26.0)	13 (6.8)	192 (100.0)
	사립대학	14 (4.9)	74 (25.9)	117 (40.9)	59 (20.6)	22 (7.7)	286 (100.0)
전체		25 (5.2)	145 (30.3)	164 (34.3)	109 (22.8)	35 (7.3)	478 (100.0)
대 학 원 생 신 분 *	전일제	15 (4.6)	97 (29.9)	104 (32.1)	77 (23.8)	31 (9.6)	324 (100.0)
	시간제	10 (6.5)	47 (30.7)	60 (39.2)	32 (20.9)	4 (2.6)	153 (100.0)
전체		25 (5.2)	144 (30.2)	164 (34.4)	109 (22.9)	35 (7.3)	477 (100.0)

주) *<0.1 / **<0.05 / ***<0.01

차) 인접학과 수업 권장

교수가 인접 학과의 전공 수업을 수강하도록 권장한다는 응답은 37.2%인 반면 권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저 그렇다”는 다소 유보적인 응답 41.6%까지 고려해 본다면 다양한 학문영역의 등장과 그로 인한 폭넓은 전문가의 등장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인접학문에 대한 개방적이고 수용적 태도를 갖고 박사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필요성과 배치되는 현실로 해석된다.

<표 V-175> 인접학과 수업 권장(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23	4.9
대체로 그렇다	153	32.3
그저 그렇다	197	41.6
대체로 아니다	84	17.7
전혀 아니다	17	3.6
합계	474	100.0

결측: 5명(1.0%)

학위과정과 관련 있는 인접학과 전공수업을 수강할 것은 권장하는 것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연령,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규모가 클수록 인접 학문분야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에 대해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특성에서는 이학·공학계열과 사회·경영계열의 전공자들이 여타 학문분야의 수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176> 인접학과 수업 권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교수는 인접 학과의 전공 수업을 수강하도록 권장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5 (3.4)	63 (42.3)	57 (38.3)	19 (12.8)	5 (3.4)	149 (100.0)
	중규모	16 (5.8)	77 (27.8)	122 (44.0)	52 (18.8)	10 (3.6)	277 (100.0)
	소규모	2 (4.2)	13 (27.1)	18 (37.5)	13 (27.1)	2 (4.2)	48 (100.0)
전체		23 (4.9)	153 (32.3)	197 (41.6)	84 (17.7)	17 (3.6)	474 (100.0)
성별	남	9 (3.4)	82 (30.9)	110 (41.5)	52 (19.6)	12 (4.5)	265 (100.0)
	여	14 (6.7)	71 (34.1)	87 (41.8)	31 (14.9)	5 (2.4)	208 (100.0)
전체		23 (4.9)	153 (32.3)	197 (41.6)	83 (17.5)	17 (3.6)	473 (100.0)
연령 *	20대	7 (5.3)	49 (36.8)	41 (30.8)	31 (23.3)	5 (3.8)	133 (100.0)
	30대	14 (5.9)	73 (30.5)	104 (43.5)	38 (15.9)	10 (4.2)	239 (100.0)
	40대이상	2 (2.0)	30 (29.7)	52 (51.5)	15 (14.9)	2 (2.0)	101 (100.0)
전체		23 (4.9)	152 (32.1)	197 (41.6)	84 (17.8)	17 (3.6)	473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22 (5.8)	120 (31.4)	158 (41.4)	70 (18.3)	12 (3.1)	382 (100.0)
	수료자	1 (1.1)	31 (34.4)	39 (43.3)	14 (15.6)	5 (5.6)	90 (100.0)
전체		23 (4.9)	151 (32.0)	197 (41.7)	84 (17.8)	17 (3.6)	472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8 (4.7)	59 (34.9)	67 (39.6)	30 (17.8)	5 (3.0)	169 (100.0)
	3+4학기	8 (5.1)	47 (29.7)	62 (39.2)	34 (21.5)	7 (4.4)	158 (100.0)
	5+6학기이상	6 (10.9)	14 (25.5)	29 (52.7)	6 (10.9)	0 (0.0)	55 (100.0)
	수료자	1 (1.1)	31 (34.4)	39 (43.3)	14 (15.6)	5 (5.6)	90 (100.0)
전체		23 (4.9)	151 (32.0)	197 (41.7)	84 (17.8)	17 (3.6)	472 (100.0)

주) *<0.1 / **<0.05 / ***<0.01

<표 V-176> 인접학과 수업 권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교수는 인접 학과의 전공 수업을 수강하도록 권장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계열 ***	인문계열	0 (0.0)	17 (25.8)	36 (54.5)	12 (18.2)	1 (1.5)	66 (100.0)
	사회+경영	5 (3.5)	49 (34.3)	66 (46.2)	21 (14.7)	2 (1.4)	143 (100.0)
	이학+공학	12 (7.8)	55 (35.9)	51 (33.3)	29 (19.0)	6 (3.9)	153 (100.0)
	농학+의학	2 (4.7)	12 (27.9)	11 (25.6)	12 (27.9)	6 (14.0)	43 (100.0)
	예체능+사범	4 (6.8)	19 (32.2)	26 (44.1)	9 (15.3)	1 (1.7)	59 (100.0)
전체		23 (5.0)	152 (32.8)	190 (40.9)	83 (17.9)	16 (3.4)	464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6 (4.4)	54 (40.0)	55 (40.7)	18 (13.3)	2 (1.5)	135 (100.0)
	대전충청	2 (2.4)	28 (33.3)	31 (36.9)	19 (22.6)	4 (4.8)	84 (100.0)
	호남	1 (1.4)	13 (18.6)	38 (54.3)	14 (20.0)	4 (5.7)	70 (100.0)
	강원제주	1 (4.3)	7 (30.4)	10 (43.5)	3 (13.0)	2 (8.7)	23 (100.0)
	영남	13 (8.0)	51 (31.5)	63 (38.9)	30 (18.5)	5 (3.1)	162 (100.0)
전체		23 (4.9)	153 (32.3)	197 (41.6)	84 (17.7)	17 (3.6)	474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6 (4.4)	54 (40.0)	55 (40.7)	18 (13.3)	2 (1.5)	135 (100.0)
	비수도권	17 (5.0)	99 (29.2)	142 (41.9)	66 (19.5)	15 (4.4)	339 (100.0)
전체		23 (4.9)	153 (32.3)	197 (41.6)	84 (17.7)	17 (3.6)	474 (100.0)
대학원 설립유형 *	국공립대학	6 (3.1)	52 (27.1)	86 (44.8)	39 (20.3)	9 (4.7)	192 (100.0)
	사립대학	17 (6.0)	101 (35.8)	111 (39.4)	45 (16.0)	8 (2.8)	282 (100.0)
전체		23 (4.9)	153 (32.3)	197 (41.6)	84 (17.7)	17 (3.6)	474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17 (5.3)	98 (30.4)	136 (42.2)	58 (18.0)	13 (4.0)	322 (100.0)
	시간제	6 (4.0)	54 (35.8)	61 (40.4)	26 (17.2)	4 (2.6)	151 (100.0)
전체		23 (4.9)	152 (32.1)	197 (41.6)	84 (17.8)	17 (3.6)	473 (100.0)

주) * < 0.1 / ** < 0.05 / *** < 0.01

카) 외국대학원과 공동프로그램 운영

소속 대학원의 박사과정 프로그램 중에서 외국 대학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응답은 14.8%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 대학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외국 대학원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수준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석된다.

<표 V-177> 외국 대학원과 공동프로그램 운영(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22	4.7
대체로 그렇다	48	10.1
그저 그렇다	118	24.9
대체로 아니다	145	30.7
전혀 아니다	140	29.6
합계	473	100.0

결측: 6명(1.3%)

외국대학원과의 공동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연령,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및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계열별 특성에서 이학·공학계열이 외국 대학원과의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상대적으로 공동프로그램의 운영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78> 외국 대학원과 공동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외국 대학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전 체
		매 우 그렇 다	대 체 로 그렇 다	그 저 그렇 다	대 체 로 아 니 다	전 혀 아 니 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9 (6.0)	16 (10.7)	37 (24.8)	41 (27.5)	46 (30.9)	149 (100.0)
	중규모	9 (3.3)	32 (11.6)	67 (24.3)	91 (33.0)	77 (27.9)	276 (100.0)
	소규모	4 (8.3)	0 (0.0)	14 (29.2)	13 (27.1)	17 (35.4)	48 (100.0)
전체		22 (4.7)	48 (10.1)	118 (24.9)	145 (30.7)	140 (29.6)	473 (100.0)
성별	남	12 (4.5)	24 (9.1)	71 (26.8)	78 (29.4)	80 (30.2)	265 (100.0)
	여	10 (4.8)	24 (11.6)	47 (22.7)	67 (32.4)	59 (28.5)	207 (100.0)
전체		22 (4.7)	48 (10.2)	118 (25.0)	145 (30.7)	139 (29.4)	472 (100.0)
연령 ***	20대	9 (6.8)	15 (11.3)	27 (20.3)	54 (40.6)	28 (21.1)	133 (100.0)
	30대	4 (1.7)	24 (10.0)	55 (22.9)	68 (28.3)	89 (37.1)	240 (100.0)
	40대이상	9 (9.1)	9 (9.1)	35 (35.4)	23 (23.2)	23 (23.2)	99 (100.0)
전체		22 (4.7)	48 (10.2)	117 (24.8)	145 (30.7)	140 (29.7)	472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18 (4.7)	41 (10.8)	95 (24.9)	110 (28.9)	117 (30.7)	381 (100.0)
	수료자	4 (4.4)	7 (7.8)	21 (23.3)	35 (38.9)	23 (25.6)	90 (100.0)
전체		22 (4.7)	48 (10.2)	116 (24.6)	145 (30.8)	140 (29.7)	471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8 (4.8)	20 (11.9)	41 (24.4)	52 (31.0)	47 (28.0)	168 (100.0)
	3+4학기	7 (4.4)	13 (8.2)	36 (22.8)	50 (31.6)	52 (32.9)	158 (100.0)
	5+6학기이상	3 (5.5)	8 (14.5)	18 (32.7)	8 (14.5)	18 (32.7)	55 (100.0)
	수료자	4 (4.4)	7 (7.8)	21 (23.3)	35 (38.9)	23 (25.6)	90 (100.0)
전체		22 (4.7)	48 (10.2)	116 (24.6)	145 (30.8)	140 (29.7)	471 (100.0)

주) *<0.1 / **<0.05 / ***<0.01

<표 V-178> 외국 대학원과 공동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외국 대학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전 체
		매 우 그렇다	대 체 로 그렇다	그 저 그렇다	대 체 로 아니다	전 혀 아니다	
전 공 계 열 ***	인문계열	0 (0.0)	0 (0.0)	18 (28.1)	21 (32.8)	25 (39.1)	64 (100.0)
	사회+경영	9 (6.3)	15 (10.5)	44 (30.8)	39 (27.3)	36 (25.2)	143 (100.0)
	이학+공학	11 (7.2)	24 (15.7)	35 (22.9)	44 (28.8)	39 (25.5)	153 (100.0)
	농학+의학	1 (2.3)	3 (6.8)	9 (20.5)	18 (40.9)	13 (29.5)	44 (100.0)
	예체능+사범	1 (1.7)	6 (10.2)	8 (13.6)	21 (35.6)	23 (39.0)	59 (100.0)
전체		22 (4.8)	48 (10.4)	114 (24.6)	143 (30.9)	136 (29.4)	463 (100.0)
대 학 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10 (7.5)	10 (7.5)	38 (28.6)	41 (30.8)	34 (25.6)	133 (100.0)
	대전충청	1 (1.2)	7 (8.3)	19 (22.6)	26 (31.0)	31 (36.9)	84 (100.0)
	호남	0 (0.0)	7 (10.0)	24 (34.3)	25 (35.7)	14 (20.0)	70 (100.0)
	강원제주	1 (4.3)	3 (13.0)	7 (30.4)	6 (26.1)	6 (26.1)	23 (100.0)
	영남	10 (6.1)	21 (12.9)	30 (18.4)	47 (28.8)	55 (33.7)	163 (100.0)
전체		22 (4.7)	48 (10.1)	118 (24.9)	145 (30.7)	140 (29.6)	473 (100.0)
수 도 권 여 부	수도권	10 (7.5)	10 (7.5)	38 (28.6)	41 (30.8)	34 (25.6)	133 (100.0)
	비수도권	12 (3.5)	38 (11.2)	80 (23.5)	104 (30.6)	106 (31.2)	340 (100.0)
전체		22 (4.7)	48 (10.1)	118 (24.9)	145 (30.7)	140 (29.6)	473 (100.0)
대 학 원 설 립 유 형 ***	국공립대학	4 (2.1)	19 (9.9)	36 (18.8)	66 (34.4)	67 (34.9)	192 (100.0)
	사립대학	18 (6.4)	29 (10.3)	82 (29.2)	79 (28.1)	73 (26.0)	281 (100.0)
전체		22 (4.7)	48 (10.1)	118 (24.9)	145 (30.7)	140 (29.6)	473 (100.0)
대 학 원 생 신 분	전일제	13 (4.0)	33 (10.2)	75 (23.2)	105 (32.5)	97 (30.0)	323 (100.0)
	시간제	9 (6.0)	15 (10.1)	42 (28.2)	40 (26.8)	43 (28.9)	149 (100.0)
전체		22 (4.7)	48 (10.2)	117 (24.8)	145 (30.7)	140 (29.7)	472 (100.0)

주) *<0.1 / **<0.05 / ***<0.01

타) 담당교수와 공동 연구

교수와 공동 연구하고 있는 과제가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은 63.5%로 “없다”응답 9.4%보다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은 대체적으로 담당교수와 공동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79> 담당교수와 공동 연구(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75	15.7
대체로 그렇다	228	47.8
그저 그렇다	129	27.0
대체로 아니다	34	7.1
전혀 아니다	11	2.3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대학원생들이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사례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성별, 연령, 대학원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공동연구 빈도가 많았으며, 전공 영역별 분석에서는 이학·공학계열과 농학·의학계열 전공분야에서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공동연구 빈도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인문계열이 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연구 빈도가 가장 빈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80> 담당교수와 공동 연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31 (20.8)	69 (46.3)	41 (27.5)	8 (5.4)	0 (0.0)	149 (100.0)
	중규모	41 (14.6)	137 (48.9)	78 (27.9)	16 (5.7)	8 (2.9)	280 (100.0)
	소규모	3 (6.3)	22 (45.8)	10 (20.8)	10 (20.8)	3 (6.3)	48 (100.0)
전체		75 (15.7)	228 (47.8)	129 (27.0)	34 (7.1)	11 (2.3)	477 (100.0)
성별	남	36 (13.6)	139 (52.5)	69 (26.0)	16 (6.0)	5 (1.9)	265 (100.0)
	여	38 (18.0)	89 (42.2)	60 (28.4)	18 (8.5)	6 (2.8)	211 (100.0)
전체		74 (15.5)	228 (47.9)	129 (27.1)	34 (7.1)	11 (2.3)	476 (100.0)
연령 ***	20대	20 (15.0)	74 (55.6)	33 (24.8)	3 (2.3)	3 (2.3)	133 (100.0)
	30대	43 (18.0)	112 (46.9)	51 (21.3)	26 (10.9)	7 (2.9)	239 (100.0)
	40대이상	12 (11.5)	41 (39.4)	45 (43.3)	5 (4.8)	1 (1.0)	104 (100.0)
전체		75 (15.8)	227 (47.7)	129 (27.1)	34 (7.1)	11 (2.3)	476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66 (17.1)	177 (46.0)	110 (28.6)	25 (6.5)	7 (1.8)	385 (100.0)
	수료자	9 (10.0)	50 (55.6)	19 (21.1)	8 (8.9)	4 (4.4)	90 (100.0)
전체		75 (15.8)	227 (47.8)	129 (27.2)	33 (6.9)	11 (2.3)	475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28 (16.6)	71 (42.0)	58 (34.3)	10 (5.9)	2 (1.2)	169 (100.0)
	3+4학기	28 (17.5)	77 (48.1)	43 (26.9)	7 (4.4)	5 (3.1)	160 (100.0)
	5+6학기이상	10 (17.9)	29 (51.8)	9 (16.1)	8 (14.3)	0 (0.0)	56 (100.0)
	수료자	9 (10.0)	50 (55.6)	19 (21.1)	8 (8.9)	4 (4.4)	90 (100.0)
전체		75 (15.8)	227 (47.8)	129 (27.2)	33 (6.9)	11 (2.3)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80> 담당교수와 공동 연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계열 ***	인문계열	7 (10.3)	21 (30.9)	23 (33.8)	13 (19.1)	4 (5.9)	68 (100.0)
	사회+경영	21 (14.7)	58 (40.6)	50 (35.0)	11 (7.7)	3 (2.1)	143 (100.0)
	이학+공학	31 (20.1)	86 (55.8)	27 (17.5)	8 (5.2)	2 (1.3)	154 (100.0)
	농학+의학	7 (16.3)	26 (60.5)	8 (18.6)	0 (0.0)	2 (4.7)	43 (100.0)
	예체능+사범	7 (11.9)	34 (57.6)	16 (27.1)	2 (3.4)	0 (0.0)	59 (100.0)
전체		73 (15.6)	225 (48.2)	124 (26.6)	34 (7.3)	11 (2.4)	467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29 (21.2)	67 (48.9)	36 (26.3)	5 (3.6)	0 (0.0)	137 (100.0)
	대전충청	12 (14.3)	36 (42.9)	16 (19.0)	13 (15.5)	7 (8.3)	84 (100.0)
	호남	3 (4.3)	28 (40.0)	30 (42.9)	7 (10.0)	2 (2.9)	70 (100.0)
	강원제주	6 (26.1)	12 (52.2)	5 (21.7)	0 (0.0)	0 (0.0)	23 (100.0)
	영남	25 (15.3)	85 (52.1)	42 (25.8)	9 (5.5)	2 (1.2)	163 (100.0)
전체		75 (15.7)	228 (47.8)	129 (27.0)	34 (7.1)	11 (2.3)	477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29 (21.2)	67 (48.9)	36 (26.3)	5 (3.6)	0 (0.0)	137 (100.0)
	비수도권	46 (13.5)	161 (47.4)	93 (27.4)	29 (8.5)	11 (3.2)	340 (100.0)
전체		75 (15.7)	228 (47.8)	129 (27.0)	34 (7.1)	11 (2.3)	477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26 (13.5)	87 (45.3)	53 (27.6)	20 (10.4)	6 (3.1)	192 (100.0)
	사립대학	49 (17.2)	141 (49.5)	76 (26.7)	14 (4.9)	5 (1.8)	285 (100.0)
전체		75 (15.7)	228 (47.8)	129 (27.0)	34 (7.1)	11 (2.3)	477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54 (16.7)	150 (46.4)	84 (26.0)	26 (8.0)	9 (2.8)	323 (100.0)
	시간제	21 (13.7)	77 (50.3)	45 (29.4)	8 (5.2)	2 (1.3)	153 (100.0)
전체		75 (15.8)	227 (47.7)	129 (27.1)	34 (7.1)	11 (2.3)	476 (100.0)

주) *<0.1 / **<0.05 / ***<0.01

파) 학술지 논문게재 경험

학위논문 이외에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1.7%인 반면 논문작성 경험이 없는 경우는 19.1%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은 학위논문 이외에도 학위과정 동안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된다.

<표 V-181> 학술지 논문 게재 경험(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31	27.5
대체로 그렇다	163	34.2
그저 그렇다	91	19.1
대체로 아니다	61	12.8
전혀 아니다	30	6.3
합계	476	100.0

결측: 3명(0.6%)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연령, 대학과 학위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 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의 규모가 클수록 학술지에 대한 게재 빈도가 높았다. 전공계열별 특성에서는 이학·공학계열과 농학·의학계열의 전공분야에서 학술지 게재논문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적 특성에서는 수도권 대학들 보다는 비수도권대학들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들보다 학술지 게재논문의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2> 학술지 논문 게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학위논문 이외에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48 (32.4)	47 (31.8)	26 (17.6)	18 (12.2)	9 (6.1)	148 (100.0)
	중규모	77 (27.5)	94 (33.6)	62 (22.1)	35 (12.5)	12 (4.3)	280 (100.0)
	소규모	6 (12.5)	22 (45.8)	3 (6.3)	8 (16.7)	9 (18.8)	48 (100.0)
전체		131 (27.5)	163 (34.2)	91 (19.1)	61 (12.8)	30 (6.3)	476 (100.0)
성별	남	74 (28.0)	86 (32.6)	52 (19.7)	36 (13.6)	16 (6.1)	264 (100.0)
	여	56 (26.5)	77 (36.5)	39 (18.5)	25 (11.8)	14 (6.6)	211 (100.0)
전체		130 (27.4)	163 (34.3)	91 (19.2)	61 (12.8)	30 (6.3)	475 (100.0)
연령 ***	20대	36 (27.1)	51 (38.3)	29 (21.8)	12 (9.0)	5 (3.8)	133 (100.0)
	30대	74 (31.1)	79 (33.2)	48 (20.2)	22 (9.2)	15 (6.3)	238 (100.0)
	40대이상	21 (20.2)	32 (30.8)	14 (13.5)	27 (26.0)	10 (9.6)	104 (100.0)
전체		131 (27.6)	162 (34.1)	91 (19.2)	61 (12.8)	30 (6.3)	475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100 (26.0)	123 (32.0)	81 (21.1)	55 (14.3)	25 (6.5)	384 (100.0)
	수료자	31 (34.4)	39 (43.3)	9 (10.0)	6 (6.7)	5 (5.6)	90 (100.0)
전체		131 (27.6)	162 (34.2)	90 (19.0)	61 (12.9)	30 (6.3)	474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34 (20.1)	51 (30.2)	44 (26.0)	29 (17.2)	11 (6.5)	169 (100.0)
	3+4학기	48 (30.2)	54 (34.0)	28 (17.6)	18 (11.3)	11 (6.9)	159 (100.0)
	5+6학기이상	18 (32.1)	18 (32.1)	9 (16.1)	8 (14.3)	3 (5.4)	56 (100.0)
	수료자	31 (34.4)	39 (43.3)	9 (10.0)	6 (6.7)	5 (5.6)	90 (100.0)
전체		131 (27.6)	162 (34.2)	90 (19.0)	61 (12.9)	30 (6.3)	474 (100.0)

주) *<0.1 / **<0.05 / ***<0.01

<표 V-182> 학술지 논문 게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학위논문 이외에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계열 ***	인문계열	23 (33.8)	14 (20.6)	11 (16.2)	16 (23.5)	4 (5.9)	68 (100.0)
	사회+경영	20 (14.0)	55 (38.5)	34 (23.8)	25 (17.5)	9 (6.3)	143 (100.0)
	이학+공학	56 (36.4)	60 (39.0)	19 (12.3)	12 (7.8)	7 (4.5)	154 (100.0)
	농학+의학	16 (37.2)	17 (39.5)	7 (16.3)	1 (2.3)	2 (4.7)	43 (100.0)
	예체능+사범	15 (25.9)	16 (27.6)	15 (25.9)	6 (10.3)	6 (10.3)	58 (100.0)
전체		130 (27.9)	162 (34.8)	86 (18.5)	60 (12.9)	28 (6.0)	466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43 (31.4)	40 (29.2)	20 (14.6)	18 (13.1)	16 (11.7)	137 (100.0)
	대전충청	29 (34.9)	24 (28.9)	12 (14.5)	9 (10.8)	9 (10.8)	83 (100.0)
	호남	4 (5.7)	21 (30.0)	31 (44.3)	12 (17.1)	2 (2.9)	70 (100.0)
	강원제주	6 (26.1)	15 (65.2)	0 (0.0)	2 (8.7)	0 (0.0)	23 (100.0)
	영남	49 (30.1)	63 (38.7)	28 (17.2)	20 (12.3)	3 (1.8)	163 (100.0)
전체		131 (27.5)	163 (34.2)	91 (19.1)	61 (12.8)	30 (6.3)	476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43 (31.4)	40 (29.2)	20 (14.6)	18 (13.1)	16 (11.7)	137 (100.0)
	비수도권	88 (26.0)	123 (36.3)	71 (20.9)	43 (12.7)	14 (4.1)	339 (100.0)
전체		131 (27.5)	163 (34.2)	91 (19.1)	61 (12.8)	30 (6.3)	476 (100.0)
대학원 설립유형 **	국공립대학	48 (25.1)	80 (41.9)	38 (19.9)	16 (8.4)	9 (4.7)	191 (100.0)
	사립대학	83 (29.1)	83 (29.1)	53 (18.6)	45 (15.8)	21 (7.4)	285 (100.0)
전체		131 (27.5)	163 (34.2)	91 (19.1)	61 (12.8)	30 (6.3)	476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91 (28.3)	112 (34.8)	65 (20.2)	36 (11.2)	18 (5.6)	322 (100.0)
	시간제	40 (26.1)	50 (32.7)	26 (17.0)	25 (16.3)	12 (7.8)	153 (100.0)
전체		131 (27.6)	162 (34.1)	91 (19.2)	61 (12.8)	30 (6.3)	475 (100.0)

주) *<0.1 / **<0.05 / ***<0.01

하)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소속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 제고와 새로운 이론의 소개 및 체험 활동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을 운영한다. 따라서 전공 관련 세미나 또는 포럼을 얼마나 자주 개최하고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자주 개최한다”는 응답은 55.0%인 반면 “개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2%에 불과하였다.

<표 V-183> 대학원 차원의 세미나와 포럼 개최(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89	18.7
대체로 그렇다	173	36.3
그저 그렇다	161	33.8
대체로 아니다	48	10.1
전혀 아니다	5	1.1
합계	476	100.0

결측: 3명(0.6%)

대학원에서 자체 세미나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연령,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원생의 신분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의 전공계열별 특성에서는 이학·공학계열과 ·의학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최빈도를 보인 반면 사회·경상계열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최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84> 세미나와 포럼 개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전공 관련 세미나 또는 포럼을 자주 개최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35 (23.5)	59 (39.6)	42 (28.2)	13 (8.7)	0 (0.0)	149 (100.0)
	중규모	49 (17.6)	92 (33.0)	103 (36.9)	31 (11.1)	4 (1.4)	279 (100.0)
	소규모	5 (10.4)	22 (45.8)	16 (33.3)	4 (8.3)	1 (2.1)	48 (100.0)
전체		89 (18.7)	173 (36.3)	161 (33.8)	48 (10.1)	5 (1.1)	476 (100.0)
성별	남	46 (17.4)	102 (38.5)	89 (33.6)	26 (9.8)	2 (0.8)	265 (100.0)
	여	43 (20.5)	71 (33.8)	72 (34.3)	21 (10.0)	3 (1.4)	210 (100.0)
전체		89 (18.7)	173 (36.4)	161 (33.9)	47 (9.9)	5 (1.1)	475 (100.0)
연령 **	20대	33 (24.8)	51 (38.3)	39 (29.3)	10 (7.5)	0 (0.0)	133 (100.0)
	30대	44 (18.4)	84 (35.1)	77 (32.2)	31 (13.0)	3 (1.3)	239 (100.0)
	40대이상	12 (11.7)	37 (35.9)	45 (43.7)	7 (6.8)	2 (1.9)	103 (100.0)
전체		89 (18.7)	172 (36.2)	161 (33.9)	48 (10.1)	5 (1.1)	475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68 (17.7)	136 (35.4)	135 (35.2)	42 (10.9)	3 (0.8)	384 (100.0)
	수료자	21 (23.3)	36 (40.0)	25 (27.8)	6 (6.7)	2 (2.2)	90 (100.0)
전체		89 (18.8)	172 (36.3)	160 (33.8)	48 (10.1)	5 (1.1)	474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29 (17.2)	62 (36.7)	62 (36.7)	15 (8.9)	1 (0.6)	169 (100.0)
	3+4학기	25 (15.6)	54 (33.8)	58 (36.3)	21 (13.1)	2 (1.3)	160 (100.0)
	5+6학기이상	14 (25.5)	20 (36.4)	15 (27.3)	6 (10.9)	0 (0.0)	55 (100.0)
	수료자	21 (23.3)	36 (40.0)	25 (27.8)	6 (6.7)	2 (2.2)	90 (100.0)
전체		89 (18.8)	172 (36.3)	160 (33.8)	48 (10.1)	5 (1.1)	474 (100.0)

주) *<0.1 / **<0.05 / ***<0.01

<표 V-184> 세미나와 포럼 개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전공 관련 세미나 또는 포럼을 자주 개최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 계열 ***	인문계열	6 (8.8)	28 (41.2)	26 (38.2)	7 (10.3)	1 (1.5)	68 (100.0)
	사회+경영	17 (11.9)	39 (27.3)	68 (47.6)	19 (13.3)	0 (0.0)	143 (100.0)
	이학+공학	40 (26.1)	66 (43.1)	36 (23.5)	11 (7.2)	0 (0.0)	153 (100.0)
	농학+의학	14 (32.6)	16 (37.2)	9 (20.9)	2 (4.7)	2 (4.7)	43 (100.0)
	예체능+사범	11 (18.6)	24 (40.7)	17 (28.8)	7 (11.9)	0 (0.0)	59 (100.0)
전체		88 (18.9)	173 (37.1)	156 (33.5)	46 (9.9)	3 (0.6)	466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27 (19.7)	53 (38.7)	43 (31.4)	12 (8.8)	2 (1.5)	137 (100.0)
	대전충청	15 (17.9)	30 (35.7)	28 (33.3)	10 (11.9)	1 (1.2)	84 (100.0)
	호남	4 (5.7)	14 (20.0)	35 (50.0)	15 (21.4)	2 (2.9)	70 (100.0)
	강원제주	5 (21.7)	12 (52.2)	6 (26.1)	0 (0.0)	0 (0.0)	23 (100.0)
	영남	38 (23.5)	64 (39.5)	49 (30.2)	11 (6.8)	0 (0.0)	162 (100.0)
전체		89 (18.7)	173 (36.3)	161 (33.8)	48 (10.1)	5 (1.1)	476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36 (18.8)	75 (39.1)	57 (29.7)	22 (11.5)	2 (1.0)	192 (100.0)
	사립대학	53 (18.7)	98 (34.5)	104 (36.6)	26 (9.2)	3 (1.1)	284 (100.0)
전체		89 (18.7)	173 (36.3)	161 (33.8)	48 (10.1)	5 (1.1)	476 (100.0)
대학원생 신분 **	전일제	70 (21.7)	115 (35.7)	96 (29.8)	37 (11.5)	4 (1.2)	322 (100.0)
	시간제	19 (12.4)	57 (37.3)	65 (42.5)	11 (7.2)	1 (0.7)	153 (100.0)
전체		89 (18.7)	172 (36.2)	161 (33.9)	48 (10.1)	5 (1.1)	475 (100.0)

주) *<0.1 / **<0.05 / ***<0.01

5) 대학원의 교육여건

가) 대학원 전용 연구 공간의 확보

대학원생을 위한 전용 연구 공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8.4%인 반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3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원들이 대학원생을 위한 전용공간의 확보가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응답결과라 할 것이다.

<표 V-185> 대학원생 전용 연구 공간 확보(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55	11.6
대체로 그렇다	127	26.8
그저 그렇다	126	26.6
대체로 아니다	110	23.2
전혀 아니다	56	11.8
합계	474	100.0

결측: 5명(1.0%)

대학원 전용공간의 확보여건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대학원 학위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 규모가 클수록 대학원생을 위한 전용공간의 확보여건이 좋은 것으로 타나났으며, 전공계열별 특성에서는 이학+공학계열과 예체능+사범계열 전공 영역에서 대학원 전용공간의 확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의 대학원이 전용공간의 확보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86> 대학원 전용 연구 공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대학원생을 위한 전용 연구 공간이 충분하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15 (10.1)	40 (26.8)	33 (22.1)	47 (31.5)	14 (9.4)	149 (100.0)
	중규모	34 (12.3)	77 (27.8)	82 (29.6)	53 (19.1)	31 (11.2)	277 (100.0)
	소규모	6 (12.5)	10 (20.8)	11 (22.9)	10 (20.8)	11 (22.9)	48 (100.0)
전체		55 (11.6)	127 (26.8)	126 (26.6)	110 (23.2)	56 (11.8)	474 (100.0)
성별	남	34 (12.9)	69 (26.2)	71 (27.0)	60 (22.8)	29 (11.0)	263 (100.0)
	여	21 (10.0)	58 (27.6)	55 (26.2)	50 (23.8)	26 (12.4)	210 (100.0)
전체		55 (11.6)	127 (26.8)	126 (26.6)	110 (23.3)	55 (11.6)	473 (100.0)
연령	20대	13 (9.8)	35 (26.5)	33 (25.0)	32 (24.2)	19 (14.4)	132 (100.0)
	30대	37 (15.5)	65 (27.2)	59 (24.7)	54 (22.6)	24 (10.0)	239 (100.0)
	40대이상	4 (3.9)	27 (26.5)	34 (33.3)	24 (23.5)	13 (12.7)	102 (100.0)
전체		54 (11.4)	127 (26.8)	126 (26.6)	110 (23.3)	56 (11.8)	473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45 (11.7)	101 (26.3)	103 (26.8)	87 (22.7)	48 (12.5)	384 (100.0)
	수료자	9 (10.2)	26 (29.5)	22 (25.0)	23 (26.1)	8 (9.1)	88 (100.0)
전체		54 (11.4)	127 (26.9)	125 (26.5)	110 (23.3)	56 (11.9)	472 (100.0)
대학원 이수 학기(4범주)***	1+2학기	16 (9.5)	39 (23.2)	64 (38.1)	31 (18.5)	18 (10.7)	168 (100.0)
	3+4학기	16 (10.0)	48 (30.0)	35 (21.9)	37 (23.1)	24 (15.0)	160 (100.0)
	5+6학기이상	13 (23.2)	14 (25.0)	4 (7.1)	19 (33.9)	6 (10.7)	56 (100.0)
	수료자	9 (10.2)	26 (29.5)	22 (25.0)	23 (26.1)	8 (9.1)	88 (100.0)
전체		54 (11.4)	127 (26.9)	125 (26.5)	110 (23.3)	56 (11.9)	472 (100.0)

주) *<0.1 / **<0.05 / ***<0.01

<표 V-186> 대학원 전용 연구 공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대학원생을 위한 전용 연구 공간이 충분하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계열 **	인문계열	9 (13.2)	20 (29.4)	8 (11.8)	18 (26.5)	13 (19.1)	68 (100.0)
	사회+경영	6 (4.2)	36 (25.2)	45 (31.5)	39 (27.3)	17 (11.9)	143 (100.0)
	이학+공학	25 (16.4)	43 (28.3)	38 (25.0)	30 (19.7)	16 (10.5)	152 (100.0)
	농학+의학	6 (14.0)	10 (23.3)	13 (30.2)	7 (16.3)	7 (16.3)	43 (100.0)
	예체능+사범	8 (13.8)	18 (31.0)	13 (22.4)	16 (27.6)	3 (5.2)	58 (100.0)
전체		54 (11.6)	127 (27.4)	117 (25.2)	110 (23.7)	56 (12.1)	464 (100.0)
대학원소재지역 ***	서울경기	15 (10.9)	36 (26.3)	31 (22.6)	47 (34.3)	8 (5.8)	137 (100.0)
	대전충청	12 (14.3)	20 (23.8)	20 (23.8)	16 (19.0)	16 (19.0)	84 (100.0)
	호남	0 (0.0)	15 (21.7)	26 (37.7)	16 (23.2)	12 (17.4)	69 (100.0)
	강원제주	1 (4.3)	6 (26.1)	6 (26.1)	5 (21.7)	5 (21.7)	23 (100.0)
	영남	27 (16.8)	50 (31.1)	43 (26.7)	26 (16.1)	15 (9.3)	161 (100.0)
전체		55 (11.6)	127 (26.8)	126 (26.6)	110 (23.2)	56 (11.8)	474 (100.0)
수도권여부 ***	수도권	15 (10.9)	36 (26.3)	31 (22.6)	47 (34.3)	8 (5.8)	137 (100.0)
	비수도권	40 (11.9)	91 (27.0)	95 (28.2)	63 (18.7)	48 (14.2)	337 (100.0)
전체		55 (11.6)	127 (26.8)	126 (26.6)	110 (23.2)	56 (11.8)	474 (100.0)
대학원설립유형 ***	국공립대학	20 (10.4)	59 (30.7)	55 (28.6)	28 (14.6)	30 (15.6)	192 (100.0)
	사립대학	35 (12.4)	68 (24.1)	71 (25.2)	82 (29.1)	26 (9.2)	282 (100.0)
전체		55 (11.6)	127 (26.8)	126 (26.6)	110 (23.2)	56 (11.8)	474 (100.0)
대학원생신분	전일제	34 (10.6)	92 (28.7)	83 (25.9)	74 (23.1)	37 (11.6)	320 (100.0)
	시간제	21 (13.7)	34 (22.2)	43 (28.1)	36 (23.5)	19 (12.4)	153 (100.0)
전체		55 (11.6)	126 (26.6)	126 (26.6)	110 (23.3)	56 (11.8)	473 (100.0)

주) *<0.1 / **<0.05 / ***<0.01

나) 대학원 강의평가제도 도입 여부

대학원에서 대학원 강의에 강의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59.7%인 반면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원들이 강의평가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87> 대학원 강의평가제도의 도입 여부(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27	26.9
대체로 그렇다	155	32.8
그저 그렇다	96	20.3
대체로 아니다	63	13.3
전혀 아니다	31	6.6
합계	472	100.0

결측: 7명(1.5%)

강의평가제 도입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대학원 학위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및 대학원생의 신분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의 규모면에서는 중급규모의 대학원이 강의평가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대학의 유형별 특성에서는 국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의 대학원에서 강의평가제 도입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88> 대학원 강의평가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귀 대학원은 대학원 강의에도 강의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57 (38.5)	57 (38.5)	19 (12.8)	10 (6.8)	5 (3.4)	148 (100.0)
	중규모	60 (21.7)	78 (28.2)	67 (24.2)	47 (17.0)	25 (9.0)	277 (100.0)
	소규모	10 (21.3)	20 (42.6)	10 (21.3)	6 (12.8)	1 (2.1)	47 (100.0)
전체		127 (26.9)	155 (32.8)	96 (20.3)	63 (13.3)	31 (6.6)	472 (100.0)
성별	남	72 (27.5)	84 (32.1)	53 (20.2)	40 (15.3)	13 (5.0)	262 (100.0)
	여	54 (25.8)	71 (34.0)	43 (20.6)	23 (11.0)	18 (8.6)	209 (100.0)
전체		126 (26.8)	155 (32.9)	96 (20.4)	63 (13.4)	31 (6.6)	471 (100.0)
연령	20대	41 (31.1)	33 (25.0)	29 (22.0)	20 (15.2)	9 (6.8)	132 (100.0)
	30대	66 (27.7)	85 (35.7)	40 (16.8)	32 (13.4)	15 (6.3)	238 (100.0)
	40대이상	19 (18.8)	37 (36.6)	27 (26.7)	11 (10.9)	7 (6.9)	101 (100.0)
전체		126 (26.8)	155 (32.9)	96 (20.4)	63 (13.4)	31 (6.6)	471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104 (27.2)	132 (34.5)	81 (21.1)	43 (11.2)	23 (6.0)	383 (100.0)
	수료자	22 (25.3)	23 (26.4)	14 (16.1)	20 (23.0)	8 (9.2)	87 (100.0)
전체		126 (26.8)	155 (33.0)	95 (20.2)	63 (13.4)	31 (6.6)	470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41 (24.6)	61 (36.5)	37 (22.2)	18 (10.8)	10 (6.0)	167 (100.0)
	3+4학기	45 (28.1)	50 (31.3)	37 (23.1)	15 (9.4)	13 (8.1)	160 (100.0)
	5+6학기이상	18 (32.1)	21 (37.5)	7 (12.5)	10 (17.9)	0 (0.0)	56 (100.0)
	수료자	22 (25.3)	23 (26.4)	14 (16.1)	20 (23.0)	8 (9.2)	87 (100.0)
전체		126 (26.8)	155 (33.0)	95 (20.2)	63 (13.4)	31 (6.6)	470 (100.0)

주) *<0.1 / **<0.05 / ***<0.01

<표 V-188> 대학원 강의평가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귀 대학원은 대학원 강의에도 강의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계열 **	인문계열	20 (29.9)	14 (20.9)	14 (20.9)	14 (20.9)	5 (7.5)	67 (100.0)
	사회+경영	28 (19.9)	61 (43.3)	33 (23.4)	13 (9.2)	6 (4.3)	141 (100.0)
	이학+공학	49 (32.2)	48 (31.6)	25 (16.4)	22 (14.5)	8 (5.3)	152 (100.0)
	농학+의학	8 (18.6)	13 (30.2)	7 (16.3)	8 (18.6)	7 (16.3)	43 (100.0)
	예체능+사범	21 (35.6)	17 (28.8)	10 (16.9)	6 (10.2)	5 (8.5)	59 (100.0)
전체		126 (27.3)	153 (33.1)	89 (19.3)	63 (13.6)	31 (6.7)	462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45 (32.8)	66 (48.2)	17 (12.4)	9 (6.6)	0 (0.0)	137 (100.0)
	대전충청	33 (39.8)	26 (31.3)	16 (19.3)	7 (8.4)	1 (1.2)	83 (100.0)
	호남	1 (1.4)	5 (7.1)	29 (41.4)	19 (27.1)	16 (22.9)	70 (100.0)
	강원제주	3 (14.3)	8 (38.1)	3 (14.3)	3 (14.3)	4 (19.0)	21 (100.0)
	영남	45 (28.0)	50 (31.1)	31 (19.3)	25 (15.5)	10 (6.2)	161 (100.0)
전체		127 (26.9)	155 (32.8)	96 (20.3)	63 (13.3)	31 (6.6)	472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45 (32.8)	66 (48.2)	17 (12.4)	9 (6.6)	0 (0.0)	137 (100.0)
	비수도권	82 (24.5)	89 (26.6)	79 (23.6)	54 (16.1)	31 (9.3)	335 (100.0)
전체		127 (26.9)	155 (32.8)	96 (20.3)	63 (13.3)	31 (6.6)	472 (100.0)
대학원 설립유형 ***	국공립대학	40 (21.1)	55 (28.9)	43 (22.6)	32 (16.8)	20 (10.5)	190 (100.0)
	사립대학	87 (30.9)	100 (35.5)	53 (18.8)	31 (11.0)	11 (3.9)	282 (100.0)
전체		127 (26.9)	155 (32.8)	96 (20.3)	63 (13.3)	31 (6.6)	472 (100.0)
대학원생 신분 **	전일제	82 (25.6)	96 (30.0)	67 (20.9)	52 (16.3)	23 (7.2)	320 (100.0)
	시간제	45 (29.8)	58 (38.4)	29 (19.2)	11 (7.3)	8 (5.3)	151 (100.0)
전체		127 (27.0)	154 (32.7)	96 (20.4)	63 (13.4)	31 (6.6)	471 (100.0)

주) *<0.1 / **<0.05 / ***<0.01

다) 각종 기자재의 확보

대학원 강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응답은 45.9%인 반면 “충분치 못하다”는 응답은 2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30.0%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을 위한 각종 기자재의 확보 상태는 그리 양호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89> 각종 기자재의 확보(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60	12.6
대체로 그렇다	159	33.3
그저 그렇다	143	30.0
대체로 아니다	84	17.6
전혀 아니다	31	6.5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강의기자재의 확보여건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수준,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계열별 특성에서 이학·공학계열 전공영역에서 강의기자재 확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농학·의학 분야의 대학원생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의견을 표시하였다. 한편 수도권지역 대학원생들의 강의기자재 확보여건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90> 각종 기자재의 확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대학원 강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15 (10.1)	56 (37.6)	41 (27.5)	32 (21.5)	5 (3.4)	149 (100.0)
	중규모	40 (14.3)	89 (31.8)	86 (30.7)	42 (15.0)	23 (8.2)	280 (100.0)
	소규모	5 (10.4)	14 (29.2)	16 (33.3)	10 (20.8)	3 (6.3)	48 (100.0)
전체		60 (12.6)	159 (33.3)	143 (30.0)	84 (17.6)	31 (6.5)	477 (100.0)
성별	남	39 (14.7)	92 (34.7)	71 (26.8)	46 (17.4)	17 (6.4)	265 (100.0)
	여	21 (10.0)	67 (31.8)	72 (34.1)	38 (18.0)	13 (6.2)	211 (100.0)
전체		60 (12.6)	159 (33.4)	143 (30.0)	84 (17.6)	30 (6.3)	476 (100.0)
연령	20대	22 (16.5)	36 (27.1)	45 (33.8)	22 (16.5)	8 (6.0)	133 (100.0)
	30대	30 (12.6)	87 (36.4)	60 (25.1)	46 (19.2)	16 (6.7)	239 (100.0)
	40대이상	7 (6.7)	36 (34.6)	38 (36.5)	16 (15.4)	7 (6.7)	104 (100.0)
전체		59 (12.4)	159 (33.4)	143 (30.0)	84 (17.6)	31 (6.5)	476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43 (11.2)	129 (33.5)	120 (31.2)	67 (17.4)	26 (6.8)	385 (100.0)
	수료자	16 (17.8)	30 (33.3)	23 (25.6)	16 (17.8)	5 (5.6)	90 (100.0)
전체		59 (12.4)	159 (33.5)	143 (30.1)	83 (17.5)	31 (6.5)	475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18 (10.7)	59 (34.9)	51 (30.2)	33 (19.5)	8 (4.7)	169 (100.0)
	3+4학기	12 (7.5)	51 (31.9)	55 (34.4)	26 (16.3)	16 (10.0)	160 (100.0)
	5+6학기이상	13 (23.2)	19 (33.9)	14 (25.0)	8 (14.3)	2 (3.6)	56 (100.0)
	수료자	16 (17.8)	30 (33.3)	23 (25.6)	16 (17.8)	5 (5.6)	90 (100.0)
전체		59 (12.4)	159 (33.5)	143 (30.1)	83 (17.5)	31 (6.5)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90> 각종 기자재의 확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대학원 강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계열 ***	인문계열	2 (2.9)	20 (29.4)	22 (32.4)	17 (25.0)	7 (10.3)	68 (100.0)
	사회+경영	9 (6.3)	49 (34.3)	50 (35.0)	25 (17.5)	10 (7.0)	143 (100.0)
	이학+공학	36 (23.4)	55 (35.7)	37 (24.0)	19 (12.3)	7 (4.5)	154 (100.0)
	농학+의학	7 (16.3)	8 (18.6)	12 (27.9)	12 (27.9)	4 (9.3)	43 (100.0)
	예체능+사범	5 (8.5)	24 (40.7)	17 (28.8)	11 (18.6)	2 (3.4)	59 (100.0)
전체		59 (12.6)	156 (33.4)	138 (29.6)	84 (18.0)	30 (6.4)	467 (100.0)
대학원 소재지역 ***	서울경기	14 (10.2)	54 (39.4)	36 (26.3)	31 (22.6)	2 (1.5)	137 (100.0)
	대전충청	11 (13.1)	24 (28.6)	24 (28.6)	15 (17.9)	10 (11.9)	84 (100.0)
	호남	1 (1.4)	14 (20.0)	33 (47.1)	16 (22.9)	6 (8.6)	70 (100.0)
	강원제주	2 (8.7)	6 (26.1)	7 (30.4)	6 (26.1)	2 (8.7)	23 (100.0)
	영남	32 (19.6)	61 (37.4)	43 (26.4)	16 (9.8)	11 (6.7)	163 (100.0)
전체		60 (12.6)	159 (33.3)	143 (30.0)	84 (17.6)	31 (6.5)	477 (100.0)
수도권 여부 ***	수도권	14 (10.2)	54 (39.4)	36 (26.3)	31 (22.6)	2 (1.5)	137 (100.0)
	비수도권	46 (13.5)	105 (30.9)	107 (31.5)	53 (15.6)	29 (8.5)	340 (100.0)
전체		60 (12.6)	159 (33.3)	143 (30.0)	84 (17.6)	31 (6.5)	477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국공립대학	19 (9.9)	69 (35.9)	59 (30.7)	29 (15.1)	16 (8.3)	192 (100.0)
	사립대학	41 (14.4)	90 (31.6)	84 (29.5)	55 (19.3)	15 (5.3)	285 (100.0)
전체		60 (12.6)	159 (33.3)	143 (30.0)	84 (17.6)	31 (6.5)	477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39 (12.1)	106 (32.8)	95 (29.4)	58 (18.0)	25 (7.7)	323 (100.0)
	시간제	21 (13.7)	52 (34.0)	48 (31.4)	26 (17.0)	6 (3.9)	153 (100.0)
전체		60 (12.6)	158 (33.2)	143 (30.0)	84 (17.6)	31 (6.5)	476 (100.0)

주) *<0.1 / **<0.05 / ***<0.01

라) 장학금제도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에 대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응답은 31.9%에 불과한 반면 “많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1>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40	8.4
대체로 그렇다	112	23.5
그저 그렇다	167	35.0
대체로 아니다	108	22.6
전혀 아니다	50	10.5
합계	477	100.0

결측: 2명(0.4%)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수혜제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연령, 전공계열,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급 규모 대학의 대학원소속이 장학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공계열별로는 이학·공학계열이 가장 나은 장학금 제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농학·의학계열과 예체능·사범계열 전공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학금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의 장학제도 여건이 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92> 장학금 제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9 (6.0)	20 (13.4)	57 (38.3)	37 (24.8)	26 (17.4)	149 (100.0)
	중규모	27 (9.6)	82 (29.3)	87 (31.1)	64 (22.9)	20 (7.1)	280 (100.0)
	소규모	4 (8.3)	10 (20.8)	23 (47.9)	7 (14.6)	4 (8.3)	48 (100.0)
전체		40 (8.4)	112 (23.5)	167 (35.0)	108 (22.6)	50 (10.5)	477 (100.0)
성별	남	19 (7.2)	72 (27.2)	91 (34.3)	54 (20.4)	29 (10.9)	265 (100.0)
	여	20 (9.5)	40 (19.0)	76 (36.0)	54 (25.6)	21 (10.0)	211 (100.0)
전체		39 (8.2)	112 (23.5)	167 (35.1)	108 (22.7)	50 (10.5)	476 (100.0)
연령 *	20대	17 (12.8)	31 (23.3)	48 (36.1)	24 (18.0)	13 (9.8)	133 (100.0)
	30대	16 (6.7)	49 (20.5)	80 (33.5)	64 (26.8)	30 (12.6)	239 (100.0)
	40대이상	7 (6.7)	32 (30.8)	38 (36.5)	20 (19.2)	7 (6.7)	104 (100.0)
전체		40 (8.4)	112 (23.5)	166 (34.9)	108 (22.7)	50 (10.5)	476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30 (7.8)	92 (23.9)	134 (34.8)	92 (23.9)	37 (9.6)	385 (100.0)
	수료자	10 (11.1)	20 (22.2)	32 (35.6)	15 (16.7)	13 (14.4)	90 (100.0)
전체		40 (8.4)	112 (23.6)	166 (34.9)	107 (22.5)	50 (10.5)	475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1+2학기	11 (6.5)	35 (20.7)	67 (39.6)	42 (24.9)	14 (8.3)	169 (100.0)
	3+4학기	12 (7.5)	43 (26.9)	45 (28.1)	41 (25.6)	19 (11.9)	160 (100.0)
	5+6학기이상	7 (12.5)	14 (25.0)	22 (39.3)	9 (16.1)	4 (7.1)	56 (100.0)
	수료자	10 (11.1)	20 (22.2)	32 (35.6)	15 (16.7)	13 (14.4)	90 (100.0)
전체		40 (8.4)	112 (23.6)	166 (34.9)	107 (22.5)	50 (10.5)	475 (100.0)

주) *<0.1 / **<0.05 / ***<0.01

<표 V-192> 장학금 제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계열 ***	인문계열	6 (8.8)	15 (22.1)	27 (39.7)	11 (16.2)	9 (13.2)	68 (100.0)
	사회+경영	2 (1.4)	37 (25.9)	47 (32.9)	37 (25.9)	20 (14.0)	143 (100.0)
	이학+공학	28 (18.2)	42 (27.3)	50 (32.5)	24 (15.6)	10 (6.5)	154 (100.0)
	농학+의학	2 (4.7)	6 (14.0)	13 (30.2)	19 (44.2)	3 (7.0)	43 (100.0)
	예체능+사범	2 (3.4)	10 (16.9)	23 (39.0)	16 (27.1)	8 (13.6)	59 (100.0)
전체		40 (8.6)	110 (23.6)	160 (34.3)	107 (22.9)	50 (10.7)	467 (100.0)
대학원소재지역 ***	서울경기	14 (10.2)	33 (24.1)	46 (33.6)	31 (22.6)	13 (9.5)	137 (100.0)
	대전충청	4 (4.8)	7 (8.3)	29 (34.5)	27 (32.1)	17 (20.2)	84 (100.0)
	호남	0 (0.0)	13 (18.6)	25 (35.7)	30 (42.9)	2 (2.9)	70 (100.0)
	강원제주	0 (0.0)	1 (4.3)	11 (47.8)	8 (34.8)	3 (13.0)	23 (100.0)
	영남	22 (13.5)	58 (35.6)	56 (34.4)	12 (7.4)	15 (9.2)	163 (100.0)
전체		40 (8.4)	112 (23.5)	167 (35.0)	108 (22.6)	50 (10.5)	477 (100.0)
대학원설립유형 ***	국공립대학	6 (3.1)	38 (19.8)	77 (40.1)	45 (23.4)	26 (13.5)	192 (100.0)
	사립대학	34 (11.9)	74 (26.0)	90 (31.6)	63 (22.1)	24 (8.4)	285 (100.0)
전체		40 (8.4)	112 (23.5)	167 (35.0)	108 (22.6)	50 (10.5)	477 (100.0)
대학원생신분	전일제	27 (8.4)	77 (23.8)	105 (32.5)	76 (23.5)	38 (11.8)	323 (100.0)
	시간제	13 (8.5)	34 (22.2)	62 (40.5)	32 (20.9)	12 (7.8)	153 (100.0)
전체		40 (8.4)	111 (23.3)	167 (35.1)	108 (22.7)	50 (10.5)	476 (100.0)

주) *<0.1 / **<0.05 / ***<0.01

마) 기숙사 시설

박사과정의 경우 기혼자가 상당수 있을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대학원생들이 많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숙시설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시설의 실태를 설문한 결과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응답은 30.3%에 불과한 반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42.6%에 달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원의 기숙사 시설은 아직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193>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31	6.5
대체로 그렇다	113	23.8
그저 그렇다	128	27.0
대체로 아니다	116	24.5
전혀 아니다	86	18.1
합계	474	100.0

결측: 5명(1.0%)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여건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성별,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수준,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기숙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대학의 소재지역별 특성에서는 영남지역 소재 대학원들이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원생들이 그 다음으로 기숙시설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대학설립유형별 특성에서는 국공립대학이 사립대 보다는 기숙시설이 잘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높았다.

<표 V-194>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12 (8.1)	36 (24.2)	47 (31.5)	37 (24.8)	17 (11.4)	149 (100.0)
	중규모	19 (6.9)	71 (25.6)	62 (22.4)	68 (24.5)	57 (20.6)	277 (100.0)
	소규모	0 (0.0)	6 (12.5)	19 (39.6)	11 (22.9)	12 (25.0)	48 (100.0)
전체		31 (6.5)	113 (23.8)	128 (27.0)	116 (24.5)	86 (18.1)	474 (100.0)
성별 ***	남	26 (9.8)	59 (22.3)	61 (23.0)	67 (25.3)	52 (19.6)	265 (100.0)
	여	5 (2.4)	54 (26.0)	67 (32.2)	49 (23.6)	33 (15.9)	208 (100.0)
전체		31 (6.6)	113 (23.9)	128 (27.1)	116 (24.5)	85 (18.0)	473 (100.0)
연령	20대	10 (7.5)	34 (25.6)	34 (25.6)	30 (22.6)	25 (18.8)	133 (100.0)
	30대	20 (8.4)	53 (22.3)	64 (26.9)	60 (25.2)	41 (17.2)	238 (100.0)
	40대이상	1 (1.0)	26 (25.5)	29 (28.4)	26 (25.5)	20 (19.6)	102 (100.0)
전체		31 (6.6)	113 (23.9)	127 (26.8)	116 (24.5)	86 (18.2)	473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25 (6.5)	95 (24.9)	98 (25.7)	95 (24.9)	69 (18.1)	382 (100.0)
	수료자	6 (6.7)	18 (20.0)	29 (32.2)	20 (22.2)	17 (18.9)	90 (100.0)
전체		31 (6.6)	113 (23.9)	127 (26.9)	115 (24.4)	86 (18.2)	472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12 (7.1)	34 (20.2)	52 (31.0)	42 (25.0)	28 (16.7)	168 (100.0)
	3+4학기	5 (3.1)	44 (27.5)	42 (26.3)	40 (25.0)	29 (18.1)	160 (100.0)
	5+6학기이상	8 (14.8)	17 (31.5)	4 (7.4)	13 (24.1)	12 (22.2)	54 (100.0)
	수료자	6 (6.7)	18 (20.0)	29 (32.2)	20 (22.2)	17 (18.9)	90 (100.0)
전체		31 (6.6)	113 (23.9)	127 (26.9)	115 (24.4)	86 (18.2)	472 (100.0)

주) *<0.1 / **<0.05 / ***<0.01

<표 V-194>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 계열	인문계열	2 (3.0)	19 (28.8)	18 (27.3)	18 (27.3)	9 (13.6)	66 (100.0)
	사회+경영	5 (3.5)	37 (25.9)	39 (27.3)	36 (25.2)	26 (18.2)	143 (100.0)
	이학+공학	20 (13.1)	30 (19.6)	38 (24.8)	36 (23.5)	29 (19.0)	153 (100.0)
	농학+의학	0 (0.0)	8 (18.6)	13 (30.2)	12 (27.9)	10 (23.3)	43 (100.0)
	예체능+사범	4 (6.8)	17 (28.8)	15 (25.4)	13 (22.0)	10 (16.9)	59 (100.0)
전체		31 (6.7)	111 (23.9)	123 (26.5)	115 (24.8)	84 (18.1)	464 (100.0)
대학원 소재 지역 ***	서울+경기	6 (4.4)	29 (21.2)	36 (26.3)	37 (27.0)	29 (21.2)	137 (100.0)
	대전충청	3 (3.6)	16 (19.0)	20 (23.8)	24 (28.6)	21 (25.0)	84 (100.0)
	호남	0 (0.0)	3 (4.3)	23 (33.3)	27 (39.1)	16 (23.2)	69 (100.0)
	강원+제주	0 (0.0)	3 (13.6)	5 (22.7)	12 (54.5)	2 (9.1)	22 (100.0)
	영남	22 (13.6)	62 (38.3)	44 (27.2)	16 (9.9)	18 (11.1)	162 (100.0)
전체		31 (6.5)	113 (23.8)	128 (27.0)	116 (24.5)	86 (18.1)	474 (100.0)
대학원 설립 유형 *	국공립대학	11 (5.8)	49 (25.7)	63 (33.0)	38 (19.9)	30 (15.7)	191 (100.0)
	사립대학	20 (7.1)	64 (22.6)	65 (23.0)	78 (27.6)	56 (19.8)	283 (100.0)
전체		31 (6.5)	113 (23.8)	128 (27.0)	116 (24.5)	86 (18.1)	474 (100.0)
대학원생 신분	전일제	26 (8.1)	72 (22.4)	85 (26.5)	79 (24.6)	59 (18.4)	321 (100.0)
	시간제	5 (3.3)	40 (26.3)	43 (28.3)	37 (24.3)	27 (17.8)	152 (100.0)
전체		31 (6.6)	112 (23.7)	128 (27.1)	116 (24.5)	86 (18.2)	473 (100.0)

주) *<0.1 / **<0.05 / ***<0.01

바)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

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자의 취업 실태에서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30.6%인 반면 “잘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3%나 되었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9.1%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원 졸업자들이 학위취득 이후 취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V-195>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24	5.0
대체로 그렇다	122	25.6
그저 그렇다	186	39.1
대체로 아니다	117	24.6
전혀 아니다	27	5.7
합계	476	100.0

결측: 3명(0.6%)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실태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대학의 규모, 연령,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수준,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졸업자의 취업여건이 좋다는 응답이 높았다. 전공계열별 특성에서는 이학·공학계열 전공영역 졸업자의 취업률이 높은 반면 인문계열 전공영역이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 대학원 졸업자보다 취업률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V-196>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자의 취업이 잘 되고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	대규모	3 (2.0)	50 (33.6)	60 (40.3)	28 (18.8)	8 (5.4)	149 (100.0)
	중규모	21 (7.5)	63 (22.6)	106 (38.0)	75 (26.9)	14 (5.0)	279 (100.0)
	소규모	0 (0.0)	9 (18.8)	20 (41.7)	14 (29.2)	5 (10.4)	48 (100.0)
전체		24 (5.0)	122 (25.6)	186 (39.1)	117 (24.6)	27 (5.7)	476 (100.0)
성별	남	16 (6.0)	71 (26.8)	103 (38.9)	58 (21.9)	17 (6.4)	265 (100.0)
	여	8 (3.8)	51 (24.3)	82 (39.0)	59 (28.1)	10 (4.8)	210 (100.0)
전체		24 (5.1)	122 (25.7)	185 (38.9)	117 (24.6)	27 (5.7)	475 (100.0)
연령 ***	20대	17 (12.8)	33 (24.8)	53 (39.8)	25 (18.8)	5 (3.8)	133 (100.0)
	30대	5 (2.1)	69 (28.9)	78 (32.6)	70 (29.3)	17 (7.1)	239 (100.0)
	40대이상	2 (1.9)	20 (19.4)	54 (52.4)	22 (21.4)	5 (4.9)	103 (100.0)
전체		24 (5.1)	122 (25.7)	185 (38.9)	117 (24.6)	27 (5.7)	475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	비수료자	21 (5.5)	99 (25.8)	149 (38.8)	99 (25.8)	16 (4.2)	384 (100.0)
	수료자	3 (3.3)	23 (25.6)	36 (40.0)	17 (18.9)	11 (12.2)	90 (100.0)
전체		24 (5.1)	122 (25.7)	185 (39.0)	116 (24.5)	27 (5.7)	474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11 (6.5)	43 (25.4)	65 (38.5)	43 (25.4)	7 (4.1)	169 (100.0)
	3+4학기	5 (3.1)	41 (25.6)	67 (41.9)	38 (23.8)	9 (5.6)	160 (100.0)
	5+6학기이상	5 (9.1)	15 (27.3)	17 (30.9)	18 (32.7)	0 (0.0)	55 (100.0)
	수료자	3 (3.3)	23 (25.6)	36 (40.0)	17 (18.9)	11 (12.2)	90 (100.0)
전체		24 (5.1)	122 (25.7)	185 (39.0)	116 (24.5)	27 (5.7)	474 (100.0)

주) *<0.1 / **<0.05 / ***<0.01

<표 V-196>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자의 취업이 잘 되고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공계열 ***	인문계열	0 (0.0)	12 (17.6)	28 (41.2)	23 (33.8)	5 (7.4)	68 (100.0)
	사회+경영	2 (1.4)	32 (22.4)	67 (46.9)	35 (24.5)	7 (4.9)	143 (100.0)
	이학+공학	22 (14.4)	48 (31.4)	54 (35.3)	26 (17.0)	3 (2.0)	153 (100.0)
	농학+의학	0 (0.0)	12 (27.9)	11 (25.6)	15 (34.9)	5 (11.6)	43 (100.0)
	예체능+사범	0 (0.0)	16 (27.1)	20 (33.9)	16 (27.1)	7 (11.9)	59 (100.0)
전체		24 (5.2)	120 (25.8)	180 (38.6)	115 (24.7)	27 (5.8)	466 (100.0)
대학원소재지역 ***	서울경기	5 (3.6)	46 (33.6)	57 (41.6)	23 (16.8)	6 (4.4)	137 (100.0)
	대전충청	0 (0.0)	19 (22.6)	27 (32.1)	27 (32.1)	11 (13.1)	84 (100.0)
	호남	0 (0.0)	7 (10.0)	29 (41.4)	29 (41.4)	5 (7.1)	70 (100.0)
	강원제주	0 (0.0)	6 (26.1)	9 (39.1)	7 (30.4)	1 (4.3)	23 (100.0)
	영남	19 (11.7)	44 (27.2)	64 (39.5)	31 (19.1)	4 (2.5)	162 (100.0)
전체		24 (5.0)	122 (25.6)	186 (39.1)	117 (24.6)	27 (5.7)	476 (100.0)
대학원설립유형 **	국공립대학	3 (1.6)	46 (24.0)	73 (38.0)	58 (30.2)	12 (6.3)	192 (100.0)
	사립대학	21 (7.4)	76 (26.8)	113 (39.8)	59 (20.8)	15 (5.3)	284 (100.0)
전체		24 (5.0)	122 (25.6)	186 (39.1)	117 (24.6)	27 (5.7)	476 (100.0)
대학원생신분	전일제	19 (5.9)	82 (25.5)	117 (36.3)	82 (25.5)	22 (6.8)	322 (100.0)
	시간제	5 (3.3)	39 (25.5)	69 (45.1)	35 (22.9)	5 (3.3)	153 (100.0)
전체		24 (5.1)	121 (25.5)	186 (39.2)	117 (24.6)	27 (5.7)	475 (100.0)

주) *<0.1 / **<0.05 / ***<0.01

사) 대학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대학원의 행정서비스체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9.8%인 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4.6%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45.6%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원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은 대체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V-197> 대학원 행정서비스 만족도(대학원생 집단)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29	6.1
대체로 그렇다	113	23.7
그저 그렇다	217	45.6
대체로 아니다	82	17.2
전혀 아니다	35	7.4
합계	476	100.0

결측: 3명(0.6%)

대학원의 행정지원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원생집단의 특성을 보면 성별,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수준, 대학원의 소재지역, 대학의 설립유형 및 대학원생의 신분 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설립유형별 특성에서 사립대학 대학원의 행정지원서비스가 국공립대학원의 행정서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특성에서는 수도권 대학소재 대학원들이 자체행정서비스의 질적 만족도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비수도권지역의 대학원들에 대한 평가보다 긍정적 평가의 견이 높았다.

<표 V-198> 대학원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 집단)

구 분		대학원의 행정서비스체제에 만족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의 규모	대규모	10 (6.7)	41 (27.5)	65 (43.6)	26 (17.4)	7 (4.7)	149 (100.0)
	중규모	17 (6.1)	61 (21.9)	133 (47.7)	45 (16.1)	23 (8.2)	279 (100.0)
	소규모	2 (4.2)	11 (22.9)	19 (39.6)	11 (22.9)	5 (10.4)	48 (100.0)
전체		29 (6.1)	113 (23.7)	217 (45.6)	82 (17.2)	35 (7.4)	476 (100.0)
성별 *	남	19 (7.2)	63 (23.8)	117 (44.2)	40 (15.1)	26 (9.8)	265 (100.0)
	여	10 (4.8)	49 (23.3)	100 (47.6)	42 (20.0)	9 (4.3)	210 (100.0)
전체		29 (6.1)	112 (23.6)	217 (45.7)	82 (17.3)	35 (7.4)	475 (100.0)
연령	20대	9 (6.8)	30 (22.6)	65 (48.9)	19 (14.3)	10 (7.5)	133 (100.0)
	30대	13 (5.4)	56 (23.4)	102 (42.7)	45 (18.8)	23 (9.6)	239 (100.0)
	40대이상	7 (6.8)	27 (26.2)	49 (47.6)	18 (17.5)	2 (1.9)	103 (100.0)
전체		29 (6.1)	113 (23.8)	216 (45.5)	82 (17.3)	35 (7.4)	475 (100.0)
대학원 과정 수료	비수료자	26 (6.8)	90 (23.4)	175 (45.6)	67 (17.4)	26 (6.8)	384 (100.0)
	수료자	3 (3.3)	23 (25.6)	41 (45.6)	14 (15.6)	9 (10.0)	90 (100.0)
전체		29 (6.1)	113 (23.8)	216 (45.6)	81 (17.1)	35 (7.4)	474 (100.0)
대학원 이수 학기 (4범주) **	1+2학기	15 (8.9)	42 (24.9)	72 (42.6)	34 (20.1)	6 (3.6)	169 (100.0)
	3+4학기	4 (2.5)	39 (24.4)	76 (47.5)	28 (17.5)	13 (8.1)	160 (100.0)
	5+6학기이상	7 (12.7)	9 (16.4)	27 (49.1)	5 (9.1)	7 (12.7)	55 (100.0)
	수료자	3 (3.3)	23 (25.6)	41 (45.6)	14 (15.6)	9 (10.0)	90 (100.0)
전체		29 (6.1)	113 (23.8)	216 (45.6)	81 (17.1)	35 (7.4)	474 (100.0)

주) *<0.1 / **<0.05 / ***<0.01

<표 V-198> 대학원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대학원생)(표계속)

구 분		대 학 원 의 행 정 서 비 스 체 제 에 만 족 한 다					전 체
		매 우 그 령 다	대 체 로 그 령 다	그 저 그 령 다	대 체 로 아 니 다	전 혀 아 니 다	
전 공 계 열	인문계열	2 (2.9)	18 (26.5)	32 (47.1)	12 (17.6)	4 (5.9)	68 (100.0)
	사회+경영	8 (5.6)	34 (23.8)	74 (51.7)	20 (14.0)	7 (4.9)	143 (100.0)
	이학+공학	12 (7.8)	38 (24.8)	63 (41.2)	26 (17.0)	14 (9.2)	153 (100.0)
	농 학+의학	1 (2.3)	11 (25.6)	13 (30.2)	13 (30.2)	5 (11.6)	43 (100.0)
	예 체 능+사범	6 (10.2)	10 (16.9)	29 (49.2)	10 (16.9)	4 (6.8)	59 (100.0)
전 체		29 (6.2)	111 (23.8)	211 (45.3)	81 (17.4)	34 (7.3)	466 (100.0)
대 학 원 소 재 지 역 **	서울경기	12 (8.8)	41 (29.9)	60 (43.8)	18 (13.1)	6 (4.4)	137 (100.0)
	대전충청	3 (3.6)	14 (16.7)	36 (42.9)	18 (21.4)	13 (15.5)	84 (100.0)
	호남	1 (1.4)	12 (17.1)	38 (54.3)	15 (21.4)	4 (5.7)	70 (100.0)
	강원제주	2 (8.7)	4 (17.4)	9 (39.1)	6 (26.1)	2 (8.7)	23 (100.0)
	영남	11 (6.8)	42 (25.9)	74 (45.7)	25 (15.4)	10 (6.2)	162 (100.0)
전 체		29 (6.1)	113 (23.7)	217 (45.6)	82 (17.2)	35 (7.4)	476 (100.0)
수 도 권 여 부 **	수 도 권	12 (8.8)	41 (29.9)	60 (43.8)	18 (13.1)	6 (4.4)	137 (100.0)
	비 수 도 권	17 (5.0)	72 (21.2)	157 (46.3)	64 (18.9)	29 (8.6)	339 (100.0)
전 체		29 (6.1)	113 (23.7)	217 (45.6)	82 (17.2)	35 (7.4)	476 (100.0)
대 학 원 설 립 유 형 ***	國公(국공) 립대학	4 (2.1)	46 (24.0)	83 (43.2)	41 (21.4)	18 (9.4)	192 (100.0)
	사립대학	25 (8.8)	67 (23.6)	134 (47.2)	41 (14.4)	17 (6.0)	284 (100.0)
전 체		29 (6.1)	113 (23.7)	217 (45.6)	82 (17.2)	35 (7.4)	476 (100.0)
대 학 원 생 신 분 *	전 일 제	20 (6.2)	76 (23.6)	143 (44.4)	52 (16.1)	31 (9.6)	322 (100.0)
	시 간 제	9 (5.9)	36 (23.5)	74 (48.4)	30 (19.6)	4 (2.6)	153 (100.0)
전 체		29 (6.1)	112 (23.6)	217 (45.7)	82 (17.3)	35 (7.4)	475 (100.0)

주) *<0.1 / **<0.05 / ***<0.01

4. 박사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 국내박사학위 운영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다양화와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역할과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이제 대학원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은 학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학술·연구 역량의 필요성을 요청 받고 있고, 아울러 국제적 수준의 교육 및 학술 연구를 담당할 고도의 이론 및 전문적 고급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안고 있다.

대학원 교육이 고급두뇌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최상의 학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원 박사과정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시점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원 박사과정 전반에 대한 대외적인 문제점(거시적인 문제의식)과 대학원 박사과정 자체가 안고 있는 대내적인 문제점(미시적인 문제의식)을 구분하여 진단함으로써 대학원 박사과정 개혁의 방향과 개혁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이 지니고 있는 대외적인 문제점으로서 첫째, 우리나라 대학원 체제가 후속학문세대를 양성하기에는 질적 수준이나 학문적 수월성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이 높지 않고, 해외박사를 우대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는 점이다. 우수 두뇌유출과 학문의 해외의존성 심화 및 국부유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의 대학원과 교수들이 제 분야의 학문 후속세대를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선진국의 앞선 학문적 성과를 배우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도 없다. 문제는 국내 학위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외국 학위 선호가 국내 대학원의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외생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지만, 한편으로는 외국 학위에 대한 왜곡된 사회·문화적 심리 구조를 극복하는 일이 좀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원별 수요공급의 불균형 현상과 박사학위의 공급과잉이 대학원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지식기반산업 부문의 강화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전문 고급두뇌 양성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육의 팽창과 일반교육화 현상으로 인해 상위학력인 대학원교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원 인가의 남발과 박사과정의 신설로 인해 대학원 교육의 질적 저하 현상이 사회적 현상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학문 중심적인 일반대학원의 경우, 과잉공급과 지속적인 수요의 감소로 인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지방의 일반대학원의 경우 대학의 학부와 마찬가지로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형식적인 교육·연구 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박사학위 인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별로 진정한 고급 연구 인력이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데에는 현재 대학원의 수요공급 체제로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학문분야별·설립별 대학원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의 특성과 학풍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원 유형에 따른 이념과 기능이 혼돈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대학원 유형을 구분하고, 연구중심대학(대학원 위주 연구중심대학과 연구중심 단설대학원), 교육중심대학(대학원병설 교육중심대학, 학부 위주의 교육중심대학), 기술인력양성대학 등으로 분화하여 특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형식적으로 체제 변화를 유도하여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형 분화에 따른 법률적 차원에서 이념과 기능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고,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차별성이 없이 이론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학원 운영 면에 있어서도 유형별로 차별화와 특성화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대학원 운영이 부실한 대학은 유형에 관계없이 부실한 교육·연구여건을 유지한 채 특성 없는 대학원을 유지하고 있다. 개별 대학마다 대학원 교육을 위해 별도의 행정 직제는 만들어져 있지만, 대학원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실험실습실 등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하여 학부교육의 연장

선상에서 대학원 교육과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원 박사과정은 특성은 물론 학문공동체에 의한 대학원마다의 학풍이 서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원의 특성과 학풍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대학당국, 교수와 학생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편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이 지니고 있는 대내적인 문제점으로서 첫째, 대학원 박사과정의 구조적 한계점을 들 수 있다. 대학당국의 관심과 투자 없이 팽창된 대학원 박사과정은 대학원내의 내부적 모순 즉 도제식 사제관계, 학문생산 방식의 수공업성, 서비스가 없는 권위주의적 교육, 학문 및 지식생산의 동종교배 현상 가중, 선택과 배제의 원칙 작용 등의 전근대적 ‘대학원 운영 방식’에 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대학원 내의 연구 활동에서 학생이나 후배가 교수나 선배를 자유롭게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맹종해야 하는 학문적 풍토에서 대학원의 근본적인 기능 회복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이 대학원을 선택할 때, 교수진이나 연구시설, 객관적 평가결과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않고 대학원의 간판이나 동창생으로서의 효력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아무리 훌륭한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지방이라는 지역적 요인 때문에 기피하는 등의 교육적·학문적 풍토가 개선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대학원 박사과정의 질 개선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특성 없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과 부실 운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전일제 학생 중심의 학문후속세대라기 보다는 직장을 다니면서 고학력 자격증을 얻기 위해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학사관리를 허술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테면, 직장인의 허위출석 기재, 과제·논문대행업체 이용 등 일부대학이 박사과위 학위과정을 부실 운영하면서 나타난 대학원 운영체제의 부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원 박사과정의 질적 수준이나 학문적 수월성이 뒤떨어지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학원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절대적으로 교수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박사과정을 운영하면서 이들은 학부 및 특수(전문)대학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정에 따라 지도해야 하는 학생수는 많지만 실제 학과 소속의 교수수는 너무나 적은 관계로 박사과정의 교육이나 학

생지도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많은 학과의 경우 5명 내외의 교수로 구성된 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박사학위논문의 질적 수준 담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넷째, 박사학위과정 운영의 불합리성 문제이다. 학위과정의 졸업학점 범위는 학칙에 위임되어 있으나, 학문영역 혹은 계열별에 따라 다양하지도 못하고(대부분이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요구), 동시에 교육과정 운영이 엄격하지 못하여 교육영역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다는 점이다. 유럽은 이미 박사학위 표준화를 위해 유럽의 39개 대학 모임인 꼬임브라 그룹(the Coimbra Group)에 의해 발의되었고, 유럽 대학에서 배출한 박사학위의 국제적 가치, 즉 "브랜드 네임"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운영의 엄격성은 향후 박사과정의 내실화 여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지도체제의 불합리성 문제이다. 학위논문 생산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교수와 학문적 유대 관계이지만, 학과별로 세부전공의 지도교수가 다양하지 않고, 연구의 독창성에 대한 학문적 성찰이 부족하며, 지도교수와 복종적 도제교육시스템 운영으로 학문적 비판 풍토가 결여되는 등 지도교수제 운영의 문제점이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박사학위의 질적 저하와 부조리 발생 문제이다. 논문표절 등 부정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계가 표절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처벌조항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학위논문의 표절은 저작권이라는 법률적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학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의 문제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논문 표절에 대한 검증 및 차단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논문 심사과정에서 심사자 개개인이 표절 부분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부정학위 수여에 대한 제재 미흡과 일부 대학에서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부조리 관행이 발생됨으로써 국내 박사학위 논문의 질적 수준과 사회적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다.

나. 박사학위과정 운영의 개선 방안

1) 개선의 기본 방향

□ 국내 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확보

- 현재 대학원 교육의 질 저하와 학위제도의 질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학원 박사학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이를 위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원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논문심사과정 등 일련의 대학원 학사관리체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 또한 대학원 유형에 따른 학위 명칭을 재정비하여 학위가 주는 학문적, 직업적 신호를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음.

□ 박사학위와 직업자격간의 연계 강화

- 대학원 박사학위과정과 직업자격과의 연계를 정교화시켜 자격제도를 통해 대학원과 노동시장과의 긴밀한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자격제도는 교육훈련제도와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중요한 국가·사회적 인프라이기 때문임.

□ 대학원 운영의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

- 향후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국민과 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1세기형 다양한 대학원 체제’의 구축과 학제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 이를 위해 대학원을 포함한 고등교육 학제는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적성을 기르기 위하여 다양하고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함.
- 또한 대학(원) 학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어느 트랙(track)을 선택하든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함.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와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개인과 국가·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설립목적, 교육연한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함.

□ 대학원 학제 운영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는 특히 대학원 교육체제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의 고등교육체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방법, 제도 등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해야 함.
- 대학(원)은 세계화 추세에 맞게 국제적인 이동이나 교환, 상호 인정 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제를 ‘국제 표준화(global standard)’에 부합해야 하고, 국제적 통용성과 국제적 교육수요 변화에 부응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수업연한, 졸업, 학위 및 자격 등에서 국제적 통용성을 제고하고, 교육과정의 범위(scope)와 계통(sequence)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편해야 함.

2) 대학원 박사학위제도 개편 방안

□ 박사학위 명칭의 선명화

- 박사학위는 크게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학위 명칭을 통해 학위 종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학술학위의 명칭 통일; Ph.D.(일반박사학위), M.A.(일반석사학위)
 - 다만, 전공별 명칭은 ()로 표시하도록 함.
- 전문학위 명칭은 전문 분야에 따른 현행과 같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학위의 종류)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박사학위 수여 기관의 연계를 통한 박사학위의 학문적 질 제고

-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마다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 학과 신설을 위한 교원 확보 기준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최소 5명, 박사 과정은 최소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박사과정 학과 신설을 위한 전임교원 연구실적
 - (1) 전임교원 1/2이상(7명중 4명 이상)은 박사학위과정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 가)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 최근 5년간 교과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내외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2편 이상
 - 나)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 최근 5년간 교과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내외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
 - (2) 연구실적 인정범위; 박사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
- 교과부는 박사학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을 정해 2012년부터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리려면 학부 정원을 1.5~2명 줄여야 하는 ‘학부 감축을 통한 증원’ 조항을 추가하였음.
- 또한 교과부는 일반·전문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신설할 때 기준이 되는 교원 연구실적(논문 등)의 최소기준 편수를 상향하고 국제논문에는 가중치를 주는 방안 제시
- 이는 "대학원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으면서 교육의 질은 유지하는 한편 대학원을 키우려는 대학에서는 학부 구조개혁 효과 기대(연합뉴스, 2011.08.11)
-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박사학위를 부여하기에는 학과당 7명 전후의 교원 규모는 수준 미달이라는 사실임.
- 이를테면 교육학과에 교수는 15명이라고는 하지만 교육학의 하위 전공은 너무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전공 교수는 1-2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각 전공별로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경우 대학원 (사범대학)에 교육 행정학과(ELPA), 교육심리학과, 교육정책학과 등에 각각 교수 15명, 22명, 13명 등이 재직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이 단일 대학의 단일 학과에서 세부 전공별로 박사학위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박사학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부 전공분야별로 대학과 학과, 그리고 교수들이 연계하여 학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수여 기관의 연계체제 구축이 요구됨.

□ 박사학위 이수과정의 합리적 조정 운영

- 직장인의 학업여건을 고려하여 박사학위과정을 전일제와 부분제로 구분 운영
 - 학생의 학업여건을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 시행하되, 개별학생의 부분제 참여 여부는 학생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
 - 학칙에 부분제 운영의 근거 조항 신설
- 이수과정의 차이에 따른 등록금 조정
 - 이수과정에 따른 등록금 차등 징수를 통하여 학생들의 참여 유도
 - 학칙 또는 등록금 관련 별도규정 반영 유도

□ 학위과정 운영의 합리성이나 공정성 확보

- 학위논문(특히 박사학위논문)의 표준화 방안 검토
 - 유럽은 이미 박사학위 표준화를 위해 39개 대학 모임인 꼬임브라 그룹(the Coimbra Group)에 의해 발의되었고, 유럽출신 박사학위의 국제적 가치, 즉 “브랜드 네임”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졸업학점 범위는 학칙에 위임되어 있으나, 학문영역 혹은 계열에 따라 다양하지 못하며(대부분이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요구), 또한 코스워크 운영이 엄격하지 못하여 교육영역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음.
- 학위 표준화 방안 마련 적용
 - 어느 대학에서 졸업하던 간에 학위 논문의 질적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박사학위 졸업이수 학점은 36학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위과정 (학·석사과정, 석·박사과정), 대학원 종류(일반/전문/특수대학원)에 따라 졸업이수 학점 범위가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사범대학의 경우, 석·박사과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고, Ph.D. 와 Ed.D.로 학위종류가 구분되어 있으며, 졸업이수 학점인 경우에도 60학점에서 90학점에 이르기까지 학과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학위 표절 검증 및 차단시스템(프로그램) 개발

-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계가 표절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처벌조항을 마련하지 못했음.
- 학위논문의 표절은 저작권이라는 법률적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학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의 문제
 -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위논문의 표절은 저작권법과 연계되어 있어 엄격히 관리해야 함.
- 하지만 무엇보다도 논문 표절에 대한 검증 및 차단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논문 심사과정에서 심사자 개개인이 표절 부분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임.
- 논문 표절 방지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
 - 논문 표절 방지를 위한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특별강좌를 실시해 표절이 무엇인지, 처벌규정은 어떠한지 등 표절예방수칙, 저작물 인용방법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 실제로 캐나다 University of Northern British Columbia에서는 Academic Regulation 46(Academic Sanctions) “a. Plagiarism (표절예방수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논문 표절 검증 및 차단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연구결과의 사회적 신뢰 회복 및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박사학위 논문표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위·학술지논문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DB시스템 구축

- KERIS에서 구축·운영 중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개선하여 연도별, 학위별 분류 등 검색기능 강화
- 모든 대학의 박사학위논문,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 논문이 RISS의 논문검색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될 수 있도록 논문 DB 구축
 - ※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 대학(블룸필드 교수)에서는 6개 이상의 연속된 동일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를 표절로 보고, 이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발간되는 모든 학위논문이나 서적에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저자의 허가 없는 모든 전제와 복제는 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특히 저작물은 미완성, 미발표의 경우라도 연설문, 강연초록, 교수 강의 내용까지 본인의 허가 없이는 출판이나 도용, 무단 전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교육자격과 직업자격과의 연계 강화; 대학원 학위제도와 연계

- 대학원 학위와 직업자격³⁸⁾을 연계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에서 다양한 교육자격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국가자격체제(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도입·시행해야 함.
 - 교육 및 직업자격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자격에 대한 국가적 기준 틀 마련
 - 국가적·사회적 합의에 의해 인정된 직업자격과 학위종류와의 연계체제 마련
 - 이를 위해 정부, 산업계, 학회, 전문직 협의회 등이 공조한 “교육·직업 자격위원회(가칭)” 구성·운영
- 아울러 대학원의 기능과 역할 재조정을 통한 학위종류 수여체제 재정립 구축
 - 대학원 역할 재조정
 - 특수대학원; 재교육, 평생교육

38) 학위와 직업자격은 자격(qualification)이라는 용어로 포괄 될 수 있음.

- 전문대학원; 재교육, 전문분야 인력양성

- 일반대학원; 고급인력양성

- 추진전략

- 특수대학원; 완전 자율

- 일반대학원; 준통제(질 관리를 통해)

- 전문대학원; 국가 통제(특수분야에 대한 국가인력분야)

- 교육자격과 직업자격의 단계에 따른 학위유형을 다음의 표와 같이 재정립해 볼 수 있음.

□ 지도교수 체제의 엄격성 유지

- 학위논문 생산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교수와의 관계의 문제

- 지도교수가 누가 되고,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문제 검토

- 연구의 독창성에 대한 학문적 성찰 부족

- 지도교수와의 복종적 도제교육시스템 운영으로 학문적 비판 풍토 결여

- 현행과 같이 개별 지도교수체제는 물론 집단 지도교수체제 등 대학원 여건에 맞게 다양한 지도교수체제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VI.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질 관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일반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1) 일반대학원의 개요

대학의 3대 기능은 교육·연구·봉사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학원 역시 이러한 목적과 기능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학원의 주된 목적과 기능을 교육법에서 살펴보면, 현행 한국 고등교육체계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은 주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원은 대학 교육의 부수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고등교육법(2009.01.30 법률 제9356호)에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서 ‘대학(교)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1항에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일반대학원의 목적을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법상의 규정은 주로 일반대학원과 전문 및 특수대학원과의 역할과 기능상의 구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비되는 관점에서 일반대학원은 주로 ‘연구’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비교적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반대학원 역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고도의 이론 및 전문적 기술을 가진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창의적 학술·연구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반상진 외, 2004; 신현석 외, 2008). 1810년 훔볼트가 설립한 베를린 대학에서는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표방하고 연구 활동을 통한 교육을 시도하였으며, 오늘날의 대학원 교육의 모태로 여겨져 왔다(한민구, 2002). 이러한 훔볼트식 대학원 대학들은 교수와 학생이 공

동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대학의 존재 이유로 삼고 연구실과 강좌제도 등 이에 맞는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최고의 연구기관이자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20세기 중반까지 확고한 위치를 확립하고 발전해 왔다.

주로 연구기능보다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부와 비교해 볼 때, 일반대학원은 교육과 연구가 중요한 기능이자 목적이면서도 이 두 가지 기능을 엄밀하게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대학원 교육은 대학원에서의 ‘교수(teaching)’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용, 교수와 학생 간 연구의 지도 및 협력 등을 대학원 체제의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신현석, 2006). 또한, 일반대학원은 인력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창의적 지식 생산의 정점에 있어야 한다는 기대도 받고 있다(장필화, 2002).

따라서 초창기 교수요원이 부족하던 산업화시대의 대학원은 오늘날의 대학과 같이 교수로서의 전문기능인을 양성해 내는 최종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나, 근래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학문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가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인식이 변화되어 왔다(강영삼, 2000; 장필화, 2002; 정정목 외, 2004; 한민구, 2002). 이러한 경향은 연구중심대학원 육성을 표방한 ‘BK21사업’과 주요 대학순위평가가 주목받게 된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1> 대학원의 종류 및 목적

구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 목적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전문 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수업 형태	주간	주간	야간·계절제
학위 과정	석사 및 박사과정	석사과정(원칙) (학칙에 따라 박사과정 설치가능)	석사과정
수여 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학수학위 가능)	전문학위
교육 내용	학술이론 및 연구방법론	실천적 이론 및 실무 교육	실천적 이론 및 실무 교육
학부 교원 활용	학부와 연계	학부와 연계, 별도의 대학원 전임교원 확보	학부와 연계
배출 인력	연구개발 및 교수	전문직	직업인 계속교육

* 출처: 한준상(2002). p.10.

2) 일반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가) 일반대학원의 현황

먼저, 우리나라 대학원의 수는 이러한 양적 변화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1970년에 총 64개원이었던 우리나라 대학원 수는 2008년에는 사립대학원 대학교의 수까지 포함하여 1,055개원으로 증가하여 약 16.5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공립대학교의 대학원은 1970년 당시 21개원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까지 201개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VI-2> 연도별, 설립별 대학원 학교수

(단위: 개원)

구분	총계	국립	공립	사립
1970	64	21	—	43
1975	82	24	—	58
1980	121	32	—	89
1985	201	41	2	158
1990	298	61	3	234
1995	421	87	6	328
2000	829	138	12	679
2005	1,051	164	14	873
2006	1,051	169	14	868
2007	1,042	168	14	860
2008	1,055	173	14	868
2009	1,115	192	15	908
2010	1,138	201	15	922

* 주: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http://cesi.kedi.re.kr/>).

또, 1970년 67.2%였던 사립대학원의 비율은 2000년 81.9%로 높아졌다. 1970년 당시 43개원이었던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수는 2005년 873개원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2007년에는 그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8년에 다시 증가하여 868개교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사립 위주의 고등교육 기관 증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대학원 수는 거의 3배가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원인은 1990년대 후반 대학 졸업자들이 부족한 취업 기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였고, 대학 졸업이 직업 획득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고등교육의 대중화 현상과 그에 따른 대학원설립 기준의 완화도 대학원수의 빠른 증가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다음으로, 대학원생의 수의 규모 역시 지속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어 왔다. 대학원 학생수는 1970년 당시 6,640명에 불과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290,029명에 이르렀다. 특히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서 1995년 112,728명이었던 대학원 학생수는 2000년 229,437

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00년 이후 현재까지도 그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대학원 학생의 남녀비율은 1970년 당시 남학생 5,833명, 여학생 807명으로 각각 87.8%, 12.2%였으나, 2008년에는 남학생 159,733명, 여학생 141,679명으로 각각 53.0%, 47.0%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대학원 학생수의 급격한 팽창은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하여 대학졸업 자체가 가지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그 대신에 더 높은 수준의 학력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경향의 결과로 파악될 수 있다.

<표 VI-3> 연도별 설립별 일반대학원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총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70	6,640	807	2,597	221	—	—	4,043	586
1975	13,870	2,278	4,236	390	—	—	9,634	1,888
1980	33,939	5,786	11,133	1,370	—	—	22,806	4,416
1985	68,178	12,452	19,155	2,429	207	3	48,816	10,020
1990	86,911	19,560	25,042	4,978	384	35	61,485	14,547
1995	112,728	31,675	33,902	8,557	1,081	174	77,745	22,944
2000	229,437	80,072	68,841	22,533	2,657	633	157,939	56,906
2005	282,225	124,930	81,207	34,729	3,970	1,176	197,048	89,025
2010	316,633	152,367	91,304	42,884	4,616	1,567	220,713	107,916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http://cesi.kedi.re.kr/>).

전체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지난 35년간 고등교육기회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확대되어 왔으며,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원의 수가 약 10여 년간 급속도로 팽창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사립 영역 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 팽창이 이루어졌다.

최근 10년간 일반대학원 규모 역시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9년 117개 대학원에서 2010년 현재에는 167개 대학원으로 약 42.7%(46개)가 증가하였으며, 대학원 재학생수는 1999년 석사과정 76,400명, 박사과정 28,883명 규모

이던 것이 2010년 현재에는 석사과정 88,862명, 박사과정 48,670명으로 각각 16.3%, 6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75년 학생수가 8,066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학원은 짧은 기간 동안 획기적인 양적 확대를 보여주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고등 교육의 규모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³⁹⁾.

<표 VI-4> 연도별 일반대학원 학교수 및 재학생수 추이 (1999-2010)

(단위: 개, 명)

연도	학교수	재학생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1999	117	76,400	28,883	105,283
2000	129	79,828	31,714	111,542
2001	135	80,189	32,765	112,954
2002	139	82,810	34,545	117,355
2003	143	83,740	36,019	119,759
2004	142	81,611	38,492	120,103
2005	145	79,823	40,778	120,601
2006	149	81,037	42,798	123,835
2007	154	82,854	43,730	126,584
2008	158	84,562	45,107	129,669
2009	163	86,091	45,926	132,017
2010	167	88,862	48,670	137,532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http://cesi.kedi.re.kr/>).

일반대학원 입학정원도 2003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인구감소와 함께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국립대 정원 동결과 같은 지속적인 증원 억제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대학원의 양적 확대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39) 2007년 5월 31일에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교육력 향상 방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대학원 학생수 6.1명으로 미국(3.9명), 프랑스(3.7명), 영국(3.4명), 일본(1.7명), 러시아(0.7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있다.

<표 VI-5> 최근 10년간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추이(2001-2010)

(단위: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51,771	53,117	53,508	53,042	52,812	51,312	50,714	50,964	51,759	55,569
석사	39,272	39,837	40,050	38,692	37,652	35,710	34,807	34,795	35,327	37,781
박사	12,499	13,280	13,458	14,350	15,160	15,602	15,907	16,169	16,429	17,888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학년도 전국 대학원 석·박사과정 운영 기본통계.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배출하는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는 이제 대학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관용어가 되어가고 있다(반상진 외, 2003; 신현석, 2008).

The Times지(紙) 세계대학종합평가('10)의 200위 이내 대학의 수는 4개(11위)로 중국(6개, 7위), 일본(5개, 10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IMD('11) 세계경쟁력 순위에서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39위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역량의 측면에서도 양적인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는 있으나 질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⁴⁰⁾. 박사학위취득자의 수도 1980년 524명이던 규모는 2010년 박사가 10,542명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5년간의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보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석사과정 졸업생의 경우에는 연구직으로의 진출보다는 일반취업(약 70%)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인력수급이나 사회적 수요보다는 학력주의 및 학위선호에 따른 일자리 불일치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정현 외, 2006).

40) * SCI 논문수 및 순위 : 6,227편('96, 21위) → 18,497편('04, 13위) → 25,494편('07, 12위) → 39,843('10, 11위)

* 5년주기별(2005-2009)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3.47회 ('09, 30위)

출처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과학기술통계서비스: <http://sts.ntis.go.kr/>

<표 VI-6> 최근 5년간 일반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및 정규직 취업률 추이(2005-2010)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취업률	81.9	81.7	81.7	81.6	79.9	70.7
- 석사	-	-	77.4	77.8	75.7	69.4
- 박사	-	-	92.6	91.5	91.1	74.2

* 2010년 취업률은 건강보험 가입 취업률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연보(<http://cesi.kedi.re.kr/>)

또한, 대학 증원이나 대학원 증원에 필요한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현황에서도 절반 이상의 대학에서 교원확보율은 60~80%에 머무르고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도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부와 대학원이 대학체제 내 자원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들(노승무, 2006; 반상진 외, 2001; 서정현 외, 2006; 전성연, 2002)을 감안한다면, 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들 4대 요건에 대한 확보율은 실제로는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7> 대학의 4대 요건 확보 현황

확보율 (%)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 수	%	학교 수	%	학교 수	%	학교 수	%
50 미만	0	0	8	5.4	2	1.1	83	56.5
50-60	1	0.7	2	1.3	16	9.2	10	6.8
60-70	5	3.4	2	1.3	42	24.1	5	3.4
70-80	14	9.4	6	4.0	43	24.7	5	3.4
80-90	21	14.1	2	1.3	25	14.4	7	4.8
90-100	26	17.4	6	4.0	6	3.4	3	2.0
100 이상	82	55.0	123	82.6	40	23.0	34	23.1
평균 확보율	101.3		188.6		79.9		53.7	

*주: 2008년 재학생 기준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 사립 일반대 149개교

교원: 국·사립 일반대 174개교 대상(겸임·초빙 포함)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0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조정계획. p.3.

나) 일반대학원의 문제점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수행된 대학원 제도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들이나 개별 대학 차원에서 수행된 대학원의 교육 및 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학원 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자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이 선결해야 할 핵심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반대학원이 대학의 하위체제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이 교수, 재정 시설 등 교육의 제반 여건들을 공유하고 있어, 대학원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반상진 외, 2003; 서정현 외, 2006, 한민구, 2002). 즉, 대학원 운영이 행정조직체계상 학부행정과 비교해 볼 때, 별도의 직제는 마련되어 있으나 중간관리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과정의 조직체계에 부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학원의 학사관리를 다소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반상진 외, 2003).

둘째, 일반대학원의 공동화 현상이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반대학원들은 학부규모의 확장에 따라 함께 확대되어 온 측면이 있고, 교육편제, 학위제도, 전공구분, 교육과정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대학원의 설립이념이나 지역적 특성,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화되어 있다(강인수, 2002; 소광섭, 2001; 한민구, 2002). 이러한 문제점은 경쟁력을 갖추기보다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는 나도이즘(Me-Tooism)과 함께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규모를 확장하는데 주력해 온 결과이다.

셋째,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전임 교원이나 선진 연구시설이 갖추어 있지 못한 열악한 교육여건을 들 수 있다. 연구시설과 연구비는 절대적 수준에서 부족하고, 도서확보율, 실험실습 기자재, 교수1인당 학생비율, 학생일인당 평균 연구비 등 다양한 지표에서 우리나라 대학원의 연구여건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학원을 전담하는 전임교원도 없는 실정이다(반상진 외, 2003; 서정현 외, 2006; 우제창 외, 2003). 우수한 대학원생, 우수한 교수진 확보, 훌륭한 연구시설의 구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재정적 지원은 대학원의 운영과 발전을 위

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넷째, 대학원의 수요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대학원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지식기반산업 부문의 강화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전문고급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고, 대학교육의 팽창과 일반교육화 현상으로 인해 상위학력인 대학원 교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반상진 외, 2003). 그러나 최소한의 설치기준만을 충족하면 인가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속적인 과잉공급과 수요의 감소로 인해 일반 대학원 교육시장에서는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는 학부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학생의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형식적인 교육·연구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⁴¹⁾. 대학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유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추세는 각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학부 졸업 후 수도권 소재 대학원이나 과학원, 포항공대 등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반상진 외, 2003). 게다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학부 졸업생이나 석사졸업생이 외국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다섯째, 현대의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대학원 행정조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측면이다. 대체로 행정조직이 계층적 구조에 치우쳐 있고 업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러한 계층구조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실무적 협조체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대학원의 행정조직을 없애고, 단과대학과 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학원의 전반적인 교육행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히려 대학원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개선이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학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대학원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수행된 전성연 등(2002)과 정정

41) 2011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전체 일반대학원의 51.4%(92개)가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을 100%이상 달성하고 있었으며, 49.6%(87개)의 대학원은 100%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가운데 신입생 충원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원은 총 24개로 전체의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6월 현재).

목 등(2004)의 정책연구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대학 차원에서 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속속 마련되고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전체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원 평가는 대학원 조직구조와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수립하거나 각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 교육 및 연구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전성연 외, 2002; 정정목 외, 2004).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학원 교육의 성격이 애매한 채로 수행되어 오던 서구에서도 최근에는 이념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능이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평가되는 체제로 개선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김춘일, 2001).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은 그동안 구조조정이나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이 처해있는 현실들은 일반대학원의 이념이나 목표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원을 설립하고 보다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 대신, 사회의 고학력 추세에 편승하여 교원과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거나 재정난을 보완하기 위한 임시방편책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양적 확대가 대학원의 성과, 특히 질적 개선에 어떠한 기여나 문제점을 야기해왔는지,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려는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학원이 얼마나 많은 산출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정해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 하는 효과성의 문제와 함께 대학원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고, 주어진 자원과 여건을 어떻게 활용·배분해 나갈 것인가와 같은 대학원 경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그동안 큰 그림 없이 고등교육의 하드웨어를 키우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그 하드웨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고민할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대학원 경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나. 일반대학원 질 관리 기제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의 질 관리를 위해 마련된 기제는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재정지원사업 평가, 정보공시 등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실시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대학기관평가인증제, 학문분야별 평가 등의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체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사업 중 BK21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그리고 대학정보공시에서 공개되고 있는 정보들 가운데 대학원 부문의 정보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대학기관평가인증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을 독립된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평가는 없으며, 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지표의 일부로써 대학원 평가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제도에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대학자체평가인증제가 있다.

그동안 대학 평가는 1982년 4월 당시 문교부(현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제 3727호) 제 18조⁴²⁾에 근거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이후로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자의 구성, 평가기준의 선정, 평가업무의 진행, 평가보고서의 작성 등 대학평가의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평가활동에 있어 자율적으로 대학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대교협의 대학평가 실시초기에는 대학기관평가 형태로 시행되어 왔으나, 1994년부터는 대학평가인정제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로, 대학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학과 및 학문분야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평가인정제로 구

42) 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 (대학평가) ①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는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된다. 이 중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1주기(1994-2000)에서 주로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조성적 목표를 표방하여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2주기(2001-2006)에서는 1주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및 내실화를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평가가 수행되었다.

황인성(2008)에 따르면,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교육여건 개선의 명분을 제공하고, 대학교육과정의 개선이나 대학 행정 및 학사조직의 개선을 가져왔고, 대학의 자율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학들 간의 선의의 경쟁체제가 확립되고, 대학교육의 질과 연구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일정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이영호, 2007). 이렇듯 대학평가는 대학으로 하여금 학사운영과 경영에 대한 자체적인 합리화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하고,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발전 의지를 고취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기초하여 대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신재철, 2005).

<표 VI-8>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의 대학원 관련 지표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수	비고
1. 발전 전략 및 비전	1.1 대학원 특성화	대학원 특성화 전략 및 추진 실적	2	정성
	1.2 1주기 평가결과 반영	반영여부	1	정성
2. 교육	2.1 교육목적	교육목적의 적절성	1	정성
	2.2 교육과정 및 방법	교육과정 편제 및 국내외협력	2	정성
3. 학사 및 논문 지도	3.1 수업 및 학사관리	수업관리, 학습평가, 학위관리	3	정성
	3.2 연구참여 및 논문지도	학생의 연구참여, 논문지도, 학위논문의 질	3	정성·정량
4. 연구	4.1 연구실적	논문·저서·발표실적(교수)	3	정량
5. 대학원생 및 교수	5.1 대학원생	교육성취도(취업률), 만족도	2	정성·정량
	5.2 교수	교수구성, 교수업무, 교수개발	3	정성·정량
6. 교육 여건 및 지원 체제	6.1 학생지원체제	장학금, 복지시설	2	정성·정량
	6.2 교육지원체제	실험실습비	1	정성
	6.3 연구지원체제	연구지원시설, 수업연구용 기자재	2	정성
	6.4 정보지원체제	도서 및 정보자료, 정보활용도	2	정성·정량
계			27	

*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4).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시행을 위한 2004년도 대학종합평가의 기준.

대학평가의 본질을 이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강화라고 한다면 대학평가는 평가를 통한 서열화 보다는 각 대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통해 교육 및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 비해 평가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학평가의 본질을 감안할 때 현행 대학평가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대교협에서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는 2주기부터 대학원을 하나의 독립된 평가영역으로 간주하여 6개 영역 27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원 평가 항목들은 학부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정성적인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원의 여건이나 성과를 객관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일부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고, 대학원생과 대학교수가 학문공동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평가지표들(예컨대, 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대학원생 연구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투입요소 위주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고 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다루는 생산성의 측면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박남기 외, 2001; 백정하, 2005; 신재철, 2004; 유길한, 2002). 투입요소 위주의 평가방식은 투입이 우수하면 성과도 좋을 것이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대학교육에 있어 투입과 산출이 반드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정용덕 외, 2004). 투입위주의 평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 투자만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 및 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투입위주의 평가방식은 최소한의 교육여건(minimum requirement)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미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들은 비교적 노력을 덜 들이면서도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반면, 후발 신설대학이나 소규모 대학의 경우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도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반상진 외, 2004; 백정하, 2005; 전성연 외, 2002; 정정목 외, 2004).

평가기준에 할당되는 가중치의 타당성 문제도 많은 대학평가 연구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는 평가자의 철학과 강조점을 반영하여야 하나, 이러한 고려 없이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획일적으로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정성지표의 경우,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평가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박남기 외, 2001; 유길한, 2002; 정용덕 외, 2004).

궁극적으로 대학종합평가는 주로 학부의 교육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평가이고 대학원은 그 부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대학원의 독립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 개선이나 대학원의 질과 성과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엄준용, 2010).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을 통하여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역시 학부중심의 대학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학원의 질 개선이나 여건 개선의 측면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측면은 대

학종합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학문분야별 평가

학문분야별 평가는 특정 학문분야의 교육·연구·시설설비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포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질 보증 기제로 프로그램 평가라고도 한다. 현재 학문분야별 인증이 실시되고 있는 학문분야로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경영학, 무역학, 공학, 건축학, 교육학 등 9개 분야이다.

<표 VI-9> 학문분야별 평가분야와 인증기관

평가분야	인증기관
공학교육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간호학	한국간호평가원
경영학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의학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건축학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치의학	치의학교육평가원
무역학	한국무역교육인증원
한의학	한의학교육평가원
교육학	한국교육개발원

* 서영인(2010). p.9에서 발췌.

학문분야별 평가수행을 보면, 의학교육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의학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신설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1주기 평가를 수행하였다. 2005년부터는 2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공학교육의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며 공학교육의 평가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21개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 평가인증되고 있는데,

전체 대학수를 감안하면 일부 대학의 교육프로그램만이 평가인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학교육인증원은 공학분야의 자격에 대한 국제적 상호인정을 위해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 WA 준회원(Provisional Member)에 가입되었다. 2003년에는 간호사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통제의 필요성 및 국민의 요구충족에 부응할 수 있는 간호수준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3년제와 4년제 간호교육기관을 평가하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발족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학문분야별 평가는 자격증 및 전문인력양성분야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평가들이 수행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 실시되는 등 학문분야별로 자율적인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BK21사업 평가

한편,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평가가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BK21)사업을 들 수 있다. BK21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1999년에 착수된 국가 전략사업으로, 특히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 등 차세대 고급연구인력의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지난 2006년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 6월 현재 5차년도 평가를 앞두고 있다.

<표 VI-10>에 제시되어 있듯이, BK21사업은 석·박사 및 박사후 과정생 등의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연구기반의 조성, 대학원 사회에 경쟁적 연구풍토가 정착 등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대학원은 졸업요건 강화와 인센티브 및 장학금의 제공 등을 통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참여와 연구성과 개선을 독려하고 있고, 대학원생들의 학술논문의 수와 국제학술대회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기존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는 연구실적이 교수 중심으로 측정되던 반면, 고급인력양성이라는 사업의 주된 목적에 부합하게 학생들에 관한 연구성과 지표들(학술지, 학술발표 등)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

(2006)에 따르면, BK21사업은 대학 연구력의 획기적 증대, 경쟁 분위기의 조성, 연구중심대학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VI-10> 2단계 BK21사업 4차년도('09) 총량 성과

구분			'06년도 (1차년도)	'07년도 (2차년도)	'08년도 (3차년도)	'09년도 (4차년도)	3차년도 와 비교
연구 성과	논문 (총건수)	참여교수	23,704건	24,140건	25,999건	26,731건	2.8% 증
		참여대학원생	9,786건	11,133건	13,861건	15,100건	8.9% 증
		신진연구인력	2,091건	3,392건	3,492건	3,284건	6.0% 감*
	논문 1건당 IF (과기 분야)	참여교수	2.17	2.46	2.51	2.69	7.2% 증
		참여대학원생	2.08	2.43	2.50	2.66	6.4% 증
		신진연구인력	2.32	2.57	2.50	2.80	12.0% 증
산학 협력	정부·산업체 연구비 수주액		9,931억원	11,445억원	13,343억원	13,934억원	4.4% 증
인력 양성	석·박사 과정 참여자수		35,476명	37,871명	38,118명	39,547명	3.8% 증
	석·박사 학위배출수		8,629명	7,832명	9,106명	9,756명	7.1% 증

* IF : Impact Factor (인용지수)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단계 BK21사업 4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p.1.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BK21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지표만으로 지원 대상 대학과 사업단에 요구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이덕로 외, 2009). 즉, 교육과 연구, 그리고 대학원 특성화라는 3가지 핵심영역에 대하여 각 사업단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단은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중도 탈락시키는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BK21사업 평가는 일종의 프로그램 평가로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주도사업의 책무성 확보, 사업운영을 위한 정보의 획득, 사업 자체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특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노화준, 2006). 따라서 대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김병주 등(2005)의 연구와 손소영 등(2001)의 연구에서는 평가방법 및 준

거들이 참여 사업단의 특성과 규모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또한 향후 사업발전을 위해 활용되기 보다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예산을 재배분받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2008)에서는 2008년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하여 2단계 BK21 사업의 성과관리 및 예산집행 점검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석박사 지원 및 취득인원 수, 논문건수, 특허건수, 전임교원확보율 등의 주요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Seong 등(2008)의 Rand 보고서는 2단계 BK21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모형을 제시해 줌으로써 성과측정과 지표개발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제안 가운데 평가지표와 관련된 주요 제안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지표 체계 설정을 위한 전략으로 목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진술 할 것, 둘째, 그러한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지표의 선택할 것, 셋째, 장단기적 성과를 모두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그 중간지표나 간접지표들을 고려할 것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평가지표에 추가해야 할 주요지표로 상위 10%수준 저널에 인용된 한국인 저자 논문수, BK21사업단/비사업단 대학원생 구성비 변화, 해외대학원 유학 등록학생수, 학술성과 및 교육의 질, 상위 3~5개 이외 대학의 석박사 배출 비중, 대학별/학과별 총 연구비 및 학생 1인당 연구비 지원액, 학과별 논문, 외국인 공동저자 등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BK21사업 평가는 BK21사업을 위해 교육, 연구, 특성화 영역별로 구성된 지표들을 측정하고, 이를 합산하는 여타의 대학평가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을 위한 투입요소들과 주요 연구성과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 경영 개선을 위한 실천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한계가 있다.

<표 VI-11> BK21 5차년도 연차평가 항목 및 지표(인문사회 분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교 육 (HRD)	대학원 교육과정	대학원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적
	학위배출	석·박사 배출실적
	취업	취업실적
	대학원생 논문 및 학술대회	대학원생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실적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	국제화 사업 추진실적
		교육환경의 국제화실적
연구 (R&D)	신진연구인력	신진연구인력 학술성과 및 지원 실적
	정부연구비 및 민간단체 각종지원금	정부연구비 수주실적
		민간단체 각종 지원금 수주 실적
	연구 성과	참여교수 학술연구 실적
		사업단 대표 연구 실적의 우수성
		참여교수 국제적 학술활동 실적
대학원 특성화	대학의 인적자원 투자	소속학과(부) 전임교원 채용실적
	대학의 물적자원 투자	대학의 대응자금 수주 및 운영실적
	사업단 운영 및 자체 평가	사업단장의 역량 및 사업단 운영
		자체평가(외부 진단 평가도 가능) 실적
지역 우수 대학원	지역 관련 교육과정	지역연계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실적
	지역협력체제	사업단과 관·산·연 간 협력 체제 구축
연구윤리	대학의 연구윤리 확보 노력	연구윤리 관련 지침에 따른 대학 자체 규정 등 정비

* 자료: 한국학술진흥재단(2010). pp.24-28을 재구성.

4) 대학정보공시제

대학정보공시제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고 있는 현행 제도이다. 대학정보공시제의 목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학생·학부모, 산업체, 정부 등의 학교선택, 산

학협력 및 직원채용, 정책집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여,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는 대학의 주요정보(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공개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질 제고를 촉진하고 지속적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2008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점차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대학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능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교과부의 다양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 정보공시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자료가 공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63개 공시항목 가운데, 대학원만을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는 항목은 18개에 불과하다. 특히, 대학원 질 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전임교원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 예산 및 결산 등의 정보는 학부에 통합되어 공시됨으로써 해당 대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VI-12> 대학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2011)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여부 ²	
		대학	대학원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	○
	나. 학교규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기준	○	○
	나.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	○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대학입학(편입학)전형 시행계획	○	○
	나.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	○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	×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	×
	다. 신입생 충원 현황	○	○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	○
	마. 재적 학생 현황	○	○
	바. 외국인 학생 현황	○	○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	○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	×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	○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	○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	○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	×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
	다. 전임교원 확보율	○	×
	라.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	×
	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	×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	×
	나. 저(著)·역(譯)서 실적	○	×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국공립)	○	×
	나. 기성회회계 예·결산 현황(국공립)	○	×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국공립)	○	×
	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사립)	○	×
	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사립)	○	×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사립)	○	×
	사. 적립금 현황(사립)	○	×
	아. 기부금 현황(사립)	○	×
	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	×
	차. 등록금 현황	○	○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	×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	×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	×

<표 VI-12> 대학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2011)(표계속)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여부 ²	
		대 학	대 학원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	×
10.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	×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	×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	○
	다. 장학금 수혜 현황	○	○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	○
	마.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	×
	바.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	×
	사.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
	아.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	×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자.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	×
	가. 장서 보유 현황	○	×
	나. 도서관 예산 현황	○	×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다. 연구시설 현황	○	×
	가. 정관(사립)	○	×
	나. 법인의 임원 현황(사립)	○	×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	×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	×
	마. 기숙사 수용 현황	○	×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사립)	○	×
	사. 직원 현황	○	×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	×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	×
	차. 시간강사 강의료	○	×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	×
	타.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국공립)	○	×

다. 종합 및 시사점

1) 대학원 평가 및 질관리 기제의 종합 및 시사점

유현숙 등(2009)은 대학의 평가 모형을 평가결과의 활용자(User)에 따라 활용목적별로 소비자 정보제공, 정부 정책지원, 자체진단 및 컨설팅, 외부평가인증 등 4가지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분류기준에 따라 앞서 논의한 다양한 대학원 질 관리 기제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13> 대학의 평가모형 분류 및 특징

평가모형	특징	관련 사례
소비자 정보제공	학생, 학부모, 기업 등 교육소비자에게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에 관한 의사결정과 선택을 효율적으로 지원	대학정보공시
정부 정책지원형	정부가 다양한 정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학의 선정 및 결정 등에 활용 가능한 평가모형	BK21, WCU 등
자체평가 지원 및 컨설팅형	대학들이 자가진단 및 평가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스스로 질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가모형	대학자체평가
외부대학평가 인증형	대학이 기관 또는 프로그램 단위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최소 기준의 확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증모형	대학기관평가인증 프로그램평가인증

* 출처: 유현숙 외(2009), p.20과 서영인(2010), p.12의 내용을 재구성

이러한 유형 분류는 대학원을 비롯하여 고등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평가 및 질 관리 기제들에 대한 유형과 특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며, 질 관리 기제의 구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유형 분류에 따르면 현행 대학원에 대한 질 관리 기제는 크게 대학원 내부와 외부의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

학원이 자체적으로 자가진단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스스로 혹은 컨설팅을 통하여 질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자율적 내부시스템과 외부로부터 질 관리 역량 및 성과, 즉, 책무성을 인증 받는 외부시스템이 그것이다. 결국, 대학원의 질 관리 체제를 고려함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평가 및 질 관리 기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원 평가 및 질 관리 기제의 문제점과 시사점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대학원과 대학원 질 관리 기제들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 평가와 같은 질 관리 기제는 그동안 학부의 일부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강하여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수행된 평가에서 일부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원의 기능이나 특성을 독립적으로 고려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학자나 교수와 같이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일반대학원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그리고 연구성과 중심의 평가가 고안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원하고 있는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들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 고유의 평가목적에 근거하고는 있으나,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과는 연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도 종료되며, 사업기간 내내 이루어냈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평가인증제는 대학원 교육을 위한 최소수준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여건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기관단위 평가인증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대학원의 교육여건, 과정, 성과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시적 평가체제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공시제와 같은 상시 질 관리 시스템 역시 학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대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대학 순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원 순위는 대학 순위에 영속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학정보공시제와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학원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원의 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학원 평가 관련 연구나 평가체제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앞선 논의에서처럼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이 처해 있는 몇 가지 상황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첫째, 대부분의 일반대학원은 학부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독립적인 변수들의 추출과 이들 간의 관계성을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둘째, 그 동안의 우리나라 대학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학의 설립이념이나 소재지나 규모 등의 대학원이 지닌 특성에 따라 특성화되어 있지 않은 채 학부의 확장에 따라 함께 확대되어 온 측면이 강하고, 이로 인하여 대학원의 편성과 운영에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도 대학원을 독립된 단위로 평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교육조직에 대한 평가에서 논의되어 왔듯이, 해당 교육조직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이고,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질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은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원 관련 평가 지표들의 선정과 타당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대학원 평가를 통한 질 관리 체제의 구축은 오랜 기간 요구되어 왔으면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듯, 대학원에 대한 평가 및 질 관리 체제의 구축은 측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학원 체제에 얼마나 많은 투입과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왔던 기존의 투입위주의 평가방식은 대학원에 대한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여건을 개선해 온 순기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대학원 교육의 질적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궁극적으로 대학원

대한 평가가 학부평가에 부수적인 역할로 작용해 왔다는 점은 대학원을 위한 개선정보를 제공해주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교육기능이 강조되는 여타의 학교급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대학원은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학부와 분리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기 위한 제반 조건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질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대학원 영역에 대한 대학 외부 차원의 적극적인 질 관리 기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2. 주요 선진국의 질 관리 체제

여기에서는 평가에 기반한 질 관리 체제의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가. 미국⁴³⁾

미국에서의 대학원 평가체제는 교육부, 고등교육평가인증협의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 주정부, 평가인증기관, 개발대학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연방전체를 총괄하여 대학평가인증을 조정하는 고등교육평가인증협의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가 다양한 고등교육평가기구들을 공신력 있게 인증하고 있다.

CHEA는 3,000여개의 대학들의 비영리협의체로서 비정부조직이며, 60여개의 대학평가기구(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들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CHEA는 대학평가인정기관들을 총괄하는 전국단위 조직체로서 대학의 질과 업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 그리고 각종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연방의회나 주 정부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다. CHEA 산하에서 대학원의 평가 담당하고 있는 기구들을 인증해 주는 기관으로 전문분야별평가인증기구(Specialized and Professional

43) <http://www.chea.org/default.asp?link=7>에서 참조함.

Accrediting Organization)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학문분야별 평가와 유사하다.

원칙적으로 대학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외부 평가기관 등에 의해서 기관평가와 학문분야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질 보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CHEA이다.

CHEA는 평가기구들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학생, 학부모,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 지원기관, 정부 및 고용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학에 의한 자율규제를 촉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CHEA는 미국 내외에서 활동하는 고등교육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의 질 보장을 위해 CHEA는 평가기구들을 평가 인증하고 있다. CHEA의 인증을 받는 평가기구들은 지역평가인정기구(8개 지역), 전문분야별 평가인정기구(44개), 전국단위평가인정기구(6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CHEA에서 수행하는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평가인증을 통한 자율 규제를 전국적으로 촉진하는 활동
- 평가인증에 관한 데이터 및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활동
- 평가인정기구들과 대학 간의 갈등 조정과 의사소통 촉진 활동
- 대학과 전문대학의 질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 평가인증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활동

미국의 교육부는 교육기구나 프로그램을 정부주도로 평가하지 않으며, 교육부장관은 법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평가기관 목록을 공표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CHEA와 교육부는 인증기관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공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CHEA는 평가기관들이 사회적 공신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인증기관이며, 교육부는 지원할 재정의 적절한 배분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CHEA 산하 전문분야별평가인증기구는 주로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CHEA는 자신들이 인증한 프로그램평가 인증기구 목록을 보유하고, 그 목록내의 대학이 요청할 경우 주기적으로 프로그램평가 인증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구는 CHEA의 공식적 인증을 바탕으로 학제적 질을 검토하고, 대학은 평가를 통해 자기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대학평가인증제의 목적은 대학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지 혹은 충분한 정도로 교육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는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인증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5년~10년 주기로 실시되며, ① 평가인증의 요청, ② 자체평가보고서의 제출, ③ 인증기관의 방문평가의 형태로 진행된다.

나. 영국

영국은 1992년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의 시행과 함께 학위수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고등교육 인구와 고등교육 기관의 급증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학위과정의 질적 수준과 박사학위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질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연구학위 프로그램 지원 정책의 개혁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왔다(Taylor, 2004; DfES, 2003).

현재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는 ‘고등교육질보장기구(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QAA)’에서 담당하고 있다. QAA는 영국 대학과 전문대학들로부터의 기금과 영국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비정부 독립기구이다. QAA는 고등교육 졸업자격의 기준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고, 아울러 고등교육기관들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QAA, 2004).

QAA는 대학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 고용주, 일반인들에게 고등교육의 질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학문분야별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대학과 학문 분야별 평가의 수행, 국제적 고등교육 질 관리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QAA에서 실시되는 연구학위에 대한 평가과정은 연구학생과 질에 대한 평가요소가 중요한 요소이며,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들이 학위를 통해서 학문분야별로 상이한 연구프로그램과 대학원 졸업생들이 학제적인 기준을 달성하였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QAA의 기준은 1996년 고등교육질관리위원회(HEQC)가 발간한 ‘연구학위 질 보장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Quality Assurance of Research Degrees)’과 잉글랜드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의 ‘대학원 연구학위프로그램 수준향상 체계’ 등을 참고하여 ‘고등교육의 학문적 질 및 기준보장을 위한 행동코드(Code of Practice for the assurance of academic quality and standards in higher education)’ 중 연구학위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QAA의 질 관리 코드는 연구학위를 운영하는 대학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III장 참조](QAA, 2004).

이렇듯 영국의 학위과정에 대한 질 관리 체제는 국가수준에서 큰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 대학들은 이를 참조하여 자신들의 실정 및 학과의 특성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하며, 정부가 운영 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통계국(HESA)의 자료분석을 통한 연구학위과정의 학위취득 소요기간 모니터링, 고등교육원(HEA)의 ‘대학원 연구경험 설문조사’ 보고서 등과 같은 보조적인 질 관리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McGhee, 2004).

다. 일본⁴⁴⁾

일본의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는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and University Evaluation: NIAD-UE)가 실시하는 평가, 대학자립 단체인 일본대학평가인증협회, 그리고 대학자체평가제도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박남기, 2004). NIAD-UE는 대학평가와 함께 이루어지는 대학원 평가

44) 일본 고등교육 질관리 체제는 이종승 외(2006), 서정현 외(2006) 등을 참고함.

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대학평가인증협회는 회원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자체평가제도는 정부가 모든 대학이 교육과 연구 활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의무화시킨 제도이다. 이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평가를 주관하면서 대학평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는 NIAD-UE이다.

NIAD-UE는 학위수여기구로 1991년에 발족하여 NIAD-UE로 개편된 이래 대학의 평가에 관한 사업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일본 정부의 공기관 구조개편에 따라 독립행정법인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IAD-UE는 대학의 교육연구활동 상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그 교육연구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NIAD-UE는 대학의 교육연구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 대학의 교육연구활동 등의 상황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제공함과 동시에 공표하고 있다. 또, 학교교육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학위(학사, 수사, 박사)를 수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의 교육연구활동 등의 상황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조사연구, 및 학위 수여를 위해 필요한 학습성과의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NIAD-UE는 대학이 교육연구활동 등에 상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정보 및 대학에서의 각종 학습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의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의 요청에 기초하여, 국립대학 및 대학공동이용기관의 교육연구활동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해당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일본대학평가인증협회는 신규 회원이 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신규평가인증과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평가 인증의 두 가지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은 인증위원회와 기관평가소속위원회 및 전문기관평가소속위원회들이 주도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평가인증 및 재인증에 대한 최종 책임을 맡고 있으며,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권고사항들(Recommendations)을 제공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대학(원)의 명단은 공개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된 자료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료공개여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일본의 대학원 평가 및 인증체제는 대학이 대학이념과 목적달성을 위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자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장해주고, 대학원들이 자신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준비과정을 통해 대학원 스스로 자기 대학에 적합한 자체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해 준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라. 호주⁴⁵⁾

호주에서는 1992년 ‘고등교육 질보장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1993년부터 1995년 동안 대학들은 질 보장 프로그램에 따라 대학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이후부터는 정부에 ‘질 보장·개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호주의 질 보장 체제는 AQF(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대학, 주 및 지방정부, 연방정부, 그리고 AUQA(Australian University Quality Agency)구성되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각 주체들의 역할을 보면, AQF는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에서 수여하는 각종 학위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대학은 자체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 적용되는 학문기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주 정부는 주 내의 고등교육기관을 인증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대학평가인증에 적용되는 주정부들의 기준이 일관성이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질 보장 체제를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 호주 질 보장 체제의 실질적인 근간은 1999년 연방정부에 의해서 설립된 '호주 대학 질 관리 기구(AUQA)'를 통해 마련되었다.

AQA는 대학과 인증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호주의 대학과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질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제공하며, 각 기관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AUQA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국가기관이다.

AUQA는 대학, 주와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인증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문분야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AUQA는 고등교육의 질

45) 호주 고등교육 질관리 체제는 이종승 외(2006), 김현철 외(2007) 등을 참고함.

을 보장하는 제도, 주와 지방정부의 인증기관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이들 제도가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고 있다. 또, 교육기관과 주 및 지방정부의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로 획득한 신규대학 및 비대학 고등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호주의 고등교육 시스템의 국제적 수준을 포함한 상대적 기준과 질 관리 과정을 발표하는 동시에 국제적 고등교육의 질 보장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마.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국의 질 관리 체제가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활동하는 질 관리 기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영리조직인 CHEA가 평가기구들을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비정부 독립기구인 QAA가 고등교육기관 평가와 학문분야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비영리 독립국가기관인 AUQA가 전국 모든 대학에 대한 기관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독립행정법인인 NIAD-UE가 대학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국가수준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기구들이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독립된 기구로서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둘째, 평가의 결과와 인증의 결과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재정배분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지원할 재정의 적절한 배분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는 학위과정에 대한 질 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와 실적을 점검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모든 평가와 인증은 대학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각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학원 또는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대학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자체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에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넷째, 주요 선진국의 평가기구들 대부분은 고등교육기관의 질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CHEA, QAA, AUQA, NIAD-UE 등은 국제적 고등교육의 질 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대학에 관한 정보와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해당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즉,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수요자와 대학원 프로그램의 질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원의 질을 알려줄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3. 대학원 박사과정의 질 관리 방안

가. 비전

오늘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수요의 증대로 인해 고등교육의 기회는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급격한 양적 팽창으로 인한 질적 저하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선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는 지식기반 21세기에서는 고등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대학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가 없으며, 그 중심에 대학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다양한 세계대학 순위들 역시 대학경쟁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대학원 중심대학 또는 연구중심 대학의 그것을 의미한다. 이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대학원 교육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유현숙 외, 2010).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취학률이 70%에 달하고 있고, 고졸자 중에 대학진학자의 비중이 84.8%에 달함으로써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대학들이 영역별로 어떠한 부분에서 취약한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고등교육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간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과 관련해서는 대학과 대학원이 구분되지 않은 채, “대학경쟁력”이라는 용어로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교육과 분리되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학원은 그간 학부에 부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대학원을 위한 전담교수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경우도 드물다. 대학원 교육의 충실은 고등교육의 연구 성과와 직결되고 있으며,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중핵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원 교육은 고등교육의 연구 성과와 직결되고 있으며, 대학원은 궁극적으로 대학원의 목표와 기능에 맞는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동시에,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중핵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시장의 개방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의 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대학원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원 교육 질 관리 및 평가체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대학정보공시가 운영되면서 대학원 교육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에 비하여 그 항목이 미흡하며, 대학과 분리되지 않은 운영으로 별도의 지표로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대학원교육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질 관리 및 평가체제가 시급히 구축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체제와는 다른 보다 시장친화적인 형태의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의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질 관리 체제의 핵심요소들은 정보공시, 자체평가, 외부평가, 정보공시 내역과 평가 결과에 근거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다. 정보공시제도의 시행, 의무화된 자체평가의 시행과 공개, 외부평가 기관의 인정, 정보공시자료와 연계된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원래의 취지대로 시행될 경우, 대학의 행정부담은 낮추고 성과 유인을 높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는 보다 만족시키며,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한 대학의 경쟁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새로운 질 관리 체제의 구축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수요자의 관점에서 확인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대학원의 질관리 시스템의 구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대학원의 질 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비전은 대학원 체제의 질적 개선과

수월성 제고를 도모하는데 있다. 대학원이 우수한 고급두뇌의 원활한 공급과 최상의 학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원의 학사관리, 제도, 운영 등 대학원 내부적 요소와 정보공시, 평가인증, 평가-재정지원 연계 등 대학원 외부의 요소들간의 유기적인 연계에 바탕을 둔 종합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질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나. 목표

대학원의 질적 수월성 제고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차원에서 대학원 스스로가 자구적인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해 나가는 동시에, 책무성의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대학원은 자율성 차원과 책무성 차원에서의 질 관리체제가 요구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의 자율적 질관리 노력과 대학원의 책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 관리기제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대학원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목표가 된다.

다. 대학원 내부의 질관리 기제(자율성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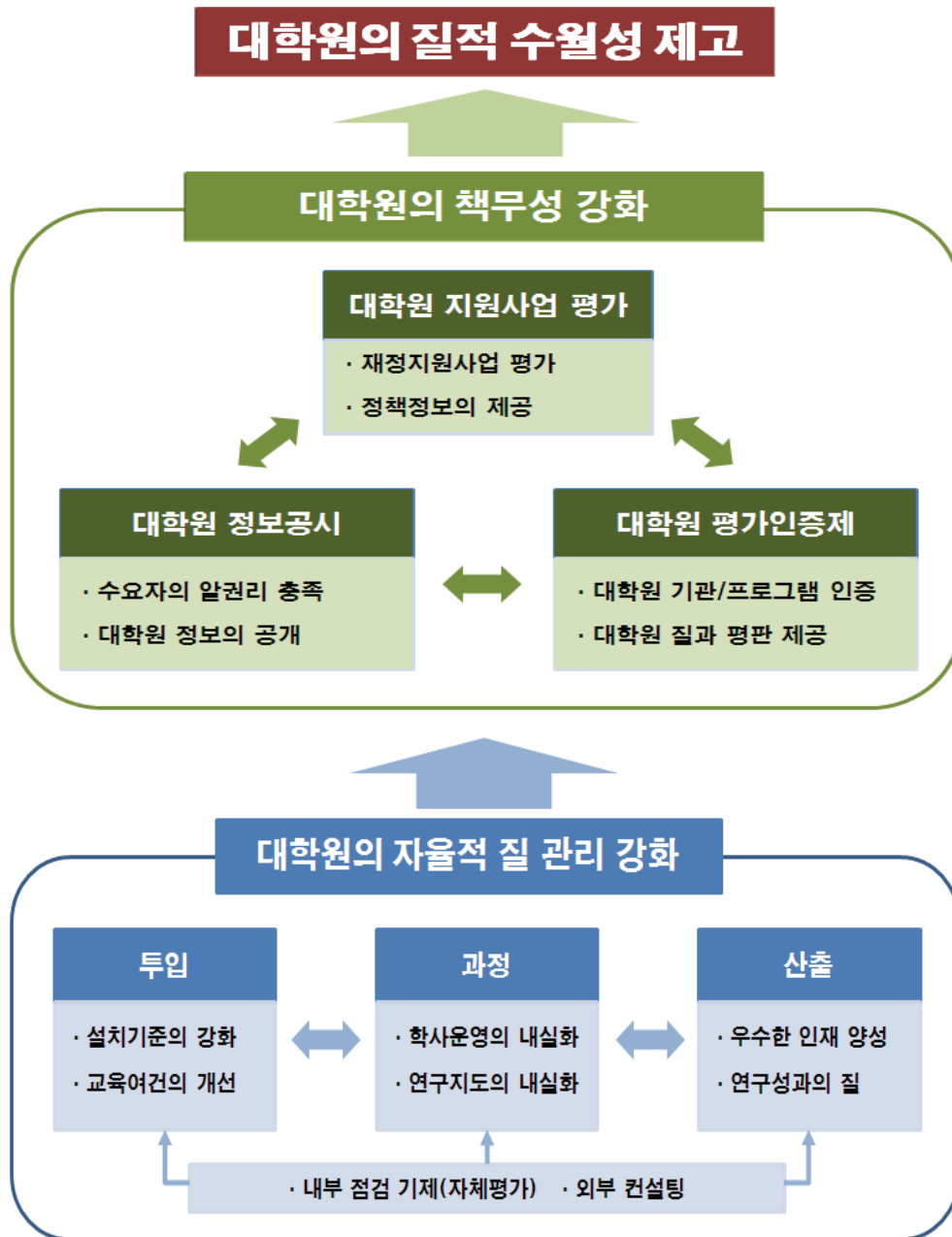
대학원 내부의 질관리 기제는 대학원 스스로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대학원의 설립요건과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의 질(투입의 질), 입학에서부터 학위취득에 이르기까지 대학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학위취득을 위한 제반 학사운영의 질(과정의 질), 학위취득자와 연구성과의 질(산출의 질)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각 대학원 차원에서 자율적·자체적인 질관리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할 요소들이다. 이러한 내부점검 기제 요소로는 자체평가, 외부컨설팅 등이 있다.

라. 대학원 외부의 질관리 기제(책무성 차원)

대학원 외부의 질관리 기제는 대학원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시스템을 말하며, 제도적 차원에서의 질관리 기제라 할 수 있다. 이미 과잉공급되고 있는 대학원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다. 정부주도의 평가가 자율성과 창의성의 최상위 수준에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학원을 통제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대학원의 설립이 대학원 전체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고, 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 부실한 대학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방치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원의 황폐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국가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원의 전반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점검해나가는 대학원 외부기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의 영역을 포함하는 확장된 대학정보공시제도와 대학원(박사과정)인증제를 통하여 대학원 운영의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방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학원 질관리 시스템의 기본모형은 [그림 V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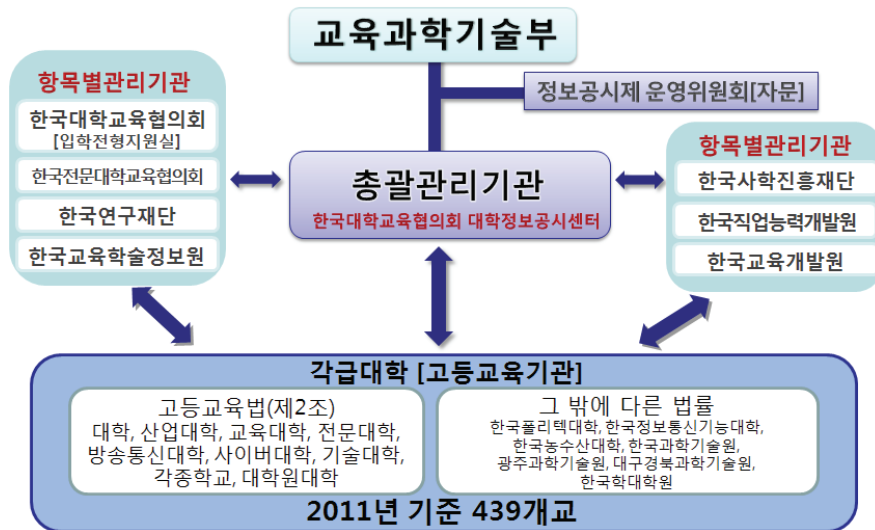
[그림 VI-1] 대학원(박사과정) 질 관리 시스템의 비전과 전략

마. 대학원 박사과정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1) 단기과제 : 대학원 정보공시의 활용

현행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의 정보를 교육수요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대학 스스로 자체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정보공시에서는 학부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학정보공시제와 마찬가지로 학부와 분리된 대학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학원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원 정보공시제의 목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 대학원의 제반 여건과 주요 성과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쟁풍토를 조성하여, 대학원의 자율적·자체적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현재의 대학정보공시제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가 총괄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대학정보공시 실행계획 수립, 대학정보공시 지침 및 양식개발 등 공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항목별 관리 기관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학전형지원실) 등 7개 기관이 지정되어, 각 기관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시항목의 연계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대학정보공시자료 작성 및 제출, 개별대학 정보공시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공시제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학정보공시 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p.4.

[그림 VI-2] 대학정보공시제 추진체제

이미 학부를 중심으로 한 대학정보공시제에서 대학원의 정보를 수집해 나가는 체제가 일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원 정보공시는 기존의 대학정보공시제를 확대하여 대학원 정보에 대한 조사와 공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주관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산하에 대학원 정보공시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고, 7개 항목별 관리기관 역시 현재 수집되고 있는 정보의 체계를 학부와 대학원이 분리되도록 시스템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각 대학들은 대학원의 질 관리를 위한 자체 정보수집 및 분석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원 정보공시제의 도입에 있어 한 가지 선결해야 할 점은 각 대학에서 예산이나 인적자원의 운용 등에 있어 학부와 대학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이다. 대학정보공시가 운영되면서 대학원 교육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에 비하여 그 항목의 수가 적고, 대부분 학부의 정보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과 분리되지 않은 운영으로 별도의 지표로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대학원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임교원들이 학부에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학과의 연구성과 주로 대학원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학부에서 조사되어 공시되고 있으며, BK21이나 WCU사업과 같이 대학원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들 역시 학부차원에서 공시되고 있다. 따라서 학부와 대학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학원을 단위로 수집할 수 있도록 지침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각 대학 역시 학부와 대학원의 정보를 올바르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수집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IV장과 V장에서 제시된 대학원 설치기준 방안과 대학원 학위과정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학부 정보와의 분리 및 연계를 고려한 대학원 정보공시 항목과 내용을 제안하면 <표 VI-14>와 같다.

<표 VI-14> 대 학 정 보 공 시 대 학 원 부 문 공 시 항 목 의 예

공시항목정보	공시정보 내용	비고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대학원 학칙	수정
	나. 대학원 규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수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정편성 및 평가기준	
	나.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다.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종합 및 외국어시험, 학술지 등)	신설
	라. 교수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	신설
	마.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의 구성 (전체 심사위원수, 외부심사위원 수)	신설
	바. 학위청구논문심사비	신설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대학원 입학(편입학)전형 시행계획	
	나.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다. 신입생 선발방법(서류, 면접, 필기, 공인자료)	신설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신입생 입학 경쟁률	신설
	나. 신입생 충원현황	
	다.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포함)	
	라. 재적 학생 현황	
	마. 외국인 학생 현황	
	바. 중도탈락학생 현황	
	사. 신입생 출신대학 유형별 현황(모교, 타대학(국내, 국외))	신설
	아. 전일제 학생 현황	신설
	가. 졸업생 현황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나. 학위취득 탈락율	신설
	다. 졸업생의 진학 현황	
	라. 졸업생의 취업 현황	

<표 VI-14> 대학정보공시 대학원부문 공시항목의 예(표계속)

공시항목정보	공시정보 내용	비고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학부 중복 허용)	수정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학부 중복 허용, 학과별)	수정
	다. 전임교원 확보율(학부 중복 허용, 학과별)	수정
	라.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학부 중복 허용, 학과별)	수정
	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학부 중복 허용, 학과별)	수정
7.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교수, 학생 분리)	수정
	나. 저(著)·역(譯)서 실적(교수, 학생 분리)	수정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현황	
	나.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신설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신설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신설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신설
10.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가. 대학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신설
	가. 연구비 수혜 실적	신설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신설
	다. 장학금 수혜 현황	신설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신설
	마.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신설
	바.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신설
	사.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신설
	가. 연구시설현황(대학원 항목으로 변경)	수정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나. 대학원생 1인당 연구공간 면적	
	가. 직원현황 (대학원 담당)	수정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나.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학부와 공동 공시)	수정
	다. 시간강사강의료	신설

* 신설: 기존 대학정보공시에서 대학원에서는 공시되지 않는 항목으로 대학원 정보공시에서 학부와 분리하여 공시함을 의미

2) 중장기 과제 (1) : 대학원 자체평가의 강화

고등교육법에서 의무화된 자체평가 실시와 공개는 2009년부터 시범실시 되어 왔으며, 2011년부터 자체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기관인증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체평가는 모든 유형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에 포함되는 기본 요소이며, 실제적으로 고등교육 기관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자체평가는 학부 중심의 평가체제라는 기존의 대학평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자체평가는 대학원 부문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대학원 자체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학자체평가의 내용 가운데 대학원 부문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자체평가 제도는 그 실시와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로 학부자체평가와 대학원 자체평가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기에는 대학 내 자체평가연구위원회와 행정부서의 부담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 이를 고려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자체평가 지표 내에서 대학원 부문의 지표들을 분리 및 신설하고, 전체 대학의 자체평가 테두리 내에서 학부와 대학원이 각각 고유의 기능에 맞게 부문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대학원 부문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한 지표의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대학 정보공시자료와 연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대학자체평가제도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 부문의 자체평가가 실시된다면, 이 역시 대학알리미에 탑재된 공시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원 정보공시에 제시된 공시항목과 함께 대학원의 고유 목적과 기능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필수 및 일반 준거와 그 지표들에 대한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학원의 자체평가는 대학원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대학(원)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게 되는 점에서 대학정보공시와 대학원 인증을 연계해 주는 대학원 질관리 체제의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을 지닌다.

3) 중장기 과제 (2) : 대학원 인증제의 도입

기관평가 인증제도는 대학으로 하여금 자기점검 및 자율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내 상시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는 대학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해 주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에서는 재정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의 질 보증체제를 구축해 준다는 측면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용성을 인정받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따라서 각 대학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해당 대학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대학원 인증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대학원 인증제도의 시행은 기본적으로 대학 기관 인증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되 대학원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원의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학문분야별 인증제를 대학원 부문에까지 확대하여 학문분야별 대학원 인증제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자체평가에 대한 인증에서는 대학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증기준들을 점검하고, 세부적인 박사학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인증은 학문분야별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므로 학문분야별로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학원이 기본 요건은 물론 성과의 유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원 정보공시와 대학원 자체평가의 내용에 담겨 있는 대학원의 여건과 성과에 대한 정보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

4) 중장기 과제 (3) : 독립된 대학(원) 평가·인증기관 설립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학평가시스템의 정비와 개선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체제의 개편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교육부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다양한 민간기구들을 통해 수시로 있어 왔으나, 평가기관 간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인 평가가 반복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은 피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해 왔고,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원 정보공시기관, 그리고 평가인증기관의 형태로 제안된 현재의 질 관리 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질 관리기제들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공시 및 평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와 인증을 총괄 조정 및 관리하는 독립된 평가인증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국무회의에서 대학평가 전담기구인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관한 고등교육평가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고등교육의 자율화의 기조 속에서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고등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주된 업무는 한국교육개발원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독립된 평가기구인 ‘(가칭)고등교육평가인증원’은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정보의 공개, 평가기관들에 대한 인증, 그리고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평가기준 및 지표의 개발 연구, 외국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하며, 고등교육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체계화하고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립된 평가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2006년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한 정책과제(이종승 외, 2006)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나, 평가원 설립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대학정보공시제도, 대학평가인증제도, 재정지원사업 평가체제 등 현존 질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I. 요약 및 제언

1. 요약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해 고급 지식 및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할 줄 아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의 역할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고등교육체제의 원활한 작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현재의 환경이 각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고등교육체제를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게 때문에 각국은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요구되는 고급인력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창의성과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국부창출의 수단으로 박사급 고급인력을 특별히 중시하는 추세로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이에 발맞추어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들어 BK21사업, WCU사업 등 고급인력양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000년대 접어들어 지속적인 양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교육 및 연구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 박사과정에 대한 불만족은 해외박사 선호현상으로 이어져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간 국내 박사과정은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와 이러한 제도를 평가 및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질적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질 관리(Quality Control)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박사과정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박사인력을 양성하며, 박사과정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박사과정 제도 전반을 진단 및 분석하고 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학원 설치기준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대학원 설치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의 대학원 사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교육 및 연구여건 강화를 위한 대학원 설치기준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해 현행 대학원 체제 전반의 기능과 역할을 살핀 후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요 선진국의 박사과정 운영체제를 분석 후 시사점을 도출하여 박사학위과정 개선을 통한 박사과정 운영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현행 대학원 박사과정 운영 평가 및 인증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박사과정 운영평가 및 인증시스템 사례를 검토한 후 이에 따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박사과정 운영의 질 확보를 위한 평가 인증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문헌을 고찰하여 각 방안에 관련된 선행 정책 및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된 외국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였고, 대학교수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박사과정 운영 및 질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방법을 통해 대학원 설치기준 개선안과 박사과정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박사과정 운영 내실화의 배경

박사과정 운영 내실화의 배경은 크게 시대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등교육체제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대사회적 환경은 인구구조, 산업구조, 국제사회와 같이 세 범주로 나뉘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다루었다. 우선,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등교육 학령인구의 변화를 예측하게 해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한국의 총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곧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대학 간 통합이나 구조개혁 정책을 가속화하는 추세이다. 또한 산업구조 역시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 탈산업사회 등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가치 창출과 변화의 근원이 물질에서 지식과 정보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원천으로서 고등교육의 역할이 보다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등교육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길러진 인력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인적자원 확보를 넘어서 고등수준의 지식을 생성, 응용, 확산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 특히 대학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변화는 크게 지식기반사회와 국제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세계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교육은 일종의 상품이라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교육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세계 교육시장으로 개방 및 확대되어 나가면서, 고등교육 기관은 국내의 기관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기관들과도 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은 한 편으로는 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나 동시에 위기요인이 될 수도 있다.

고등교육체제는 환경변화의 영향과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의 현상으로 첫째, 정보화,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고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하는 보고서들을 발표해왔다는 것을 들 수 있고, 둘째, 그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의 시장화가 고등교육의 경쟁을 심화시켰으며, 셋째,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고등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특정 짓는 요인인 학령인구 감소, 평생학습사회 도래 및 언급된 시대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기관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끼쳐, 각국이 자국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체제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편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각국은 고등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는 창의성과 지식의 중요성 증대, 학문 간 융합 및 글로벌 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 국부창출 수단으로 고등교육 중에서도 특히 박사과정에 집중 투자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질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 중요한 화두는 자율화와 책무성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거버넌스 유형의 정책이었다면, 현 정부의 대학원 정책은 자율화를 기반으로 한 대학 간 경쟁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 선별적으로 지원을 받는 소수의 대학원이 전체 대학원의 발전을 선도하는 방식을 취하는 이른바 자치 거버넌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및 정책방향의 영향에 따라 대학원 체제의 기능과 역할은 첫째, 전

통적인 학문탐구의 요람에서 현장중심의 실용교육의 기능으로, 즉 사회적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둘째, 학생과 교수의 국제적 이동 가속화로 인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셋째, 대학원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학생들의 연령분포가 다양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에 따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선진국의 대학원 체제

선진국의 대학원 체제와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세계 최정상 수준에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대학원 제도는 학과운영의 융통성, 교수들의 연구활동과 교수활동의 효과적인 접목, 연구와 학습의 통합적 연계,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등을 그 강점으로 한다. 특히 미국의 대학원은 ‘학과중심의 대학원 제도라는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형성해 연구-교육-학습의 연계라는 홀볼트적 이상을 실현시켰으며, 대학과 민간, 그리고 정부부문간 효과적인 연계와 조정, 합리적 재정지원체계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1957년 이른바 스푸트닉 쇼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교육개혁의 성과라 여겨지고 있다. 미국의 대학원 구조의 핵심은 다양성과 체계적 인증체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은 학문별, 대학원별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독자적이면서도 목적에 맞는 대학원 교육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학위체제와 학위 과정을 구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학교원과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술학위(Academic Degree; MA, MS, Ph.D)와 고급전문직과 재교육을 위한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 MBA, M. ED. MFA. Ed.D, JD 등)를 위한 교육과정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은 ‘체계적인 인증체제’를 통해 교육과 연구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학단계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단계마다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까다로운 인증체제를 만들고 이를 정부와 민간간의 운영상의 연계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질관리를 유도하고 학위에 대한 전문적 권위와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대학원 체제는 소위 '교육학위'만을 수여할 수 있는 대학(university college) 이하의 기관들의 그룹과, '연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는 대학교(university)

그룹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영국은 1992년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시행과 함께 대학들의 연구학위 수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그 이후 신설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연구학위 취득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연구학위과정을 개설하는 전공과 기관의 수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다양성을 증진시켰는데, 대표적으로 이론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전문박사(professional PhD) 과정이 신생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가 심화되면서 연구학위 과정의 질적 수준과 박사학위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최소 질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영국의 연구학위 프로그램(RDP) 지원 정책을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개별 고등교육 기관들은 물론 고등교육 분야 전체에서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그 결과 영국 정부는 연구학위 과정 운영과 관련한 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가적 연구비 배분 체계를 경쟁적 방식으로 개선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영국 대학들의 효율적인 연구 능력 강화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연구학위 프로그램(RDP)의 질 관리 체계는 잉글랜드 고등교육 재정위원회(이하 HEFCE)가 수립한 '대학원 연구학위 프로그램 수준 향상 체계(Improving standards in postgraduate research degree programmes)'로 대표되는데, 총 8개 영역에 있어 연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대학이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기준(minimum threshold standards)과 HEFCE가 권장하는 우수사례(recommended good practice) 등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연구학위를 운영하는 대학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QAA에서 제시하고 있다. 영국 연구학위 프로그램의 질 보장 체계는 국가수준에서 큰 범위의 가이드라인, 즉 절차적 기준만을 제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참조하여 개별 기관들이 자신들의 실정 및 학과의 특성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 운영하며, 정부가 운영 현황과 실적을 추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HEFCE는 ① 고등교육 통계국(HESA)의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학위 과정 학생들의 학위 취득 소요 기간 모니터링, 고등교육원(HEA)의 '대학원 연구 경험 설문조사(PRES) 등 연구학위 프로그램의 질 보장 장치를 추가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의 RDP(research degree programmes)에 대한 재정지원은 크게 HEFCE의 'QR기금(Quality Related funding)'과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의 특별 연구비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학위 과정 이수자들에 대해서는 위의 두 기관의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등록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 이 펀드는 교육과정의 질보장과 연계되어 현재 '연구평가체계(RAE)'에서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 중에서 연구비 수령 자격이 되는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국적의 학생들에게 배분되고 있다.

셋째, 프랑스의 대학원제도는 2007년을 기준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2007년 이전에는 단기과정(short courses)과 장기과정(long course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기과정은 크게 세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박사과정은 세 번째 주기는 크게 전문과정에서는 기술연구학위(DRT)와 전문고등연구학위(DESS)를, 학문과정으로는 프랑스 교수자격(HDR) 등 국가학위를 수여받음으로써 종료되는 시스템이었다. 2007년 이후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LMD(Licence-Master-Doctorat) 구조에 맞게 재편되었으며, 박사학위는 대학(universités), 그랑제콜, 인증 받은 공립 고등교육기관(habilités)에서 고등교육 및 연구부서의 승인에 따라 단독으로 혹은 함께 수여되고 있다. 박사과정에 대한 질 관리는 다양한 참여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국가차원에서는 국가고등교육및연구위원회(CNESER: National higher educational and research board)는 교수와 주요 강의자의 임용 및 질 관리에 대한 결정을, 연구 및 기술 자문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CSRT)), 국가과학위원회(the Conseil national de science), 국가인문과학발전위원회(the Conseil national pour un nouvel développement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등은 연구정책과 예산편성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포물러 펀딩(formula funding) 방식과 전략적 목표에 따른 성과계약(performance contracts based on strategic objectives)방식,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선정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funding for specific research projects, awarded in the framework of competitive bidding procedures) 등을 채택하고 있는데, 성과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사학위과정과 관련하여 대학원제도와 질 관리 체제에 대한 선진 주요국의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여되는 박사학위의 다양화와 차별화이다. 세계 각국은 이른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의 역할과 기능, 학위 수여과정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하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에서 수여되는 다양한 형태의 박사학위들(교육학박사, 경제학박사, 행정학박사 등)은 외국의 전문학위에 해당되는 학위들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박사학위 과정에서 수여되는 다양한 학위들은 대학원 체제의 개편이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대학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른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지원이다. 세계 각국은 각 대학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대학원의 입학단계에서부터 최종 학위가 수여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교화되고 체계화된 학위과정 인증체제와 질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인증체제와 질 관리 체제를 바탕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가이드라인)들을 권고하고 있고, 지속적인 인증과정을 통하여 학위의 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재정지원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과 학위의 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추면 대학원이 신설되고,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질 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가 유심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박사학위과정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참여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은 정부, 민간부문이 각 대학들과 유기적인 연계되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인증과 질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국가수준에서 큰 범위의 가이드라인, 즉 절차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이를 참조하여 개별 인증기관들과 질관리 부서들이 자신들의 실정 및 특성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 운영하며, 자체 평가는 물론 민간 인증기관과 정부가 운영 현황과 실적을 추후에 점검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박사학위과정 및 수여학위에 대한 인증 및 질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대학 차원, 민간부문(대교협 등) 차원, 정부차원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알맞은 질 관리 시스템(예를 들면, 정보공시, 자체평가, 인증평가, 재정지원 평가 등)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대학원 설치기준 강화 방안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원 설치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매년 6월)→대학별 정원 조정 및 확정(매년 7월~10월)→정원 사후관리(매년 3

월~5월)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원 증원, 입학 정원 범위 내 조정, 학과신설 등 기준, 정원 책정기준, 사후 이행 확인에 대한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 이 중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기준이 학과신설 등 기준 내부에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설치기준의 문제점은 우선, 대학규모, 지역적 특성 및 학문적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다수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박사과정 설치비율이 고등교육 최강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으나, 연구중심대학에서 배출되는 박사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사과정의 남설 현상은 박사과정 설치와 관련된 오래전에 마련한 매우 느슨한 설치기준을 적용해 온 규정상의 문제와 2004년 이후 총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꾼 절차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율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반되어야 할 합당한 책무성 장치가 제대로 함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설립예의 최소기준 및 최소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이행 점검과 운영과정 점검 등 질적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과정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조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문제의식 하에서 박사과정 등 연구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심층적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일련의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 및 접근방식 면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연구학위 프로그램의 질 보장을 위해 국가수준에서는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각 대학이 실정 및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영국 정부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박사학위 프로그램들이 2005/6학년도까지 제시된 최소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주기적 기관평가를 통해 대학들로 하여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이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박사과정 설치의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주립대

학의 경우 사전 심의 시스템을 거치고 사후에 자율적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학문 분야별 평가인증 제도 등으로 질이 관리되고 있다. 미국의 대학원은 주로 지역별 인증기관들에 의해 인증을 받게 되며 이러한 인증기관들은 정부기관이라기보다는 학문공동체에 가깝다. 그러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들은 정부지원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미국의 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은 그 역사가 길고 엄격하며, 절차상 자기평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자기평가를 제출한 후 그것을 기반으로 인증평가팀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처리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 이후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간혹 거절을 당하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을 경우는 문제점을 수정하도록 요청받고, 승인을 거절당할 경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중단하게 된다. 주로 주의 상황마다 서로 다른 인증 및 평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사립대학 역시 통제를 받기는 하나 주립대학이 받는 평가나 인증에 비해 덜 엄격하다는 특징이 있다. 주정부 인증은 기본적으로 각 대학이나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최소한의 학문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원들을 확보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박사과정 설치기준 설정과 관련된 이슈는 총 10개로 1)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과 범위의 문제, 2) 박사과정 설치 인가기준으로서 고려 가능한 질적 지표 선정, 3) 학문계열별 특성을 감안한 ‘최소 연구실적 충족기준’ 설정 문제, 4) “전임교원 강의비율”의 대학원 설치기준으로서 타당성 문제, 5) 연구실적 범주 간 가중치 부여 문제, 6) 학문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유사계열 범위 설정의 문제, 7) 저·역서의 인정대상 계열 범위, 8) 예체능계 연구업적의 고시에 규정 여부, 9) 박사과정 신설시 ‘사전심의 제도’의 타당성 문제, 10) 질적 지표에 대한 사후 이행점검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 설치기준과 질 관리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며, 둘째, 설치기준은 가능하다면 추후 이행 점검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간단하고 점검하기 쉽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의하여 대학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선 기본방향 중 제1안으로는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대로 관련규정 및 지침개정을 통하여 박사과

정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있으며, 이에 박사과정 설치학과를 대상으로 계열별/학과별 교수 1인당 연간 논문 출판편수 등 지표에 대한 평균값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제2안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전공특성, 해당학과의 운영상의 특징들을 보다 정성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대학설립운영규정, 교과부 정원조정 지침)을 개정하여 박사과정 설치의 경우에도 전문대학원 설치 등과 마찬가지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있다. 제3안은 박사과정 설치기준은 현행대로 두되, 영국과 같이 국가수준의 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한 후, 주기적 평가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며 이와 함께 부실프로그램의 경우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을 박탈하거나 기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여러 안 및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대안을 포함하여 어떤 대안이 어떤 상황에서나 절대적으로 최선의 대안이라는 증거는 없으며 결국 해당 국가의 고등교육의 발전정도 등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안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상황변화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정책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개선 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 미군정 체제 하에서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미국 방식의 대학들이 설립되었으나, 그 장점인 경쟁체제의 확립과 대규모 재정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주도형으로 대학 제도가 발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도 도입기(1946년~1965년)에는 대학원 규정을 제정하여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을 시작하였고 제도 정착기(1966년~1990년)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형태로 대학원제도가 정책되었으며, 응용학문 위주의 특수대학원이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 발전기(1991년 이후)에 특이한 사항으로는 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대학원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고 학위를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여 수여하였다는 점

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급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 즉,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 경영전문대학원 제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박사학위과정은 학위과정 이수, 논문 자격시험, 논문심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정을 개별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대학 자율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0년 이후 이에 따라 대학의 장이 박사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였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 대학원은 크게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대학원은 주로 고급 전문직을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일반대학원은 주로 연구 활동과 교수활동의 접목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원 제도는 복층형 횡렬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어, 하나의 학과는 대학 신입생의 기초 강좌에서부터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제공하는 하나의 통합적 단위로 유럽의 경우보다 더 융통성 있게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대학원 학위체제는 석사, 박사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석사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종결석사과정)로 나뉘고, 박사학위의 경우 Ph. D. 이외에도 다양한 전문박사학위가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학위수여자는 주지사, 주 고등교육위원회 의장, 총장, 이사장 등 주에 따라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보인다. 미국 대학원의 경우 신입생은 학부와는 다르게 학과별로 입학하며, 석사과정 약 2년, 박사과정은 약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대부분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학생들은 대학원 과정을 지내면서 교수의 연구 활동을 함께하고 다시 그것이 교육활동으로 이어져, 교육과 연구의 연계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전문대학원의 역할과 기능이 전문화되어 전문박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 만큼, 학위 명칭 간의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원 제도의 다양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유럽연합(EU)는 볼로냐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며, 볼로냐 프로세스의 목적은 유럽의 여러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높여서 국제적 호환성과 선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다. 학점교환 및 인정 시스템과 학위설명서는 대다수 EU 가입국이 채택하였으며 3단계 학위구조(학사/석사/박사)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 도입되어 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의 고등교육 과정은 박사과정에 바로 진학할 수 있는 과정과 실

용성을 지향하는 전문프로그램으로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과정으로 분류되며, 후자의 경우 고용시장에 바로 진출할 수 있다. 진학 가능 과정과 그렇지 않은 과정 사이의 경계는 기관의 유형과 졸업자격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나 점차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석사과정의 마지막에 박사과정에 진학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몇몇 국가에서는 몇가지의 제한을 더 두기도 한다.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대개 최소 3년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더 짧거나 더 길기도 하다. 유럽국들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학위과정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평가기준과 학위인증기관의 설립을 모색하여 다른 국가와의 학위 통용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박사과정의 개선 및 질 제고 방안에 관해 교육의 내용을 공급하는 교수집단과 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원생 집단을 구분하여 설문조사 하였으며, 교수집단의 응답자는 344명, 대학원생 집단의 응답자는 479명이었다. 설문은 교수집단과 대학원생집단을 대상으로, 신입생 선발과정, 전형방법, 대학원 입학기준, 논문심사 등에 대한 설문, 교육 및 조직에 대한 설문, 정보공시, 박사학위논문의 질관리 등과 관련한 대학원 교육의 질에 관한 설문, 대학원의 교육여건, 박사과정 설치기준 등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졌고, 응답은 이후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되었다.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은 대외적, 대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대외적인 문제점은 첫째, 우리나라 대학원 체제가 후속학문세대를 양성하기에는 질적 수준이나 학문적 수월성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이 높지 않으며 해외박사를 우대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둘째, 대학원별 수요공급의 불균형 현상과 박사학위의 공급과잉이 대학원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셋째,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의 특성과 학풍이 부재하다는 것들이다. 대내적 문제점은 첫째, 대학원 박사과정의 구조적 한계점으로 전근대적 대학원 운영방식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특성 없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과 부실 운영의 문제점이 있으며, 셋째, 절대적으로 교수수가 부족하여 질적 수준이나 학문적 수월성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넷째, 박사학위과정 운영의 불합리성 역시 존재하여 학문영역 혹은 계열별로 다양하지도 못하고 엄격하지도 못하여 부실하고, 다섯째,

교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체제가 불합리하고, 마지막으로 논문표절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데서 비롯한 박사학위의 질적 저하와 부조리 발생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른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 국내 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의 확보, 둘째, 박사학위와 직업자격간의 연계 강화, 셋째, 대학원 운영의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 대학원 학제 운영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가 있으며, 구체적인 대학원 박사학위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첫째, 박사학위 명칭의 선명화, 둘째, 박사학위 수여 기관의 연계를 통한 박사학위의 학문적 질 제고, 셋째, 박사학위 이수과정의 합리적 조정 운영, 넷째, 학위과정 운영의 합리성이나 공정성 확보, 다섯째, 학위 표절 검증 및 차단시스템(프로그램)개발, 여섯째, 교육자격과 직업자격과의 연계 강화, 마지막으로 지도교수 체제의 엄격성 유지 등이 있다.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질 관리 방안

대학의 3대 기능은 교육·연구·봉사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학원 역시 이러한 목적과 기능에서 대학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고등교육체계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은 주로 대학이며, 대학원은 대학교육의 부수적인 것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다. 교육법 상 규정은 주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과의 역할과 기능상의 구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을 중점으로 하는 전문 및 특수대학원과는 달리 일반대학원은 ‘연구’를 그 주요 역할과 기능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반대학원 역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고도의 이론 및 전문적 기술을 가진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창의적 학술·연구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교육에 중점을 두는 학부와 비교했을 때, 일반대학원은 교육과 연구가 중요한 기능이자 목적이면서도 두 기능을 엄밀하게 분리하기는 쉽지 않으며 또한 일반대학원은 인력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창의적 지식 생산의 정점에 있어야 한다는 기대도 받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래 우리나라의 일반대학원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학문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가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인식이

변화되어 왔다.

지난 3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기회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확대되어 왔으며,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원의 수가 약 10여 년간 급속도로 팽창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사립 영역 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 팽창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배출하는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특히 외국대학과 경쟁하는 세계대학종합평가의 200위 이내 대학 수는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세계경쟁력 순위에서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39위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 역량의 측면에서도 양적인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는 있으나 질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학원 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자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이 선결해야 할 핵심과제들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일반대학원이 대학의 하위체제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둘째, 일반대학원의 공동화 현상, 셋째,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전임 교원이나 선진 연구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열악한 교육여건, 넷째, 대학원의 수요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대학원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 다섯째, 현대의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대학원 행정조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여섯째, 자발적인 개선이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학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다. 따라서 효과성의 문제와 함께 대학원 경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대학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대학원 경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의 질 관리를 위해 마련된 기제는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재정지원 사업 평가, 정보공시 등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실시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대학기관평가인증제, 학문분야별 평가 등의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체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사업 중 BK21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그리고 대학정보공시에서 공개되고 있는 정보들 가운데 대학원 부분의 정보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제들의 실태와 문제점은 첫째, 대학원 평가와 같은 질 관리 기제는 그동안 학부의 일부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강하여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수행된 평가에서 일부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둘째, 일부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원하고 있는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들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 고유의 평가 목적에 근거하고는 있으나,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과는 연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점, 셋째, 정보공시제와 같은 상시 질관리 시스템 역시 학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 대학원이 처해 있는 몇 가지 상황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며 현실적인 제약이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질 관리 기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주요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 중 미국의 대학원 평가는 교육부, 고등교육평가인증협의회(CHEA), 주정부, 평가인증기관, 개별대학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CHEA가 연방전체를 총괄하여 대학평가인증을 조정하고 다양한 고등교육평가기구들을 공신력 있게 인증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평가인증제의 목적은 대학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지 혹은 충분한 정도로 교육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대학에서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는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현재 그 대학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통 5-10년 주기로 실시되며 평가인증의 요청, 자체평가보고서의 제출, 인증기관의 방문평가 형태로 진행된다.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질보장기구(QAA)에서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영국 대학과 전문대학들로부터의 기금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비정부 독립기구이다. QAA는 고등교육 졸업자격의 기준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고, 아울러 고등교육기관들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대학이 세부 지침을 제정 및 운영한 후 정부가 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그것을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형태로 질 관리가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고등교육통계국(HESA) 등에서 보

조적인 질 관리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일본의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는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UE)가 실시하는 평가, 대학자립단체인 일본대학평가인증협회, 그리고 대학자체평가제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NIAD-UE에서 대학평가와 함께 대학원평가를 담당하며, 일본대학평가인증협회에서는 대학의 자체평가를 인증하고, 대학자체평가제도는 정부가 모든 대학이 교육과 연구 활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중 핵심적인 역할은 NIAD-UE가 맡고 있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및 인증체제는 대학이 역할 수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대학원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을 받으며, 평가준비과정을 통해 자체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해준다는 효과를 지닌다.

호주에서는 1992년 고등교육 질보장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1995년까지 질 보장 프로그램에 따라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부터는 질 보장, 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호주의 질 보장 체제는 호주자격체제(AQF), 대학, 주 및 지방정부, 연방정부, 그리고 호주 대학 질 관리 기구(AUQA)로 구성되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호주 질 보장 체제의 실질적인 근간은 호주 대학 질 관리 기구(AUQA)에 의해 마련되었다.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활동하는 질 관리 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의 결과와 인증의 결과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재정배분의 근거가 되고, 모든 평가와 인증은 대학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선진국의 평가기구들 대부분은 고등교육기관의 질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현대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원 교육은 고등교육의 연구 성과와 직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고등교육 경쟁력 역시 대학원 교육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질 관리 및 평가체제가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의 구축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이 원래의 취지대로 시행될 경우, 대학의 행정부담은 낮추고 성과유인을 높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는 보다 만족시키고,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한 대학의 경쟁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질 관리 시스템의 구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대학원 질 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은 대학원 체제의 질적 개선과 수월성 제고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대학원이 우수한 고급두뇌의 원활한 공급과 최상의 학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원 내부적 요소와 대학원 외부의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에 바탕을 둔 종합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질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대학원은 자율성 및 책무성 차원에서의 질 관리 체제가 요구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고, 대학원의 자율적 질 관리 노력과 대학원의 책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 관리 기제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대학원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목표가 된다.

대학원 내부적인 질 관리 기제는 대학원 스스로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투입의 질과 과정의 질, 산출의 질을 확인하는 것이 그것들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자율적, 자체적인 질 관리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내부점검 기제 요소로는 자체평가, 외부컨설팅 등이 있다. 대학원 외부의 질 관리 기제는 대학원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시스템을 말하며, 제도적 차원에서의 질 관리 기제라 할 수 있다. 대학정보공시제도와 대학원(박사과정)인증제를 통해 대학원 운영의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방안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학원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기과제로는 대학원 정보공시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현재 대학원 정보는 대학정보공시제의 일부로 공개되고 있으나, 학부와 분리된 대학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학원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대학원 정보공시제의 목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 대학원의 제반 여건과 주요 성과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쟁풍토를 조성하여, 대학원의 자율적, 자체적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으며, 기존의 대학정보공시제를 확대하여 대학원 정보에 대한 조사와 공시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도입 이전에 한 가지 선결해야 할 점은

각 대학이 학부와 대학원을 엄격히 구분해야한다는 점이다. 중장기 과제는 총 세 가지로 첫째, 대학원 자체 평가의 강화를 위해 대학자체평가에서 대학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정보공시와 대학원 인증을 연계할 수 있다. 둘째, 대학원 인증제를 도입하여 대학 내 상시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으로는 대학 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해주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된 대학(원) 평가 인증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있으며, 이는 기존의 분산된 평가시스템을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제언

가. 정부를 위한 제언

□ 대학원 설치기준의 강화를 위한 제언

본 연구보고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박사과정 설치기준 설정과 관련된 이슈를 총 10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1)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과 범위의 문제, 2) 박사과정 설치 인가기준으로서 고려 가능한 질적지표 선정, 3) 학문계열별 특성을 감안한 ‘최소 연구실적 충족기준’ 설정 문제, 4) “전임교원 강의비율”의 대학원 설치기준으로서 타당성 문제, 5) 연구실적 범주 간 가중치 부여 문제, 6) 학문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유사계열 범위 설정의 문제, 7) 저·역서의 인정대상 계열 범위, 8) 예체능계 연구업적의 고시에 규정 여부, 9) 박사과정 신설시 ‘사전심의 제도’의 타당성 문제, 10) 질적 지표에 대한 사후 이행점검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 설치기준과 질 관리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며, 둘째, 설치기준은 가능하다면 추후 이행 점검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간단하고 점검하기 쉽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셋째, 장기적인 관점

에서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의하여 대학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해 볼 때,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대안을 포함하여 어떤 대안이 어떤 상황에서나 절대적으로 최선의 대안이라는 증거는 없으며 결국 해당 국가의 고등교육의 발전정도 등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안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상황변화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정책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에 설치기준과 관련된 대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관련규정 및 지침개정을 통하여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강화

-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대로 박사과정 설치학과를 대상으로 계열별/학과별 교수 1인당 연간 논문 출판편수 등 지표에 대한 평균값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사전심의제도 도입

- 관련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여 확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해당학과의 운영상의 특징들을 보다 정성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대학설립운영규정, 교과부 정원조정 지침)을 개정
- 박사과정 설치의 경우에도 전문대학원 설치 등과 마찬가지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

□ 박사학위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율적 차원에서 대학원 스스로가 자구적인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해 나가는 동시에, 책무성의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

는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대학원의 자율적 질관리 노력과 대학원의 책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 관리기제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대학원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박사학위의 다양화와 차별화

세계 각국은 이른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의 역할과 기능, 학위수여과정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하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에서 수여되는 다양한 형태의 박사학위들(교육학박사, 경제학박사, 행정학박사 등)은 외국의 전문학위에 해당되는 학위들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박사학위 과정에서 수여되는 다양한 학위들은 대학원 체제의 개편이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대학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지원

세계 각국은 각 대학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대학원의 입학단계에서부터 최종학위가 수여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교화되고 체계화된 학위과정 인증체제와 질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인증체제와 질관리체제를 바탕으로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가이드라인)들을 권고하고 있고, 지속적인 인증과정을 통하여 학위의 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재정지원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과 학위의 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추면 대학원이 신설되고,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질 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가 유심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일부 재정지원사업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대학원 전체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처럼 국가수준의 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한 후,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주기적 평가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대학원의 상시적 질 관리를 도모하고, 부실한 박사학위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을 박탈하거나 기타 재

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고 나아가 박사과정을 폐지 또는 통폐합 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대학원의 자율성 존중과 정부의 역할 명료화

박사학위과정에 대한 질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참여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은 정부, 민간부문이 각 대학들과 유기적인 연계되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인증과 질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국가수준에서 큰 범위의 가이드라인, 즉 절차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이를 참조하여 개별 인증기관들과 질관리 부서들이 자신들의 실정 및 특성에 맞는 세부 지침을 제정, 운영하며, 자체평가는 물론 민간 인증기관과 정부가 운영 현황과 실적을 추후에 점검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박사학위과정 및 수여학위에 대한 인증 및 질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대학차원, 민간부문(대교협 등) 차원, 정부차원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대학원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자체적인 질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정부와 민간부문의 인증 및 평가기관이 주기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시스템(예를 들면, 정보공시, 자체평가, 인증평가, 재정지원평가 등)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박사과정 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 대학정보공시제 내 대학원 정보 공시 항목의 개발과 활용

현행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의 정보를 교육수요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대학 스스로 자체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정보공시에서는 학부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학정보공시제와 마찬가지로 학부와 분리된 대학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학원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원 정보공시제의 목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 대학원의 제반

여건과 주요 성과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쟁풍토를 조성하여, 대학원의 자율적·자체적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이미 학부를 중심으로 한 대학정보공시제에서 대학원의 정보를 수집해 나가는 체제가 일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원 정보공시는 기존의 대학정보공시제를 확대하여 대학원 정보에 대한 조사와 공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관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산하에 대학원 정보공시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고, 7개 항목별 관리기관 역시 현재 수집되고 있는 정보의 체계를 학부와 대학원이 분리되도록 시스템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각 대학들은 대학원의 질 관리를 위한 자체 정보수집 및 분석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와 대학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학원을 단위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마련과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이 요구된다.

○ 대학원 자체평가 제도의 확립

고등교육법에서 의무화된 자체평가 실시와 공개는 2009년부터 시범실시 되어 왔으며, 2011년부터 자체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기관인증평가를 시행할 예정에 있으나 이는 학부를 중심으로 한 평가로, 대학원에 대한 자체평가는 여전히 부수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체평가는 모든 유형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에 포함되는 기본 요소이며, 실제로 고등교육 기관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자체평가는 학부 중심의 평가체제라는 기존의 대학평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대학원의 자체평가는 대학원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대학(원)인증기구로부터 인증 받게 된다는 점에서 대학정보공시와 대학원 인증을 연계해 주는 대학원 질관리 체제의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학부)을 중심으로 한 자체평가는 대학원 부문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대학원 자체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대학자체평가의 내용 가운데 대학원 부문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자체평가제도는

그 실시와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로 학부자체평가와 대학원 자체평가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기에는 대학 내 자체평가연구위원회와 행정부서의 부담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 이를 고려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자체평가 지표 내에서 대학원 부문의 지표들을 분리 및 신설하고, 전체 대학의 자체평가 테두리 내에서 학부와 대학원이 각각 고유의 기능에 맞게 부문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대학원 부문에 대한 자체평가 지표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정보공시자료와 연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대학자체평가제도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 부문의 자체평가가 실시된다면, 이 역시 대학알리미에 탑재된 공시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원 정보공시에 제시된 공시항목의 개발과 연계하여 대학원의 고유 목적과 기능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필수 및 일반 준거와 그 지표들을 개발하는 정책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독립된 대학(원) 평가·인증기관 설립

대학평가시스템의 정비와 개선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체제의 개편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교육부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다양한 민간기구들을 통해 수시로 있어 왔으나, 평가기관 간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인 평가가 반복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은 피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해 왔고,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원 정보공시기관, 그리고 평가인증기관의 형태로 제안된 현재의 질 관리 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질 관리기제들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공시 및 평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와 인증을 총괄 조정 및 관리하는 독립된 평가인증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국무회의에서 대학평가 전담기구인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관한 고등교육평가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고등교육의 자율화의 기조 속에서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고등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주된 업무는 한국교육개발원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독립된 평가기구인 ‘(가칭)고등교육평가인증원’은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정보의 공개, 평가기관들에 대한 인증, 그리고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평가기준 및 지표의 개발 연구, 외국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하며, 고등교육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체계화하고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립된 평가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2006년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한 정책과제(이종승 외, 2006)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나, 평가원 설립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대학정보공시 제도, 대학평가인증제도, 재정지원사업 평가체제 등 현존 질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대학을 위한 제언

□ 대학원의 자체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

우리나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설치요건을 구성하는 과정에는 많은 변수와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고, 각 대학원의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행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다.

설문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우리의 대학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수수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이나 학문적 수월성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학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연구비 역시 외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대학 내 남של된 대학원 체제를 고유의 설립목적과 여건에 적합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각 대학이 처한 여건과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고려하면서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집결하여 효율적인 대학원 체제를 구축·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원 육성을 위한 자체적인 대책(위원회의 구성, 발전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설치기준에 관계없이 이러한 발전계획에 기초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자체여건을 지속적·계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 대학원 학사관리의 질 관리

본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이 처해있는 현실들은 일반대학원의 이념이나 목표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원을 설립하고 보다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 대신, 사회의 고학력 추세에 편승하여 교원과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거나 재정난을 보완하기 위한 임시방편책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양적 팽창은 대학원 교육의 질 저하와 학위제도의 질 관리부재로 이어져 국내 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을 야기해 왔다. 대학당국의 관심과 투자 없이 팽창된 대학원 박사과정은 대학원내의 내부적 모순 즉 도제식 사제관계, 학문생산 방식의 수공업성, 서비스가 없는 권위주의적 교육, 학문 및 지식생산의 동종교배 현상 가중, 선택과 배제의 원칙 작용 등의 전근대적 ‘대학원 운영 방식’에 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고등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대되는 한편, 고등교육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대학은 물론 일반대학원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이나 구조조정이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원은 박사과정생 선발에서부터 교육과정의 운영,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 등 일련의 대학원 학사관리체제의 질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박사과정의 특성과 학풍이 부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의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학과운영의 융통성, 교수들의 연구 활동과 교수활동의 효과적인 접목, 연구와 학습의 통합적 연계,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학문별, 대학원별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독자적이면서도 목적에 맞는 특성화된 대학원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 대학의 대학원에 대한 자체평가의 강화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과 관계없이, 각 대학은 스스로 대학원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기제를 운용함으로써 대학원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원 자체평가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세계 대학 경쟁력 평가의 항목들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순위는 곧 대학원의 순위라 할 수 있으며,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대학원의 경쟁력을 통해 높은 평판과 경쟁력을 유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이 학부의 부수적인 기관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대학 발전을 선도하고, 특히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대학이라면 더더욱, 대학원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는 기제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세계화 및 국제화의 경향에 따라 이제 국내의 대학원도 세계의 대학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의 고등교육체제와 연계될 수 있는 교육내용, 방법, 제도 등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 스스로 대학원의 질을 유지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정노력은 필수적이며, 자체평가는 그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선 학부와 대학원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학사, 경영, 행정 등과 관련된 정보들이 분리될 수 있는 대학 내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독립채산제’ 형태의 대학원 운영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원 정보 수집 체계의 확립

대학원 정보공시제의 도입에 있어 한 가지 선결해야 할 점은 각 대학에서 예산이나 인적자원의 운용 등에 있어 학부와 대학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이다. 대학정보공시가 운영되면서 대학원 교육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에 비하여 그 항목의 수가 적고, 대부분 학부의 정보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원의 운영이 대학(학부)과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지표로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대학원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임교원들이 학부에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학과의 연구성과 주로 대학원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학부에서 조사되어 공시되고 있으며, BK21이나 WCU사업과 같이 대학원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들 역시 학부차원에서 공시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학원을 단위로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각 대학 역시 이에 부응하여 학부와 대학원의 정확한 정보를 올바르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삼(2000). 한국 고등교육 연구의 성장·발달과 전망. 교육논총, 20(1), 39-57.
- 강인수(2002).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기능. 대학교육, 120, 13-21.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10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조정계획. p.3.
- 교육과학기술부(2010). 2단계 BK21사업 4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박사과정 선진화 방안(안) - 질적수준 제고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교육과학기술부 부내 정책토론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박사과정 선진화 방안(안): 질적 수준 제고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미출판 교과부 내부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학년도 전국 대학원 석·박사과정 운영 기본통계.
-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 2011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대학 및 대학원용).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7.5.31.).
-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2006). 두뇌한국(BK)21 바로알기-BK21설명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08). 2008년도 국정감사 쟁점사업.
- 국회입법조사처(2010).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국회입법조사처.
- 김병주·나민주·조규락(2005). BK21사업 성과분석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선미(1998). 프랑스의 대학교육. 人文論叢, 6, 261-272.
- 김승연(2005). 프랑스와 한국의 고등교육 학제에 대한 비교 연구-2002년 4월 8일에 LMD학제로 개정된 프랑스 대학 학제의 개정 前과 後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4, 1-23.
- 김진환(2004). 이원화된 프랑스의 대학체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50, 197-218.
- 김철희·정태화·이상돈·유한구·임병인·채재은·최봉희(200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인력수급체계 개선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김춘일(2001). 주요선진국 대학원교육의 성격과 동향. 인문예술논총, 22집, 173-234.
- 김현철·유재봉·박현(2007). 선진국의 대학평가 -호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07-86. 교육인적자원부.
- 노승무(2006). 연구 성과의 향상을 위한 대학원의 역할. 대학의 역사와 문화, 3, 57-79.
- 노화준(2006). 정책평가론(제4판). 서울: 법문사.
- 류지성(2009). 수요자 중심의 대학개혁.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 포럼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 민철구·이진수·유현숙(2002). 대학연구시스템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2-25.
- 박남기·김성열·김성숙·박선형·백종섭·서민원·오세희·한신일·황윤한(2006). 대학별 교수업적평가 현황 분석 및 교수업적 평가 모형 개발. 정책연구과제 2006-공모-15. 교육인적자원부.
- 박재윤·이정미(2010). 미래 교육비전 연구. 연구보고 RR한국교육개발원
- 반상진·신현석·이석열·이은구·김검훈(200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방안 연구. 교육정책연구 2003-일반-19. 교육인적자원부.
- 반상진·신현석·이석열·이은구·김검훈·민병제(2004).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체제적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2(2), 255-277.
- 백정하(2005). 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의 현황과 과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평가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국회좋은교육연구회 2005년도 제2차 정책토론회.
- 서영인(2010). 고등교육 평가체제 선진화 방안. OR 2010-01-12. 한국교육개발원
- 서정현·신현석·반상진·이석열·조경덕(2006). 대학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체제 개편 및 제도개선 시행방안 연구. 정책연구과제 2006-지정-02. 교육인적자원부.
- 소광섭(2001).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현실과 개선방안. 대학교육, 114, 77-81.
- 손소영·조용관·소형기·이승환(2001).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두뇌한국(BK) 21의 학생만족도 성과 분석. 산업공학, 14(4), 대한산업공학회.

- 신재철(2005). 대학구조개혁과 대학평가. 제18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51-81.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평가학회.
- 신현석(2008). 대학구조개편과 고등교육의 질 제고. 한국교육학연구, 14(3), 171-202.
- 신현석 · 이은구 · 김겸훈 · 노명순(2008).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대학원 교육의 질 만족요인 탐색. 교육문제연구, 제31집, 49-77.
- 신현석 · 반상진 · 이석열(2005). 외국의 대학원교육체제 분석 연구: 발전적 대학원 교육체제 구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 비교교육연구, 15(2), 53-86.
- 엄준용(2010). DEA를 활용한 대학원의 효율성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제창 · 이성호 · 조형 · 남궁근(2003). 우수대학원생 유치 및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정책연구-2002-특-17. 교육인적자원부.
- 유길한(2002). 대학평가지표의 준거 타당성에 관한 논증. 교육학연구, 40(5), 81-102.
- 유현숙 · 이정미 · 임후남 · 김병주 · 이영 · 고장완(2009). 대학정보공시제를 활용한 대학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연구. RR 2009-16.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 임후남 · 이정미(2010). 2009년 대학공시정보를 활용한 대학평가. OR 2010-01-13. 한국교육개발원
- 윤종혁(2006). 창의적 인재양성과 효율적 운영체제 구축.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IV 06-11. 한국교육개발원
- 윤희윤 · 김신영(2005). 학술지 영향계수와 연구업적 평가비중의 상관성 분석. 정보관리연구, 36(3), 1-25.
- 이덕로 · 김소영 · 차성현(2009). 2단계 BK21 사업단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와 투입 산출요소별 영향력 분석. 교육학연구, 47(2), 105-134.
- 이영호(2007). 대학경쟁력과 대학평가. 교육정책포럼, 154, 8-11.
- 이종승 · 김병주 · 박남기 · 채재은(2006).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06-지정-42. 교육인적자원부.
- 이혜영 · 강영혜 · 박재윤 · 김태은 · 한준(2007). 교육비전 중장기 계획 연구. RR2007-02. 한국교육개발원
- 장창원(200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인적자원정책 개선 지원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필화(2002).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과제. 대학교육, 120, 7-12.
- 전성연(2002). 대학원의 평가 및 지원 체제. 고등교육연구, 13(1), 73-99.
- 정용덕 · 이승중 · 최운실(2004). 글로벌시대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평가체제 개혁방안 연구. 정책연구 2004-지정-10. 한국행정학회.
- 정정목 · 김광웅 · 조영달 · 임동욱(2004). 대학원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 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 채재은(2005). OECD 주요국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비교교육연구, 15(1), 143-166.
- 채재은 · 변기용 · 남수경 · 최정윤(2009). 고등교육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상덕 · 김미란 · 이정미 · 김승보 · 장수명(2007).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 교육체제 혁신방안 연구. RR 2007-14.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청(2009). 향후 10년간 사회요인 분석 및 시사점. 서울: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2008).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2). 2002학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대학종합 평가 편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4).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시행을 위한 2004년도 대학종합 평가의 평가기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 대학 기관평가인증 편람.
- 한국학술진흥재단(2010). 2단계 두뇌한국(BK)사업 분야별 4차년도 평가지표 및 배 점(안).
- 한민구(2002). 대학원 중심대학의 기능성과 한계. 대학교육, 120, 22-25.
- 한준상(2002). 교육대학원의 기능과 역할,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연세교육과학, 50, 1-11.
- 한택수(2008). 프랑스 문화교양 강의 18. 서울: 김영사.
- 황인성(2008).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의 성과. 대학교육, 152, 72-76.

- Beyer, J. M, & Snipper, R.(1974). Objective Versus Subjective Indicators of Quality in Graduate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47(4), 541–557.
- CHEPS(2007). *Higher education in France: Country report*. The Netherlands: Center for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
- Clement, F., & Sturgis, R. B.(1974). Quality of Department of Doctoral Training and Research Productivity. *Sociology of Education*, 47(2), 287–299.
- DfES (2003).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
- Eurydice(2007). *Focus on the Structure of Higher Education in Europe–2006/7: National Trends in the Bologna Process*. Brussels: Eurydice.
- Eurydice(2008). *Higher Education Governance in Europe. Policies, structures, funding and academic staff*. Brussels: Eurydice.
- G. House (2010). Postgraduate Education in United Kingdom. Higher Education Policy Institute.
- Geiger, R. (1986). To Advance Knowledge: The Growth of American Research universities, 1900–1940, 72(4).
- Geiger, R. (2004). Research, graduate education, and the ecology of American universities: an interpretive history. *Contemporary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Issues for the Twenty-Firt Century*. A Garland Series, 6, 8–9.
- Greene. J. C.(1976). Science, Learning, and Utility: Patterns of Organizationin the Early American Republic. *The Pursuit of Knowlege in the Early American Republic: American Scientific and Learned Societies from Colonial Times to the Civil War*. Baltimore, 1–20.
- HEFCE (2002). Improving standards in postgraduate research degree programmes.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 HEFCE (2004) Circular letter number 18.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 HEFCE (2011a). Sector impact assessment of QR research funding and RDP supervision funding.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 HEFCE (2011b). Consultation on allocation method for postgraduate research funding

- from 2012–2013.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 Kayser, E. L.(1970). *Bricks Without Straw: The Evolution of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New York.
- McGhee(2004). *The academic quality handbook*. Routledge: New York.
- Morison, S. E.(1936). *Harvard College in the Seventeenth Century*. Cambridge, 69–71.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4). *Federal Support for Education FY 1980 to FY 2003*.(<http://nces.ed.gov/pubs2004/2004026.pdf>)
- National Research Council(1978). *A Century of Doctorat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QAA (2004). *Code of Practice for the assurance of academic quality and standards in higher education– Section 1. postgraduate research programmes*
- ReinGold, N.(1987). *Vannevar Bush's New Deal for Research, or The Triumph of the Old Order*. *Historical Studies in the Physical and Biological Scienc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7(2), 299–344.
- Sadlak, J. (2004). *Studies on Higher Education: Doctoral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tatus and Prospects*. UNESCO: Bucharest.
- Seong, S., Popper, S. W., Goldman, C. A., Evans, D. K., and Grammich, C. A. (2008). *두뇌한국 21 제2단계 사업의 성과평가 모형과 정책적 시사점 (Brain Korea 21 Phase II: A New Evaluation Model)*. Monograph series. The Rand Corporation.
- Servos, J. W. (1980). *The Industrial Relations of Science: Chemical Engineering at MIT, 1900–1939*. *Isis*, 71(4), 530–539.
- Smith, A. (2010). *One step beyond: making the most of postgraduate education*.
- Talyor, J. (2004). *The United Kingdom*. By F. Sadlack(ed.) *Doctoral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tatus and Prospects*, pp. 231–258. Romania: UNESCO–CEPES Publication Unit.
- University UK (2009). *Pattern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UK*.
- University UK, www.universityuk.ac.uk/UKHESector/Pages/OverviewSector.aspx
- Versey, L. R.(1965). *The Emergence of the American University*, Chicago.

Williamson, H. F., & Wild, P. S.(1976). Northwestern University: A History, 1850-1975. Evanston.

교육통계연보 <http://cesi.kedi.re.kr/>

과학기술통계서비스 <http://sts.ntis.go.kr/>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미국대학원제도 www.americangraduateeducation.com/

미국이 질관리 체제 <http://www.chea.org/default.asp?link=7>

영국 고등교육원 www.heacademy.ac.uk/ourwork/research/surveys/pres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http://www.gradsch.psu.edu/prospective/>

HESA (2010). www.hesa.ac.uk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 참고자료: 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연구실적 (KRI에 본인인 등록한 자료 기준)

<부표 1> 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논문 및 저서

(KRI에 본인이 등록한 자료 기준) - 가중치 없음

연도	연구분야 코드	연구분야 _대분류	평균	최대값	최소값	10분위	20분위	50분위	80분위	90분위
2008	A	인문학	1.02	27.5	0	0	0	0.25	2	3
	B	사회과학	0.94	17.84	0	0	0	0.4	1.9	2.67
	C	자연과학	0.9	33	0	0	0	0.49	1.5	2.33
	D	공학	0.77	22.75	0	0	0	0.25	1.33	2.14
	E	의약학	0.78	17.24	0	0	0	0.4	1.33	2.09
	F	농수해양	0.78	8.84	0	0	0	0.4	1.35	2.1
	G	예술체육	0.4	10	0	0	0	0	0.84	1.4
	H	복합학	0.92	12.22	0	0	0	0.5	1.6	2.31
2009	A	인문학	1.01	25	0	0	0	0.2	2	3
	B	사회과학	0.98	20.24	0	0	0	0.5	2	2.77
	C	자연과학	0.85	31	0	0	0	0.45	1.46	2.19
	D	공학	0.77	23.39	0	0	0	0.25	1.33	2.14
	E	의약학	0.81	14.86	0	0	0	0.5	1.39	2.01
	F	농수해양	0.8	10.13	0	0	0	0.4	1.41	2.17
	G	예술체육	0.4	22.92	0	0	0	0	0.9	1.4
	H	복합학	1.07	9.17	0	0	0	0.67	2	3
평균	A	인문학	1.015	26.25	0	0	0	0.225	2	3
	B	사회과학	0.96	19.04	0	0	0	0.45	1.95	2.72
	C	자연과학	0.875	32	0	0	0	0.47	1.48	2.26
	D	공학	0.77	23.07	0	0	0	0.25	1.33	2.14
	E	의약학	0.795	16.05	0	0	0	0.45	1.36	2.05
	F	농수해양	0.79	9.485	0	0	0	0.4	1.38	2.135
	G	예술체육	0.4	16.46	0	0	0	0	0.87	1.4
	H	복합학	0.995	10.695	0	0	0	0.585	1.8	2.655

<부표 2> 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논문 및 저서

(KRI에 본인이 등록한 자료 기준) - 가중치 SCI = 2 KCI;
SCORPUS 등 기타 학술지, 저서 = 1 KCI

연도	연구분야 코드	연구분야 _대분류	평균	최대값	최소값	10분위	20분위	50분위	80분위	90분위
2008	A	인문학	1.03	27.5	0	0	0	0.25	2	3
	B	사회과학	0.95	19.77	0	0	0	0.4	1.96	2.7
	C	자연과학	1.29	35	0	0	0	0.59	2.03	3.36
	D	공학	0.98	37.15	0	0	0	0.29	1.63	2.75
	E	의약학	1.03	33.14	0	0	0	0.5	1.73	2.78
	F	농수해양	0.97	12.93	0	0	0	0.44	1.63	2.63
	G	예술체육	0.4	10	0	0	0	0	0.88	1.4
	H	복합학	0.98	12.44	0	0	0	0.5	1.91	2.5
2009	A	인문학	1.02	25	0	0	0	0.2	2	3
	B	사회과학	0.98	20.24	0	0	0	0.5	2	2.8
	C	자연과학	1.22	43	0	0	0	0.57	2	3.15
	D	공학	0.99	33.03	0	0	0	0.29	1.61	2.78
	E	의약학	1.08	23.15	0	0	0	0.63	1.82	2.72
	F	농수해양	0.99	18.1	0	0	0	0.43	1.67	2.76
	G	예술체육	0.4	22.92	0	0	0	0	0.9	1.4
	H	복합학	1.15	9.17	0	0	0	0.9	2.1	3
평균	A	인문학	1.025	26.25	0	0	0	0.225	2	3
	B	사회과학	0.965	20.005	0	0	0	0.45	1.98	2.75
	C	자연과학	1.255	39	0	0	0	0.58	2.015	3.255
	D	공학	0.985	35.09	0	0	0	0.29	1.62	2.765
	E	의약학	1.055	28.145	0	0	0	0.565	1.775	2.75
	F	농수해양	0.98	15.515	0	0	0	0.435	1.65	2.695
	G	예술체육	0.4	16.46	0	0	0	0	0.89	1.4
	H	복합학	1.065	10.805	0	0	0	0.7	2.005	2.75

<부표 3> 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논문 및 저서

(KRI에 본인이 등록한 자료 기준) - 가중치 SCI = 2 KCI;
SCORPUS 등 기타 학술지 = 1.5 KCI, 저서 = 1 KCI

연도	연구분야 코드	연구분야 _대분류	평균	최대값	최소값	10분위	20분위	50분위	80분위	90분위
2008	A	인문학	1.03	27.5	0	0	0	0.25	2	3
	B	사회과학	0.96	19.77	0	0	0	0.4	2	2.74
	C	자연과학	1.33	39	0	0	0	0.65	2.1	3.49
	D	공학	1.01	39.18	0	0	0	0.29	1.7	2.87
	E	의약학	1.06	33.49	0	0	0	0.51	1.8	2.87
	F	농수해양	1.01	13.04	0	0	0	0.44	1.68	2.76
	G	예술체육	0.41	10	0	0	0	0	0.88	1.4
	H	복합학	1	12.44	0	0	0	0.5	2	2.67
2009	A	인문학	1.02	25	0	0	0	0.2	2	3
	B	사회과학	1	20.24	0	0	0	0.5	2	2.83
	C	자연과학	1.26	45.67	0	0	0	0.59	2.08	3.25
	D	공학	1.03	33.48	0	0	0	0.31	1.69	2.9
	E	의약학	1.12	25.18	0	0	0	0.66	1.9	2.8
	F	농수해양	1.04	18.54	0	0	0	0.45	1.74	2.93
	G	예술체육	0.41	22.92	0	0	0	0	0.9	1.41
	H	복합학	1.18	9.17	0	0	0	0.9	2.15	3.17
평균	A	인문학	1.025	26.25	0	0	0	0.225	2	3
	B	사회과학	0.98	20.005	0	0	0	0.45	2	2.785
	C	자연과학	1.295	42.335	0	0	0	0.62	2.09	3.37
	D	공학	1.02	36.33	0	0	0	0.3	1.695	2.885
	E	의약학	1.09	29.335	0	0	0	0.585	1.85	2.835
	F	농수해양	1.025	15.79	0	0	0	0.445	1.71	2.845
	G	예술체육	0.41	16.46	0	0	0	0	0.89	1.405
	H	복합학	1.09	10.805	0	0	0	0.7	2.075	2.92

RR 2011-02

박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 행 2011년 12월

발행인 신 현 석

발행처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주 소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본관 213호

전화 : (02) 3290-2658

팩스 : (02) 3290-2985

<http://hepri.korea.ac.kr>

인쇄처 제일문화사 (02) 921-7221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